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The Politics of Legitimacy and Resilience:
Adaptive State Nationalism in North Korea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강 혜 석

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지도교수 백 창 재
이 논문을 정치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강 혜 석

강혜석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	원	장	<u>김 의 영</u>	(인)
부	위	원	<u>장 백 창 재</u>	(인)
위		원	<u>구 갑 우</u>	(인)
위		원	<u>이 정 철</u>	(인)
위		원	<u>정 영 철</u>	(인)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비(非)민주국가에 대한 비교정치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북한을 사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 과정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양태가 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 즉 회복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계급노선에 기반한 유토피아에의 장밋빛 약속이 빛바랜 지금, 민족주의가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정당성의 공백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살아남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과 지속을 가능케 한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로 작동해 왔으며 북한은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비교적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특히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첫째, 대남·통일론의 프레임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북한 민족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많은 전략과 정책은 대남·통일론의 프레임 속에 이해되어 왔으며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족주의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한 민족주의의 강화는 남북 간의 ‘상대적 힘의 균형’에 대한 반응적, 수세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진영내부의 갈등과 체제의 지속적 실패, 그리고 정치적 계승이라는 내부적, 본질적 위기에 대한 대응 즉, ‘정당성의 정치’의 한 방식으로서 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결과’ 뿐만이 아니라 그 ‘방식’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민족주의의 부상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 즉 한반도를 아우르는 ‘한민족’을 호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계설정을 통해 남한을 배제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는 방식, 즉 ‘민족 재건설’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김일성민족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그동안 간과되어온 북한 민족주의의 호명 ‘방식,’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현 북한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핵심 열쇠라 주장한다.

셋째, 북한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과 비교사회주의의 접근법을 결합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에 의한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결코 북한에서의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민족자결론의 등장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끊임없는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요컨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그 자체는 보편의 차원에서 설명가능하나 그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했으며 이와 같은 사례별 특수성이 각 체제의 성격에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넷째, 이행론의 결정론적인 역사관이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여, 보다 개방적인 정치발전론의 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생존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넘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생존이라는 비교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북한의 민족주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개념은 ‘적응’이다. 즉 생존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근대화론과 민주화론의 기본적인 가정인 발전을 통한 민주화의 경로가 아닌 민주화 없는 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존의 정치적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한 적응의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민족주의를 적응의 한 기제로 정의하고 이를 적응적 국가민족주의로 개념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단선적, 필연적 과정으로 접근하기보다 동태적, 정치적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성의 정치, 적응, 회복탄력성 등의 개념을 통해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국가와 정권의 생존이라는 최우선의 당위를 넘어서는 수는 없다는 현실이 발생시키는 일차적인 구조적 압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압력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열린 선택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를 둘러싼 긴장과 그러한 긴장이 발생시키는 변용의 과정에 주목한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본질적 충돌지점, 즉 계급과 민족의 긴장이며 두 번째는 수령제와의 긴장, 마지막으로 통일과의 긴장이다. 본 연구는 상기한 긴장들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동학들과 그것이 함의하는 열린 선택의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현재적’ 이해를 넘어 ‘전망적’ 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핵심어: 북한, 국가민족주의, 적응, 정당성의 정치, 회복탄력성.

학번: 2011-30889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개요	1
제2절 기존논의 검토	8
제3절 연구의 자료와 방법	19
제4절 연구의 구성	21
제2장 이론과 비교	23
제1절 민족주의의 정치와 사회주의 국가	23
1. 국가와 민족주의: 주요 개념들	23
1) 적응(Adaptation)	23
2) 국가민족주의(State Nationalism)	26
3) 회복탄력성(Resilience)	29
2.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적용과 주장	32
1)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회복탄력성'	32
2) '정당성의 정치'로서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34
3)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주의를 둘러싼 긴장: 민족 vs 계급	37
제2절 역사적 경험: 소련 vs. 중국	39
1. 민족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입장의 원형	39
1) 약한 고리로서의 민족주의? : 이론적 실패 vs. 정치적 실패	39
2) 마르크스에서 스탈린까지	40

2. 소련의 역사적 경험	54
1)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완과 긴장	54
2) 고르바초프 시기의 위기	58
3) 사회민족주의의 부상과 적응의 실패	60
(1) 국가민족주의에서 사회민족주의로	61
(2) 부정과 돌파: 적응의 실패	62
3. 중국의 역사적 경험	65
1) 국가건설과 모순론	66
2) 덩샤오핑 시기의 위기	68
3) 국가민족주의의 부상과 적응	70
(1) 국가민족주의의 부상	72
(2) 인정과 점진주의: 적응의 과정	73

제3장 호명 이전의 북한 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76

제1절 민족주의 호명 이전 북한의 민족, 민족주의관	78
1. 해방에서 1950년대까지: ‘반일 애국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79
2. 1960년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주체’의 결합	85
3. 1985년의 전환: 김정일의 민족 재정의	88
제2절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	94
1. 유일체제와 ‘주체’	94
1) 진영내부의 갈등과 ‘주체’의 등장	94
2) 이데올로기 갈등과 주체의 사상화	99
2. 후계체제와 ‘우리 식,’ ‘우리민족제일주의’	102
1) 정당성의 정치와 ‘우리 식’	102
2) 우리 식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로	106

제4장 ‘민족’에서 ‘민족주의’로의 과도기: ‘김일성 민족’의 건설 … 112

제1절 탈냉전과 민족: 자주성의 진화	112
1. 자주성의 재구성: 새로운 적, 경계 그리고 ‘우리’	114
1) 냉전과 자주성	114
2) 민족국가와 자주성	116
2.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강화	122
1) 사회주의 국가실패와 ‘계급 vs. 인민 vs. 민족’	122
2) 후계자의 정치비전과 ‘우리민족제일주의’	126
3) 조직과 동원	131
3. 민족과 통일: ‘우리’와 ‘민족’	134
1) 1980년 이전시기의 북한 통일방안	135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민족 vs. 통일 vs. 계급’	138
제2절 민족 재건설의 실제	145
1.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46
1) <민족과 운명>의 제작배경	146
2) 김정일의 ‘종자론’과 <민족과 운명>의 ‘종자’	153
3) <민족과 운명>의 정치적 함의	157
2. 민족 재건설의 제도적 시도	163
1) 민족문화유산의 법제화	163
2) 민족과 일상생활: 가족법과 명절의 복원	169
제3절 수령의 사망과 정당성의 위기: 주체성과 민족성의 결합	173
1. 수령의 사망: 포섭정책의 부상과 ‘김일성민족론’	174
2. 위기의 심화: 고난의 행군	179
3. 김정일 정권의 ‘종자’: 주체성과 민족성	183

제5장 민족주의의 호명과 애국주의: 선군, 강성대국, 김일성조선 192

제1절 수면아래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반제 선군’ 196

1. ‘사회주의 강성대국론’과 민족주의: 국가민족주의 196
 - 1)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호명 196
 - 2) ‘사회주의강성대국’과 ‘민족’ 202
 - 3) ‘국가’의 부상과 ‘민족주의’: ‘광명성1호’와 ‘김일성조선’ 208
2. ‘선군’의 기원과 논리: 혁명의 새로운 주력군 215
 - 1) 1995년 1월 김정일 노작 3편과 ‘선군시대’의 배경 215
 - 2) ‘선군’의 등장과 논리적 구성 220

제2절 새로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호명 226

1. 민족 담론의 생산·유통의 다양화 226
2. ‘민족주의’ 호명의 배경 229
3. 김정일(2002).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233
4. ‘민족’의 대서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239
 - 1)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작배경 239
 - 2)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구성과 정치적 함의 244

제3절 통일과 민족재건설의 딜레마: ‘우리 민족끼리’의 양면성 251

1. 통합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구심력 253
 - 1) 당위론에 입각한 통일의 재강조 254
 - 2) 선군과 통일의 논리적 결합 시도 257
2. 분리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원심력 262
 - 1) <우리 민족끼리>의 명과 암 263
 - 2) 민족 개념의 지속 vs. 민족 요건의 불충족 268

제6장 결 론	276
참고문헌	282

<표·그림 목차>

<표 3-1> 1986년 이전 북한의 민족개념	89
<표 4-1> 김정일 담화에 등장한 ‘우리 식’ 표현: 원본과 증보판 비교: 1961-1980	129
<표 4-2> 김정일 신년사 목록: 1975-2010	147
<표 4-3>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주요인물과 형상화: 1990-2003 조선중앙연감 정리	156
<표 4-4> 북한의 민족문화유산관련 주요 문건: ~1997년	164
<표 4-5> 『근로자』에 등장한 ‘김일성민족’: 1995-1997	178
<표 4-6> 김정일 담화 및 저작 목록: 1994.10.16.~1995.1.15.	180
<표 4-7> ‘주체성과 민족성’의 실천적 구성과 내용	189
<표 5-1> ‘미국 5년 총공세’에 대한 김정일의 언술: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198
<표 5-2> 1995년 1월 김정일 노작에 나타난 군 관련 표현	223
<표 5-3> 북한의 정치담론 생산 경로	227
<표 5-4> 2002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구성	245

이 논문은 2016년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20세기 사회과학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적인 붕괴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점이었던 데 이의를 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실패 이후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사회과학은 또 다른 중대한 실패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은 듯하다. 탈냉전 이후 패권적 담론으로 급격히 부상한 진화론적 낙관론 혹은 수렴론이 처한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낙관론의 위기는 다음의 두 가지 명백한 현실에 기인한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의 지속이다. 주지하듯 탈냉전 이후 민주화론은 정치변동론과 관련해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유해왔다. 냉전에서의 ‘승리’를 선언한 자유진영에게 ‘악의 축’의 소멸은 역사적 필연이자 당위의 실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Bush 1992).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북한 등 이른바 ‘살아남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가 그것이다.²⁾

-
- 1) 몰락 그 직전까지 이를 예측한 이가 오직 브레진스키(Brzezinski, 1989)뿐이었다는 삼보의 회고는 이와 같은 실패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Shambaugh, 2008: 12).
 - 2) 이러한 평가에 있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질문은 ‘사회주의 국가란 무엇인가?’일 것이다. 관련한 전통적인 정의는 주로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들이다.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의 위상과 그에 기반한 공산당 유일지배, 국가소유체계, 관료적 조정메커니즘을 핵심 구성요소로 들고 있는 코르나이(Kornai 1992)의 정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커밋먼트, 주요 생산 수단에 대한 공유 및 국유제, 전위조직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배적 위상, 다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과의 협력적인 외교정책 등을 들고 있는 화이트(White 1983)의 규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화 이후의 분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진행된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이와 같은 포괄적 정의들의 유효성을 크게 감퇴시켜왔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는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에 가까운 중국이 ‘맑스주의 없는 레닌주의’ 혹은 ‘당-국가 자본주의’로서 일종의 ‘혼합체제’(hybrid system)에 가깝다는 브라운(Brown 2009, 605)의 지적은 탈냉전 이후 하나의 ‘종’으로서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분류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질문과 무관한 ‘진정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분석적 용이성을 위해 “스스로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당의 유일지배가 작동하고 있는 국가”들을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한 색슨버그(Saxonberg 2013, 6)의 최소주의적 정의를 차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있어서 해당 정의의 유용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하의 각주 10번을 참조할 것.

둘째, 민족주의의 부활이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보편화를 전제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전망을 내어놓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세계시민의 탄생을 예언한 홉스봄(Eric Hobsbawm)과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의 좌파 진영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쇠퇴는 탈냉전의 시기를 지배한 낙관론의 또 다른 축이었다.³⁾ 그러나 21세기에도 IS를 비롯한 이슬람지역의 종파문제, 터키-쿠르드 갈등,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벳, 몽골 지역의 민족문제,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민족주의 갈등은 사라지기는커녕 종교문제와 결부되어 보다 공세적이고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 또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민족주의의 부활이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에서도 분명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주지하듯 트럼프, 시진핑, 푸틴에서 유럽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는 이제 시대의 대세로까지 자리매김 되고 있다.⁵⁾ ‘민족주의 시대의 종언’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던 앤더슨의 전망이 30 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해 보이는 이유이다(Anderson 1983, 3).

따라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계기로 21세기의 시작을 물리적 시간의 차원이 아닌 정치사회적 격변의 전환점이자 이념도 국경도 사라진 유토피아로의 진화과정으로 이해하던 수렴론적 낙관론이 처한 위기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매우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목을 더욱 끄는 것은 상기한 두 가지 흐름의 결합이다. 그것이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이건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이건 소멸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두 현상이 오히려 결합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강력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모토로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는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3) 홉스봄과 하버마스의 초기 낙관론과 이후의 수정에 대해서는 팔티(Palti 2001)를 참조할 것.

4) 특히 탈냉전 이후 민족주의적 충돌이 새롭게, 그리고 격렬하게 나타난 지역이 사회주의를 통해 민족문제를 ‘빛나게’ 해결했다고 자부해왔으며 실제로도 체제가 유지되던 기간만큼은 민족을 매개로한 갈등이 거의 부재했던 구(舊)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다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이긴 하나 유고, 소련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체제 전환 이후의 민족 갈등을 사회주의의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모순의 폭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결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상관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라 생각된다.

5)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세계화 현상에 대한 평가로는 다음이 유용하다. Gideon Rachman, “Trump, Putin, Xi and the rise of nostalgic nationalism”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198efe76-ce8b-11e6-b8ce-b9c03770f8b1?mhq5j=e3>(검색일 2017.5.20.). Zheng Wang, “The New Nationalism: ‘Make My Country Great Again’”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2016/05/the-new-nationalism-make-my-country-great-again/>(검색일: 2017.5.20.).

없다’는 마르크스의 도그마나 ‘민족주의는 부르주아의 전염병’에 불과하다던 스탈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양자는 적어도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극단적인 적대적 관계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합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비(非)민주국가에 대한 비교정치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비록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그 성취는 비할 바 없이 미약하나 사회주의적 특성을 한층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형성은 오히려 더욱 뚜렷한 북한을 사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 과정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양태가 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 즉 회복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계급노선에 기반한 유토피아에의 장밋빛 약속이 빛바랜 지금, 민족주의가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정당성의 공백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살아남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과 지속을 가능케 한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로 작동해 왔으며 북한은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비교적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것이다.

물론 소위 민족해방운동 세력으로서 북한 지도부의 정체성, 분단국가의 특수성, 근대화의 요구 등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유지, 강화시켜온 중요한 요소들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민족주의가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조선민족제일주의’ 혹은 ‘우리민족제일주의’ 논의 공식화와 함께 북한의 민족주의가 전면부상함에 따라 해당 이슈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⁶⁾ 그러나 2002년 민족주의를 공식 복권시킨 이후 김정은 시대 들어 “사회주의 문명국”과 “동방의 핵강국”을 양대 기둥으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사라졌던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김정일 애국주의”를 통한 “김일성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은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특히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첫째, 대남·통일론의 프레임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북한 민족주

6) 북한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는 체제성립 초기부터였다는 주장(서동만 2000; 이정식 & 스칼라피노 1972; 커밍스 1986; 암스트롱 1999)과 1960년대 부터였다는 주장 등(이종석 1994; 정영철 2003) 다양하나 그러한 성격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며 급격히 강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일치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이종석 1994; 정영철 2001; 2003; 2010; 김갑식 2006; 서동만 2000).

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김일성 사후 제1유혼으로서 조국통일이 여전히 지속 강조되어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 통일은 말 그대로 국가전략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지상과제’였다. 북한의 많은 전략과 정책은 대남·통일론의 프레임 속에 이해되어 왔으며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족주의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 왔다. 최근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된 계기가 북한의 입장이 ‘One Korea’론으로부터 ‘Two Korea’론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는 점은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민족주의 전략이 동독 호네커의 2민족 2국가론과 같이 남북 간 힘의 ‘균형’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해석은 김일성민족론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현 민족주의 전략이 남북 간의 세력균형이 결정적으로 기울게 된 탈냉전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⁷⁾ 다시 말해 북한 민족주의론의 강화는 남북 간의 ‘상대적 힘의 균형’에 대한 반응적, 수세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진영내부의 갈등과 체제의 지속적 실패, 그리고 정치적 계승이라는 내부적, 본질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총체적 국가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⁸⁾ 본 연구가 대남통일정책의 프레임보다는 ‘정당성의 정치’ (politics of legitimacy)라는 내부의 정치적 동학을 통해 북한 민족주의의 호명 과정과 부상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둘째,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결과’ 뿐만이 아니라 그 ‘방식’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민족주의의 부상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 즉 한반도를 아우르는 ‘한민족’을 호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계설정을 통해 남한을 배제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는 방식, 즉 ‘민족 재건설’ (Nation-Rebuilding)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우리(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나 ‘김일성 민족’론이 표방하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위대한 주체사상,”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는 민족의 경계가 그것이다.⁹⁾ 요컨대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이슈에

7) 동독의 민족담론, 민족주의 전략에 대해서는 팔모브스키(Palmowski 2013), 제임스(James 2012), 마쯔(Maaz 1995), 한운석(2005; 2006; 2008), 유지훈(2008), 권형진(2014), 김병웅(1983) 등을 참조할 것.

8) 물론 이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기보다는 1980년대 후반 이래의 ‘muddling through’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강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식’ 이데올로기로써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와의 본질적인 긴장이라는 원인 이외에도 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점차 그 비중과 위상, 체계성 등이 발전되어왔기 때문이라 보인다.

9)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구분 없이 병용되는 개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구분을 두지 않고 양자를 병용하기로 한다. 김정일. 1989년 1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

서는 여전히 남한을 포괄하는 의미의 단일민족론을 내세우기도 하나 이와 차별적인 또 다른 구성(construction)의 범주를 지향하는 움직임도 분명한 흐름으로 지속,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민족을 호명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차별적인 이와 같은 북한 민족주의의 예외성은 그동안 ‘분석’의 대상이 아닌 ‘기술’의 대상에 머물러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온 북한 민족주의의 호명 ‘방식,’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현 북한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핵심 열쇠라 주장한다.

셋째, 북한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과 비교사회주의의 접근법을 결합하고자 한다.¹⁰⁾ 앞서 언급한 일련의 역사적 특수성은 오랫동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족주의적 특성의 기원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결코 북한에서의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민족자결론의 등장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끊임없는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물론 북한 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보편성은 많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 각각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양자의 결합, 즉 ‘비교’를 통해 북한 사례의 정치적 동학과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그 자체는 보편의 차원에서 설명가능하나 그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했으며 이와 같은 사례별 특수성이 각 체제의 성격에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북한 민족주의 분석의 재료로 활용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물론 본 연구는 북한을 특정한 국가 혹은 국가들의 사례

양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제9권. 199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0) 비교 사회주의의 분석틀로 북한을 분석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답을 해야하는 질문은 과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가?”일 것이다. 본 연구는 상기한 색슨버그의 정의를 차용하여 당 규약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과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를 견지할 것을 규정한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한다. 규범적 평가와 차별적인 이와 같은 최소주의적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적 용이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과는 거리가 먼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인가?’ 혹은 ‘북한은 어떠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인가?’를 둘러싼 논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가디자인이 정권의 선호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시키는 구조적 압력과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점은 국가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이데올로기와 그에 의거한 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상기한 정의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의 확장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와 전면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된 전형적인 비교사례연구 형식을 따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역학을 넘어선 보편적 함의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로서 상기한 여타 사례들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넷째, 이행론의 결정론적인 역사관이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여, 보다 개방적인 정치발전론의 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분석한다. 이는 상기한 비교사회주의적 분석과의 결합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지만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본 연구의 관심은 특히 사회주의 독재국가로서 북한의 ‘생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생존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넘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생존이라는 비교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북한의 민족주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¹¹⁾ 해당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개념은 ‘적응’ (adaptation)이다. 즉 생존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근대화론과 민주화론의 기본적인 가정인 ‘발전을 통한 민주화’ (Democratization through Development)의 경로가 아닌 ‘민주화 없는 발전’ (Development without Democratization)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존의 정치적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한 ‘적응’의 메커니즘이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바로 그 ‘적응’의 핵심적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실제 북한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근본적인 긴장과 더불어, 특정 시기 북한 체제의 구체적인 대내외적 정치적 조건과 요구에 따라 입체적인 변화와 부침을 보여 왔으며 정당성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북한의 생존을 지탱해왔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민족주의를 ‘적응’의 한 기제로 정의하고 이를 ‘적응적 국가민족주의’ (Adaptive State Nationalism)로 개념화한 이유이다.

다섯째,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단선적, 필연적 과정으로 접근하기보다 동태적, 정치적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성의 정치, 적응, 회복탄력성 등의 개념을 통해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국가와 정권의 생존이라는 최우선의 당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현실이 발생시키는 일차적인 구조적 압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압력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열린 선택의 성격을

11) 디미트로프 편(Dimitrov ed 2013)과 색슨버그(Saxonberg 2013)는 그 대표적인 성과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를 둘러싼 긴장과 그러한 긴장이 발생시키는 변용의 과정에 주목한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본질적 충돌지점, 즉 계급과 민족의 긴장이다. ‘계급’에서 ‘민족’으로 방점 이동은 사회주의 체제 정당성의 근본 기동인 계급노선의 약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민족주의가 공식적으로 복권되는 과정에서 다시 부상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왜 이전과 달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없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는지,¹²⁾ 그리고 이러한 계급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이 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호명과 ‘반제’ 선군노선의 강화와 병행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긴장은 수령제와의 긴장이다.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호명은 ‘사회주의 조국’을 강조함으로써 민족과 계급의 본질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북한에서는 철저히 인격화되어있는 충성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수령’ 그 너머에 비인격적인 충성의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충성의 대상을 교체하려는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부상할 여지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과의 긴장이다. 주지하듯 통일은 북한의 국가 목표에 있어 말 그대로 지상과제의 위상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의 민족주의 부상의 토대가 되고 있는 ‘민족재건설’의 내용이 이러한 통일론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핏줄, 언어, 문화, 영토”를 기준으로 규정되던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의 민족 개념을 대체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위대한 주체사상”,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는 새로운 경계(boundary)가 이전의 그것과 달리 남한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본 연구는 상기한 긴장들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동학들과 그것이 함의하는 열린 선택의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현재적’ 이해를 넘어 ‘전망적’ 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12) 요컨대 2000년대 이후의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이전의 애국주의는 용어 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상이하다. 이전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연결지어 규정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와의 결합 속에 호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13) 아래와 같은 김정일의 규정은 상기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민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43쪽.

제2절 기존 논의 검토

탈냉전 이후 패권적인 지위를 차지해온 민주화론의 이론적 기반은 진화론과 구조기능주의로 무장한 근대화론이었다. 근대화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발전이 궁극적으로 서구화, 즉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이다(Alvin 1990).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정점을 찍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은 위기에 빠진 근대화 학파(The Modernization School)에겐 일종의 최종 승전보와 같았다.¹⁴⁾ 물론 민주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닌 새로운 독재의 유형으로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장기적 지속이 근대화론을 위기에 빠뜨려온 중요한 사례였음은 사실이다.¹⁵⁾ 그러나 해당 이론의 무엇보다 강력한 반례는 역시도 몰락 직전까지만 해도 생존, 더 나아가 번영까지 예견되었던 반(反)민주주의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존재였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의 정치적 현실은 ‘역사의 종언’ 류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판이했다. 민주화의 물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역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¹⁶⁾ 이와 같은 ‘현실’은 비교정치연구의 흐름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멸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비(非)민주주의 혹은 독재국가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크게 독재국가 일반에 대한 비교정치적 논의, 특수한 사례로서의 중국 지역학, 새로이 부활한 비교사회주의의 성과들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연동되어 있으나 나름의 독자적인 접근법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비교사회주의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첫째, 독재국가 일반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게디스(Geddes 1999), 브루커(Brooker 2000), 윈트로브(Wintrobe 2000), 브라운 리(Brownlee 2007) 등은 그 대표적인 성과 들이다. 특히 부에노 드 메스키타 외(Bueno De Mesquita, et al. 2005)는 이

14) 1974년 이래 1990년까지의 민주화의 물결을 민주화의 제3의 물결로 정의한 논문으로는 헌팅턴(Huntington. 1991)참조.

15) 권위주의에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 것은 스페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치체제에 대한 유형학을 확립한 린츠(Linz. 1964; 1975)였다.

16) 관련한 통계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s://freedomhouse.org/>

와 같은 연구 흐름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의 시도는 매우 야심차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권자 이론’(Selectorate Theory)이라 명명한 분석틀을 통해 극단적 독재체제에서부터 선진민주주의에 이르는 모든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의 결정요인과 결과를 일관되게 설명해내고자 했다. 해당 이론은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이기적 행위자라는 단순한 가정 하에 그가 권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그룹인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더 광범위한 그룹인 선택권자(selectorate)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선출 제도’(selection institution)에 주목한다.

여기서 지도자 혹은 정권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오직 승리연합이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바람직한 정책이란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승리연합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즉 매우 다양해 보이는 지도자들의 정책은 특정한 제도가 부여한 인센티브 구조 하에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독재체제는 특별히 비도덕적이고 권력욕이 불타는 악한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승리연합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체제를 일컫는 용어일 뿐이다. 즉 독재체제의 사악해 보이는 정책들은 독재자의 부도덕함이라기보다는 그가 직면한 인센티브 구조의 산물이며 특정 정책을 낳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치문화, 시민성, 폭력성, 배금문화 등 다양한 ‘행동의 규범’(norms of conduct)들 역시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그들은 근대화론의 규범적 예측과 달리 해당 인센티브 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rational choice)을 하는 한 독재체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Bueno de Mesquita & Smith 2011 46-48; Bueno de Mesquita et al. 2005, 12).¹⁷⁾

독재체제 일반에 대한 부에노 드 메스키타 외의 상기한 이론은 매우 정교하다.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을 모두 설명해내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해당 이론이 ‘정권’(regime)의 ‘생존’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생존의 질’을 포함하여 ‘국가’(state)차원에서 성공한 독재체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7) 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경험적 근거들은 해당 이론이 형식논리에 근거한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경험적 사례들은 조세 구조와 세율에서 유아사망률과 식수의 질 등 다양한 주제, 고대 이집트에서 현재의 북한과 미국에 이르는 거의 모든 국가, 그리고 기업과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 외의 조직 등 매우 포괄적이다. 이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부에노 드 메스키타 와 스미스(Bueno de Mesquita & Smith, 2011)가 유용하다. 이들의 분석틀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통한 검증,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리적 설명은 부에노 드 메스키타 외(Bueno de Mesquita et al. 2005)의 Part II를 참고할 것.

탈냉전 이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독재국가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은 새로운 관점을 요구했다.

지역학의 연장으로서 중국 연구의 발전은 바로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한 응전이었다. 주지하듯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 (development)은 중국 정치체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즉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강력한 근거였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과 달리 중국의 정치체제는 점진적 개혁의 조치들에 머물 뿐 ‘이행’의 경로를 밟지 않았다. 진화론의 틀을 벗어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튼 개념이 바로 대표적인 중국 연구자 중 하나인 네이션(Andrew Nathan)의 ‘탄력적 권위주의’ (Resilient Authoritarianism)였다 (Nathan 2003). 특히 해당 개념은 이행론의 논의를 주도한 학술지인 *Journal of Democracy*가 기획한 중국 정치관련 특집호의 권두논문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이었다.

그는 사회주의를 포함한 전체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한 기존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정권 변환(regime change)을 전제로 한 파슨즈(Talcott Parsons)의 프레임이다. 해당 체제는 궁극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포기하고, 테크노크라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며, 관료적 규제와 복잡성, 전문화를 진전시키고, 사적 언행에 대한 통제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거쳐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웬탈(Richard Lowenthal)의 주장처럼 일련의 ‘적응’ (adaptation)을 통해 ‘유토피아에서 발전으로의 민주화 없는 전환’의 경로를 밟는 것이다. 네이션은 비록 먼 미래의 민주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2003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치발전이 후자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것이 심지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 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Nathan 2003, 16). 즉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가 이행의 예비단계로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탄력적 권위주의’ (Resilient Authoritarianism)의 개념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¹⁹⁾

물론 2012년 리청(Cheng Li)의 ‘중국 공산당의 탄력적 권위주의의 종언’ (The End of the CCP’s Resilient Authoritarianism)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논문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주장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중국의 현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18) 중국의 경제적 성취와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정치체제에 대한 논쟁은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개괄로는 슈성 자오 편(Zhao ed, 2006)을 참조할 것.

19)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브루스 딕슨(Bruce Dickson)의 저작들을 들 수 있다 (Dickson 2000, 2003, 2008, 2016). 해당 관점과 이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는 샴보(Shambaugh 2008, 23-41)를 참조할 것.

없다(Cheng Li 2012). 그러나 중국이라는 강력한 사례, 그리고 비록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혹은 ‘생존’ 그 자체를 성공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 쿠바,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속은 해당 흐름을 중국이라는 특수한 지역학의 차원이 아닌 비교정치의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상기한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원들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비교사회주의 연구’의 부활을 들 수 있다. 해당 연구를 대표하는 성과로는 색슨버그(Saxonberg 2013)와 디미트로프 편(Dimitrov ed 2013)을 들 수 있다.²⁰⁾ 해당 연구들은 공히 사회주의의 몰락이 아닌 생존에 대한 비교정치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민족주의에 주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색슨버그의 연구를 살펴보자. 해당 연구는 기본적으로 1960-70년대 발전된 비교사회주의의 성과와 보편적인 체제유형학을 통해 이행 과정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한 린츠와 스테판(Linz & Stephan 1996)의 분석틀을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비교사회주의의 논점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¹⁾

20) 이외에 브라운(Brown 2009)도 참고할 만 하다. “왜 공산주의는 그렇게 오래 지속 되었었는가?”(Why *Did* Communism Last so Long? 강조 필자)라는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은 몰락 ‘이전’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색슨버그나 디미트로프의 연구와 차별적이다. 그러나 색슨버그와 마찬가지로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연구에 대한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록 자세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의 ‘지속’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생존’에 대해서도 일정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장과 밀접히 관련된 후자에 대한 논의에서 브라운은 민족주의를 중요한 변수로 들고 있다(Brown 2009, 574-586).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색슨버그는 니카라과,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강한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붕괴한 사례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체제 생존의 핵심 요소로서 민족주의 변수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Saxonberg 2013, 2). 그러나 이와 같은 반박은 직관적이나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등산과 평균수명의 상관관계에 있어 양자의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hip)에 대한 설명적 인과관계(explanatory causal relationship)가 존재한다고 할 때 등산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이 짧았던 사례들, 즉 통계적 상관관계(statistical co-relationship)와 관련된 반례들은 해당 주장의 ‘강성(強性)’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정오(正誤)’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의 주장은 민족주의의 존재 유무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에 중요한 변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혹은 정권에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브라운이나 색슨버그의 논의와는 차별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한편 이론과 가설, 그리고 사례검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월츠(Waltz, 1979: 13-16)를 참조할 것.

21) 이하에서는 탈냉전 이후에도 생존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2000년대 이후의 비교사회주의의 연구 성과와 구분하기 위해 탈냉전 이전의 비교사회주의론을 ‘고전적 비교사회주의론’으로 명명했다.

주지하듯 고전적 비교사회주의의 문제제기는 전체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 그리고 흐루시초프 이후 사회주의의 분화라는 새로운 현실을 계기로 한 것이었다. 즉 전체주의의 ‘정적인’ (static) 분석틀로는 사회주의의 실재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²²⁾ 특히 상기한 논의를 관통했던 주요한 분석틀이 역설적이게도 사회주의를 탄생시킨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가장 강력한 대항이론가 중 하나였던 막스 베버(Max Weber)의 핵심개념, 즉 ‘일상화’ (routinization)였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혁명정권으로서 사회주의 정권의 특성에 대한 통찰에 따른 것이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명칭이 돌파이든, 부정이든 혹은 전복이든 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존 질서의 파괴와 새로운 비전의 제시이다. 따라서 혁명정권은 혁명의 성공과 동시에 혁명정권으로서의 속성을 탈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스스로가 파괴해야 할 기존 질서의 수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혁명정권은 혁명의 성공과 함께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며 결국 혁명성의 완화, 즉 ‘일상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마이어(Meyer 1967)의 권위의 유형론, 터커(Tucker 1967)의 탈급진화론, 로웬탈(Lowenthal 1970)의 발전과 유토피아의 딜레마, 조윳(Jowitt 1975)의 동원정권에서 포섭정권으로의 변화, 찰머스 존슨(Johnson 1970)의 목표문화에서 전이문화로의 변화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일상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의 결과들이었다.

색슨버그는 권위의 일상화에 주목한 상기한 흐름을 이어 받아 ‘정당성의 이론’ (theory of legitimacy)을 내세우며 정당성의 성격과 강도를 변수로 사회주의 정권을 전체주의, 실패한 전체주의, 초기 후기전체주의, 동결된 후기전체주의, 성숙된 후기전체주의 등으로 구분하는 유형론을 제시했다(Saxonberg 2013, 13, 29-30). 특히 살아남은 사회주의 정권의 사례 연구에 있어 색슨버그가 주목한 단계는 상기한 구분 중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쇠퇴한 ‘후기 전체주의’ (post-totalitarianism)의 유형이다. 그리고 그는 해당 단계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제로 ‘실용주의적 수용’ (pragmatic acceptance)을 제시한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쇠퇴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사회계약’ (social contract)으로, 현 체제에서 일정한 혜택을 입고 있는 대중들이 정권을 대내외적 제약 하에서 ‘그럭저럭’ (reasonably well)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성과를 통해 지속되는 ‘정당하지 않은’ 중국의 지속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2)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비교정치와 지역학의 발전적 결합을 시도한 대표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로웬탈(Lowenthal 1970), 엑스타인(Eckstein 1970), 암스트롱(Armstrong 1965), 터커(Tucker 1967), 조윳(Jowitt 1975), 호프(Hough 1977), 스킬링(Skilling 1966), 화이트(White 1986), 레인(Lane 1968), 마이어(Meyer 1967), 릭비(Rigby 1980, 1982), 브레슬라우어(Breslauer 1982).

그러나 그의 분석들은 상기한 세속적 성취에 기반한 사례를 벗어난 반대의 상황, 즉 극심한 실패를 겪고 있는 생존 사례들까지 포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가 쿠바와 북한을 위의 분류에 포괄되지 않는 술탄주의(sultanism) 혹은 가산제(patrimonialism)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또한 상기한 시도는 특정한 지역전문가의 시선에서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려 했다는 점에서 각 사례분석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²³⁾

이에 반해 해당 지역의 전문가들이 각 장을 맡고 편자가 1장을 통해 일반이론의 구축이 아닌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한 변수와 동학을 종합하는 형태를 취한 디미트로프 편(Dimitrov ed 2013)은 보다 확장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해당 연구의 의의는 비교사회주의 연구의 장을 연 가장 중요한 연구서라 할 수 있는 찰머스 존슨 편(Johnson ed 1970), 즉 *Change in Communist Systems*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이 부상하게된 핵심적인 계기는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연설 이후 사회주의권이 겪은 중대한 변화와 분화였다. ‘평화적 공존론’과 ‘평화적 이행론’의 제기를 시작으로 하여 1961년 소련 공산당 22차 당대회에서의 ‘계급혁명의 종식’과 ‘전 인민의 당’ 선언으로 정점을 찍은 소련 발 변화의 파고는 사회주의권 전체를 아우르는 격렬한 논쟁을 유발했던 것이다.²⁴⁾ 특히 상기한 이데올로기 논쟁과 병행된 일련의 정치경제적 개혁조치들은 이른바 ‘홍’(紅, red)에서 ‘전’(專, expert)으로의 변화, 즉 유토피아에서 발전으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더 이상 정적인(static) 전체주의의 분석틀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66년 미국 정치학회에 조직된 ‘비교공산주의연구 기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ttee for Comparative Communist Studies)는 이에 대한 학계의 대응이 본격화된 결과였다. 그리고 2년 후인 1968년 23명의 일류 정치학자 및 역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23) 원래 아시아 전문가인 마크 톰슨(Mark Thompson)과 쿠바 전문가인 후안 로페즈(Juan Lopez)와 공저로 계획되어있던 해당 저서는 필자들의 개인사정으로 동유럽 전문가인 색슨버그가 모두 쓰게 되었다고 한다(Saxonberg 2013, ix~x).

24) 흐루시초프 시대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브레슬라우어(Breslauer 1982)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치개혁과 관련된 국내의 주요한 연구물로는 박수현(1997)이 유용하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완성되어 출판된 흐루시초프의 회고록은 당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Khrushchev 2005; 2006; 2007).

모여 2달여 동안 상기한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찰머스 존슨 편은 바로 해당 학술회의의 논의를 종합한 것이었다(Johnson 1970, Preface).

이들이 주목한 개념은 그 제목에서도 잘 나타나듯 ‘변화’(change)였다. 존슨에 따르면 당시의 지배적인 모델이었던 전체주의 분석들은 사회주의의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분명하게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변화를 다루어 왔으며, 특히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들을 포착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²⁵⁾ 따라서 이들은 변화한 현실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공산주의 체제는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Johnson 1970, 2). 이후 비교사회주의 분석들은 전체주의 분석들과 경쟁하며 많은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해당 연구 성과가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난 후 비교사회주의 분석들은 사회주의 자체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상기한 질문이 여전히 유의미할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는 또 다른 현실 앞에 섰다. 디미트로프 편은 바로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한 학계의 대응이었다. 1966년 ‘비교공산주의연구 기획위원회’가 설치된지 정확히 40년 후,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지 20년이 넘게 지난 2006년, 일군의 학자들이 미국 정치학회 연례 모임에서 상기한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를 모았고 그 결과 이듬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해당 컨퍼런스의 타이틀은 바로 책의 제목과 동일한 “왜 공산주의는 붕괴하지 않았는가?”(Why Communism Didn't Collapse: Understanding Regime Resilience in China, Vietnam, Laos, North Korea, and Cuba)였다. 디미트로프 편이 바로 해당 컨퍼런스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저자들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건 해당 연구 성과가 도출된 이와 같은 과정은 앞서 살펴본 1960년대의 대응과 많은 면에서 닮아 있었다. “오직 미래만이 확실할 뿐 과거는 언제나 변화한다”는 사회주의권의 오래된 농담으로 시작한 찰머스 존슨의 자성의 목소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Johnson 1970, Preface).

25) 첫째, 자율적인 독재자에 의한 일당지배에서 ‘집단적 지배’(collective leadership)나 ‘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 전위’(a party-dominated national front)로의 변화, 둘째, 엘리트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테러에 의존하는 정도의 변화, 셋째, 중앙집중화된 명령경제(command economy)에서 반(半) 집중화 관리체제(semi-centralized managerial system) 혹은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로의 변화, 넷째, 외부로부터 공산주의가 이식된 경우 위성국에서 독립국으로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Johnson 1970, 3).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정보보다 더욱 주목해야할 지점은 바로 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개념의 유사성이다. 앞선 존슨 편의 핵심 개념이 ‘변화’ 였다면 디미트로프 편이 주목하는 개념은 적응(adaptation), 보다 정확히는 “지속된 적응적 제도 변화”(continuous adaptive institutional change)이다. 즉 현 체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체제자체의 속정보다는 그 체제의 적응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Dimitrov 2013, 3~4, 16). 이는 변화에 주목한 앞선 존슨 편의 문제의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은 40여 년 간 발전된 비교정치의 최근 연구성과들을 적용하여 적응의 핵심적인 기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개혁, 이데올로기, 포섭(inclusion), 수평적·수직적 책임성(accountability) 등이 그것이다(Dimitrov 2013, 6).²⁶⁾ 즉 ‘생존한 사회주의’들은 그저 버텼거나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적응’의 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체제 내로 수용하는 다양한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주요한 적응의 기제 중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된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²⁷⁾ 이데올로기 편의 총론을 맡은 티스마노누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한 ‘민족주의적 스탈린주의’(National Stalinism)로 정의 내린다(Tismaneanu 2013, 87). 특히 북한에 대한 사례분석 편을 맡은 암스트롱은 북한의 생존과 이데올로기적 적응의 기제로서 민족주의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Armstrong 2013).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의 점진적 이탈과 민족주의의 단계적 강화의 결과로

26) 적응의 매커니즘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부분은 일종의 ‘학습효과’의 문제이다. 티스마노누는 붕괴로 이어진 탈스탈린화와 성공적인 개혁개방으로 이어진 탈마오화를 비교하면서 후발주자로서 중국이 소련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음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Tismaneanu 2013, 71).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종의 개발독재국가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한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게 매우 유의미한 선행사례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주목해야할 지점이라 판단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론을 통한 체제변화를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발독재국가로의 변화로 해석한 연구로는 조영남(2009)을 참조할 것.

27) 북한 이외에도 중국, 쿠바, 베트남 역시 중요한 사례로 언급된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외세와의 무력투쟁을 거친 내생적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으로 외부의 적에 대한 공포가 해당 정권이 민족주의를 정권의 무기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함께 쿠바가 주요 사례로 제시되는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쿠바의 미래는 이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비교사례가 될 듯하다(Dimitrov 2013, 26-28). 또한 브라운 역시 중국, 베트남, 쿠바의 예를 들며 혁명의 내생성 여부(indigenous revolution or non-indigenous revolution)가 사회주의의 생존과 민족주의의 상관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주장한다(Brown 2009, 586).

서 일종의 열린 이데올로기였고, 선군정치를 거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완전히 결별한 현재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군사적 민족주의’ (militant nationalism)를 핵심으로 하며 이는 시장과의 결합 가능성마저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티스마노누와 암스트롱의 분석은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먼저 티스마노누의 경우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공산주의체제의 붕괴”(Ideological Erosion and the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s)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관심이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의 동학으로서의 적응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소련과 동구의 사례를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의 압력, 즉 이데올로기적인 쇠퇴가 사회주의 붕괴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그에게 중국은 여전히 예외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그의 주장은 중국이 흐루시초프 이래의 수정주의와 그것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쇠퇴가 가져올 위기를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극복해왔다는 것이다. 지식인의 포섭(co-optation)과 민족적 정체성의 강화가 그것이다(Tismaneanu 2013, 85). 이러한 차원에서 그의 분석은 이데올로기 영역 ‘내’에서의 적응의 과정을 추적하고 그 요소로서 민족주의의 활용을 분석하고 있기보다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보완할 이데올로기 ‘외’적 변수로서 ‘민족담론’을 거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그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에게 있어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주요한 분석 대상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민족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루마니아와 함께 가장 민족적인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로서 제시되고는 있으나 민족주의와 생존의 관계는 적절히 분석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만 지속적인 탄압과 개인숭배, 그리고 주체사상을 통해 생존해온, 그러나 적응에 ‘실패’한 사례로 소멸이 예정된 국가일 뿐인 것이다(Tismaneanu 2013, 87-97). 요컨대 소련, 중국, 북한에 대한 그의 비교 분석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적응’이라는 동일한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분석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암스트롱은 앞선 티스마노누와 달리 이데올로기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편저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민족주의와의 상관관계 속에 통시적 관점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적응에 대한 그의 분석은 비교정치, 혹은 비교

사회주의의 보편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천착한 예외론에 기반하고 있다.²⁸⁾ 그가 북한의 민족주의를 유교적 전통과 연관 짓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로 재구성한 결과라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각을 잘 보여준다(Armstrong. 2013; 115).²⁹⁾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결코 북한에만 특수한 현상이 아니며 일시적인 현상은 더욱 아니었다. 비록 그 성패와 양상은 달랐으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적응의 과정은 사회주의 일반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이다.³⁰⁾

또한 그의 분석은 사후적인 동시에 기술적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그는 짧게는 1960년대까지, 길게는 1980년대까지도 명백히 존재한 북한 내의 반(反)민족주의적 정서와 주장에 대한 증거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주체노선, 혹은 주체사상이 지닌 민족주의적 특성들만을 ‘선별적’으로 기술하며 북한이 ‘원래’ 민족주의적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Armstrong 2013, 103).³¹⁾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은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1980년대 이후의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극단의 연구경향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족주의를 둘러싼 모순과 긴장, 그리고 그러한 긴장과 모순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동시에 상기한 긴장과 기획들이 북한의 민족주의의 현재적 ‘내용’에 미친 영향들을 드러내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요컨대 암스트롱의 연구는 기존의 많은 북한 민족주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민족주의 부상의 과정이 민족주의나 아니냐의 단순한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반(反)민족주의적 정당성의 자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족주의가 지닌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전환 및 통제하려는 매우 정교한 ‘적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포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가 본 연구가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민족주의

28) 다음 문장은 이와 같은 시각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North Korea's method of regime survival is unique.”(Armstrong 2013, 118)

29) 또한 상기한 역사적, 문화적 접근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유교문화권인 중국, 베트남과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단계에 대한 설명과 달리 군사적 민족주의로 규정한 선군정치의 단계는 피포위 의식을 들어 쿠바를 유사한 사례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일관성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Armstrong 2013, 118).

30)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31) 북한의 공간문헌을 근거로 한 수많은 북한 민족주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해온 바와 같이 적어도 1960년대 초반내지 1970년대까지도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은 이를 ‘부르주아적 전염병’으로 간주한 스탈린의 민족주의관과 일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와 사회주의의 결합과 긴장, 그리고 이와 같은 변수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회복탄력성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보편적인 구조와 압력들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이라는 특수성의 차원에서 북한 민족주의의 구체적 경험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려는 이유라 하겠다.

제3절 연구의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문헌분석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지조사 및 인터뷰 등이 불가능한 북한 사례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국가 민족주의’라는 개념에서 드러나듯 본 연구가 주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가 ‘국가’라는 점은 접근가능한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당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공식 간행물이라는 점이 갖는 근본적 한계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지점이라 판단된다. 특히 자료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적이다.

첫째, 당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인 『근로자』이다. 해당 잡지는 수령을 비롯하여 당정군의 핵심 인사들이 직접 필자로 등장하여 해당 시기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해설과 견해를 모아놓은 자료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특히 정치이론잡지로서의 성격에서 보듯 정치사상영역을 핵심적인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영역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기한 잡지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로 사후적인 윤색과 조작의 가능성에서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시계열적인 변화를 추적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둘째, 새로 발간된 『김정일 선집』(증보판)이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시작된 2009년 발간되기 시작하여 2015년 25권을 마지막으로 출간이 완료된 해당 자료는 기존의 『김정일 선집』이 2004년까지의 노작만이 실려 있고 그 편수 역시 377편에 그친데 반해 김정일 시대 전체를 포괄하는 논문 및 담화문 870편이 실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일의 노작을 상당수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북한 자료 일반이 가지고 있는 사후적 윤색과 조작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해당 자료의 근본적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자료를 통해 상기한 가능성들에 대한 검증이 일정정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에서 ‘수령’이 갖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사후적 윤색과 조작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시작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자료라는 점에서 상기 자료는 충분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민족, 민족주의 관련 간행물들이다. 김정일에 의해 민족주의가 공식 복권된 2002년을 즈음하여 북한에서는 해당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단행본들이 다수 발간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2년 민족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전문 잡지로서 『민족문화유산』이 창간된 것 역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로 사전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기존 연구의 자료 풀을 벗어나 상기한 다양한 단행본과 잡지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려 시도했다.

제4절 연구의 구성

이하의 본문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 <이론과 비교>는 적응, 국가민족주의, 회복 탄력성 등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이와 같은 개념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들을 제시한다.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회복 탄력성의 상관관계, 이러한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정당성의 정치의 동학,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결합에서의 다양성의 원인이 되는 계급과 민족의 근본적인 긴장 등이 그것이다. 또한 상기한 가설들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 소련과 중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교사례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제3장 <호명 이전의 북한 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은 우리민족제일주의의 등장을 통해 민족과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1986년 이전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시기를 다룬다. 해당 시기는 주체, 우리식의 호명을 통해 일종의 ‘정당성의 정치’가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온 시기로서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의 등장은 이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공간과는 차별적인 맥락에서 독자적인 변화를 겪어온 민족, 민족주의가 상기한 기존의 정당성의 자원들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결과라는 것이 3장의 요지이다.

제4장 <민족>에서 ‘민족주의’로의 과도기: ‘김일성 민족’의 건설>은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의 등장을 통해 본격화된 민족주의의 부상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정치적 계승,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초유의 위기 국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으로 나타났는지를 다룬다. 해당 시기는 김일성 민족론을 통한 민족재건설이 전면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긴장 속에 아직 민족주의의 전면적인 복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해당 장에서는 특히 탈냉전 직후 진행된 ‘자주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해석, 100부작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로 기획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갖고 있었던 함의, 그리고 수령의 사망과 유훈통치를 거치는 기간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이 민족담론을 어떻게 규정하고 활용해왔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5장 <민족주의의 호명과 애국주의: 선군, 강성대국, 김일성조선>은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개막과 함께 등장한 선군노선과 강성대국론이 강력한 민족주의와 결합해나가며 새로운 애국주의로 공식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선군노선과 강성대국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밝힌다. 이어서 특히 김정일에 의해 민족주의가 공식적으로 복권된 2002년을 즈음하여 상기한 흐름이 전면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대집단체조 아리랑의 함의 등을 살펴본다.

제6장 <결론>에서는 상기한 논의를 종합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 시기의 북한 민족주의의 양상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해당 장에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의 지속적인 부상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제2장 이론과 비교

본 장에서는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석에 필요한 주요한 개념과 가설들을 살펴본다. 또한 이와 같은 개념과 가설이 북한을 넘어선 비교사회주의적 차원에서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엇갈린 운명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 즉 ‘소멸된 제국 소련’과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의 경험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민족주의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 왔는지 살펴본다.

제1절 민족주의의 정치와 사회주의 국가

1. 국가와 민족주의: 주요 개념들

1) 적응(Adaptation)

비교사회주의 연구와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적응’ (adaptation)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응’의 개념을 통해 디미트로프 편이나 네이션 등의 연구자들이 주목하고자 한 지점은 ‘생존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단지 그럭저럭 버텼거나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대응을 통해 정당성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체제 내로 수용하려 시도해 왔다는 것이었다. 상기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적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첫째, 적응이란 일차적으로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비교사회주의의 부상과 함께 주목받아온 적응의 개념은 전체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 속에 1960년대 비교사회주의 학자들이 천착한 ‘사회

주의 체제의 내적인 변화와 분화'에 대한 분석 필요성에 대한 대응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즉 사회주의 체제를 전체주의론의 틀 속에서 불변의 무엇으로 간주하거나 민주화론의 관점에서 이행 이전의 무엇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분석들과 개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사회주의 체제 나름의 발전 내지 변화의 움직임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착안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적응의 가장 일차적인 요소는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둘째, 적응이란 모든 변화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정을 통한 점진주의의 방식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것들에 대한 '부정' (negation)에 의한 '돌파' (break through)의 방식과 '인정' (recognition)을 통한 '점진주의' (muddling through)적 방식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변화 유형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적응은 후자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이는 사회주의의 체제 개혁 과정에서 상기한 '방식'의 차이가 변화의 결과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응의 영역으로 가장 주목받아온 것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행을 전제로 한 민주화, 시장화와는 차별적이나 사회주의 국가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를 시도함으로써 체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Dimitrov 2013, 3-4, 16; Nathan 2003, 2).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제도가 아닌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적응의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 점진적 변화가 용이한 제도적 개혁들과 달리 이데올로기 영역은 체제 정당성의 근본적인 기반이 되는 부분으로 변화가 어렵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¹⁾

그러나 1978년 이래 중국의 개혁과정은 탈-이데올로기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재기능화' (refunctionalization of ideology)와 병행되었다는 추탕(Tsou Tang)의 주장이나, 소련과 중국의 개혁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적응의 과정을 거친'(adapted) 사회주의의 교의들이 정책적 혁신과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통한 정치적 안정성의 유지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는 순안(Sun Yan)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Tang Tsou 1986, xxxv-xxxviii; Sun 1994, 1995). 중국의 당교 교육과정 중 3개의 기본 과목 전체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중국

1) 이러한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적응을 "제도적 변화"(institutional change)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Dimitrov, 2013: 3-4).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과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교양과 집단 총화를 부활 및 강화시킨 최근 시진핑의 시도에서 보듯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적응의 과정을 거쳐 여전히 체제 정당성의 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이희옥 2016).²⁾

이와 같은 차원에서 민족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나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과정을 ‘적응’의 주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전제이다.³⁾ 물론 사회주의와 같은 혁명적 운동과 달리 민족주의는 순수이데올로기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천이데올로기를 결여하고 있어 조직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Schurmann 1968, 23).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민족주의 자체만 볼 때에는 타당하나,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볼 경우 그 한계가 뚜렷하다.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와의 갈등과 융합의 과정을 통해 분명한 실체를 지닌 요소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2차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갖는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자기 완결적 논리구조를 지니지 못한 열린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갖는 한계는 분석적 개념으로서 민족주의가 갖는 ‘무용함’이 아닌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족주의와 관련한 우리의 질문은 “민족주의가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회 이데올로기들과 결합하느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임지현 1999, 24).

예를 들어 중국 문화혁명에서 지속된 계속혁명론은 민족주의의 부상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론’ 혹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으로 변모하며 계급에서 인민으로의 변화를 겪었다. 북한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을 대체한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강성대국(국가)’론을 통해 중국과 유사한 변화를 겪었다. 물론 중국의 변화는 이후 혁명의 ‘적(敵)’인 자본가를 포섭한 ‘3개 대표론’으로 귀결된

2) 중국 당교의 기본 교육과정은 3개의 기본과목과 5개의 당대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5개의 당대과목은 당대 세계 경제, 당대 세계 과학기술, 당대 세계 법제, 당대 세계 군사, 당대 세계 사조이다(이희옥 2016).

3) 적응의 개념을 통해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로는 안경모(2015)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달리 해당 연구는 민족주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4)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는 함께 조직 이데올로기를 구성하지만, 각각의 기능은 다르다. 순수 이데올로기는 “가치”, 즉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념을 나타내는 반면 실천 이데올로기는 “규범”, 즉 행동을 처방하고,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들을 의미한다(Schurmann 1968, 38-39).

데 반해, 북한은 ‘선군정치’를 거치며 인민과 혁명적 군인이 함께 강조되는 굴절을 겪었다.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자체는 일반적이었으나 구체적인 양상들은 국가별 특수성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보편적 이론 자원들과 함께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특수한 사례 분석을 결합하려는 이유이다.

요컨대 ‘적응’의 개념은 이행론의 진화론적 전제,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기된 탈이데올로기화와 재이데올로기화의 이분법을 넘어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Actually Existing Socialism)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

2) 국가민족주의(State Nationalism)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민족주의는 어떤 민족주의인가? 민족과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그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악명이 높다. 민족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나라마다 심지어 개개의 사전마다 다르며 민족주의 역시 유구한 세월동안 다양한 민족들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만큼이나 다양해서 그 핵심교리를 추출하거나 이론적으로 정형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장문석 2007, 41; 임지현 1999, 24).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에 대한 과학적 정의(scientific definition)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시튼 왓슨의 고백을 비롯하여 베네딕트 앤더슨, 앤서니 스미스, 어니스트 겔너, 마이클 헤쳐, 허친슨과 스미스, 브라이언 젠킨스 등 민족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의 호소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분석적 개념으로서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Seton-Watson 1977, 5; Anderson 2006, 3-4; Smith 1998; Gellner 1983, 1-8; Hechter 2004, 5; Hutchinson and Smith 1994, 4; Jenkins 2011, 8-13).

이러한 차원에서 헤쳐(Hechter 2000: 5-9)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무리한 정의가 오히려 개념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설명력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민족과 민족주의가 아닌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연구 목적을 위해 적절한 요소들이 배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 즉 유형화를 통해 민족주의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분석적 개념으로서 민족주의의 활용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질문은

5)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사회주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강조한 루돌프 바로(Rudolf Bahro)의 개념이다(Bahro 1977).

‘어떤 민족주의인가?’이며 분석의 성패 역시 사전적 평가가 아니라 분석의 결과가 얼마나 유용한가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정의와 개념 자체에 대한 일반론을 탐구하기 보다는 민족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사례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과 생존의 기저에 있는 이데올로기적 적응의 과정과 그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는 상기한 헤처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민족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좁혀 구체적인 유형을 차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개념은 바로 ‘위로부터의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민족주의, 즉 ‘국가민족주의’ 개념이다.⁶⁾

국가민족주의는 앤더슨이 시튼-왓슨(Hugh Seton-Watson)의 개념을 인용하여 발전시킨 ‘관주도 민족주의’ (Official Nationalism), 혹은 Jacques Rupnik, Pierre Kende, George Mink 등이 개념화한 ‘권력형 민족주의’ (Nationalisme d'appareil)(윤덕희 1988b, 64) 등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즉 국가민족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동학’에 주목하는 대중 민족주의(Popular Nationalism)나 사회민족주의(Nationalisme de Société) 개념들과 달리 국가 혹은 정권으로부터의, 즉 ‘위로부터의 동학’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대중과 시민사회가 아닌 국가에 초점을 맞춘다.⁷⁾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국가민족주의라는 개념에 내재된 전제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민족주의를 의도적인 정치적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⁸⁾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정의들을 관통하는 매우 드문 전제 중 하나가 “무엇보다 민족주의는 정치적”이라는 인식이라는 헤처의 지적처럼 민족주의가 갖는 정치적 성격은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Hechter 2004, 6).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면서도 다음의 지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 연구의 관점이 ‘모든’ 민족주의가 그러하다는 주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상기한 관점의 이면에는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정체성으로 볼 것인가?’의 논쟁과 관련하여

6) 북한의 민족주의 분석에 있어 국가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활용한 드문 예로는 서동만(2000)을 들 수 있다.

7) 국가민족주의란 개념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중국 민족주의와 관련한 자오 슈셴(Zhao Suisheng)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의 대비 속에 중국의 민족주의를 국가민족주의(state nationalism) 또는 국가주도민족주의(state-led nationalism)로 규정한 일관된 분석을 제시한다(Zhao 2004, 36; 2005).

8) ‘기획’이란 표현은 민족주의를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nationalism as discourse), 기획으로서의 민족주의(nationalism as project), 평가로서의 민족주의(nationalism as evaluation)로 구분한 캘훈의 용례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한다(Calhoun 1998, 6).

전자를 지지하는 입장이 내재되어 있다.⁹⁾ 본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일반론과 관련하여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즉 본 연구에서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국가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취한 이유는 다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양상과 그것이 해당 체제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의식에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주체로서 국가에 주목한다. 민족과 국가를 연결 짓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자 근대적인 의미의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인 ‘민족 국가’ (nation state)라는 개념이 갖는 일상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Linz 1993). 국가와 민족의 일치된 경계를 암시하는 ‘민족 국가’ 대신 “민족주의 원리에 따라 정당화되고 그 구성원들이 비록 문화적 동질성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민족적 통일성과 통합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라는 보다 중립적인 의미의 ‘민족적 국가’ (national State)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스미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과 개념의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Smith 2010, 27). 실제 민족주의를 정치적 기획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정치적 주체는 국가 이외에도 다양하다. 예컨대 민족주의를 ‘정치의 한 형태’ (a form of politics)로 정의하며 해당 관점을 대표해온 학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브로이의 경우 행위자로서의 국가 혹은 정부에 주목한 ‘국가 주도 민족주의’ (state-led nationalism)나 ‘정부 민족주의’ (governmental nationalism) 개념들을 통해 민족주의에 접근할 경우 일반적인 정치이론에서 전제하는 합리성(self-interest)에 근거한 국가 행위들과 민족주의적 행위들 간의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히틀러 등의 사례에 천착한 도덕적 접근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국가에 대항한 민족주의’ (nationalist oppositions to the state) 사례들에 보다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Breuille 1994, 1-9). 본 연구는 행위자로서의 국가에 주목하는 관점이 갖는 이와 같은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국가를 적절히 정의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국가주의와 구분되는 민족과 관련한 특정한 상징과 담론, 정책들에 주목할 경우 국가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충분한 분석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본 연구는 베버(Max Weber)와 오토 힌츠(Otto Hintze)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9) “어느 인구 집단 구성원들의 일부가 그 집단이 실제적이거나 혹은 잠재적인 민족을 구성한다고 믿으며 그 자율성, 통합,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 정의한 스미스의 주장이 전자를 대표한다면 민족주의란 단순한 정치적 교의가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 정의한 캘훈은 후자의 인식을 보여준다(Smith 2010, 19; Calhoun 1998). 두 가지 시각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장문석(2011, 58-63)이 유용하다.

국가를 “특정한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제력을 독점하는 동시에 집단, 계급, 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조직’ (organization)’ ” 과 이를 운영하는 통치 엘리트의 결합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국가’ (state as actor)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는 스카치폴의 정의를 차용하고자 한다(Skocpol 1985). 이러한 정의는 국가를 전적인 사회의 반영물로 간주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속성을 소거해버린 정통 맑시즘의 국가론이나 다원주의 국가론과 차별적일 뿐 아니라 국가민족주의 일반에서 발견되는 상징 조작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사회를 초월한 도덕적 이상이자 하나의 전체로서 규정함으로써 국가민족주의의 이상과 실제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헤겔리안적인 국가론과도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¹⁰⁾

3) 회복탄력성(Resilience)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국가의 ‘회복탄력성’ (state resilience)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당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정치학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쓰여 온 개념은 ‘안정성’ (sta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안정성은 체제, 정권, 국가 등과 쌍을 이뤄 해당 변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¹¹⁾ 그러나 회복탄력성과 안정성은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차별적이며 각각의 차별성은 본 연구의 주장, 분석 디자인, 사례의 특성 등과 연동된다.¹²⁾

10) 물론 본고 역시 국가민족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국가와 사회의 일체화 혹은 국가의 신성화와 헤겔의 국가론이 갖는 ‘표면적 유사성’이 양자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전체주의적 국가관을 입론한 칼 슈미트의 국가론과 헤겔의 국가론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는 남기호(2014)가, 헤겔의 국가론에 대한 간략한 요약으로는 박상섭(2008, 79-82)이 유용하다.

11) “The Political Sustainability of European Monetary Union”(Mckay 1999)나 “The Sustainability of Political Democracy: Lessons From South America”(Remmer 1996) 등의 논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연구자들은 안정성(stability) 대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논문들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었다.

12) 이하의 구분은 회복탄력성이란 단어가 학문적 용어로 재탄생한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고 판단되는 생태학(Ecology)에서의 개념정의, 특히 해당 논의의 장을 연 세미나 페이퍼라 할 수 있는 홀링(Holling 1973)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의는 이후 정치학에서

첫째, 안정성은 동요(fluctuation)가 적은 특정한 ‘균형으로의 복귀’(return to an equilibrium)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 회복탄력성은 ‘변화를 흡수’(absorb changes)하여 생존을 지속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적응의 과정을 포함한다.¹³⁾ 이와 같은 특성은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이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본 연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둘째, 안정성은 주체의 내·외부를 포괄하는 어떤 ‘상태’(conditions)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의미가 강한 반면 회복탄력성은 주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capability)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국가의 안정성은 국가 스스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반발의 정도,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적·비군사적 개입과 위협의 정도 등과의 복합적인 상호관계 속에 의해 결정되나 국가의 회복탄력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내재적 역량에 좌우된다. 해당 특성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국가의 입장과 정책, 즉 국가민족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분석 디자인과 연계된다.

셋째, 앞선 두 번째의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일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성에 비해 회복탄력성은 특정한 위기상황을 계기로 드러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안정성을 건강에, 회복탄력성을 체력에 비유한다면 비교적 항시적으로 관찰되는 ‘건강’ 상태에 비해 ‘체력’은 설사 그것이 인위적이더라도 한계에 근접해야 드러난다. 따라서 국가의 회복탄력성 역시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과 연결 지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본 연구가 국가의 생사를 가늠하는 극적인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가 회복탄력성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이는 논리적으로 크게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적인 방식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고 해당 변수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유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면 체력측정을 하지 않고도 영양섭취 정도와 규칙적인 운동 여부만을 확인함으로써 체력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으로 회복탄력성을 ‘구

해당 개념들이 통용되어온 맥락과 본 연구의 독자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홀링의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홀링의 개념정의를 포함하여 생태학에서 해당 개념의 변화 발전을 소개한 대표적 연구로는 월커 외(Walker et al 2004, 2006a, 2006b)가 유용하다.

13) 이와 같은 차이는 ‘생존’(survival)과의 차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즉 생존이란 개념은 결과만을 뜻할 뿐 ‘과정’과 ‘정도’(variation)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회복탄력성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성' 하는 변수들을 선별하고 해당 변수를 조작화하는 방식이다. 가령, 체력테스트, 근육량, 평균 심박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체력을 수치화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회복탄력성 역시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이 주로 쓰여 왔다.¹⁴⁾ 예컨대 네이션은 중국 국가의 회복탄력성의 '원인' (cause)으로 제도화를 들고 있으며 권위주의 국가 일반의 회복탄력성을 다루고 있는 헤스(Steve Hess)의 경우 회복탄력성의 '기반' (source)으로 경제적 성장, 강력하고 제도화된 정당, 인접 국가의 정치체제 등을 들고 있다(Nathan 2003; Hess 2013).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직접적인 '측정' 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 및 목표와 연관된다.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는 민족주의라는 특정한 변수가 회복탄력성과 갖는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함이지 회복탄력성을 결정하는 변수들과 관련된 일반이론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諸)변수를 발굴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민족주의라는 변수가 미친 영향의 방향과 성격을 논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에서 추정한다.

14) 립셋(Seymour M. Lipset)의 고전적인 논의, 그리고 뒤 이은 수많은 연구성과들에서 공유되어온 안정성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 경제적 성과는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라는 립셋의 논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그 자체로 안정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requisite)에 해당한다(Lipset 1959). 드물지만 안정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수화하려는 대표적인 시도로는 *Foreign Policy*에서 개발한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수는 치안 유지력과 집단 간의 갈등 등 안정성을 구성하는 변수와 빈곤과 경제침체, 정부의 정당성 등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2.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적용과 주장

1)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회복탄력성’

그렇다면 상기한 개념들을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장들은 무엇인가? 먼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국가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해당 변수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앞선 디미트로프 편(Dimitrov ed 2013)에서 민족주의는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수니(Suny 1993)와 베이싱어(Beissinger 2004) 등은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민족주의를 들고 있다. 또한 심지어는 중국, 베트남, 쿠바를 근거로 민족주의를 사회주의 생존의 비결로 제시하는 동시에 동유럽을 사례로 민족주의를 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브라운의 연구처럼 동일한 저술에서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기도 한다(Brown 2009, 585-588). 과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정권의 회복탄력성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본 연구의 주장은 ‘조건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지배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와의 결합 방식, 그리고 해당 민족주의의 주체와 성격의 문제이다. 즉 민족주의 일반이 아니라 ‘적응적 국가민족주의’라는 민족주의의 특정한 유형, 그리고 그것이 사회주의와 결합한 특수한 방식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먼저 결합방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적응’ (adaptation)의 방식, 즉 기존의 것들에 대한 ‘부정’ (negation)에 의한 ‘돌파’ (break through)의 형태가 아닌 ‘인정’ (recognition)을 통한 ‘점진주의’ (muddling through)적 변화의 방식이 채택되는 조건에서 민족주의가 정권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¹⁵⁾ 이데올로기의 독점과 이에 기반한 ‘독재’를 통해 유지되는 ‘강한 국가’ (strong state)로서의 특성은 역설적으로 완결성의 훼손에 매우 취약한 ‘약한 국가’ (weak state)를 낳는 원인

15) 돌파의 개념은 조윌(Jowitt 1971, 7)에서 차용하였다. 민족건설(Nation Building)을 돌파와 정치적 통합(Political Integration)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 돌파는 혁명적 엘리트들에 의해 자신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혹은 실제적 권력의 중심으로 간주된 가치, 구조, 행위들을 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되어 왔으며 따라서 변화가 기존의 정당성의 기반을 ‘부정’ 하며 ‘돌파’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의도와 달리 체제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Verdery 1991; Sun 1995). 이행이 아닌 더 나은 사회주의를 위한 개혁을 목표로 했던 수정주의가 엄청난 폭발력으로 국가적 성상파괴(national iconoclasm)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로 이어지며 개혁의 주체 자체를 소멸시킨 ‘고르바초프 현상’(Gorbachev Phenomenon)의 이면에는 바로 이와 같은 취약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생존 비결에는 점진주의를 통한 취약성의 완화, 예컨대 ‘공칠과삼론’(功七過三論)으로 상징되는 ‘인정을 통한 극복’이라는 특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Tismaneanu 2013, 67, 80; 안경모 2015).

다음으로 주체 및 성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지나친 단순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국가민족주의’ 개념의 도입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회복탄력성과의 조건부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특성과 연관된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지적처럼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지향의 결합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적·집단적(national·collective) 지향과 대중적·개인적(popular·individual) 지향이 그것이다(Morgenthau 1957, 481-482). 이러한 두 가지 지향의 발전적 결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전면적 해방의 시기로서 혁명과 민족국가건설의 국면이다. 프랑스 혁명 초기의 애국주의는 그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인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자유와 평등의 지향은 국경을 넘어선 것이었고 국가주권의 논리 역시 보다 큰 틀의 공화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혁명 이후 해당 애국주의가 국가주의적 애국주의 혹은 배타적 열정민족주의로 변질되기 전까지 인민의 해방과 민족국가의 건설은 결코 모순되지 않았다(홍태영 2012, 197-232). 또한 제국주의와의 투쟁 속에 국가주권을 회복하는 한편 혁명을 통해 인민주권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실현하려 했던 민족해방혁명의 역사적 경험 역시 상기한 발전적 결합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국가의 건설 이후 해방의 언어로서의 민족주의의 특성은 정권에게 양날의 칼로 변모한다. 비록 그 스스로가 혁명의 결과이긴 하나 절대군주의 대체물로서 권력을 쥐는 순간 인민을 동원하는 기제로서 해방의 언어가 겨누었던 칼날이 이제 스스로를 향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 민족주의는 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국가의 회복탄력성의 강력한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국가를 붕괴시키는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 즉 해당 민족주의가 주체의 측면에서는 ‘국가에 의

한’ (by the state) 그리고 성격의 측면에서는 ‘국가를 위한’ (for the state) 민족주의로서의 특성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국가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전제로 한 국가민족주의와 사회민족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이를 통해 민족주의가 국가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변수로 작동한 사례와 부정적 변수로 작동한 사례를 구분하고자 한다. 요컨대 소련과 동구에서 민족주의가 체제를 파괴한 것은 그것이 종족과 사회를 매개로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며, 이와 달리 중국과 북한 등에서 민족주의가 회복탄력성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상기한 민족주의의 원심력을 ‘정치적 언어의 독점’(monopoly over the language of politics)을 통해 구심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⁶⁾

2) ‘정당성의 정치’로서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적응적 국가민족주의’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회복탄력성의 자원으로 작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국가에 의해 적절히 활용될 경우 민족주의는 왜, 그리고 어떻게 회복탄력성의 강력한 기반으로 작용하는가? 본 연구는 그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정당성의 정치’ (politics of legitimacy)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민족주의는 모든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변수인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내려는 국가의 의도적인 노력의 과정, 즉 ‘정당성의 정치’의 핵심자원으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보완 혹은 대체해 왔다는 것이다.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정치에 대한 통찰을 시작으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을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 규정한 바 있다. 그에 있어 ‘적과 동지의 구분’이란 전체로서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아닐지라도 도덕적인 것에서의 선과 악(good and evil), 미학적인 것에서의 미와 추(beautiful and ugly), 경제적인 것에서의 이와 해(profitable and unprofitable)처럼 정치적인 것을 그

16) 관련하여 민족주의의 다양한 유형들이 별도로 존재한다기보다 하나의 민족주의 안에 다양한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민족주의의 모호성과 가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재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젠킨스의 지적 역시 주목할 만하다(Jenkins 2011, 11). 예컨대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적 민족주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결합한 민족주의는 지배의 언어가 되는 반면 사회와 결합한 민족주의는 해방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것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 짓는, 다시 말해 정치적인 것에만 특정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분이다(Schmitt 2007, 25- 27). 요컨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은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적대(antagonism)이며 이러한 적대, 즉 적과 동지의 구분의 소멸은 정치 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chmitt 2007, 29, 35).

이와 같은 슈미트의 주장은 강렬함과 전형성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정치현실주의의 오랜 전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즉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서의 정치의 속성은 그의 표현을 빌면 어떠한 규범적, 도덕적, 추상적 바람과 이상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실재(reality)이자 실제적 가능성(real possibility)이다(Schmitt 2007, 28).

어찌 보면 이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보다 근본적인 정치의 본질, 즉 지배 그리고 지배의 정당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배는 복종과 대쌍 관계를 이루며 바로 이와 같은 복종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화 기제는 적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것이다(Schmitt 2007, 52). 요컨대 ‘적과 동지의 구분’, 다시 말해 ‘그들’과 구분되는 소속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우리’의 구성은 지배의 원동력인 ‘정당성의 정치’의 핵심적인 자원 중 하나로 작동해 왔다(Herz 1978, 318).

종교와 유사한 유토피아주의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는 바로 이와 같은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서의 정당성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체제이다. 슈미트의 지적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세계사회의 모든 투쟁을 부르주아라는 인류 최후의 적에 대한 마지막 투쟁으로 집약하고 있기 때문이다(Schmitt 2007, 74). 특히 레닌주의 정권 일반에 존재하는 종적 특수성으로 끊임없는 “전투의식”(combat ethos)의 재생산을 들고 있는 조윗(Kenneth Jowitt)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레닌주의 정치체제의 본질을 “올바른 노선”(correct line)의 유일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와 그 정점에 있는 당의 카리스마적 지배에서 찾고 있는 그에게 있어, 내외부의 적들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를 통한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서의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핵심적인 기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Jowitt 1992, 121- 126, 253).

이와 동시에 슈미트와 조윗의 통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양자 모두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서의 정치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일종의 ‘우리’ 만들기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적 통합”(organizational integrity)과 “정치적 통일체”(political entity)라는

17) 예를 들어 슈미트의 저작을 구체적인 정치적 실존에 근거하여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한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해제를 참조할 것(Strauss 2007, 97-122).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에게 있어 ‘적과 동지의 구분’은 단순히 정치의 정태적 특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가 아닌 이질적인 그 무엇’(the other)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의 ‘우리’ 만들기를 통해 전체로서의 정치적 공간, 즉 ‘국가’를 유지시키는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Jowitt 1992, 1- 2; Schmitt 2007, 27- 30, 39, 46).

정당성의 정치로서의 ‘우리’ 만들기, 그리고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갖는 함의에 대한 이와 같은 통찰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경계’(boundary)였던 ‘계급’의 표상이 희미해진 지금, 피할 수 없는 지배의 정당성의 위기를 겪어 온 살아남은 현존 사회주의들에서 왜 거의 예외 없이 민족주의가 호명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¹⁸⁾ 그것은 민족주의가 이전과 놀라우리만치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경계를 제공하며 해당 공백을 대체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역시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서의 정치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콘베르시(Daniele Conversi)는 민족주의가 일종의 ‘정체성의 구성’(identity construction)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대당(opposition)과 이질성(otherness)을 통해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Conversi 1995, 77- 80). 이러한 통찰은 ‘귀속의 정치’(the politics of belonging)의 개념을 통해 민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유발 데이비스(Nira Yuval- Davis)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경계를 통해 이전의 소속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속을 만들어 내고 유지시키는 정치적 기획으로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말하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의 근대 민족국가는 바로 그러한 기획의 결과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Yuval- Davis 2003, 127- 133).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특성이 국가라는 매개를 통해 일종의 정당성의 구축과정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음은 물론이다(Calhoun 1998, 66- 85).

또한 정당성의 독점성 역시 중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마르크스-

18) 물론 이는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괴리를 겪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탈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을 휩쓸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의 부상에서 볼 수 있듯이 탈냉전 이후의 세계적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적과 동지의 구분이 체제를 초월한 정치 일반의 속성이라 볼 때 민족주의의 소멸과 세계시민의 탄생을 예언한 홉스봄(Eric Hobsbawm)과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류의 낙관론이 현실화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패자만이 아니라 승자 역시도 ‘적’(enemy)을 잃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점일 수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지점이다. 홉스봄과 하버마스의 초기 낙관론과 이후의 수정에 대해서는 팔티(Palti 2001)를 참조할 것.

레닌주의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결정론적 역사관에 기반 한 ‘진리의 독점’ 구조이다 (Saxonberg 2013, 4).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백을 메우는 대체물은 단순히 정당성의 근원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정당성의 근원으로서의 독점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도 민족주의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대다수의 민족주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민족주의의 핵심 교의는 바로 민족이 정치권력의 ‘유일한’ (sole) 근원이자 모든 이해와 가치를 압도하는 ‘최우선성’ (priority)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Smith 2010, 35; Breuilly 1994, 2; Kohn 1944, 36-3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의 부상 과정 일반,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은 정당성의 정치의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본 논문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이다.

3)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주의를 둘러싼 긴장: 민족 vs. 계급

앞서 살펴본 정당성의 정치가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과 관련한 질문 중 ‘왜’와 관련된 답의 핵심 고려라면 ‘어떻게’와 ‘무엇’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족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긴장의 균열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마지막 주장이다. 계급노선과 민족주의의 긴장이 그것이다. 계급노선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탱해온 정당성의 핵심적 자원들로서 민족주의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결합하는 등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다이내믹스를 낳아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족주의의 부상과정은 바로 이와 같은 다이내믹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한 국가와 정권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져 왔다 (임지현 1999).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이미’ 존재해온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대응은 철저히 환원론적인 것으로 역사유물론의 ‘경제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거치며 이러한 약점은 부분적으로 보완되었으나 이른바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 스탈린 시대에 와서도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르주아적인 전염병’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단순히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노선을 통한 혁명의 지

향이라는 체제의 근본적인 정당성의 논리에 기반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마르크스(Karl Marx)의 선언이 상징하듯 민족과 국가는 적어도 도그마적으로는 명백한 ‘지양’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Marx 1991, 73).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활용은 기존의 정당성의 체계에 민족주의를 기계적으로 덧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상기한 ‘긴장’을 폭발적 원심력을 자극하는 위기의 촉매가 아닌 단단한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기회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바로 이러한 ‘결합’의 성패에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강조된 ‘사회주의(소비에트) 민족론’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정당화한 핵심 무기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였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쇼비니즘과의 차별화는 특수성에 대한 지향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언제나 보편성에 대한 지향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병기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¹⁹⁾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합의 구체적인 양상들은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주의의 내용과 특성, 그리고 효과를 결정짓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과 중국의 민족주의의 강화가 국가의 몰락과 부상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 사례나 중국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민족주의가 ‘내용적’으로 다른 것은 상기한 긴장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의 원인에 대한 ‘현재적’ 이해를 넘어 미래에 갖는 함의를 포괄하는 ‘전망적’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기한 긴장들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 개별 민족주의의 ‘내용’과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19) 민족주의가 배타하는 폭력성과 배타성에 대한 지양과 ‘실재하는’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를 양립시키려는 시도는 사회주의 진영이 아닌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나쁜 것’으로서의 민족주의와 ‘좋은 것’으로서의 애국주의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애국주의에 대한 담론에서 흔히 나타나듯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으로서의 민족주의와 ‘시민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공화정에 대한 애정’으로서의 애국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곽준혁·조홍식 편 2012, 15). 둘째, 민족주의 자체를 상기한 보편적 지향을 담지한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기본 전제에 “모든 민족은 완전한 자기표현과 자율성을 요구하며 지구적 평화와 정의는 자율적인 민족의 세계를 필요로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을 포함하려 시도한 스미스와 케두리의 시도는 후자에 해당한다(Smith 2010, 35). 요컨대 자유주의 진영의 민족주의론에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의 역할과 사회주의 진영의 민족주의론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역할은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제2절 역사적 경험: 소련 vs. 중국

1. 민족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입장의 원형

1) 약한 고리로서의 민족주의?: 이론적 실패 vs 정치적 실패

“내가 처음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민족문제 때문이었다. 그것은 성벽의 실질적인 틈이었고 그 틈은 나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라는 성채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성채 밖으로 나와 보다 넓은 틀 속에서 민족문제를 바라보게 하였다.”(Debray 1977)²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민족문제는 마르크스주의의 ‘약한 고리’ 또는 ‘최대의 취약지구’로 인식되어왔다. 마르크스주의가 실재하는 중대한 문제로서의 민족문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일관된 해석과 처방에 실패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환원론적 관점과 국제주의로 대변되는 보편 철학으로서의 특성들은 문화와 심리를 포괄하는 총체적 현상이자 보편이 아닌 특수에 대한 강력한 호소로 이루어진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막는 ‘근본적’이며 ‘내재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임지현 1999, 184; 박호성 1987, 248; 1989, 21).²¹⁾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내용적인 긴장과 대립만큼이나 주목해야할 지점은 마르크스주의적 민족, 민족주의론의 ‘부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실패’가 과연 ‘정치적 실패’와 동일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응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

20) 드브레이에 대한 스미스의 인터뷰에서 발췌(Smith 1977).

21) 이외에도 벨러(Wehler)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민족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체험이 결핍되었다는 점을, 모취만(Motschmann)은 모든 민족들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하나의’ ‘근본원칙’에서만 민족문제를 인식할 있다는 ‘헤겔로부터 도출된 확신’의 영향을, 뮌젠(Mommsen)은 당시의 헤겔 좌파적, 자코뱅적, 급진민주주의적 학문 분위기를 원인으로 지적한다(박호성 1989, 55 재인용).

지의 문제와 ‘현존 사회주의 국가’가 민족이라는 현실을,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실재하는 정서와 이데올로기를 안보와 발전, 동원과 통제 등의 현실적 문제와 연관하여 어떻게 다루고 활용해왔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²²⁾ 예컨대 임지현(1999, 185)이 앞서 살펴본 내재적 원인들과 함께 민족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실패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는 ‘정치주의적 경향,’ 즉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전술적 차원에서의 ‘실천적 문제’로 민족문제에 접근한 역사적 경험들은 역설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적응’을 통한 성공적인 정치적 활용의 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²³⁾ 이론가를 넘어 전복의 기수로서의 혁명가이자 건설의 구심으로서의 정치가여야 했던 레닌과 스탈린은 물론이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조차 불변의 규범적 관점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를 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모순적인 현실들에 끊임없이 적응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 마르크스에서 스탈린까지

민족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입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어온 문구는 공산당 선언의 다음의 두 구절이라 할 수 있다.

22) “마르크스와 엥겔스 양자 모두 독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주도권을 잡기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제로 민족주의자였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데이비스(Davis)의 주장이나 민족자결권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강대국 쇼비니스트’로 규정한 울프(Wolfe)등 민족주의 이론에서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해석의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박호성 1989, 66 재인용).

23) 예컨대 ‘그것이 도대체 존재하기는 했던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곤 하는 스탈린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드문 학자라 할 수 있는 에릭 반 리(Erik van Ree)의 경우 세계혁명과 국제주의로부터의 이탈, 즉 ‘진정한’ 혁명론에 대한 배반으로 여겨져 온 일국사회주의론과 그 이면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론이 스탈린의 타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는 물론이고 예수와 마호메드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혁명’이론에 이미 내제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상상의 섬 유토피아가 그러하듯 많은 혁명이론들에서 이상적인 사회는 경계를 지닌 것이었고 일국사회주의론과 소비에트(사회주의) 애국주의는 이것이 민족과 국가라는 특정한 경계를 통해 표현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의 이름이 애국주의이건 민족주의이건 그 본질로서의 경계의 정치의 혁명적 정치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상수로 늘 존재하고 활용되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반리(van Ree 1998; 2003; 2015)를 참조할 것.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 재산, 인구의 분산 상태를 점점 없앴다. 그들은 **주민을 집결시키고, 생산 수단을 집중시키며, 재산을 몇몇의 손에 집중시켰다.** 그 필연적 결과는 정치의 중앙집권화였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 서로 다른 법률, 서로 다른 정부, 서로 다른 관세를 갖고 동맹 관계를 통해서만 겨우 연결되어 있던 독립적인 각 지방들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률, 하나의 민족적인 계급 이해를 갖고 하나의 관세 구역 안에 사는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되었다.”(Marx & Engels 1872, 57)

“공산주의자들은 조국과 국적을 없애 버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다.”(Marx & Engels 1872, 72)²⁴⁾

전자는 민족이 자연적 원인이건 역사적 경험에 의한 것이든 ‘이미’ 존재해 왔다는 원초론(primordialism), 영속론(perennialism) 등의 입장과 달리 기본적으로 근대론(modernist)의 입장에서 민족이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시기와 조건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그리고 후자는 앞선 입장의 연장선에서 계급과 민족의 논리 중 전적으로 계급의 이해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²⁵⁾

이와 같은 시각은 영국의 인도 지배, 프랑스의 알제리 침공 등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이 보기에 해당 사건들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민족의 권리가 아니라 성숙된 자본주의적 발전, 즉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진보에 갖는 함의였다. 따라서 해당 사건들을 통해 전(前)자본주의적 후진 민족, 다시 말해 ‘비(非)역사적 민족(Non-Historic Nation)’이 근대화 될 수 있다면 혁명의 대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아닌 환영의 대상이어야 했다.²⁶⁾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을 포함하여

24) Marx, Karl & Friedrich Engels, 1872. “공산당 선언,” 1991, 김재기 편역,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 서울: 거름.

25) 민족과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패러다임들인 근대론, 영속론, 원초론의 구분은 스미스(Smith 2010)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저서의 3장을 참고할 것.

26) ‘역사’를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하부구조의 변화와 동일시하는 사적유물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원시공산사회와 노예제,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정상적인’ 경로를 밟지 못한 지역은 역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동양적인 전제군주정의 주요한 사례로 간주된 인도에는 “역사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르크스의 선언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문제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도 부르주아 시민사회로의 역사 발전에서 이탈해 있는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역사적 민족’은 바로 이와 같은 지역들을 이른바 정상적인 ‘역사적 민족’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구분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었다. 비록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명확한 언급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민족에 대한 구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유럽의 주변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지역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역사적 민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기본적으로 소수 민족의 민족해방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박호성 1989, 45-46; 1987, 258-259; 임지현 1999, 119-120).

그러나 이러한 ‘원칙’ 들은 구체적 현실 속에 변용되었다. ‘역사적 민족’ 으로 평가 받았던 폴란드와 아일랜드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옹호는 이를 잘 보여준다. 먼저 폴란드의 민족해방운동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사회혁명의 완강한 적으로서 아시아적 야만성을 유럽으로 확산시킬 ‘반동의 보루’ 로 여겨지던 러시아 체제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이해되었다(박호성 1987, 259-260). “도대체 폴란드 인민의 뜻 이외에 러시아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 행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르크스의 답은 오직 “폴란드의 재건 즉 2000만의 영웅들을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세우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었다.²⁷⁾

다음으로 아일랜드 민족해방의 경우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게도 가장 먼저 혁명이 일어났어야 할 영국의 지배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핵심고리로 간주되었다(서규환·이완중 2007, 5-6). 특히 이와 같은 입장이 구체적 현실 속에 이전의 주장을 반복한 결과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역사적 진보가 식민주의를 통해 아일랜드로 확산되고 이러한 확산이 중국에는 영국의 ‘성숙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과 달리 실제 아일랜드에서 발현된 식민주의는 본국의 사회주의로의 진보를 지연 및 왜곡시키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전의 경로와는 정 반대로 오히려 식민주의의 타파 즉 아일랜드의 해방이 영국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²⁸⁾ 보다 구체적인 마르크스의 ‘새로운’ 관찰결과는 다음과 같았다.²⁹⁾

서는 구자정(2013, 453-456)을 참조할 것.

27) Karl Marx. 1867년 1월 22일 런던에서의 연설문. “폴란드의 유럽에서의 의무.” 편집부 편역. 1989.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민족해방이론의 주체적 정립을 위하여』. 나라사랑. 149-151쪽.

28)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의 ‘반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오랫동안 나는 영국에서 노동자계급이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에 의해 아일랜드의 현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 그러나 보다 면밀한 연구를 거친 후에 나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렛대는 아일랜드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아일랜드문제가 중요한가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밑줄 필자).” Karl Marx. 1869년 엥겔스에게 보낸 서한. “아일랜드 해방은 영국혁명의 전제.” 편집부 편역. 1989.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민족해방이론의 주체적 정립을 위하여』. 나라사랑. 111쪽.

29) Karl Marx. 1870년 인터네셔널의 비밀통신. “아일랜드는 영국지주제의 보루.” 편집부 편역. 1989.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민족해방이론의 주체적 정립을 위하여』. 나라사랑. 109-110쪽.

첫째, 아일랜드는 영국 지주제도의 보루인데 아일랜드의 모든 계급투쟁은 토지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바 아일랜드에서부터 영국 지주제도를 허물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둘째, 아일랜드 문제는 영국의 부르주아지가 노동자 간의 민족적 적대감을 통해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 셋째, 아일랜드 문제는 영국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를 유지하는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고대 로마의 역사적 경험에서 드러나듯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스스로를 구속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영국 혁명이 아일랜드 해방의 열쇠가 아니라 반대로 아일랜드 해방이 영국 혁명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민족론의 현실주의적 변용의 패턴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서 볼 때 민족문제에 대한 초기의 가장 적극적인 대응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오토 바우어(Otto Bauer)의 입론에서도 잘 나타난다.³⁰⁾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상기한 대응이 폴란드와 아일랜드 등 ‘역사적 민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데 반해 바우어의 입론은 ‘비역사적 민족’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대응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새로운 현실의 핵심 중 하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예언한 비역사적 민족들의 소멸 혹은 역사적 민족들로의 통합이 아닌 자각된 비역사적 민족들의 민족적 요구의 분출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바우어가 처한 구체적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주지하듯 1867년 대타협의 결과로 탄생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라는 두 개의 국민국가로 이뤄진 이중제국으로 각각은 역사적 민족으로 평가받은 독일인과 마자르인이 비역사적 민족으로 규정된 체코인과 남슬라브계 소수민족(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등)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

30) 주지하듯 바우어, 그리고 레닌, 스탈린 이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민족, 민족주의 담론을 주도한 또 다른 대표적인 논객으로는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를 들 수 있다. 민족 자결권과 관련한 레닌과의 첨예한 논쟁에서도 잘 드러나듯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로자의 입장은 이른바 정통파, 혹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초기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서 철저하게 민족보다 계급을 우선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한 것이었다(구자정 2013, 460-462). 그러나 이러한 로자의 입장은 첫째, 비록 흐루시초프 이후 일정 부분 복권되었으나 1924년 코민테른 5차 대회에서의 냉혹한 평가에서 드러나듯 이후 현존 사회주의의 주류 이론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둘째, 내용적으로 볼 때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현실에의 ‘적응’의 사례라기보다는 이론적 당위에 의한 ‘돌파’의 사례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논외로 하였다. 로자의 민족주의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그리고 ‘민족 허무주의,’ ‘반(反)애국주의’로 상징되는 기존의 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평으로는 임지현(1999, 138-182)을 참조할 것.

한 구조에서 체코, 세르비아, 슬로바크 및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의 부상은 대중정당을 지향해온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으로 하여금 비역사적 민족의 소멸과 동화를 주장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도그마를 지속하며 대중적 지지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론적 적응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이자 이론가로서 후자의 길을 주도한 것이 바로 바우어였다(구자정 2013, 462-464).

바우어의 주요한 돌파는 민족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자본주의 질서 구축과정에서 탄생한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현상이 아닌 보다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는 민족을 혈연에 의해 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 즉 자연공동체로서의 성격과 다양한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두 축으로 하는 ‘운명공동체’로 정의했다(Bauer 2006, 53-55). 여기서 바우어가 특히 강조한 것은 ‘문화’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정의에서 혈통과 문화가 민족의 두 가지 핵심 구성요소인 것은 맞지만 양자의 비중은 결코 동일하지 않았다. “혈통이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문화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민족을 이루지 못” 하는 반면, “문화의 공통성만으로 강력한 통일로 융합하는 민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연공동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민족을 형성할 수도 있는 반면, 문화공동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언제나** 민족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Bauer 2006, 151).

문화적 변수에 대한 강조는 운명공동체에 대한 정의에서도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운명공동체는 사회 속에서 ‘유사한’ 구조적 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다시 말해 계급 등 ‘유사한’ 운명을 공유하는 여타의 성격공동체와는 다르다. 즉 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항구적인 상호작용 속에 ‘동일한’ 운명을 공통적으로 체험할 때만이 형성되는 특수한 성격공동체이며 문화는 이와 같은 항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수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Bauer 2006, 142-145).

이처럼 바우어는 문화를 매개로 경제적 하부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민족의 실체를 인정한 바탕 위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공존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었다. “민족성원리”는 이와 같은 결합의 핵심고리였다. 그에 따르면 민족성원리는 외적 권력이 내적 공동체를 통합하고 그것에 봉사하는 형태로 적응되어야 한다는 원리였다(Bauer 2006, 555).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사회주의의 실현은 첫째,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확산을 통해 하나의 전체로서의 민족적 문화공동체를 강화하고, 둘째, 국제적 분업을 통해 모든 개별 민족에게 독립적인 국민경제를 수립할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외적 권력과 내적 공동체의 완전한 일치, 즉 통일적, 자치적 민족국가 형성을 앞당기게 된다는 것이다(Bauer 2006, 551-560). 요컨대

바우어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민족의 소멸이 아닌 “정치적 통일과 해방”과 연결지음으로써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이 불가피했던 오스트리아의 현실을 돌파하려했던 것이다(Bauer 2006, 559). 또한 이처럼 각 민족의 열망을 합리화하면서도 보다 장기적으로는 개별적인 민족 공동사회가 연방국가의 형태로 통합되면서 민족성원리가 국가형성의 차원에서 국가제도의 차원으로, 즉 개별 민족국가 건설의 논리에서 연방 국가 내에서의 민족자치의 논리로 진화해 갈 것이라 주장한 점 역시 다민족 국가에서의 혁명이라는 바우어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Bauer 2006, 562).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현존 사회주의의 주류 이론가의 계보와는 거리가 먼 오스트리아의 사회주의자 바우어의 견해를 이처럼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단순히 그가 본고의 주된 관심사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현실주의적 적응의 한 사례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바우어의 주장이 실제 러시아의 혁명 과정에서 매우 흡사한 형태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구자정 2013, 467). 특히 혁명의 주역인 레닌과 스탈린의 경우 바우어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민족, 민족주의론을 입론해 나갔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더욱 아이러니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푸는 열쇠는 바우어가 마주한 오스트리아의 현실과 레닌, 스탈린이 직면한 러시아의 현실이 갖는 유사성에 있었다. 바우어와 마찬가지로 레닌과 스탈린 역시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역사적 민족이 아닌 비역사적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에서의 혁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전복이 아닌 개혁을 주장한 바우어에 비해 철저한 계급노선 우선성과 전위당에 의한 주도성을 전제로 한 레닌과 스탈린의 입론은 보다 급진적인 것이었지만 그들 역시 혁명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와 분리하거나 민족 운동의 역동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바우어와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민경현 2001, 136-137).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주목하는 현실주의적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레닌, 보다 분명하게는 스탈린의 민족, 민족주의론의 변화과정은 이전의 적응들과는 차별적이었다. 그것은 민족, 민족주의론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활용의 차원에서도 매우 정치적인 성격이 강화되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이 이전의 이론가들과는 달리 혁명가를 넘어 정치가여야 했던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레닌과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민족문제에 대한 볼셰비키의 관심을 촉발한 것은 1905년 혁명 이래의 유럽과 러시아의 구체적 현실들이었다(서규환·이완중 2007, 7; 홍웅호 2013,

1). 유럽에서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부흥과 러시아에서 분출되는 비러시아 소수민족들의 혁명적 열기 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현실의 분화와 결부된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분열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초기 입장을 대변했던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우츠키 등의 정통파에서부터 앞서 살펴본 바우어 등의 오스트리아 사회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민족문제에 대한 대응은 사회주의 이론가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논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민경현 2001, 131-132). 따라서 분출하는 민족주의적 열망들을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의 동력으로 전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당화 할 것인지를 둘러싼 고민은 볼셰비키들에게 가장 절박한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다. 민족자결주의와 제국주의론은 바로 이에 대한 대응의 핵심이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은 스탈린의 독자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레닌의 승인 아래 진행된 임무수행에 가까운 업적이자 민족문제에 대한 볼셰비키의 입장에 대한 최초의 체계화된 논문이었던 스탈린의 1913년 작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을 통해 이루어졌다.³¹⁾ 여기서 스탈린은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적 생활 그리고 공통의 문화에 나타나는 심리적 성격을 기초로 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안정적 공동체”라는 민족에 대한 정의와 함께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열쇠로 민족자결권의 보장을 주장했다(Stalin 1913, 41-67).³²⁾ 그리고 1916년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판되고 이듬해 이에 기반 한 10월 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와 같은 논리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것이 되었다. 제국주의론은 민족해방운동을 제국주의 시대 혁명전선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민족자결권을 통한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변증법적 결합을 러시아와 유럽을 넘어선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이

31) 해당 논문에 대해 레닌은 만족을 표하며 민족문제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문헌 중 ‘1급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레닌과 스탈린의 민족, 민족주의론은 거의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논쟁과 해당 논문에 대한 레닌의 책임과 입장에 대한 논의는 데이비스(Davis 1985, 107-110)를 참조할 것.

32) 해당 논문에서 스탈린은 주로 바우어의 민족에 대한 정의와 관련한 비일관성, 비논리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시도하고 있으며 더불어 바우어의 주장 자체라기보다는 바우어의 주장을 러시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의 논지와 관련하여 볼 때 스탈린의 비판이 과연 정확하고 균형잡힌 것이었느냐는 지점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스탈린 역시 바우어의 주장이 가진 보다 근본적인 의의, 즉 ‘사회주의 정치이론에서 민족이라는 개념과 단위의 복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스탈린 역시 “민족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것들의 발전이 지닌 역사적 조건들과의 연관 속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른바 마르크스의 정통견해로부터의 이탈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Stalin 1913, 57). 이는 스탈린 역시 큰 틀에서 바우어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구자정 2013, 468-477). 이러한 스탈린의 입장은 이후 사회주의 민족론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론을 거치며 보다 확장된다.

다.³³⁾ 민족문제와 관련한 스탈린의 두 번째 저작이었던 1918년 작 <10월 혁명과 민족문제>는 아래와 같이 이러한 성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10월 혁명은, 1) 민족문제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것을 유럽에서의 민족적 압박과의 투쟁이라는 부분적 문제로부터 피압박 민족과 식민지 및 반식민지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일반적 문제로 전화시켰다는 것 2) 동방과 서방의 피압박 민족들을 제국주의와의 승리적 투쟁이라는 공동 궤도에 끌어들여 그들의 해방을 위한 광범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그들의 해방과업을 대단히 쉽게 하여 주었다는 것 3)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서방과 노예적 동방 간에 다리를 놓았으며 서방의 노동계급들로부터 러시아혁명을 거쳐 동방의 피압박 민족들에 이르는 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전선을 결성하였다는 것에 세계적 의의가 있다(Stalin 1918, 346).

그러나 제국주의론과 민족자결권에 대한 옹호를 통해 일단락된 이와 같은 옹전은 변화된 현실 속에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도전의 핵심은 세계혁명의 좌절이었다. 주지하듯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있어서 혁명과 공산주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생산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역사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저발전 지역들에서의 예상치 못한 혁명적 열기 등은 이러한 가정에 균열을 가져왔다. 러시아는 바로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와 같은 현실, 즉 후진국 러시아에서의 혁명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했다. 이들의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선진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과 병행된 것이어야 했다.³⁴⁾ 역사유물론에 기반한 혁명의 단계론과 그 종합으로서의 세계혁명의 비전에서 물러서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33) 민족문제에 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나름의 대응이 본격화된 계기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마르크스의 그것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서 살펴본 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18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마르크스 역시 맹아적 형태로나마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로의 확장과 그에 따른 민족문제의 성격변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임지현 1999, 119-137).

34) 공산당 선언의 1890년 독일어판 서문의 다음 구절을 참고할 것(Marx & Engels 1872, 47). “비록 러시아의 공동체(Obshchtschina)에서는 토지의 원시적인 공동 소유 형태가 심하게 무너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한층 더 높은 공산주의적 공동 소유의 형태로 직접 이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서유럽의 역사 발전이 보여 준 것과 같은 해체과정을 먼저 거쳐야만 할 것인가? 오늘날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다. 만일 러시아의 혁명이 서유럽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호가 되고 그 결과로 둘이 서로를 보완한다면, 지금 러시아에 남아 있는 토지의 공동 소유는 공산주의 발전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변용이 지닌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른바 약한 고리론을 통해 후진국 러시아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혁명의 열기로 전화시킴으로써 혁명을 현실화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그러한 혁명이 세계혁명, 즉 선진 유럽의 혁명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³⁵⁾ 따라서 10월 혁명이라는 돌파를 감행한 볼셰비키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러시아 혁명 전진의 대전제인 유럽에서의 혁명의 열기들이 식어감에 따라,³⁶⁾ 그리고 전시공산주의로 대변되는 일련의 ‘혁명적 조치’들을 정당화해주었던 내전이라는 비상사태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위기는 점차 심화되어갔다. 또한 이러한 위기의 정점이었던 1924년 혁명의 수령 레닌이 사망함에 따라 위기는 이제 내부와 외부, 노선갈등과 권력투쟁이 중첩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총체적인 위기로 전화했다. 이와 같은 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 이가 바로 스탈린이었다.

레닌이 사망한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1924년 4월과 5월 『프라우다』라는 가장 강력한 매체를 통해 전문 게재된 스탈린의 논문인 <레닌주의의 기초>는 그 포문을 여는 것이었다.³⁷⁾ 여기서 그는 레닌주의의 역사적 근원, 방법, 이론, 프롤레타리아독재, 농민문제, 민족문제, 전략과 전술, 당, 사업의 방식 등 크게 9개 주제로 나눠 당시의 거의 모든 논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의 내용들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닌 정치적 함의였다.

해당 문건이 지닌 정치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정당성을 혁명적 교의에 기댄 급진정권으로서의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데올로기에 대한

35) 해당 문제가 레닌주의와 러시아 혁명에 가져온 이론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우츠키(Karl Kautsky)와 레닌, 트로츠키와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교화 불가능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188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뛰어난 교사요 대변인”으로 불리던 카우츠키가 10월 혁명에 대해 퍼부은 날선 비판, 즉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후진국에서의 혁명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통해 오히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조건과 역량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은 레닌과 트로츠키가 직접 나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박들을 연이어 내어 놓아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카우츠키의 비판과 이에 대한 레닌, 트로츠키의 반박에 대한 간략한 요약으로는 강신준(2006, 11-54)이 유용하다.

36) 1919년 독일 노동자 봉기가 실패하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살해된 데 이어 1923년 독일 공산당의 봉기가 좌절되면서 독일 혁명이 요원해진 것은 특히 결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한형식 2010, 292).

37) Stalin, Joseph, 서중건 역, 『스탈린 선집』 1권(거름). 71-156쪽.

해석권자로서의 지위는 권력으로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시대 구분을 통해 독자적 이론화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것이 혼고학적 지식학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의 문제를 해결할 지침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은 당연하게도 창조, 즉 후계 수령의 독자적인 이론화를 포함한다. 유일 해석권자로서의 지위는 이러한 독창성의 발현이 수정주의로 상징되는 일탈과 왜곡의 시도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적용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다. 스탈린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레닌주의가 카우츠키 등이 주장하듯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응전의 결과라는 아래의 선언은 이러한 의미에서 레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스탈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유일해석권자로서 레닌에게 주어진 자율성은 그 유일 후계자를 자처한 자신에게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었기 때문이다.³⁸⁾

“레닌주의란 무엇인가?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이론과 전술이며, 특수하게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이론과 전술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前)혁명 시기(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에, 즉 발달한 제국주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준비기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아직 당면한 실제적 필연성이 아니었던 시기에 활약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옹호자인 레닌은 발달한 제국주의의 시기,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발양기, 즉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이미 일국에서 승리를 거두고, 부르조아민주주의가 분쇄되어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의 단계, 소비에트의 단계가 도래한 시기에서 활약하였다. 이것이 바로 레닌주의가 마르크스주의의 한층 진전된 발전인 이유이다.”(Stalin 1924a, 72)³⁹⁾

38) 1924년이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말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해라는 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의미하다(한형식 2010, 275).

39) 이와 같은 스탈린의 방식은 북한에도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게 반복된다. 상기한 스탈린의 1924년 논문에 비견되는 1974년 김정일의 논문의 다음 구절을 보라.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는 물론 변함없이 로동계급의 귀중한 혁명리론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하며 그 일반적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혁명실천에서 의연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리론은 어디까지나 100년 전, 50년 전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것들인 것만큼 오늘의 새로운 역사적시대, 사회주의가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는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밝히는 우리 시대의 이 역사적과제는 오직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비로소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역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입니다.”(김정일 1974/2/9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레닌주의란 말을 최초로 등장시킨 1924년의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1974년의 김정일 역시 김일성주의를 최초로 공식화했다는 점까지 닮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확보된 자율성의 공간을 통해 이제 스탈린은 앞서 언급한 당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세계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미래에 관련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했다.⁴⁰⁾ 이른바 “일국 사회주의론”이 그것이다.⁴¹⁾ 동년 12월 발표된 <10월혁명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은 이와 같은 스탈린의 입장이 최초로 공식화된 문건으로 평가된다(Leonhard 1987, 129). 레닌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에 기대어, 그리고 “후진국 노동자정부의 처지와 압도적인 농민대중과의 모순은 오로지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무대에서 국제적 규모로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강조-스탈린)이라 주장하는 영구혁명론자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 정치의 경쟁자였던 트로츠키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토대로 입론된 해당 논문을 통해 스탈린은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비록 그 국가가 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 저발전 되어 있거나, 다른 국가들이 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 더욱 고도로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가능하며 개연적인 것”이라 선언했다(Stalin 1924b, 163, 166).

그리고 1925년 12월 14차 당대회에서 지노비예프와 까메네프라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격렬한 충돌을 승리로 이끈 다음 해인 1926년, 스탈린은 또 다른 핵심 저작인 <레닌주의의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레닌주의의 이름으로 입론된, 다시 말해 레닌주의의 유일 해석권자로서의 지위를 통해 정당화된 자신의 일국사회주의론의 승리가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넘어선 정치적 승리를 포괄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⁴²⁾ 일국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한 논의를 핵심으로 한 해당 논문에서 스탈린이 카메네프, 지노비예

아 있는 이와 같은 ‘유사성’에 대한 천착은 북한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판단된다.

40) 과연 일국사회주의론을 스탈린의 독자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레닌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은 레닌의 견해와는 차별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Thompson 2004, 330). 그러나 레닌의 견해가 1917년을 기점으로 ‘이미’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1924년 이후 트로츠키가 레닌에 기대어 주장하는 영구혁명, 세계혁명론은 레닌 스스로는 과거에 포기한 입장을 지속한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반리(Van Ree 1998; 2003; 2015)를 참조할 것.

41) 일국사회주의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이완종(2008), 반리(Van Ree 1998) 등을 참고할 것.

42) 스탈린은 부하린과 그의 동맹자들의 지지를 받아 1925년 12월에 열린 제14차당대회에서 디수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대회 동안 까메네프는 총서기의 지위와 역할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은 오히려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에서의 스탈린의 힘을 키웠을 뿐이며, 그 결과 까메네프는 정치국후보위원으로 강등되고 만다. 또한 레닌그라드 당조직의 수장으로 있던 지노비예프 역시 스탈린 사람인 세르게이 끼로프(Sergei Kirov)로 대체되었다(Thompson 2004, 331).

프, 그리고 트로츠키 등의 정적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이와 같은 권력투쟁의 결과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Stalin 1926, 196, 207, 231). 1927년 15차 당대회를 통해 이들을 ‘출당’ 시킴으로써 정치의 무대에서 경쟁자들 영원히 추방해버린 후 이제 스탈린에게 남은 과제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화하는 것뿐이었다(Thompson 2004, 333).

이처럼 일견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무관해 보이는 스탈린의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 전환, 그리고 그 귀결로서 1930년대에 공식화, 전면화된 스탈린 시대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의 요체, 즉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소비에트 애국주의)’의 내용과 등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 판단되기 때문이다.⁴³⁾ 그렇다면 해당 시기 소련의 민족정책과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것은 상기한 스탈린의 노선 및 권력투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3년 이래 민족문제에 대한 볼셰비키의 대응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은 민족 자결권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는 제국주의론과 1917년의 혁명을 거치면서 소련의 민족정책에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 되었다. 1917년 11월 3일 <러시아 민족들의 권리선언>을 통해 ‘1. 러시아 모든 민족의 평등과 주권, 2. 분리와 독립국가 형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권, 3. 온갖 민족적, 종교적 특권과 제한의 폐지, 4. 러시아영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과 인류학적 집단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4개의 원칙을 표명한 혁명정부의 1920년대 민족정책의 핵심은 바로 민족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토착화 혹은 현지화 정책(коренизация)이었던 것이다(홍웅호 2013, 8, 13).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탈린은 “형식은 민족적이나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 (Socialist in Content, National in Form)라는 구호 하에 민족이 아닌 계급에 토대를 둔 공통의 소련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지화가 조장한 분권적 경향을 축소하려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1930년 당중앙위원회는 당기구에서 민족적 지부를 모조리 해체했으며 혁명과 함께 1920년대 동안 폐지되었던 역사교육은 1931년을 기점으로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소비에트 민족 자부심을 고취하고, 모국, 볼셰비키당, 그리고 당의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을 진작시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여 학교의 정식 교과목으로

43)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소비에트 애국주의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활용된다.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그러하듯 소비에트 역시 계급적 내용과 함께 러시아와 차별되는 보편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하에서는 직접인용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통일해서 표기하도록 하겠다.

부활되었으며 1933년에는 현지화 정책 자체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기에 이른다. ‘승리자의 대회’로 명명된 17차 당대회가 열린 1934년부터 전면화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바로 이러한 흐름의 종합이었던 것이다(Overy 2008, 770-772; 김남섭 2008, 49, 69-70, 85).⁴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갑작스런, 그리고 전면적인 민족정책의 전환이 바로 앞서 살펴본 스탈린 노선의 부상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이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선의 가장 큰 실천적 의미는 바로 ‘혁명’에서 ‘건설’로의 전환이었고 그러한 건설은 오직 단결된 소련 국민의 헌신과 희생에 기반 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Leonhard 1987, 130; Thompson 1996, 330-332). 요컨대 짜르 제국의 폭력적 억압정책 하에 “민족들의 감옥”으로까지 불리던 러시아의 현실을 민족자결론과 이에 기초 한 “민족창조” 정책을 통해 돌파했던 소련이 1930년대를 거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기치 하에 다시 통합의 논리를 강화해 나간 역진 현상은 스탈린 개인의 광기나 변덕, 혹은 다른 여타의 여건들과 고립된 이론적 고리들보다는 당시 소련의 구체적 상황과 연결 지을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왜 스탈린이 정치투쟁에서 승리한 직후 1차 5개년 계획을 통한 ‘대전환’에 착수한 1929년 <민족문제와 레닌주의>라는 저작을 통해 ‘사회주의 민족(소비에트 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각시켰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가능하다. 충성과 헌신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하는 바, “소비에트 제도가 수립된 후 낡은 부르조아적 민족들을 토대로 하여 발전되고 형성된 민족”으로 정의된 사회주의 민족 개념의 정립은 역사유물론적 규정을 통해 부르주아들의 개념으로 넘겨주고만 ‘민족’이라는 개념을 되찾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이후에 호명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입론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Stalin 1929, 371-372). 결국 노선, 국가, 정권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민족의 이름으로 결합시킨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활용은 1940년대 대조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어 이후 소련의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⁴⁶⁾

44) 이러한 전환은 코민테른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입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20년 2차 코민테른대회에서 채택된 <민족,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에 의해 제기되고 1922년 1월-2월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재확인된 민족해방운동과의 연대와 지원의 움직임은 1928년 코민테른 6차 대회에서의 12월 테제로 인해 역진되었다. 코민테른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맥더모트와 애그뉴(Mcdermot & Agnew 2009, 245-290)를 해당 전환의 한반도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정식·스칼라피노(2015, 322-324)를 참조할 것.

45) 혁명 초기 소련의 “민족 창조” 정책에 대해서는 구자정(2012)을 참조할 것.

46) 외부의 적은 국가와 결합된 민족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전환기의 국제정치적 환경, 즉 1927년 5월 영국의 국교단절과 프랑스로부터의 경제협상 중단 등으로 촉발된 소련의 극심한 전쟁공포와 안보불안 역시 짚고 넘어가야할 변수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소련에서의 민족주의의 활용 역시 사회주의 국가 일반과 마찬가지로 계급노선과의 본질적인 긴장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흔히 대러시아 민족주의자로 평가받은 하스 스탈린 역시 독재 체제의 중앙 집권화 경향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러시아 역사와 문화를 이용하면서도 애국심에 대한 강조가 민족 공화국을 단위로 한 분열의 원심력으로 전화하거나 계급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을 낳으며 사회주의적 지향을 희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Overy 2008, 774-775).⁴⁷⁾ 이는 왜 애국주의가 언제나 소비에트 혹은 사회주의라는 수식어를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제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병기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 하겠다. 요컨대 마르크스로부터 스탈린에 이르는 사회주의 진영의 민족관, 민족주의론은 이론과 실천, 당위와 현실의 긴장 속에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 변화해 왔던 것이다.⁴⁸⁾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와 같은 적응 혹은 활용의 시도가 언제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하에서는 앞서 제시한 국가민족주의와 사회민족주의,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성패의 가장 극적인 대비라 할 수 있는 소련과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하겠다.

판단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톰슨(Thompson 2004, 336)을 참조할 것.

47) 1930년대 소련 민족정책의 전환을 국가주의의 강화로 볼 것인가 러시아 민족주의의 강화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논점이다. 예컨대 오버리(Overy 2008, 774)의 입장은 전자의 입장을 김남섭(2008)은 후자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계급과 민족의 긴장을 국가를 매개로 해소하려 시도한 애국주의의 특성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양자는 양립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민족 국가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당 논점은 북한 연구에서 갖는 함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48)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스탈린 시대의 변화는 1950년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호명되고 활용된 과정과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초기 북한의 민족, 민족주의론에 있어 스탈린 시대의 영향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3장 1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2. 소련의 역사적 경험

저발전 자본주의·후진 농업국가라는 한계를 딛고 수립한 혁명정권이자 15개 공화국들로 구성된 연방이었으며, 한 때 지구상의 절반을 호령하던 ‘진영’의 맹주 소련의 붕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소련의 해체과정에서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민족문제이다.⁴⁹⁾ 강한 국가의 표본이자 거대한 이념의 제국이 하루 아침에 와해된 데에는 이전 시기에 소련의 주요한 정치적 자산이었던 “민족문제의 빛나는 해결”이 오히려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양날의 검과 같은 민족주의의 정치적 효과는 그 역의 관계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련에서 나타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양상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 누적된 국가 실패와 대내외적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전반적인 국가 쇠락 국면 속에 민족주의의 주체와 성격의 변화가 국가의 회복탄력성 약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완과 긴장

1980년대 이전까지의 소련 민족주의는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혁명을 통한 국가건설(State Building) 및 민족건설(Nation Building)기간, 이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기치 하에 러시아중심민족주의가 득세하고 비(非)러시아민족에 대한 억압이 지속되었던 기간, 마지막으로 스탈린 사후 일시적인 민족 자유화를 거쳐 ‘소비에

49) 서방의 소비에트학(Sovietology)에서 특히 두드러진 민족문제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소련 해체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민족문제에 주목하는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 나헤일로와 스보보다(Nahaylo & Swoboda 1990), 수니(Suny 1993), 당코스(d'Encausse 1993), 브루베이커(Brubaker 1994), 포크스(Fowkes 1997), 조정남(1996), 베이싱어(Beissinger 2002; 2009), 구자정(2013, 2011) 등은 그 예이다. 또한 비록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브레진스키(Brezinski 1989, 7, 122-126, 292), 파이프(Pipes 2001, 116-123), 권희영(1994, 103), 조호연(1999; 109-110), 신범식(2006, 285) 등도 민족문제를 소련 해체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적한다. 소비에트학을 필두로 한 기존 사회과학에서의 민족 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과 배경 등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는 구자정(2013, 2011)을 참고할 것.

트 인간형’ 이 본격적으로 추구되며 비러시아민족에 대한 억압정책으로 복귀한 시기가 그것이다.

앞서 살펴본 레닌과 스탈린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앞선 두 개의 시기이다. 먼저 1917년부터 1929년의 기간은 혁명을 통한 국가형성 및 연방제를 통한 민족형성 시도가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러시아 스스로를 포함하여 200여 민족을 15개 공화국으로 분할하고 다시 이를 하나의 국가제도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다 광범위한 민족을 상징할 필요가 있었다. 스탈린이 민족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언어’라고 본 것은, 이러한 맥락 하에 혈연에 기반 한 종족 민족적 요소보다 광범하고 확장성이 높은 ‘의사소통’으로 조건을 완화한 결과였던 것이다. 또한 연방 구성의 근본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역시 상기한 스탈린의 민족론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는 명제는 ‘연방제’의 기치와 ‘민족자결’의 원칙과 결합함으로써 개별민족국가의 독립보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하나의 이름으로 호명된 ‘상상의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었다. 비러시아 개별민족들은 같은 지향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느슨한 조건’의 민족국가 형태, 즉 연방제로 포괄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외연을 필요로 했던 개별 민족들이 ‘민족자결’의 원칙 하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공존을 받아들인 “민족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

러시아혁명 성공 후, 1918년 ‘민족자결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헌법을 통해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민족계약’으로도 불리는 상기한 헌법을 통해 러시아 공화국은 ‘독특한 생활습관과 민족구성원들으로써 상호 구별되는’ 각 소비에트들의 자발적 결합방식으로 자치공화국 혹은 자치주를 구성할 수 있었다.⁵⁰⁾ 이는 1921년 제1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이듬해 내전이 종식되고, 6개로 흩어져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의 러시아 연방공화국에의 귀속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여기서 스탈린과 레닌의 민족문제에 대한 견해차이가 표면화되었다. 레닌은 ‘소비에트 연방제’를 통해 분리주의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러시아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 ‘으로의’ ‘가입’이 아니라 ‘함께’ 유럽·아시아소비에트공화국연

50) 「러시아·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제23조)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은 시민의 인종이나 소수 민족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어떤 특권 또는 특혜를 상징하는 일,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수민족을 억압하거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공화국의 기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유효종 2012, 192 재인용).”

방’으로의 정식 통합”을 주장한 반면, 스탈린은 강력한 중앙당 권력의 강화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자치공화국의 지위로 러시아공화국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규환&이완중 2007, 15). 결국 소련은 레닌식의 연방헌법의 ‘민족자결’ 원칙으로, 1923년부터 10여년간 소련은 각 지역에서 ‘민족토착화’ 혹은 ‘민족우대’ 정책을 실시했다. 개별민족에 의한 교육, 민족 출판물 확대, 당·정부기관 민족요원 채용이 강화되었으며 소수민족을 위한 대학도 설립되었다(조호연 1999, 113).⁵¹⁾ 요컨대 이 시기는 적어도 이론적이나마 다양한 민족문화가 자유롭게 공존했던 이른바 소련 민족정책의 첫 단계였다.

두 번째로, 스탈린 치하 민족주의 억압의 기간이었던 1930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간이다. “짜르 체제의 러시아가 민족들의 감옥이었다고 한다면, 스탈린 체제 하의 소련방은 ‘모든 민족의 무덤’이었다.”는 표현은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⁵²⁾ 이 시기 러시아민족중심으로의 편협한 경도현상은 곧 비(非)러시아 및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를 의미했다. 제2차 대전 중 스탈린이 그의 새로운 지배계급을 민족주의적인 슬로건으로 합법화 하고자 한 것은 그 배경이 되었다(Brezezinski 1989, 16). 특히 1934년 히틀러의 부상을 기점으로, 스탈린은 이전까지 부정해오던 조국애·민족적 애국주의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러시아 민족주의’ 속으로 융합하기 시작했다(Pipes 2001; 2006, 104-105; 조호연 1999, 113-114). 그동안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었던 소수민족에 대한 스탈린의 입장은 1924년 대두한 ‘일국사회주의론’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경계’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1934년 키로프 암살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억압의 정점, ‘대테러’와 역사상 유례없는 강제적 민족이주정책이 시작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였다(한형식 2010, 280; 조정남 1996, 53, 120).⁵³⁾ 그는 특히 ‘대조국 전쟁’을 ‘러시아 민족 vs. 독일민족’의 대결구도로 상정하고, 다소 위축되었던 러시아 민족주의를 부흥시켰

51) 이 시기 소비에트 러시아의 소수민족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것. 유효종(2012, 194-195), 홍웅호(2013, 16-17), 맥더모프&애그뉴(Mcdermot & Agnew 2009, 208-250).

52) *Newsweek*. 18, December. 1989. p. 56(Nahaylo & Swoboda 1990, 522 재인용).

53) 1936년 폴란드 민족의 카자흐스탄 이주, 1937년 7월 남부국경지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강제이주, 체첸과 잉구세치아 공화국의 강제이주 및 처형, 동해 9월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1941년 독일인의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 등 해당 조치는 말 그대로 전격적인 속도와 전면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다. 또한 1943년 여름 이후 독일의 패망이 확실해지면서 사회주의 소련을 배신한 민족들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가진 강제이주가 뒤를 이었다. 1944년 체첸인과 잉구쉬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같은 해 5월 타타르인 강제추방, 11월 메스프인 추방 등이 그것이다. 일련의 전후 민족이주정책은 1934년 스탈린의 민족정책에 대한 완전한 입장 전환의 극단적 산물이었으며, 소수민족과 비(非)러시아인 특이성을 말살하려는 소비에트의 의도가 구체화된 결과였다(조정남 1996, 53).

다. 러시아에 대한 칭송과 대(對) 나폴레옹 승리와 같은 역사적 기억에 기반 한 애국주의에 대한 호소를 통해 러시아민족주의의 소비에트화가 구체화 되었다. ‘소비에트 인민’ 혹은 ‘소비에트화’는 ‘러시아화’ (Russification)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권희영 1994, 98; 조정남 1996, 2-5, 9). 이로써 러시아의 안보와 국가이익이 모든 문제에 우선하게 되었고, 연방의 국가들, 비(非)러시아 및 소수민족들, 하물며 러시아민족 그 자체보다도 우선했다. 이 같은 러시아중심민족주의의 부상은 ‘러시아민족의 보존’ 또는 ‘자기방위 슬로건’으로서, ‘사회주의와 러시아민족주의의 결합’이었으며, 이는 ‘일국사회주의’ 명제와 맞닿아 있었다(조정남 1996, 124).

마지막으로 비러시아 민족에 대한 일시적 자유화와 뒤 이은 억압으로의 복귀 기간인 1954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이다. 이러한 민족정책의 완화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스탈린 시기의 정책실패와 과오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소비에트 국가의 민족정책에 있어 레닌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상당한 수준의 총체적 위반”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강제이주’에 대해서도 시인했다(Khrushchev 1954). 당원에게만 공개되어 대중일반에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 여파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흐루시초프 집권 초기, 현저한 수준으로 민족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다(Nahaylo & Swoboda 1990, 161-189).⁵⁴⁾ 강제이주 민족 ‘특별정착’ 제도를 완화 혹은 해지하고 역사문제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경제의 탈중앙화를 통해 공화국들에 게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한 조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비에트 언론은 비러시아인들의 불평과 요구를 게시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문화적 지배, 법적·제도적 박해, 종교탄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언어, 문학, 역사 등 제 분야에서의 개선요구가 거세게 분출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민족문제의 폭발은 흐루시초프의 노선변경을 가져왔다(Nahaylo & Swoboda 1990, 190-217).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의 민족해방 소요는 당황한 모스크바의 무력탄압으로 이어졌다. 결국 1958년 후반부터의 민족정책 분야의 자유주의적 노선은 수정되었고 실제로 후퇴했다. 1958년 8월 『코뮤니스트』는 개별 민족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획

54) 주지하듯 이와 같은 기조는 민족 정책 뿐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수백만의 강제수용소 포로와 투옥 종교인의 석방, 국외이동과 해외 단파방송의 청취 허용, 소비재생산 확대, 농민과의 관계 개선, 임금 인상, 연금 혜택 증대, 주택건설 확충, 세금 감면, 농촌 지원, 도매 매입가격 인상, 개인 부업 제한 철폐,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개간 운동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는 제도와 법령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기보다는 일정한 정도의 개선을 추구한 것에 불과했다.(Pipe 2001, 113; 조호연 1999, 115).

일적으로 청송했으며 지방분권화에서 중앙집권화로의 복귀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차 당대회에서 소연방의 민족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설들이 속출하자 탄압은 다시 심화되었고,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키르기즈 공화국의 지역 민족주의 요구는 대숙청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소련은 중국과의 공공연한 이념논쟁, 1962년 쿠바위기, 핵문제 등으로 소진되어갔다. 1962-1965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1963년 벨라루시에서 반발이 있었고, 1964년에서 1966년 사이에는 소비에트 체제에 반대하는 3대 민족단체가 결성되었다. 한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러시아인들에 의한 민족주의 운동도 이 시기에 구체화 되었다.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가 실각되던 당시, 당의 민족 및 종교정책에 대한 불만들도 소련 내부에서 산처럼 커져갔다(Nahaylo & Swoboda 1990, 214-217).

이는 후임 브레즈네프 지도부에서도 지속되었다. 점증하는 민족문제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출되지 못한 채 수면아래의 민족문제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 제23차 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는 전임자의 연장선에서 민족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었다(Nahaylo & Swoboda 1990, 238).⁵⁵⁾ 오히려 1982년 안드로포프 체제에서는 앞선 전임자들보다도 훨씬 조심스러운 정책을 추진했다. 체르넨코 등 고르바초프 이전 시기까지의 지도자들은 더욱 심화되어 가던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가능한 통제하면서, 궁극적 이상인 ‘소비에트 인간형’의 창출이라는 명분을 고수했다.

2) 고르바초프 시기의 위기

사회주의 공화국의 ‘만형’으로서의 소련과 개별국가의 차원에서의 소련은 차별적인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소비에트=소련=러시아”의 공식 하에 단일한 행위자이자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이는 스탈린 시대의 유산이기도 했으며 실제 많은 외부의 연구들에서조차 양자가 구별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점에서 소련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에 가까웠다. 결과적으로 소련 중앙정부가 소비에트적 가치라는 구호 하에, 실제적으로는

55) “당은 각 민족의 민족적 특징과 이익을 위해서 계속 배려해야 한다. [...] 우리는 각 민족마다 분립되어 있는 당 모두가, 수많은 강의 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소연방 공산당에 합류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것은 하나의 의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갖는 마음을 동일화 시킨 레닌주의자들의 결합이다.” 『Pravda』 1966.3.30.

비(非)러시아·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가운데, 개별 민족감정은 심화되고, 각 민족들의 요구들도 보다 구체화되었지만, 국가보안부와 소련군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수면 아래에는 격변을 일으킬 폭풍이 잠복한 가운데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소련은 민족문제에서 자유로웠던 것이다(Service 2012, 475-476).

그러나 소련의 연이은 정책실패들과 그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는 민족적 불만을 고조시켰고, 연방에 대한 회의는 확산되었다.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1970년대까지의 상당한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투자를 지속하면서 강한 국가의 기초를 유지한 것은 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다수의 소련인들은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하는 조국의 핵무기를 자랑스러워했으며, ‘만형’으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자긍심으로 여기고 있었다. 소련 정부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선전과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기치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까지만 해도 민족문제는 결코 전 연방 차원의 독립문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었다. 물론 현실적인 차원에서 개별민족들에게 정치·외교·안보·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소련의 비호가 필수적이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구심력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소련에서는 군비경쟁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압박이 체제를 흔들었다. 더욱이 체르노빌에서의 충격적인 원전사고와 중동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석유가격 폭락은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수면 아래에 있던 민족문제들이 고르바초프가 주장한 레닌주의적 ‘민족자결’로의 복귀라는 명분과 결합하며 정치적 폭발력을 더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민족주의운동이 처음부터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직접적으로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주지하듯 196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한 비러시아·소수민족의 민족주의운동은 주로 ‘언어·교육’ 정책 등과 관련한 것이었고 이는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Nahaylo & Swoboda 1990, 352). 실제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전후한 시기에도 소련의 15개 연방공화국은 언어·교육·문화·역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저항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1987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7월 리가의 대규모 시위가 이른바 비(非)러시아민족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발트 3국에서는 독립문제가 표면화되었고, 1987년 6월, 수십 명의 크리미아 타타르인들의 거센 시위에 이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크리미아 타타르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소요는 계속되었다(Nahaylo & Swoboda 1990, 410-420). 이처럼 1987년 발트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주의 시위의 폭발적 증가는 고르바초프에게 민족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1987

년 11월 고르바초프의 연설은 민족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만을 보이며 발트 문제 등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 등 각 민족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치 못하는 것이었다(Nahaylo & Swoboda 1990, 442). 1988년 2월에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으로 공화국들의 교육과 언어에 대한 민족적 요구는 관성처럼 당국에 의해 무시 되었다. 결국 1988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 국경충돌이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민족분쟁이 발생했다. 소련 내 민족 분쟁이라는 이전에 없던 사건에 직면한 고르바초프는 민족문제를 빛나게 해결해 왔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소련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민족문제가 없는 국가는 없다”고 시인하기에 이른다(Nahaylo & Swoboda 430-431). 그러나 러시아 밖에서의 민족문제 논의는 보다 대담하게 전개되었고 발트국가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제반요구가 공식화되었다.(Nahaylo & Swoboda 1990, 435, 437, 456). 1988년 6월 28일 전례 없는 민족주의의 대 토론장이 되었던 제19차 당 협의회가 있는 후 고르바초프는 마침내 “민족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당국은 1990년 선제적으로 ‘소연방 탈퇴법’을 제안했지만 민족주의의 원심력을 되돌리기에는 미약했고, 결국 공화국 독립과 연방 해체의 수순으로 소련의 역사는 종결되었다.

3) 사회민족주의의 부상과 적응의 실패

소련에서 민족주의는 국가가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 동원의 주요한 수단이었다. 전체인구의 70%가 러시아인이며, 여타 20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련은 강력한 민족주의의 유지·발전에 힘입어 강화된 국가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조정남, 1996, 7).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 소련체제 격변의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소련체제의 쇠락의 길에서는 어떤 변수로 작용했는가? 소연방에서 사회주의 공식 이데올로기만큼이나 체제 유지의 핵심기능을 담당했던 민족주의는 과연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체제 수호기능을 충실히 발휘했는가? 이하는 소련의 민족주의와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본 연구가 설정한 두 가지 변수, 즉 적응과 국가민족주의 여부를 중심으로 소련의 붕괴 과정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1) 국가민족주의에서 사회민족주의로

전쟁이 종식되고, 스탈린의 시대가 저물며 민족들의 각성과 자각의 시대가 왔다. 단일 국가의 외연인 소비에트 연방의 형태를 거부하는 유혈사태와 시위가 전개되었고 고르바초프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소련의 각처에서 분출되기 시작한 민족들의 요구와 분노는 더 이상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 된 국가민족주의를 통해 통합되고 동원되던 예전의 양상과는 멀어지게 했다. 1960년대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이었던 비(非)러시아 개별민족·소수민족의 움직임은, 흐루시초프 시기 제한적이거나 완화된 제도의 틈새에서 교육기회의 확대와 지식기반의 확장을 통해 이론화, 체계화됨과 동시에 정치 세력화되었으며 비(非)러시아민족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러시아민족주의도 비슷한 시기에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 정치·외교·안보·무역·국민생활경제 전부분의 소련국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민족’이 아닌 ‘개별민족’으로서의 자구(自救)노력은 이전의 사회주의 민족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족주의적 정치담론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세력화된 비러시아 민족주의는 국가민족주의의 틀 속에서 봉합되어온 과정에서 벗어나 연방체제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개별 민족단위로서, 아래로부터의 사회민족주의로서의 성격을 강화해나가게 되었다. 체제 수립 시기에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정당성은 개별민족들의 불안정한 결합을 강제했지만, 민족적 차별의 역사적 경험과 이에 따른 민족적 각성이 소련 내 민족주의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즉 국가에 의한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국가민족주의의 강력한 결합력과 구심력이 사회민족주의 즉 연방체제 해체를 향한 민족의 분화와 원심력으로 전환되어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민족주의는 사회민족주의에 패배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연방차원에서 민족주의는, 공화국의 독립과 연방해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소비에트 러시아 국가민족주의를 종식시켰다. 둘째, 개별국가차원에서 러시아민족주의는 ‘보편적이고 국제주의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폐쇄적이고 예외적이며, 좁은 의미로 재정의 되었다. 그것은 ‘강한 국가’가 내세우던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약한 국가’의 방어적 논리의 전형이기도 했다.

(2) 부정과 돌파: 적응의 실패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레닌’에서 찾았다. “레닌의 업적과 그의 사회주의적 이상은 변증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풍부한 이론, 정치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마르지 않는 원천”이며, “역사적 상황 분석에 기초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위력의 증명”이라며 칭송되었다.⁵⁶⁾ 그것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었다. “우리는 레닌과 같이 행동한다.”는 구호 아래 레닌주의적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노선이 추진되었다.⁵⁷⁾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주의의 길”을 철저히 배격하며 스탈린주의의 전체주의적 잔재를 지워나갔다. 그는 “개인숭배와 침체 시대에 왜곡된 사회주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며 소련이 레닌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사회와 경제를 이룩할 것이라고 믿었다(Service 2012. 697). “권력만능의 명령적 관료주의 행정체계의 형태”로의 왜곡된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제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순수한 레닌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했던 것이다. 1980년대 탈(脫)이데올로기화가 연방 전체로 확산되면서 민족문제 및 각종 분류가 분출하는 상황에서도 고르바초프 정권의 해법은 이와 같은 ‘부정’을 통한 ‘돌파’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리고 현실적 문제들의 원인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굴절된 역사와 경험에서 찾았기 때문에 민족문제 자체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레닌적 순수성을 회복하면 자연히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고르바초프가 7년간의 통치기간 대부분에서 보여준 민족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처는 상기와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 기인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초기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레닌주의적·개혁적 정책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회복탄력성을 진작시키는데 실패했다. 당시의 상황은 고르바초프 스스로 조차 “아주 빠른 속도로 2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파국적인 상태”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⁵⁸⁾ 이러한 차원에서 소련이 ‘발달한 사회주의’라는 관

56) Gorbachev, Mikhail Sergeyevich. 1987.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고명식 역. 1988. (주)시사영어사. 21쪽.

57) Gorbachev, Mikhail Sergeyevich. 1989.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Pravda』 1989.11.26. 김정래 역. 1989. 『중소연구』 제13권 4호; Gorbachev, Mikhail Sergeyevich. 1989. “신뢰의 힘이 증대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영국방문 연설.” 『Pravda』 1989.4.8. 김정래 역. 1989. 『중소연구』 제13권 2호.

58) Gorbachev, Mikhail Sergeyevich. 1990.7.3. “페레스트로이카의 길로 계속 나아가자: 소련 공산당 제28차 대회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정치보고.” 『Pravda』 1989.4.8. 김정래 역. 1989. 『중소연구』 제14권 3호.

례적 주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를 ‘자기 발전 과정에 있는 사회주의’라 재규정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Service 2012, 699).

특히 개혁의 의도치 않은 효과들은 개혁 자체를 좌절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글라스노스트는 그 대표적인 예였다.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는 개혁이 당 내부 보수 세력의 저항을 받자, 고르바초프는 개혁에 대한 지지를 아래로부터 동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채택된 글라스노스트 정책은 고르바초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중들의 의식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소비에트 과거사에 대한 폭로는 러시아 민족정체성에 가장 비참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⁵⁹⁾. 글라스노스트는 소비에트 시기 동안 자신들의 국가가 얼마나 부패했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정당성이 없는 정책들을 위해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신범식 2006, 285). 이는 사회주의 소련국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공산주의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왔다.⁶⁰⁾

따라서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 고르바초프의 대처는 그 긍정적인 힘을 국가의 능력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민족주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 즉 사회민족주의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그는 198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당시 민족문제가 “오늘날에 와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민족적 원칙을 억누르던 시기에 발생”했다며 스탈린에 책임을 전가했다. 심지어 그는 민족주의를 “관청간의 할거주의”로 폄하했다. 즉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위반하는 관료주의”라는 것이다. “겉보기에 무사하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매우 큰 문제들이 폭발되어 표면화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에 미처 대비할 수 없었”다며 유혈사태와 대규모 시위라는 체제위협의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의 와중에도 민족주의는 “분리주의자, 철저한 민족주의자, 부패분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었다.⁶¹⁾ 따라서 그는 “민족 간의 감정을 더욱 표면화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

59) 이 시기 소련의 정보공개(글라스노스트)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알트리히터(Altrichter 1997, 201-205)의 연구 참고.

60) 사회의식으로서 ‘소비에트 자유주의가 급격히 분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지만, 이미 그것은 흐루시초프 시대부터 예견되었다. 안정된 체제를 바탕으로 소련과 동유럽사회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지식인과 시민사회에서의 각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언어, 문화, 교육 등 최소한의 민족적 요구들에 국한되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이데올로기 단결성의 훼손을 의미했다.

61) Gorbachev, Mikhail Sergeyevich. 1990.7.3. “페레스트로이카의 길로 계속 나아가자: 소련 공산당 제28차 대회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정치보고.” 『Pravda』 1989.4.8. 김정래 역. 1989. 『중소연구』 제14권 3호.

다”며 그들을 ‘통제’ 하거나 ‘제거’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는 이전의 정권에서 민족주의적 요구와 일련의 정책들을 ‘부르주아 민족주의’라며 배격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요컨대 국가형성기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국가와 사회의 공통의 이해 하에 느슨한 최소한의 조건 하에 결합된 후, ‘강한 국가’의 시절에는 양자가 갈등적 상태로 봉합된 채 잠복되어 있다가, ‘약한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주의가 민족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즉 국가는 수세적으로나마 민족주의에 대응하려 했으나, 아래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민족주의적 열기를 체제의 구심력으로 전환하려 하기보다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려 노력하는 데 그쳤다. 다시 말해 고르바초프 정권은 이전 시기의 강력한 국가민족주의를 도덕적 이유로 부정하는 동시에, 위기와 함께 부상한 사회민족주의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부정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의 방식은 그러한 부정이 실패한 지점에서의 대안 역시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정 반대의 방향에서 민족주의에 대해 일종의 급진적 돌파의 방식이 전면화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88년을 전후하여 소련 민족주의 문제가 분출되던 시점에 고르바초프 정권은 헌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이는 각 민족들의 독립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연방헌법안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제안된 헌법은 기존의 고르바초프의 입장과 정반대였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합의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결여한 것이었다. 이하에서 살펴볼 중국의 사례와는 달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에서의 급진성마저도 기존의 사회주의적 정당성의 기반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원심력을 동반한 민족적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이전의 자기 입장을 다시 한 번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체 이데올로기가 자생적으로 시민사회, 지식사회에서 배태될 수 없었던 소련 공산당의 장기독재라는 조건은 민족적 요구를 구체화하고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었다. 독립을 요구한 연방공화국은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조건에서라도 민족주의에 의지 혹은 편승하여 소련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했다. 소련이 처한 대외적·군사안보적·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민족적 문제의 심화는 국가의 강력한 회복탄력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의 성체의 틈을 유연하게 메우고, 공고하게 해주었던 민족주의는 이제 성체를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제 성체의 틈은 건잡을 수 없는 균열로 이어졌고, 결국 성체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 체제·국가 형성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강력

한 결합은 이제 서로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현실화 되었다. 소련은 민족주의에 대해 대단히 무지했고, 착각했으며, 뒤늦은 수세적 조치들을 취했다. 결국 양립하며 서로가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양 손에 쥔 사회주의 맹주 소비에트 연방은 ‘적응’ (Adaption)에 실패하였고, 이는 소련 붕괴의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3. 중국의 역사적 경험

본 절에서는 살아남은, 더 나아가 지난 30여 년 간 유례없는 지속적인 성취를 보여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다룬다. 이 생존한 사회주의 대국은 제국주의식민지, 내전과 해방,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소련과의 이념분쟁,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중화민족주의 등 한 세기가 못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이념적·민족적 질곡의 역사를 이어왔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중국 민족주의의 새로운 부흥 현상은 공산당 정권에 심각한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외부의 우려 혹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성취와 공존하고 있으며 덩샤오핑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후 꾸준히 예견되어온 탈(脫)이데올로기화 여부는 시진핑 체제 이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재강화 현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결정적 위기 국면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정권의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검토한다. 국가의 회복탄력성은 위기의 극복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한 위기 극복의 능력은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 국가 정당성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민족해방의 역사적 전통 속에 출발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계급 노선을 통한 건설과 계속혁명의 과정에서 1980년대까지 철저한 부정의 대상이었던 민족주의는 어떠한 논리로 재소환 되었으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다시 말해 본 절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1980년대 말 덩샤오핑 시기 위기를 돌파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나타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결합의 역사적 기원 및 이론적 근거, 그리고 덩샤오핑 시기의 위기를 적응적 국가민족주의를 통한 회복탄력성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국가건설과 모순론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보완재로서 민족주의를 호명하며 회복탄력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역사적·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1949년 10월 1일,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쩌둥은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공식선언했다. 이는 이른바 “굴욕의 세기”(century of humiliation)의 기점이 된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 무려 한 세기에 가까운 고군분투 끝에 얻은 중국의 국가건설(State Building)의 결과이자 민족건설(Nation Building)의 성취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의 중국 지식인들은 근대화와 계몽보다 구국(救國)을 더 선차적 과제로 간주했으며, 천두슈 등 공산당 엘리트들은 소련의 경험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구국의 길로 선택했다(신봉수 2008, 192).⁶²⁾ 따라서 중국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중국공산당에 의한 민족문제와의 필연적·운명적 결합을 앞두게 되었다.

이미 마오쩌둥은 1937년 2월 중국공산당 임시전국대표자대회에서 “항일시기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임무”에 관한 연설을 통해 계급노선에서 ‘통일전선전략’으로의 변화 배경을 설명한 바 있으며,⁶³⁾ 1938년 10월 중국공산당 제6기 6중전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원들은 반드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해야 한다”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민족주의의 실천적 결합이 가능함을 천명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이 항일민족통일 운동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환하게 된 까닭은 바로 일본식민지 경험에 의한 중국인들의 분노와 그로 인한 민족주의적 열망에 부응하여 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서진영 1992, 250).

실제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중국공산당은 현저한 수준의 세력 확장에 성공했다. 중일전쟁 중 공산당의 군사적 성과는 자신감의 발로가 되었고, 이들의 농민정책이 국민당에

62) 중국의 민족, 민족주의 개념은 아편전쟁 이후 량치아오, 장빙린 등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신해혁명을 전후하여 쑨원은 이른바 ‘오족공화’(五族共和)를 제시하여 단순한 하나의 민족 개념이 아니라 ‘복합민족’으로의 민족국가를 상정했다. 중국의 성립은 위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민족 실체인 ‘통일적 다민족’으로서의 ‘중화민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문기 2014, 195; 전재호 2004, 74; 이동률 2001, 259). 또한 이러한 민족건설의 과제는 좌우를 넘나드는 것이었다. 중국 근현대사를 주도한 쑨원, 장제스, 마오쩌둥 모두 고조되는 민족주의, 그것도 특히 “학생들의 민족주의 사상”과 아울러 “중국 빈민층의 심화되는 불만”에서 정치적 힘을 이끌어냈으며 중국의 위대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이론을 도출하는 데 외부의 정치적 사상을 빌어왔다는 브레진스키의 지적은 이러한 차원에서 유의미하다(Brzezinski 1989, 184).

63) 마오쩌둥. “항일시기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임무.” 김승일 역. 『모택동선집』 제1권(범우사), 308-329.

비해 아래로부터의 호응을 더욱 많이 받게 되면서 중국농민의 항일 저항심을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결합시킬 수 있었다(Johnson 1985, 11-33). 특히 해당 시기 중국 공산당은 의도적으로 사회주의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철저한 애국주의와 항일정신에 기반 한 반식민지·반봉건적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했다.⁶⁴⁾ 요컨대 중국공산당은 혁명과 국가형성 과제에서 사회주의의 성체의 갈라진 틈을 민족주의로 채우며 임무를 완수했다.

그렇다면 국가수립을 전후한 당시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 역사관과 민족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었던 이론적 논리와 근거는 무엇인가? 또 중국 사회주의와 민족문제는 어떠한 관계로 규정되었는가?

일제에 항거해 전 중국인의 연합된 항일투쟁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었다. 중국 혁명의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 마오쩌둥(毛澤東)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그는 1937년 9월 제2차 국공합작을 한 달 앞두고 “모순론”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물의 발전과정에 존재하는 모순은 두 가지 특수성을 지니는데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이 그것이다. 주요모순은 부차모순에 우선하고 결정적이며, 양자는 변증법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가령 반식민지 상태에서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국에서는 계급모순보다 반제 민족모순이 주요모순으로 된다는 것이다. 국공합작 통일전선 가운데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는 민족자산계급을 혁명계급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우’ 하게 된다.⁶⁵⁾ 마오는 “노동자, 농민대중과 결합할 의사가 있으면 혁명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혁명적이지 않거나 반혁명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식’에 있음을 역설했다(신봉수 2009, 73-77). 나아가 1938년 10월 중국공산당 6기 6중전회의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합하고 일정한 민족적인 형식을 통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마오와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통해 중국적 사회주의와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했던 것이다(서진영 2006, 22-23).

이처럼 혁명과 국가건설에 성공한 마오와 중국공산당은 민족과 계급, 즉 민족주의와

64)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혁명 이후의 국가 성격으로 모든 계급을 포괄한 통일전선에 기반한 인민민주주의독재 국가를 표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오쩌둥 지도부는 혁명 직후 중국 사회의 성격을 사회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립적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하는 신민주주의사회로 규정했던 것이다(이희옥 2004, 58-59).

65)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항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해서는 광범한 동의가 대체로 이루어져있었으나, 그 과정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관계, 당의 독립자주원칙의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오와 코민테른 계열의 왕명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진영(1992, 252-258)의 연구 참고.

사회주의의 절충적 공존 가능성을 배제한 채 출범했다. 다음 단계의 과제는 ‘발전’이었다. 초기의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방식을 신뢰하고 차용했으나, 급속한 경제개발과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은 도시-농촌, 공업-농업, 간부-대중의 괴리를 심화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인민 내부의 모순’ 발생 가능성이 대두되었다(서진영, 2008. 91-92). 또한 격렬한 진영 내의 갈등, 즉 중소분쟁의 와중에 단행된 소련의 대중 지원중단 등은 마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한 배경이 되었다.

마오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국식 적용을 통해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재해석했다. 예를 들어 생산관계 즉 의식의 발전을 통해 생산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대약진 운동의 기본적인 동원(mobilization)논리로 활용되었다⁶⁶⁾.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로 민족모순은 해소된 바, 이제 주요모순으로 재상정된 계급모순이 끊임없는 혁명의 근거가 되었다. 이후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 덩샤오핑과 류샤오치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등장, 그리고 연이은 문화대혁명 등 중국 현대사가 빠르게 전개되는 약 20여 년의 기간은 홍(紅)에 의한 혁명의 시대이자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요컨대 항일과 반제의 이름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후방을 지원했던 민족주의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 후, 사회주의 혁명의 잠재적 적으로 평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2) 덩샤오핑 시기의 위기

1978년 12월 11일 3중전회를 기점으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 노선이 채택된 이후, 경제발전과 현대화 등을 필두로 한 중국의 노선 전환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1980년대 개혁개방은 이른바 선부론(先富論⁶⁷⁾)에 따라 분권화를 기본으로 농업생산

66)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수립을 바탕으로 소련의 경제개발계획을 차용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인민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한국전쟁을 통해 최강대국 미국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마오쩌둥은 1956년 9월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신했다. 더욱이 1949년부터 대약진 운동을 발표하는 1957년까지 당내 정치적 지형은 백화제방운동과 같은 노선 갈등에도 불구하고 꽤 안정된 상태였다(MacFarquhar 2011, 21).

67) 어느 집단이나 어느 지역이든 발전 할 수 있으면 먼저 발전하고 부유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마오쩌둥의 삼면홍기(三面紅旗) 하의 평균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다음의 문건들은 초기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등소평, 1983년 1월 12일. “제반 사업은 모두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김승일

책임제, 기업독립채산제, 경제특구 조치 등 개인과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자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출입경제를 크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개별기업, 지방단위의 경제적 자율권 확대는 동시에 개별 단위나 지역의 이익을 선차시하는 제후(諸侯) 경제의 부작용을 양산했고, 황금만능주의와 부정부패, 계층·지역·도농 간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며 개혁개방 노선, 더 나아가 국가와 체제의 정당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서진영 2008, 112-117). 이러한 상황에서 자오쯔양(趙紫陽)의 ‘신권위주의’ 적 아이디어가 이완과 통제를 통해 경제적 활력과 정치적 권위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절충적 혼합체의 형태로 제안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간부들의 부당이익으로 인한 대중의 분노를 샀고 이는 다시 심각한 정치불안으로 이어졌다(Baum 2012, 472).

결국 혼합경제에서 점증하는 모순과 교착은 잘 알려진 중국 현대사의 비극 ‘천안문 사태’를 초래했다⁶⁸⁾. 사실 1989년은 중국현대사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터였다. 세계인권선언 40주년, 중국 5·4운동 70주년, 국가수립 40주년에 더해 민주화 간행물 『북경의 봄』 창간 10주년을 맞는 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해는 ‘피의 일요일’이라는 중국역사의 치욕으로 남게 되었다. 1989년 4월 호요방 사망 후, 그의 명예회복 요구와 민주화 요구의 시위가 빈번했다. 5월13일 이래 북경대학 및 북경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전국학생대표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연좌시위의 규모는 100만여 명으로 당시 5월15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방중 일정에 차질을 주는 상황이었다. 당국은 해당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북경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6월3일 인민해방군 27만 명은 무차별로 발포하여 천안문광장 시위를 살상 끝에 해산시켰다. “현대화와 사회경제적 개혁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던 덩샤오핑의 호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는 갑작스런 우발적 사건은 아니었다. 이미 1986년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학생들이 자유화와 민주개혁을 요구하고 개혁정책을 독점하는 당의 주장에 도전하는 시위가 발발했고, 당시에 당국은 무력진압을 감행한 바 있었으며 이것은 1978년말 시단민주벽 사건, 1976년 제1차 천안문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연장이었다.

역. 1994. 『등소평 문선(상)』(범우사); 등소평. 1984년 2월 24일. “경제특구를 잘 건설하고 대외 개방도시를 늘리자.” 김승일 역. 1994. 『등소평 문선(상)』(범우사).
68) 1984-1985년 사이에 급증하는 경범죄와 부패문제, 경제사범, 중국특구에서의 불법적 상업활동 등에 관한내용은 바움(Baum 2012, 498-507)의 연구 참고.

1990년대 중국 민족주의가 다시 호명된 것은 이러한 위기(Crisis)와 무관하지 않았다. 국가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위기 속에 충성을 동원하고자 했고, 지적담론에서는 맹목적인 서구 중심적 사조에서 보다 중국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정치가 등장했으며, 대중 사회 차원에서는 국가주도 민족주의와 지적담론과의 상호적인 영향 속에 하나의 정서(sentiment)로서 대중민족주의(popular nationalism)가 성장하게 되었다(Zhao 2000, 8-11). 그러나 자오(Suisheng Zhao)의 지적과 같이, 당시의 민족주의는 주체와 개념상 엄격하게 분화된 상태는 아니었다(Zhao 2000). 이는 국가도, 사회도 이제 막 분출하기 시작한 민족주의적 요구와 열기를 선점하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마오를 비판하면서 정당화한 생산력 발전론은 애초에 이데올로기적 이완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출발했고,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공백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었다.

3) 국가민족주의의 부상과 적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민족주의는 1990년대 새롭게 주목받아왔다.⁶⁹⁾ 그것은 대체로 국가에 의해 선점되어 대내외적 위기 속에 공산당이 체제 수호자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민족주의가 국가에 의해 호명된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평시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이 응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위기’(crisis)의 순간이다.

1990년대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위기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중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불만을 해소시킬 배출구로 활용하는 대신 그 과정과 경로는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하려 시도했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는 공산당의 강력한 무기로 둔갑했

69) 이러한 ‘현실’은 학계의 연구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2000년대 이후 중국 민족주의는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연구주제로 부상해 왔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단행본들만 해도 앞서 언급한 슈성자오(Zhao 2004)를 비롯하여 용난정(Zheng 1999), 피터 그리스(Gries 2004), 류와 왕 편(Liew & Wang ed. 2004), 휴스(Hughes 2006), 셴(Shen 2007), 왕정(Zheng 2012), 와이스(Weiss 2014) 등 다양하며 국내의 연구들 역시 조영남(2002, 2006), 신주식&최용호(2003), 김희교(2006), 이정남(2006), 김소중(2006), 이희옥(2009), 신봉수(2009), 이천석(2010), 조경란(2010), 한석희(2010), 이동률(2001; 2012), 한주희(2012), 윤경우(2012), 서정경(2013), 윤휘탁(2010; 2013), 이문기(2014), 공봉진(2015) 등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다.⁷⁰⁾ 국가는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요구 받던 개혁여부의 양자택일의 문제를 애국이나 배신이나 라는 도덕적 물음으로 전환하며 사회민족주의에 역공을 가했다. 사회민족주의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그 규모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국가는 태풍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태풍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고민 속에 점진적이되 단호한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다루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배태되었던 정당성의 공백을 제국주의에 대한 피해의식과 중화대국의 자부심이 교차하는 중국적 민족주의의 모순적이고 공세적인 특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그것이었다.⁷¹⁾

물론 이는 사회민족주의의 요구가 국가의 내부로 화살을 겨냥하는 역전의 가능성에 대한 끊임 없는 경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민족주의가 국가에 반(反)하는 아래로부터의 “담론의 생태계”로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려 시도했으며,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새롭게 규정된 규칙(rule)에 따르도록 통제하고자 했다.⁷²⁾ 그 방식은 교육과 언론을 통한 민족담론의 철저하고 일방적인 독점이었고, 국가의 강력한 물리력 역시 뒷받침 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은 민족주의가 담론의 형태, 즉 행위자들 상호 간에 ‘살아있는 언어’로 발전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했다. 담론(discourse)의 중요한 전제인 참여자들 사이에 ‘상호적 언어교환’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담론이 아닌 일방적 언어일 뿐이기 때문이다(Schmitt 2008).

요컨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공백은 중국의 국가민족주의를 통해 단숨에 메워졌고, 오히려 민족주의의 과잉 현상을 우려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하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국가가 민족주의를 독점하게 되는 과정과 적응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발휘해 나가는 구체적 양상과 내용을 분석한다.

70)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도구적·실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예컨대 자오(Zhao 2000a, 38; Zhao 2000b, 254; Zhao 2000c, 16-17)와 이동률(2001, 369-271) 등을 볼 것.

71) 예컨대 보겔(Ezra Vogel)은 중국 당국이 천안문사태 이후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고, 흥분된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대체 사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이 바로 ‘애국주의’ 즉 중국의 민족주의였다고 설명한다. 이는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부차적인 역할로 밀려난 후 1980년대 서방과의 관계개선과 맞물리면서 “몰락수준”이었던 민족주의가 새로이 소환된 계기였던 것이다(Vogel 2014, 858).

72) 국제정치적 접근으로 “담론의 생태계”개념을 활용한 분석으로는 구갑우(2014)의 연구 참고.

(1) 국가민족주의의 부상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내며 무력진압으로 종식된 천안문 사태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과 국내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의 입장은 오히려 전화위복을 통해 공고한 통제력을 확보했다는 것이었다(Vogel 2014, 834). 그는 인민해방군의 희생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동란 후 모두의 머리가 명석해졌다”며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반드시 고수” 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덩샤오핑의 담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신들의 “가장 큰 실수가 교육”이라는 대목으로, 청년세대와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지점이었다.⁷³⁾

중국공산당의 고민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수립과 함께 수면 아래 잠복해있던 민족주의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해소되었다. 1989년을 전후해서 소련에서는 이미 공화국들의 민족주의적 요구가 독립요구로 이어져, 연방전체의 대대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중국 내 민족주의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오쩌둥의 모순론에서 이미 민족과 계급의 결합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정권으로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생산력만이 이론과 사상의 정합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덩샤오핑의 논리구조에서 개혁개방 자체에 대한 피로도 누적이 초래한 업적 정당성의 위기는 체제 정당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련과 동유럽⁷⁴⁾ 공산정권들의 말로에 비추어 볼 때 서구유학과, 중국 내 지식인과 학생, 진보적 언론과 학계로부터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요구들이 현재의 국가 그 너머의 민족의 이름으로 정권에 반하는 사회민족주의로 발전함으로써 공산당의 독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한 시나리오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1990년대 초반의 중국 민족주의는 특정한 세력의 주도로 단일하게, 통일된 상태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조영남 2002, 178). 따라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와 국가는 민족주의적 정당성의 주도권을 놓고 팽팽하게 긴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민족주의에 대한 통제와 독점을 시도했다. 민족주의의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속에 당의 역할을 민족적 자긍심의 수호자이자 배타적 지위를 지닌

73) 등소평. 1989년 9월 16일. “미국국적의 중국학자 이정도 교수와의 담화.” 김승일 역. 1994. 『등소평 문선(하)』(범우사), 187-188.

74) 등소평. 1989년 9월 16일. “미국국적의 중국학자 이정도 교수와의 담화.” 김승일 역. 1994. 『등소평 문선(하)』(범우사), 187-188.

애국주의의 담지자로 치환 했던 것이다(Zhao 1998, 289; Ogden 2001, 162). ‘민족주의물결’이 ‘민주화의 물결’을 압도해 나간 이후의 상황은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조영남 2002, 171).

이처럼 1990년대 다시 등장한 중국 민족주의가 국가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조영남 2002, 176; 이희옥 2009, 158; 조정란 2010, 221-442; Zheng 1999, 21, 87-88; Zhao 1997, 732; Zhao 2000C, 20-21; Chang 2001, 180). 중국의 민족주의에서 국가독점 현상은 민주화, 정치개혁, 개인의 인권과 같은 문제를 국가이익의 후순위로 강등시키며, 대외적으로 민족주의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혁개방, 압축고도성장의 성공으로 신장된 국력과 자신감은 민족주의를 공세적으로 진작시켰다. 1995-1996년 대만해협 중국미사일 발사와 미국 항공모함 파견, 1998년 스파이 혐의 중국과학자 체포, 1999년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피격, 2001년 남중국해상 전투기 충돌 등이 중국인들의 배외(排外)사상으로 이어진 것은 어느 정도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한석희 2010, 88; 전재호 2004, 80-83). 나아가 2008년 3월 티벳 독립운동의 유혈진압, 올림픽 성화 봉송 때의 과도한 애국적 표현, 정권 비판적 입장의 류샤오보 교수 구금 등은 ‘강한 국가’ 중국이 민족주의를 이용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한석희 2010, 93). 결과적으로 1980년대 말의 국가적 위기를 시발로 한 초기의 국가민족주의는 위기 극복의 수단과 체제의 정당성을 넘어 대외적 팽창주의로 의심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애국주의 깃발 아래, 처리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나 소수민족 문제 같은 결끄러운 것들은 침잠되거나 무마되었다.

(2) 인정과 점진주의: 적응의 과정

6·4 천안문 사태를 기점으로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를 점유해나가는 과정은 ‘애국주의의 소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상황은 급속한 개혁개방에 따른 자본주의적 부작용에 대한 사회민족주의의 요구가 국가에 수렴되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중국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덩샤오핑의 자조 섞인 표현대로 공산당은 “젊은 세대들을 교육시켜야” 했고 그것은 “한두 달 보충”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했다. 당국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진정시키는 것 이상의 비전(vision)을 제시해야했기 때문이다. 의식과 생산관계가 아닌 물질과 생산력을 발전 동력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무감해진 인민들에게 “상

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충분히 헌신하고 싶은 ‘조국’을 그려야했던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에 대한 중국적 수정은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며 먼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공산당,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이희옥 2004, 17). 따라서 국가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키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 방식은 이미 사회에서 제기된 요구들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효과적인 언론통제와 사상교육을 통해 적아(敵我)를 재정의 함으로써 정권으로 향했던 사회민족주의의 화살을 외부로 돌릴 수 있었다. 천안문 사태에서 사회가 요구했던 정치개혁과 민주화, 인권 등의 문제는 폭력적 시위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희생적 진압을 통해 일소된 것으로 그려졌고, 국가는 무질서와 환란 가운데 중국을 지켜내는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시위에 가담한 일부’는 중국의 안정에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중국공산당은 강력한 민족주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동시에 일방적인 권력관계에 기반해 사회적 담론화를 억제했다. ‘애국주의’ 이름으로 호명된 민족주의를 통해 인민들을 국가 중심으로 결집시키려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의 국가와 사회 간 상호긴장은 재규정된 위기(crisis) 덕분에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한 서구의 금수조치는 6.4 시위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무수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공산당 정부’에 대한 것이었지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그 대상은 ‘중국민족’으로 간주되었다(Vogel 2014, 858). 당국은 “상처받은 민족주의”, “좌절된 민족주의”의 수사로 대중의 민족주의 감성에 호소하는 한편 아편전쟁 이래 오욕의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부흥은 필수적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에 정통성을 부여하자는 논리를 전개했다(한석희 2010, 85). 나아가 공산정권은 중국인들 감성 기층에 자리한 강대국에 대한 지향을 ‘중화민족’의 부활에 대한 구호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침윤에 따른 정당성의 공백을 채우려 시도했다. 이는 개혁개방과 함께 수입된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국가주의로 변질되는 과정이기도 했다(이희옥 2009, 172).

1990년대 본격화된 광범위한 애국주의 교육은 그 중요한 물적 토대였다. 1990년 5월 장쩌민이 애국주의 전통의 계승과 발양을 청년들에게 호소한 이후 1993년 1월 국가교육위원회는 “중국의 교육개혁과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애국주의를 중국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지침원리로 제시하여 민족주의 교의가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외연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공산당 중앙 선전부는 애국주의 교육을 위

한 시청각 자료를 전체 초중등 학생들이 시청하도록 했으며 1994년 8월에는 정부 명의로 <애국주의교육실시요강>을 공포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사회 건설의 전략적 차원으로 끌어 올려 전면적인 사업을 벌여나갔다. 또한 1996년 10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애국주의를 사회주의 인민이 습득해야하는 핵심 덕목으로 규정하고 애국주의 교육의 지속 강화를 결의하게 된다.⁷⁵⁾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성체의 틈에서 빠져나가려 했던 민족주의는 오히려 성체를 공고화하는 접착제로 기능하게 되었다. 적응의 관점에서 양자는 서로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닌 인정을 통한 점진적으로 결합되어 갔고, 국가에 의해, 국가를 위해 재구성된 민족주의는 그러한 적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회복탄력성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75) 중국의 애국주의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재호(2004, 76-77), 윤휘탁(2002: 2010), 이동률(2001), 보겔(Vogel 2014, 857-861) 참고.

제3장 호명 이전의 북한 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시기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가 국가의 주도 하에 정치적 정당성과 동원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호명된 1986년 이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기간이다.¹⁾ 따라서 이하에서 다루어질 194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의 기간은 본 연구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시기를 다루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이데올로기적 적응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비록 그 내용과 비중은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개념과 민족주의를 둘러싼 입장이 특정 시기의 정치적, 현실적 맥락들 속에 긴장과 타협을 겪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온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 시기를 시계열 순으로 종합하여 일원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그러나 결코 동일하지는 않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 첫 번째 축은 건국 시점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민족주의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석과 재평가를 거쳐 1986년 시점의 민족관, 민족주의관으로 귀결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추동하는 구조적 압력이자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정당성의 정치’가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본 연구의 전반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는 호명(interpellation)의 개념은 알튀세(Louis Althusser)의 핵심 가정을 따른다. 알튀세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를 통해 전반부에서는 생산조건 즉 토대와 관련된 구조적 조건들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를 통해 어떻게 재생산되는가를 설명한 다음, 후반부에는 이것이 “호명”의 과정을 거쳐 개인이 주체화 되는 것, 즉 모든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구체적인 주체로 변형 시키는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박찬부 2001, 69). 특히 주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가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되는데, 호명이 되는 개인은 스스로 해당 발화의 주체가 된다고 인식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상상된 공동체’에 편입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을 지나치게 순응적, 종속적 객체로 간주한다는 비판(강경덕 2016, 164)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민족주의, 사회주의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인 북한의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의 구현과정에서 인민 즉 대중을 민족의 이름으로 포괄하려는 시도는 여타 민족주의의 술어로서 ‘호명’ 개념이 활용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외연’으로서의 ‘우리 만들기’ 과정에서 ‘호명’은 중요한 술어로 본 논문 전반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본 장을 이와 같은 이원적 구조로 설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압력과 주체의 선택을 동시에 그러나 별도로 조명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적응적 국가 민족주의의 부상에 대한 해석이 사후적, 기능주의적, 결정론적인 것으로 흐르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 자체가 전적으로 정당성의 정치라는 구조적 압력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만은 아니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당성의 정치와 민족주의의 호명이라는 두 현상의 만남은 주체의 ‘선택’이 반영된 ‘열린’ 결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공시적, 비교정치적으로는 정당성의 정치라는 보편적 메커니즘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의 상이한 선택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통시적, 지역학적으로는 해당 선택을 완료형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끊임없는 긴장 속의, 그리고 심지어는 역진도 일어날 수 있는 열린 결과로 간주함으로써 회고적 이해를 넘어 전망적 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 자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함이다. 앞서 1장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관심은 북한의 민족관, 혹은 민족주의론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정치적 맥락 속에서 ‘왜’, ‘어떻게’ 변화되어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민족관, 민족주의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은 ‘무엇’에 대한 명료한 질문과 답에 기반 할 때 보다 견고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민족관과 민족주의관이 시기별로 결코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추적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1986년 이후 민족주의와 관련된 변화들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선 시기의 변화의 동학과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하에서는 먼저 1940년대 이래 1980년대 전반기까지 북한의 민족관과 민족주의관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이어서 1986년 민족주의가 호명됨에 있어 핵심적인 압력으로 작동한 ‘정당성의 정치’가 해당 시기 동안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민족주의 호명 이전 북한의 민족, 민족주의관

1945년 이전 조선의 제1과제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방 정국에서 지도자로 부상한 거의 모든 인사들의 대중적 지지 역시 자연스럽게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기여에 기반하고 있었다. 식민시기 국내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 보천보 전투를 통해 일제에 정면으로 맞선 영웅으로 미화되어 있었던 김일성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요컨대 김일성과 그의 동료들은 스스로 가진 민족해방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그들이 정치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 역시 대중의 민족주의적 정서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집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체성과 지향, 즉 공산주의자로서 계급노선에 기반한 혁명을 완수해야한다는 규범과 목표가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성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계급 vs. 민족’이라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충돌과 더불어 당제관계를 중심으로 위계화 되어있는 사회주의 국제관계의 하위 구성원으로서 가진 정치적 취약성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했다.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일탈은 “스탈린 대원수”의 “세계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위한 영웅적 역할”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암흑과 질곡 속에서 해방되었으며 세계민주주의 새로운 성원으로써 반만년의 민족사를 재건하여야할 찬연한 력사의 날을 맞이” 했다고 그를 노동당창립대회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당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북한의 민족관 및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은 위와 같은 다양한 조건과 긴장들의 조합에 따라 시기별로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1986년 이전의 시기는 아직 민족주의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호명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수령 및 통일 등과의 긴장 역시 나타나기 전이며, 주로 계급노선과의 긴장이 다른 두 긴장을 압도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진폭이 국내정치적 균열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 다시 말해 유일영도체계 확립 이전 시기가 그 이후에 비해 변화의 폭과 빈도가 더욱 컸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1946년 8월 28일. “쓰딸린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1집. 1988. 국토통일원.

1. 해방에서 1950년대까지: ‘반일 애국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스탈린의 그것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정영철 2001, 237; 김태우 2002, 258-259; 이종석 1994, 73; 김창근 2003, 41). 이에 대한 근거로 많이 언급되어온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언어, 령토, 경제생활 및 문화는 민족을 형성하는 표징이다. [...] 이와 같이 민족은 언어 령토 경제생활 및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이라는四個의 표징 가운데서 각 개의 표징이 지는 의의는 동일하게 크다. 이 표식들 중 하나만 없더라도 민족으로 될 수 없다. [...] 로씨아인들이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은 최근이다. 블란서인 따따르인 영국인 조선인 등에 관하여서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 민족은 자본주의가 발생될 때에 발생된다.”³⁾

“우리는 온갖 부르조아민족주의와 배타주의를 배격합니다.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아니라 자기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도 배치됩니다. 부르조아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 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발현을 방해합니다.”⁴⁾

요컨대 북한 역시 민족이란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적 생활 그리고 공통의 문화에 나타나는 심리적 성격을 기초로 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안정적 공동체”라는 스탈린의 정의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근대주의의 입장, 그리고 계급적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말하는 ‘북한’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과연 건당, 건국 이후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전쟁을 거쳐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북한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정치적 다이내믹스가 작동한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한 입장이 일관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탈린의 민족문제에 대한 입장 역시 지속적인 변화를 겪은 바, 여기서 북한이 수용했다는 스탈린의 입장은 어느 시기의 무엇을 의미하는

3)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1948. 『민족과 민족문제』. 평양: 로동당출판사; 김태우 2002, 260; 한성훈 2011, 136. 원문재인용.

4) 김일성, 1957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김일성저작집』 제11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지 등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에 관한 상기한 통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소결은 국가의 일부로서의 당이 아닌 전체로서의 북한이 스탈린식의 민족주의론을 입론한 것은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였으며, 이때 그들이 받아들인 스탈린식 민족주의의 핵심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였고,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북한의 정치적 조건과 압력과 긴밀히 연동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⁵⁾

먼저 상기한 당내 교육자료에서의 입장과 달리 국가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저작들을 통해 살펴볼 경우 적어도 한국전쟁 이전 북한의 민족주의 관련 담론을 지배한 것은 사회주의적 성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순수한 의미의 애국주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북한의 혁명단계가 인민민주주의혁명, 즉 민주개혁의 단계였다는 점과 정치적 역관계에 있어서 민족주의 세력과 경쟁하는 시기였다는 점,⁶⁾ 그리고 김일성 세력의 정당성의 기반 역시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경험이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당시의 애국은 그 자체로 선(善)으로 간주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들이 새 조선 건설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⁷⁾

특히 당시 애국주의가 사회주의적 내용을 포괄한 것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애국주의가 계급교양과 ‘동시에’ 그러나 ‘별도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사회주의적 내용은 애국주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5) 이하에서 다루는 김일성의 연술과 관련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김일성저작선집』을 주로 하되, 해당 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김일성저작집』을 참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6) “공산당은 아직도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일부 군중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 전선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 김일성. 1945년 11월 5일. “민족운동자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1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학생들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선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혁명리론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⁸⁾

“백철불굴의 **투쟁정신과 마르크스-레닌주의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수를 미워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민족적자부심을 높이고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움으로써 지난날 남에게 억눌려 살면서 자기의 힘과 재능을 믿지 못하던 그러한 노예살이근성을 철저히 뿌리빼야 합니다”⁹⁾

“군인들을 참다운 애국주의사상과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¹⁰⁾

“우리는 교원, 작가, 예술인, 의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고상한 애국주의사상과 과학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민족문화의 발전과 건국위업에 있는 지혜와 열성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¹¹⁾

“모든 군인들을 **불굴의 혁명정신과 고상한 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원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²⁾

“동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할 줄 알아야 하며 고상한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¹³⁾

“경비대가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군인들을 높은 **계급의식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¹⁴⁾

-
- 8) 김일성. 1945년 11월 17일. 평양학원 터전을 정하면서 학원 및 지방당 일군들과 한 담화. “평양학원을 창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9) 김일성. 1946년 2월 23일. 평양학원개원식에서 한 연설. “평양학원개원식을 축하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0) 김일성. 1947년 1월 15일.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업.” 『김일성저작집』 제3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1) 김일성. 1948년 3월 29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결론.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2) 김일성. 1948년 8월 7일. 내무국 경비처 제3경비려당잔을 임명하면서 준 지시. “38선경비대의 임무.” 『김일성저작집』 제4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3) 김일성. 1948년 9월 19일. 내무성중앙보안간부학교 제1기졸업식에서 한 축사.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내무일군이 되어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4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4) 김일성. 1948년 10월 21일. 경비대문화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부대의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또한 이하에서 보듯 1947년부터 애국주의를 ‘협애한’ 또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국제주의와 연결 짓고 있으나 그것 역시 여전히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적 애국주의”에 머문 것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애국주의는 결코 **협애한 민족주의**나 민족배타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철저하게 국제주의와 결합되어있습니다.”¹⁵⁾
“협애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참말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적 애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¹⁶⁾

이와 같은 단계를 벗어나 애국주의가 스탈린적 ‘형식’에 근접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시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형식’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이와 같은 결합이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사회주의적 지향에서 라기보다는 한국전쟁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대응을 그 핵심으로 한 것으로 스탈린이 말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애국주의와 최초로 결합하기 시작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국가를 초월한 계급적 연대와 이를 통한 세계혁명의 추구라는 지향보다는 한국전쟁이 지닌 국제전으로서의 성격과 원조의 현실적 필요성에 근간한 것이었다.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최초로 연결 지은 노작이라 할 수 있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이라는 논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해당 논문의 주된 내용은 제국주의 진영의 그것과 중국을 비롯한 이른바 ‘민주주의 진영’의 원조를 대비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¹⁷⁾ 그러한 흐름은 김일성에 의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최초로 언급된 다음의 논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1954년 5월 교통운수부문모범일군회의에서 행해진 해당 연설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핵심적인 함의는 ‘형제국’들의 원조였던 것이다.

15) 김일성. 1947년 2월 7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연설. “평안북도 당단 체사업에서 나타난 결합과 우리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 『김일성저작집』 제3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6) 김일성. 1947년 7월 21일. 평양시 각급 학교 졸업생환영대회에서 한 연설.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일터는 민주학원졸업생들을 기다린다.” 『김일성저작집』 제3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7) 김일성. 1952년 4월 25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김일성저작집』 제7권. 198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애국주의는 위대한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형제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튼튼히 립각할 때에만 우리의 애국주의가 진정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될수 있습니다. [...] 우리 철도운수는 해방후 **형제나라 인민들의 지성어린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 **소련은 우리 나라에 철도련대를 보내 주어 파괴된 운수시설들을 복구하여주었으며 기관사의 양성을 백방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에서 출발한 이러한 원조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적건설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하였으며 미제와 그 추종국가들의 무력침범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승리할수 있게 하였습니다.**”(18)

상기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공식화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식적 결합이 내용적으로도 완성되어 말 그대로 스탈린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형식과 내용이 완결적으로 수용된 것은 다시 이로부터 다시 3년여가 지난 1957년 말에 이르러서였다.¹⁹⁾ 그리고 1958년 들어 이와 같은 흐름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총 6편에 걸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본격적으로 다룬 1958년은 비중과 분량 모든 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²⁰⁾

그렇다면 1957년을 즈음하여 북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주지하듯 1957년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의 여독을 청산하는 동시에 해당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중공업 우선노선과 전면적인 농업 협동화에 기반 한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시도가 제1차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된 원년이였다. 따라서 권력투쟁에서의 승리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마찬가지로 제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증명해야하는 했던 1929년의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1957년의 김일성 역시 자신의 주도로 전후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사회주의혁명의 전

18) 김일성. 1954년 5월 11일. 교통운수부문모범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 김일성. 1957년 11월 27일. 조선인민군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조국통일문제와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 『김일성저작집』 제11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57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김일성저작집』 제11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 해당 논문들은 아래와 같다. 김일성. 1958년 1월 17일. 영화예술인들앞에서 한 연설.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58년 3월 7일. 도, 시, 군 당위원장들과 인민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58년 3월 8일.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58년 3월 19일. 전국청년사회주의건설자대회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58년 10월 30일.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군인들 속에서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취물들을 옹호하고, 전 인민을 동원하여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종파’ 들과 달리 자신이 혁명의 적통임을 입증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조건의 유사성이 왜 1930년대의 스탈린이 그랬듯 1950년대 후반 김일성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호명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라 판단된다.²¹⁾ 이러한 의미에서 동일하게 제1차 5개년 계획을 마치는 해에 ‘승리자의 대회’로서 진행된 1934년 소련의 17차 당대회와 1961년 북한의 4차 당대회는 적어도 스탈린과 김일성에게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승리의 결과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21)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등장에 대한 김일성 스스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문제를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전후에 진행된 인민군간부회의때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국주의교양이라고 말하여오다가 이때에 와서 특별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라는 말을 내놓게 된것은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빨리 진척되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가 선사정과 관련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북반부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서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인민들을 그저 막연하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도록 교양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군인들 속에서 그저 애국주의교양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김일성. 1969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 교양의 몇 가지 문제.” 『김일성저작집』 제24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 1960년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주체’의 결합

상기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주로 공산주의 교양과 결합되어 증산과 동원의 언어로 활용되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²²⁾ 새로운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소분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내의 갈등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 즉 주체노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²³⁾ 따라서 해당 시기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주체노선이 수정주의라는 외부로 부티의 비판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에서 민족주의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주, 자립, 자위 등 주체노선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들을 옹호하는 고리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위험한것은 수정주의자들이 혁명을 하지 않으려거든 혼자서나 안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혁명하는 것까지 반대하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수정주의를 하라고 내려먹이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수정주의로선을 따라가는것을 거부하는 혁명적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게 《교조주의》니, 《민족주의》니, 《쓰딸린주의》니 하는 모자를 씌우고 그들을 뿌리치며 사회주의진영에서 따돌리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력갱생이 민족주의라고 시비하는데 그것이 왜 민족주의겠습니까?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 제힘으로 혁명을 하며 제 손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니까?”²⁴⁾

- 22) 이하의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노작들의 해당 부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각급 당단체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사상투쟁과 병행시켜야 하며 근로대중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으로, 인민에게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결합시켜야 합니다.” 김일성. 1959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9년 2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제13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교양될 때 그들은 우리 세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공동의 재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될 것이며 한뼘의 땅이라도 더 일구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으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1961년 4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5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사랑하며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도시와 농촌을 훌륭하게 꾸리며 자기의 조국을 견결히 지키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15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23) 물론 주체와 애국주의를 최초로 연결 지은 것은 주체를 처음 제기한 1955년의 노작이었다. 그러나 주체가 그러했듯 양자의 결합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김일성.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9권. 198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24) 김일성. 1962년 3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3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근로자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그들에게 **민족적자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시키는 것 [...] 특히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 자립성.”²⁵⁾

“우리가 강조하는 주체는 결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²⁶⁾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민족배타주의와 복고주의적 경향이 자라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적자부심을 높인다고 하여 잘못하면 배타주의로 나갈수 있습니다.**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쓴것처럼 우리가 만일 배타주의로 나간다면 국제적교류도 부인하고 다른 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도 잘 받아들이어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것입니다.”²⁷⁾

“**주체를 세우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어긋나는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국제주의는 애국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세계혁명에 충실할수 없습니다. **대국주의는 큰 나라의 민족리기주의이며 사대주의는 작은 나라의 민족허무주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도 사회주의애국주의와도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애국주의자들과 국제주의자들은 대국주의와 사대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주체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합니다.”²⁸⁾

“우리가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민족주의로 나가자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체사상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²⁹⁾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은 결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조선에서 살아야지 제 나라를 버리고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수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력갱생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잘 건설하면 우리의 민족적 임무를 다하는 것인 동시에 이것은 곧 국제적 임무에도 충실하는 것으로 되며 세계혁명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³⁰⁾

25) 김일성. 1963년 2월 8일.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6) 김일성. 1963년 4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회의에서 한 결론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7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7) 김일성. 1963년 5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강화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7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8) 김일성. 1965년 2월 23일. 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9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9) 김일성. 1968년 6월 14일. 함경북도 인테리들앞에서 한 연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97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이러한 차원에서 1966년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관련한 드문 단행본인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1960년대 이래 주체의 부상과 함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겪은 변화를 종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해당 저서를 1950년대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총화라 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에서 1958년에 출판된 또 다른 단행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하여>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각 3장으로 이루어진 해당 저서에서 1958년의 책은 1. 조국과 애국주의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태도, 2.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제 특징, 3.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과업으로 구성된 데 반해, 1966년의 책은 1. 주체사상은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2. 혁명의 심화 발전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3.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의 집중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보다 보편적인 틀 속에 계급적 내용을 담는데 충신했다면 후자는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규정하고 그 실천적 과제로 자주, 자립, 자력갱생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록 시점과 내용은 다르지만 양자 모두 북한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에 출간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되는 지점이다. 앞서 설명한 1958년과 마찬가지로 1966년 역시 후계체제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된 정치적 격변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시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갑산과 숙청의 빌미가 되었던 유일영도체제의 훼손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제시된 것은 상기한 시기적 특성이 갖는 함의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³¹⁾ 당시의 국내정치적 파고와 격변의 흐름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

30) 김일성. 1969년 7월 1일. “아런 《다르 알 타흐리르》출판사총국장 아브델 하미드 아흐메드하므루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제24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1) 다음 두 노작의 해당 부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사업에서도 편향이 많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고향의 전통을 살린다고 하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골동품을 내세우는 놀음을 하였습니다. [...] 함경남도의 영흥, 북청, 흥원 같은데서는 지난날 농민운동을 한것이 좀 있다고 하여 굉장히 떠듭니다. 이것은 순전히 오기섭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입니다. 함경북도의 길주, 명천, 김책시같은데서도 자기 지방의 전통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지난날 이 지방들에서 크게 투쟁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이 뼈라를 몇장 뿌리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뼈라나 뿌리고 감옥생활이나 좀 한 것을 가지고 지방마다 자기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교양한다면 결국 지방주의나 종파주의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김일성. 1967년 3월 17~24일. 도, 시, 군및공장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반당반혁명분자들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왜곡하여 향토주의를 고취하면서 청산된 지주를 내세우고 퇴폐적인 노래를

의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이라는 대국으로부터의 영향력,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주체 및 자력갱생의 논리가 가지는 불가피한 긴장 등에 따라 북한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묘사하는데 있어 내용상의 미묘한 차이들을 드러내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1960년대 북한 민족주의, 즉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역시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내외부의 상황들과 결합하며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이다.

3. 1985년의 전환: 김정일의 민족 재정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에서 합법화된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지속적인 부침과 변화를 겪은 데 반해 여전한 부정의 대상이었던 민족에 대한 정의는 1970년에 와서야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³²⁾

기존의 스탈린식 부르주아 민족 및 민족주의 개념을 따르던 북한정권에서 처음으로 민족개념에 수정을 가한 것은 1970년 『철학사전』을 통해서였다. 북한정권은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은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봉건적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 가 세워지고 이 틀 안에 언어, 지역, 문화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점차로 이루어져 가는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 되었음을 주장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4개의 요소들은 스탈린의 부르주아 민족 공통성과 동일하지만 여기에서 ‘봉건적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 가 세워졌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칭하는 상기한 통일국가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이 아닌 ‘고려’ 로 규정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신라가 외세의 동맹과 지원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일’ 로 볼 수 없다는 즉, ‘자주성’ 을 결여했다는 비판적 입장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고려는 한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근대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스탈린식 민족관과 일정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었다.

부르게 함으로써 부르주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퍼뜨려놓았으며 지방주의를 부활시켰습니다. 당조직들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뿌려놓은 반동적사상독소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1967년 6월 20일. 함경남도당 및 함흥시당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2)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민족주의의 한 유형으로 보는 시각은 화이트(White 2011, 220)을 참조할 것. 또한 김태우(2002)의 경우 이와 같은 스탈린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이보다 훨씬 빠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었다고 주장한다

1973년에 발간된 『정치사전』은 이보다 한결음 더 나아간 정의를 보여준다.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은 우리 나라에 일찍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언어, 지역, 문화,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점차 이루어지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다. 스탈린의 기존 민족개념에서 ‘혈통’이 추가된 것은 사실상 민족개념 구성 요소의 변경으로 그 함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민족이 1970년 철학사전에는 삭제되었다가 1973년 정치사전에서 부활되었다는 점, ‘혈통’의 의미가 모호하게 처리되었다는 점, 1985년의 철학사전에서는 혈통에서 핏줄로 대체된 새로운 구성요소가 여전히 모호하게 처리된 가운데 경제생활이 빠졌다는 점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1986년 이전 북한의 민족개념

	민족의 정의	비고
1948년 <민족과 민족문제>	언어 령토 경제생활 및 문화는 민족을 형성하는 표징이다.	스탈린 정의와 일치
1970년 철학사전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불건적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의 역사적 틀 추가
1973년 정치사전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혈통추가
1985년 철학사전	핏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혈통=>핏줄, 경제생활 삭제

상기한 변화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한민족을 포괄할 수 있는 혈연의 공통성을 의미하는 혈통 또는 핏줄이 추가된 반면 스탈린의 민족이론에서 핵심을 이루던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빠짐으로써 사회주의적 지향에서 떨어진 반면 통일 지향성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었다(이종석 1994, 74-75; 김태우 2002, 278). 특히 이와 같은 변화가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사상과 리념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무의미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그 어떤 사상과 리념을 신봉하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을 찾아야 하며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1980년 6차 당대회에서의 김중린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발언과 중첩되며 상기한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생활이라는 변수의 탈락은 유보적이었고, 혈통 역시 혈연적인 공통성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바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을 통해 북한 민족주의론이 전면적인 전환을 겪기 1년 전인 1985년에 발간된 주체사상 총서였다. 말 그대로 지난 시기 주체사상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체계화한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해당 총서의 2권에 해당하는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에서 새로 제기한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정의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 라는 김정일의 주장에 기대어 논의를 펴고 있는 해당 저서에서 북한은 연령, 성별, 인종 등 생물학적 징표, 즉 자연적 징표에 의해 갈라지는 집단과 사회적 징표에 의해 갈라지는 집단을 구분하고 계급과 민족을 후자인 사회적 징표에 따라, 그 중에서도 일정한 목적 밑에 조직된 집단과 차별적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어 ‘사회적 징표’ 로서 ‘핏줄’ 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시도한다. 비교적 길지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이기엔 전문을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족은 씨족, 종족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하여오는 역사적 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문화와 영토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다. 자주성을 위한 오랜 기간의 투쟁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차 씨족, 종족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씨족, 종족의 혈연적 조직이 파괴되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통일적인 경제생활, 문화생활, 정치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일적인 경제생활, 문화생활, 정치생활은 민족의 형성발전을 위한 기본요인이다.”

“통일적인 경제생활은 민족형성의 기초이다. 생산이 확대되고 생산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같은 영토 안의 서로 다른 씨족, 종족에 속하였던 사람들 사이에 점차 새로운 통일적인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로 다른 씨족에 속했던 사람들이 통일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접촉하게 되었으며 핏줄의 공통성을 이룩해나가게 되었다.”

“통일적인 문화생활은 민족의 형성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문화적 재부를 공동으로 창조하고 교류하며 향유해나가는 문화생활과정에서 사람들은 민족어와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창조하게 되었으며 영토와 핏줄의 공통성을 이룩하게 되었다.”

“**통일적인 정치생활**은 민족의 형성을 추동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일적인 정치생활단위가 형성발전하는 데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영토를 확정하게 되었으며 통일적인 언어와 문화를 창조하고 **핏줄의 공통성도 이룩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통일적인 경제생활, 문화생활, 정치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핏줄과 언어, 문화와 영토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인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비록 핏줄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경제생활은 여전히 민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오히려 문화생활과 정치생활까지 구성요소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핏줄 역시 우리의 기대와 달리 혈연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1980년대 북한 민족개념의 변화가 계급노선과의 긴장을 포기한 것이라거나 통일지향성이 강화되었다거나 하는 기존의 해석이 일면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³³⁾ 또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모순적이라거나 즉흥적이기 보다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하에서 살펴보듯 1986년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전면화하기에 앞서 총서가 발간된 해인 1985년 8월 15일 김정일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는 담화를 발표한다. 해당 담화는 김정일이 광복을 기념한 최초의 담화이자 애국주의를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노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해당 담화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절세의 애국자”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신은 “애국이란 말을 좋아”한다며 “애국심의 본질”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주체”를 “애국의 상징이며 그 집대성”으로 정의함으로써 당, 국가, 수령, 주체 등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 개념들을 애국의 이름으로 모두 포괄하려 시도한다. 1986년부터 본격화된 우리민족제일주의론과 이후의 김일성민족론, 그리고 그 종합으로서의 김정일애국주의의 등장과 관련한 가장 직접적인 기원이라 판단된다.

둘째, 김정일의 『총서』의 발간을 비롯하여 정론에서 공식화한 민족 개념의 ‘핏줄’

33) 물론 이와 같은 북한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다. 예컨대 1999년 발간된 <김정일민족관>이란 책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북한이 여전히 핏줄에 대한 해석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핏줄의 공통성은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그 전에는 핏줄의 공통성을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민족이 사회력사적범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공통성은 민족의 징표로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핏줄의 공통성을 생물학적속성으로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민족의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 없다. 핏줄의 공통성은 유전에 의하여 후대에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생물학적 공통성이지만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오래동안 사회적운동을 같이 해온 것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적성격을 띠는 공통성이다. 핏줄의 공통성이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인 민족의 징표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조성박 1999, 18)

론, 그리고 1985년 이후 김정일 스스로 무수한 민족·민족주의 관련 이론화 작업과 일반 인민대중에 보다 확대해서 유통되는 사후 과정을 봤을 때 민족 개념의 수정과 이론적 체계화가 김정일의 후계리더십의 내용을 구성하는 비전의 ‘종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86년 2월 리규린의 서술에서 김정일의 ‘독창적인 민족 개념’의 특징이 바로 ‘피줄’에 있으며 그것은 종래에는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서 ‘피줄’ 개념의 삽입이 북한의 민족개념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였고, 그것은 1985년 10월 김정일의 『남조선문제』 정론 발표 직후였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³⁴⁾ 요컨대 이전 시기까지 민족 및 민족 개념은 김일성의 언어로 구체화되었던 데 반해 이를 기점으로 김정일의 민족담론의 주도권이 확고해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후계와 연관된 매우 체계적인 준비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³⁵⁾ 최근 민족이론의 재정립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윤색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은 사후적으로나마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³⁶⁾

34) 리규린. 1986년 2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

35)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김정일의 민족에 대한 정의는 이미 1960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인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통해 오래 전에 제시된 것이라 한다. 일본의 대동연구소 강민화 소장은 이 문헌이 선집 등에 수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되지 않은 조건과 ‘김일성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 그리고 당시 ‘고전병’에 대한 사회적인 투쟁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 문건은 1990년에 출판되었다(정영철 2010, 11).

36) 최근 새롭게 증보되어 출판되고 있는 『김정일선집』에서는 상기한 기존학설보다 10여 년을 거슬러 ‘조선민족’의 독자성을 추구하려는 조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김정일선집』 증보판 1권에서는 김정일이 1961년 5월 2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를 통해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발굴사업”을 다그칠 것을 주장했는데 이유는 “단순한 학술상의 무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구성, 특히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와 직접 잇닿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구석기시대 뿐아니라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유적유물도 많이 찾아내어 우리 민족사의 유구성을 고고학적으로 확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의 결과로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제국주의용사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짓부시고 우리 나라 역사의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서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함을 역설했다. 여기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고대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주체적 입장을 정당화 하지만, 기존의 스탈린의 민족주의 개념, 특히 브루주아 민족개념의 정의는 이론적으로는 근대적인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홀로서기 하고자 했던 모집단은 바로 소련, 스탈린의 민족관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김일성선집』 증보판 1권에서는 또한 김정일이 1961년 5월 25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에서 “민족은 민족어와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살리고 그것을 고수하자면 언어생활에서도 주체를 세우고 민족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스탈린의 민족개념 4개 구성요소들은 각각이 민족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이 되는데, 김정일이 강조하는 언어는 역시 ‘민족어’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초, 다시 말해 1970년대 초의 민족개념이 조금씩 수정되는 시점에 앞서, 김정일 민족개념의 정의와 관련해서 5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 그 흔적을

셋째, 내용적으로 상기한 흐름이 공유하는 북한 민족주의의 새로운 현상, 즉 민족재건설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1986년 이래의 북한 민족주의는 일종의 변형된 사회주의 민족론으로서 경계의 재설정을 통해 한민족이 아닌 독자적인 범주를 지향하는 민족 재건설(nation re-building)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추가한 시도와 정황들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태우(2002 277-278)는 1985년 이전까지 김정일의 민족이론이 제시된 적이 없으며, 이후 시기 김정일의 후계자구축이 공식화되면서 독창적인 이론화 작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상기한 일련의 선집 증보판을 통해서 김정일의 민족이론, 민족관의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의 논리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2절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

이하에서는 앞선 2절에서 살펴본 민족, 민족주의론의 변화와는 또 다른 축에서 정당성의 정치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 북한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귀결이 왜 민족주의의 부상과 민족 재건설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유일체제와 ‘주체’

1) 진영내부의 갈등과 ‘주체’의 등장

공화국의 수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정당성과 관련된 고민의 핵심은 결국 ‘보편성 vs. 특수성’의 긴장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보편주의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민족해방의 과정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사회주의 신생국가가 흔히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임지현 1999: 192-193).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그리고 당시 사회주의권의 맹주였던 소련을 일종의 ‘보편성’으로 본다면, 정권수립 초기 북한 지도부의 권위구축 과정(authority building)은 그와 같은 보편성에 기대어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그로부터의 ‘자주성’ 즉 자신들의 ‘특수성’을 독자적으로 담보해나가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북한정권수립 초기, 정치적 기반이 공고하지 못했던 김일성과 북한지도부의 소련에 대한 상당한 의존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의존은 정치, 사상,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전반을 총망라했다.³⁷⁾ 1946년 김일성은 “가장 친근한 벗이며 원조자”인 소련과 스탈

37) 예컨대 당 기구, 국가건설을 비롯해 군, 경찰기구 등의 물리적 강제력의 확립문제, 토지개혁, 현물세, 애국미 헌납 등의 농촌문제, 도급제, 생산돌격대운동, 사회주의적 경쟁, 스탈하노프 운동 등의 노동문제, 산업국유화와 인민경제계획, 유일관리제, 독립채산제, 계약제 등의 산업(공업)에 관한 문제, 국가 예산, 세제, 금융, 화폐개혁, 공채발행 등, 정치, 경제의 전반에 걸쳐 소

린에 만세를 표하며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사회주의정권수립의 지대한 공로를 그들에게 돌렸다.³⁸⁾ 한편 중국 역시 한국전쟁의 패배를 막은 큰 공신이였다. 전쟁 발발 이후 초반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1950년 9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의 패색이 짙어만 가는 상황에서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과 지원은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모택동(毛澤東)의 아들 모안영(毛岸英)의 참전과 희생은 물론이고 중국의 실전에서 기여는 북중 관계의 역사적 유대를 긴밀하게 유지시키는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형제국을 자처하던 두 대국과 북한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과정을 거치면서 이해의 충돌을 경험했고, 이는 관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시몬스(Robert Simmons)의 표현대로 북한과 ‘긴장된 동맹’ (strained alliance)을 유지했던 소련과 중국은 전쟁 가운데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을 북한에 관철시키고자 했으며 그 중에서는 정권에 ‘위협’으로 간주될 만한 사안들이 적지 않았다. 사회주의 연대, 피압박민족의 해방, 반제국주의투쟁과 같은 어떤 ‘공동의 이해’도 한국전쟁에서 결정적이지 못했던 것이다(박명림 1996: 252). 요컨대 한국전쟁 시 북한의 핵심적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보편적 지향과 구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 기초한 국가의 이익 즉 특수성의 정치적 동학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결코 순수한 ‘혈맹’의 동지애로만 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³⁹⁾ 중공군의 지원으로 북한이 간신히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팡덕회(彭德懷)를 중심으로 하는 조중연합사령부의 역할에 의존할 수록 김일성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⁴⁰⁾ 군사지휘권을 이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자 조선로동당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의 권위가 손상되었다(서동만 2005: 414). 더욱이 연안파 박일우가 팡덕회의 측근으로 연합사령부의 조선 측 정치책임자로 선임된 것도 정치 지형에 변수로 작용했다. 1950년 말 인민군 내에 당조직을 만든 것도 그러한 위기감에 대한 표출이었다.⁴¹⁾

련의 정책이 북한에 그대로 적용된 것 역시 이와 같은 의존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백학순 1995: 389).

38) 김일성. 1946년 8월 10일. 산업국유화법령지지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기초.”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9) 한국전쟁의 중공군 참전과 관련된 마오쩌둥의 의사결정과정과 소련과의 외교적 줄다리기, 그리고 참전과 관련한 정치적 동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서동만(2005), 박명림(1996), 곤차로프 외(1994), 김성보·이종석 (2011) 등.

40) 팡덕회는 한국전쟁의 책임자가 김일성이 아닌 자신이라 여겼으며, 자신의 상대는 맥아더라며 김일성을 부차화 했다. 소련의 외무성 문서도 그와 같은 팡덕회의 대국주의적 태도를 인정하고 있다(서동만 2005: 414).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1948년 9월,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소련군정은 소련군의 철수와 함께 명목상으로 철수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었다(이정식·Scalapino 1972: 487-488). 소련의 정치고문들은 여전히 북한 각료들과 함께 기본적인 정책결정사항들을 공유했고, 소련의 기술자 및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⁴²⁾ 이를 위해 소련계 한인들이 북한지도부와 소련 간의 가교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북한 정부기관의 거의 모든 요직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었다.⁴³⁾ 물론 그와 같은 소련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한국전쟁을 거쳐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로 재편되어가는 북한의 정치상황에서 전전(戰前)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소련의 의도이기도 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했다.⁴⁴⁾

이와 같은 경험 속에 북한에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소련과 모든 부분에서 이전과 같은 입장 즉 ‘우리’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소련과 세력이 확장되는 현상은 김일성 리더십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협은 실제 전후 복구 과정에서 소련의 정치적 개입으로 현실화 되었다. 1955년을 전후한 소련의 정치개입이 그 예이다. 당시 북한은 경제복구의 수준에 비해 인민들의 생활수준향상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었다(김성보·이종석 2011: 194-195). 더욱이 스탈린 사후 새로이 등장한 말렌코프행정부의 경공업우선 정책과 김일성의 중공업우선 정책이 충돌함에 따라 소련 당·정지도부는 1955년 4월 20일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를 문제 삼고 근본적 정책수정을 요구하며 김일성의 리더십에 제약을 가했던 것이다.⁴⁵⁾

41) 김일성. 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6권. 198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2)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인민군은 병력은 전쟁초기에 비해 3배, 각 보병사단 화력은 1951년에 비해 160%, 군사 1인당 마력은 3배로 증강되는 등 급속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으며 이는 대부분 소련의 군사원조에 기반 한 것이었다(서동만 2005: 432).

43) 이정식·스칼라피노(1972: 488-489)에 따르면 이들은 소련당국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었으며, 소련의 권력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들을 통해 투영되었다.

44) 소련과 스탈린에 대한 김일성의 절대적 의존과 신뢰는 한국전쟁을 통해 경험한 그들의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전쟁 처리과정에서 점차 퇴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Goncharov et al. 1993: 343-363). 더욱이 소련의 철저한 국익에 따른 정세판단과 북한에 대한 권력 행사는 김일성에 정치적 제약을 가했다(백학순 1995). 무엇보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의식한 소련이 중국을 참전시키고 자신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비켜가는 과정에서 북한정치에 대한 중국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데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45)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김일성은 소련의 결정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1955년 6월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자본재 생산 부문의 성장속도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재 생산비율을 높이고 협동화 강행을 멈추고, 인민물질생활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김성보, 이종석 2011: 196).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형제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주체’ 즉 ‘우리’를 호명하는 동시에 대내적 경계를 재고하게 되었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은 여전히 북한이 사회주의 형제국과 같은 진영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소련식’이나 ‘중국식’ 그 어느 쪽도 아닌 ‘조선식’을 강조하며 사상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주체’를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⁶⁾ 선전선동부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제기한 해당 연설은 박창옥, 박영빈, 허가이, 김재욱, 박일우 등 소련계, 연안계 핵심인사들의 구체적인 과오를 지적함으로써 외부와 연계된 내부의 적을 색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요컨대 북한에서 한국전쟁은 사회주의 형제국의 개별이익과 정치적 권력관계의 가장 현실적인 경험으로 작용했다. 소련과 중국의 대국주의를 체감한 북한으로서는 두 형제국이자 동맹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직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체’의 지향을 위한 정치 투쟁이 전면화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그것이다. 그 주요한 배경은 바로 소련의 제20차 당대회에 있었던 스탈린 격하운동이었다.⁴⁷⁾ 스탈린 사후 소련지도부가 당내 집체지도와 대외적 평화공존론을 제기하면서 김일성의 정치적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변화된 소련의 정세에 민감했던 소련파들은 집체지도와 평화공존론에 동조를 표하며 김일성을 위시한 당시 북한 정권에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었다(이종석 2000: 419-420). 이들은 김일성 지도부가 개인숭배를 지속할 것이 확실해지자, 연안파들과 함께 각각 소련과 중국공산당이 직접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정창현 2011: 117,120). 결국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감지한 김일성의 조치로 무산되었다. 계획에 가담했던 박창옥, 최창익, 윤공흠 등은 ‘반당종파분자’로 규정되고 이듬해 출당, 투옥, 연금 등의 숙청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일련의 위기를 극복하고 김일성중심의 권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던 북한은 1960년대 또 다른 국제정세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은 바로 1960년대 들어 더욱 첨예해진 중소분쟁과 그 사이에서의 북한의 정치동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국의 힘의 대결(power game)에서 약소국가로서의 북한은 어느 쪽을 선택하기보다 기회주의적 편승을 선택했고,

46) 김일성.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김일성저작선집』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47) 비판의 주요 내용은 개인숭배와 대중에 대한 테러행위, 사회주의를 불구로 만든 점,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 등 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흐루시초프(Khrushchev 2006)를 참조할 것.

그 성패는 양자의 철저한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김일성의 ‘주체노선’은 사회주의의 두 대국 간에 교조주의와 수정주의 논쟁 가운데서 북한이 취할 수 있었던 틈새의 자율성을 의미했다.

우선 북한은 중소분쟁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분화의 발단이 되었던 1956년 2월 소련의 제20차 당대회 이후 동년 4월 제3차 당대회를 열고 기존의 ‘동맹외교’에서 ‘다변외교’로의 전환을 꾀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제3세계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과열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분쟁에의 정치적 입지를 중립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였다. 이것이 ‘자주노선’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김성보·이종석 2011: 220-221).

북한의 홀로서기는 경제정책과 발전전략에서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 소련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가입 요구를 북한이 단호히 거절하면서, 독자적인 ‘자립적민족경제노선’을 추구했던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독자노선에 대해 비난을 퍼부은 소련에 대해 “완전한 평등과 호혜, 자주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들이 어디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때문에 누구의 “승인”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항변했다.⁴⁸⁾ “자기 민족의 운명은 인민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언명이었다.

국방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위노선이였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국방병진노선이 공식화됨과 동시에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등 1966년에 추가된 전군 현대화와 함께 4대 군사노선의 토대가 된 지침들이 의결되었다(함택영 1998: 163). 물론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자위노선의 핵심적인 물적 토대인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실질적인 시작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해당 노선의 배경으로 지적되어온 일련의 사건들, 즉 1962년 10월의 쿠바사태, 그리고 동년 11월 말 소련의 군사지원 요청 거절 등보다 선행한 1961년 5월의 당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였으며 그 주요한 동인 역시 남한의 군사쿠데타로 인한 위협인식의 증대였던 것을 밝혀졌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자위노선과 중국과 소련의 대국주의에 맞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주체’를 세우려는 의지가 무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시작이 언제였는지 만큼이나 그것이

48) 평론원 사설. 1964년 7월 7일. “왜 평양경제토론회의 성과를 중상하려드는가.” 『로동신문』.

49) “Contents of the May 18th North Korean Party Central Standing Committee Meeting,” May 21, 1961,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RC FMA 106-00581-02. Translated by Anna Beth Keim.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055>(검색일 2016.12.12.). 해당 자료에 기초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신종대(2010)를 참조할 것.

왜 1962년의 12월의 시점에 하나의 노선으로 정식화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며, 둘째,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진행되던 경제국방병진노선이 최초로 공개된 동시에 전면화 된 1966년 김일성의 연설의 핵심 문제의식이 중국과 소련의 대국주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⁵⁰⁾

1964년 10월 수정주의의 상징 흐루시초프의 실각 직후인 1965년 4월 김일성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구성된 이른바 주체노선을 정식화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1955년 이래의 자율성과 독자성 확보 노력의 결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⁵¹⁾

2) 이데올로기 갈등과 주체의 사상화

1955년의 연설과 이후의 권력투쟁,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전반의 정책적 변화들을 통해 ‘주체’의 지향이 실물화 되기는 했으나 1966년 이전까지 그것은 아직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책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안경모 2015; 164). 즉 주체사상이라는 용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 간다는 동어반복에 가까운 “원칙”에 머물러 있었으며 여전히 ‘사상으로서의 주체’는 전체를 포괄하기보다 주체노선을 구성하는 네 가지 부분 중 하나로 규정되었을 뿐이었다.⁵²⁾ 요컨대 당시의 주체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차원이라기보다 정책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북한에게 이데올로기 차원의 정당성 투쟁을 불가피하게 하는 일련의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발은 1966

50) 김일성.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노동신문 사설. 1996. “자주성을 옹호하자.” 『노동신문』(8월 12일).

51) 김일성.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2) 김일성.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년 들어 본격화된 중국의 문화혁명이었다. 1963년 이래 지속된 중국 내부의 격렬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폭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문화혁명은 국가 ‘간’의 갈등 역시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당연하게도 단순한 노선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정통성’ 투쟁으로 전면화 되었다. 이른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간의 투쟁은 특정한 국가를 사회주의 진영에서 제외하거나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북한 스스로도 “무원칙한 타협을 길”을 걷는 “수정주의”, “기회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한 터였기 때문이다.⁵³⁾ 이러한 외부로 부터의 정당성의 도전은 정권의 안정성과 직결된 내부적인 후계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었다.⁵⁴⁾ 정당성의 위기가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로 귀결될 수 있음은 이미 1950년대에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내외부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주체노선의 이데올로기로의 격상을 시도했다.

1966년 8월 12일 노동신문 사설인 <자주성을 옹호하자>와 동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인 <현 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그리고 1967년 김일성의 연설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문제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고민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⁵⁵⁾. 특히 해당 연설은 과도기 문제라는 당시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중심에 있던 주제에 대해 자신들만의 답을 내놓음으로써 ‘사상’적 위상을 확고히 했다.⁵⁶⁾ 마침내 대국들에 의해 독점되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정통’ 해석의 정당성과 기본가정을 넘어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론적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은 주체담론의 이데올로기화 작업이 후계체제의 구축과 병행되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정당성의 정치는 외부의 도전에 대한 응전인 동시에 후계의 정

53) 김일성.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4) 1960년대 후반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대응과 이를 둘러싼 내외부의 정치적 동학에 대해서는 안경모(2015)를 참조할 것.

55) 김일성.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6) 해당 글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발전 단계 상의 ‘과도기’ 설정 문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 관한 소련과 중국의 입장을 각각 우경기회주의적 견해와 좌경기회주의적 견해라 비판하며 과도기의 계선과 계급독재의 기간을 분리하는 ‘독자적’인 안을 내놓았다. 김일성. 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당성 획득이라는 내부적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1966년 5월 ‘주체사상’의 내용(substance)을 채우기 위한 연구팀, 즉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에 대한 분석총화사업”을 조직하고 3년 2개월 여 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전들에 대한 대규모의 집단학습을 진행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⁵⁷⁾ 결국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5기 8차 전원회의를 통해 후계자임이 당 전체에 공식화된 후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를 전례 없는 대규모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김일성주의를 전면화한 것은 당의 후계자로서 사상에 대한 유일적 해석권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⁵⁸⁾

본 장에서는 정당성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주체사상의 태동과 체계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형제국’으로부터의 비호와 영향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연대감이기 보다는 냉혹한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에 따른 결과였고, 그것은 한국전쟁, 전후복구건설, 중소분쟁 등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형제국들’의 원조와 지원으로 정권수립과 유지가 가능했지만, 동시에 그들로부터 ‘종속’이나 ‘개입’이라는 대가도 치러야만 했다. 결국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멤버십 자체는 어떤 것도 담보하지 않는다는 자각과 외부로부터의 불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정당성을 갈구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치사상적 고민이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되었고, 이후 북한의 대내적 후계구도의 정치동학과 결부되면서 적어도 용어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급을 의미하는 ‘김일성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57) 김정일. 1969년 7월 1일.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에 대한 분석총화사업을 결속하면서 사회과학자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제3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8) 해당 대회는 지도원급 이상의 당의 모든 선전일꾼들을 대상으로 15일간 이루어졌다. 규모와 기간 모두에서 이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또한 북한은 동년 10월 전국단위의 사회과학토론회를 열어 주체사상의 전면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연구를 위한 전국 사회과학토론회 논문집』. 197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과학토론회 전국 집회> 일본 도쿄에서 성대히 진행.” 『조선중앙연감』. 1975년. 평양: 조선중앙통신; 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4권. 199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 후계체제와 ‘우리 식,’ ‘우리민족제일주의’

1) 정당성의 정치와 ‘우리 식’

앞서 살펴본 주체의 등장과 해당 담론의 사상으로서의 격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체를 세우는 일은 정당성의 정치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었다.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서의 정당성의 정치는 행동의 자율성이라는 기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이나 ‘동지’ 나 라는 정체성 차원의 구분을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으나 주체는 여전히 선악, 미추, 이해 등 여타의 영역과 무관한 ‘독자적인 기준’ (independent criteria), 즉 전적으로 ‘다름’에 의거한 정체성 차원에서의 ‘온전한 정치적 구분’ (specific political distinction)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Schmitt 2007: 26-27).⁵⁹⁾ “김일성주의는 현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라는 김정일의 선언에서 드러나는 ‘보편주의’ (universalism)로서의 특징은 이러한 한계의 주요한 원인이었다.⁶⁰⁾ 주체사상은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정은 보편의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사상 자체는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지향하는 사상체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⁶¹⁾ 따라서 적어도 진영 내에서 ‘현재의 적’은 ‘미래의 동지’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주체사상에서의 ‘적과 동지의 구분’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해당 사상 체계는 정당성의 정치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는 ‘우리’ 당의 수령이 지닌 위대성에 기반 한 ‘유일영도체제’와 ‘유일지도체제’라는 전적으로 특수성에 기반 한 조직체계를 통해 체제 전반을 재구성해나갔던 국내적 차원의 정당성의 정치와도 일정한 긴장을 내포할 수밖에 없

59) 여기서 슈미트가 정의한 적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악함과 추함, 혹은 해로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정체성 차원의 ‘다름’(different) 즉 ‘이질성’(alien)을 의미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적의 핵심적 속성은 ‘이방인’(stranger)인이기 때문이다(Schmitt 2007: 27). 요컨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적과 동지의 구분과 이를 통한 정당성의 정치의 작동했다는 것이 북한이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혁명의 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60) 김정일. 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4권. 199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1) 물론 이는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쟁취해야할 지향이었으며 현실과 지향의 갈등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해당 문제를 독창성과 계승성의 틀 속에 면밀히 분석한 연구로는 안경모(2015)가 대표적이다.

었다. 바로 이러한 ‘주체’의 단계는 1970년대를 통해 사상화에 박차를 가해나가는 과정이 왜 ‘우리 식’의 호명과 병행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암시한다. 정체성으로서의 ‘우리’의 규정은 ‘다름’, 즉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서의 정당성의 정치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우리식의 등장과 발전과정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이다.

‘우리 식’은 김일성의 1955년 발언 이후에도 종종 등장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말과 글을 통해서였다. 즉 주체의 사상화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던 문학, 예술, 영화, 연극, 회화, 체육 등의 문화 및 선전선동 부문에서 광범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⁶²⁾

예컨대 김정일이 당 문화예술부문을 장악하기 시작한 1967년 5월을 기점으로 먼저 6월 경에 한 연설에서는 “영화음악을 우리식으로 만들자면 영화의 사상 주체적 내용에 맞게 만들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우리 시대 인민의 사상 감정, 정서를 옹기 결함시켜야” 하며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배격할 것을 지적하고 곧이어 7월에는 “방송 사업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방송사업을 우리 당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³⁾ 또한 1971년 4월에는 <우리 식의 혁명적 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영화라는 종합적 장르에서도 “자본주의적인 것”과 “교조주의적인 것”들이 혼재된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우리 식’에 대한 지향은 1973년 김정일의 장편 노작 <영화예술론>에서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⁶⁴⁾ 총 307쪽에 달하는 방대한 글을 통해 김정일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 문학예술” 건설을 위해서 “문학예술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내용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낡은 것을 뒤집어엮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

62) 이는 해당 과정이 후계자 권위구축의 동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주체의 사상화 작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식의 부상과정 역시 북한체제의 정당성의 구축과정임과 후계자 김정일의 권위 구축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63) 김정일. 1967년 6월 7일. 문화예술부문 일군 및 작곡가들앞에서 한 연설.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67년 7월 30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4) 김정일. 1973년 4월 11일. “영화예술론.” 『김정일선집』 제5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예술을 건설” 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식의 문학예술이론”의 확립과 실천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 식”의 연출체계는 “집단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기술신비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 자본주의사상”을 배격하고 “우리에 알맞게” 발전시켜다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문제를 그들의 직업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혁명적 단련 기회가 적고 둘째, 자본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객관적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⁶⁵⁾

요컨대 당시 북한에게 있어 특정 부문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세부적 활동준칙을 ‘우리 식’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이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명제로 귀결되고 있었다. 요컨대 ‘우리 식’의 확산 과정은 김일성의 1967년 5월 25일의 담화와 결부되어 진행된 지식사회와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전방위적 사상문화혁명이었던 것이다.⁶⁶⁾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권력의 정점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의 정점인 ‘당’의 강화와 병행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문건이 바로 1972년 3월 16일 문화성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에 김정일이 전한 담화 <문화성에 정치국을 내올 데 대하여>이다.⁶⁷⁾ 그는 “한때 당 사상사업부문을 맡아보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다 맡아먹다보니 문학예술은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자신이 “영화예술을 문학예술사업에서 중심고리” 보고 이를 통해 예술전반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자평하면서도,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금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그리고 그 실천의 핵심으로 “문화성에 정치국”을 세울 것을 피력했다. 당시의 각 문화관련 기관들이 “문화성”의 지시를 받고, 당적으로는 “평양시 위원회나 구역당위원”의 지시

65) 이처럼 작가와 예술인이 “좌우경의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혁명화”하는 문제를 사활적이라 강조한 데는 동유럽에서 벌어진 일련의 소요들이 문화,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반소, 반사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던 데 대한 복잡한 고민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이후 동유럽의 소요들에 대해서는 나하일로·스보보다(Nahaylo & Swoboda 1990, 218-257)를 참조할 것.

66) 이 당시 숙청은 “반수정주의 투쟁이라는 대선풍 아래 대대적인 인텔리 제거 그들의 창조물인 문화에 대한 총공격, 좌경극단주의에 의한 반문화혁명”으로 봐야할 것이며, 이는 사회전반에 극좌적 바람을 몰고왔다. 성혜량(2000: 312-317); 황장엽(1999: 148-149).

67) 김정일. 1972년 3월 16일. 문화성 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문화성에 정치국을 내올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4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를 받게 된 결과, “문학예술부문의 당의 지도”가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에서 문학 예술부문의 매 기관을 직접 대상하여 지도”해야 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새로 설치된 문화성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도당, 군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문학예술사업전반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 참모부” 역할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화성 내 당 조직의 신설은 1973년부터 김정일이 주도한 ‘3대 혁명소조운동’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우리 식’의 지향을 북한 전역에 확산시키는 주요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⁶⁸⁾

또한 ‘우리 식’의 등장과 확산 과정에서 김정일이 취한 방식이 단순히 엘리트와 조직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와 선전 수단을 장악하여 ‘인민대중’을 직접 설득하고, 자신의 이념이나 아이디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일종의 미디어 헤게모니(media hegemony)의 선점방식이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에 의한 ‘우리 식’의 제기는 그 소재와 매체, 방식 등 모든 측면에서 북한 체제 전반을 그 청자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1970년대 김정일의 주도로 ‘우리 식’이 확산된 과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전염성 강한 아래로 부터의 반정부 혹은 반체제적 문화의 양산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주체의 외연을 단단히 하면서도 그 내면의 밀도는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면의 결집은 ‘우리’라는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다. 결국 1978년 12월 25일 김정일은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는 구호를 제기함으로써 우리식이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1979년 12월 19일 “우리식대로 살아가는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의 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으며 중국에는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는 당의 구호로 전면화되었다.⁶⁹⁾

68)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우리 식’이 국가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이전 시기까지, 『김정일선집』 ‘증보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식’이 언급된 김정일의 노작 28개 중 문화체육예술부문이 26개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69) 김정일. 1978년 1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회의 회에서 한 연설.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8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79년 12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 우리 식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로

김일성은 1980년 당 6차 대회의 총화보고를 통해 지난 10년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 해 왔으며 1980년대의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확신했지만 실제 북한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⁷⁰⁾ 197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쇼크는 세계경제의 불황을 초래하며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던 북한을 채무불이행 국가로 전락시켰으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및 이듬해의 미중수교는 형제국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불러일으켰고, 1980년 남한에서의 군사 쿠데타는 남북한 간 긴장을 가중시켰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6차 당대회를 통한 전면적인 재정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안경모 2013: 72-75). 먼저 중국의 선택이 대(對)한반도 정책에까지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대북(對北)일변도 정책을 “문은 잠그되 자물쇠는 채우지 않는” 잠재적 대남개방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1982년 이후 중소관계의 복원에 따라 이러한 중국의 ‘배신’을 응징할 레버리지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했다. 1981년 한국의 올림픽 유치 역시 북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다. 대남우위에 대한 확신과 선전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의 핵심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는 6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중앙’이 아닌 ‘친애하는 영도자’로 전 인민들 앞에 선 후계자 김정일을 시험에 들게 했다. 그에게 위기 극복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인민생활향상의 기치를 내걸고 추진된 연합기업소체제의 전면화, 합영법 실시 등 일련의 개혁개방조치들, 그리고 속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다시 물질이 아닌 사상에 기댄 ‘돌파’가 절실해진 것이다.

이러한 정당성의 위기는 북한이 왜 ‘우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족’을 호명했는지에 대한 답을 암시한다. 우리식을 통해 규정된 ‘우리’는 ‘다름’을 통해 ‘적과 동지의 구분’을 가능케 했으나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부재한 미완성의 것이었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보편주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족의 호명은 상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정체성을 완성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브릴리의 지적처럼 국가에 의한 전형적인 정치적 기획으로서 민

70) 김일성.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35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족주의의 특성은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에 대한 호소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Breuilly 1994: 2-3).⁷¹⁾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와 동학이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한민족이 아닌 북한이라는 ‘국가’와 그 경계를 공유하는 새로운 민족, 즉 ‘김일성 민족’으로서의 ‘우리민족’을 호명함으로써 단순한 민족주의의 강화가 아닌 민족재건설로 나아가게 만든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이다.⁷²⁾

71) 브릴리는 스미스(Anthony Smith)가 규정한 민족주의의 기본전제(basic proposition) 중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들이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국가에 의한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종적 개념으로서 민족이 아닌 자신들만의 ‘특정한 민족(particular nation)’에 대한 호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주체’와 ‘우리’의 담론은 분명 매우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담고 있었으나 여전히 민족주의 그 자체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72) 국가 민족주의와 함께 본 연구가 주목하는 또 다른 개념은 ‘민족건설’(nation-building)이다. 일반적으로 민족건설은 ‘국가건설’(state-building)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해 왔다.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개념적으로 볼 때 양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본질적 차이에 근거한다. 그 구체적인 수식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 건설 개념에서 건설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제도(institution) 혹은 기구(organization)를 의미하는데 반해 민족은 정서적 일체감을 포함하는 ‘공동체’(community)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건설과 민족건설이 개념적으로만 상이할 뿐 실제적으로는 연동(hand in hand)되어왔다는 기존의 많은 주장들과 달리 두 과정은 역사적으로도 상이한(distinct) 과정이었다는 린츠의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문헌에서 양자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Linz 1993, 356).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오히려 민족건설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한 전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개념의 의미와 그것이 본 연구에서 갖는 의의 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 시작은 ‘건설’(building)의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해당 표현은 과연 민족은 존재해온 것인가, 발전된 것인가, 아니면 발명된 것인가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논쟁적 패러다임들, 즉 원초론(primordialism), 영속론(perennialism), 종족-상징주의(ethno-symbolism), 근대론(modernism)의 구분, 그리고 자발주의(voluntarist)와 개입주의(interventionist)의 구분 중 특정한 입장, 즉 ‘개입주의적 근대론’(interventionist modernism)의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건설’이란 단어가 민족을 자연적 현상으로 보건(원초론), 역사적 현상(영속론)으로 보건 그것이 ‘이미’ 존재해왔다는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당 관점에서 볼 때 민족은 ‘발견’(discovering)되는 것이지 근대론의 주장처럼 ‘발명’(inventing)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주의와 개입주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근대론과 관련된 것이면서도 민족 형성의 변수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 가설에 따라 구분된다. 전자는 민족을 특정한 ‘구조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forming) 것으로 보는데 반해 후자는 민족을 어떤 ‘주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building) 결과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족의 등장 배경으로 인쇄자본주의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주장이나 산업사회의 등장과 문화적 표준화에 주목한 겔너(Ernest Gellner)의 입장은 자발주의에 해당하는 반면, 국왕으로 대표되는 국가제조자(state-maker)를 강조한 톨리(Charles Tilly)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엘리트들의 정치적 투쟁에 주목한 브로이(John Breuilly)의 가설은 개입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Anderson 2006; Gellner 1983; Tilly 1975; Breuilly 1994).

이와 같은 민족건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 그리고 분석대상의 특성과의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첫째, 앞서 살펴본 국가 민족주의와의 적합성이다.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민족주의와 그 주체로서의 국가라는 행위자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은 민족을 건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 주체와 과정에 주목하는 민족건설 개념과의

또한 해당시기에 이르러 북한이 민족을 호명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큼이나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그것이 이루어진 ‘방식’이다. 이는 민족주의가 ‘계급의 경계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수령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조직체계’라는 북한 체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둥과 가진 ‘긴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계급 vs. 민족’의 긴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깊이 배어있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비록 일정한 변화는 있었으나 민족과 민족주의를 철저히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소멸되어야 할 “전염병”으로 간주한 스탈린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1985년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민족주의를 “자본가계급의 협소한 계급적 이익을 전 민족적인 이익인듯이 가장하면서 노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반동적인 사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talin 1913: 316, 324).⁷³⁾

다음으로 ‘수령 vs. 민족’의 긴장은 민족주의가 가진 이중성과 연관된 것이었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지적처럼 민족주의는 국가적·집단적(national·collective) 지향과

결합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둘째, 북한이라는 사례의 특수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민족주의의 부상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 즉 한반도를 아우르는 ‘한민족’을 호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계설정을 통해 “김일성 민족”을 구성하는 ‘새로운’ 민족건설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민족건설,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재건설(Nation-Rebuilding)의 개념을 통해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고 시도하는 이유이다. 셋째, ‘학습’의 문제이다. 최초의 민족과 민족주의가 발견된 것이건 발명된 것이건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것의 작동 원리에 대한 교범을 역시 충분히 축적된 후였다. 정치적 차원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앤더슨이 말한 ‘표절’(pirating)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개량’까지 가능한 유력한 정치적 ‘자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Anderson 2006, 81). 요컨대 현대의 민족건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의 사례를 토대로 출간된 “민족건설을 위한 초보자 가이드 북”(Dobbins et al. 2007)에 제시된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도자들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자 기술적인 업적”(Linz 1993)이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민족적 정체성의 구성”(Deutsch 2010)으로서의 정치적 성격이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북한의 현대적 민족건설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넷째, 동태적 과정으로서 민족건설이 갖는 함의이다. 기존의 민족건설에 대한 논의는 초기의 민족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일종의 ‘완료형의 과업’으로 접근되어 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 민족 건설을 ‘진행형의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실제 민족건설의 핵심인 민족의 경계는 유동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그리고 유지와 변화의 동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북한의 민족건설과정이 기존의 정당성의 자원들과의 팽팽한 ‘긴장’속에서 진행되어왔으며 또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민족건설을 완료형의 과업이 아닌 진행형의 과정으로서 접근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73) 『철학사전』(1985) 민족주의 항목. 북한의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에 대한 시기별 분석으로는 정영철(2001: 2003: 2010), 김태우(2002) 등을 참조할 것.

대중적·개인적(popular·individual) 지향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대립되는 지향의 결합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Morgenthau 1957, 481-482). 민족주의 운동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주의는 후자와 결합하며 국가를 파괴할 수도, 전자와 결합하며 국가를 건설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다. 즉 충성의 대상으로서 민족의 호명은 수령에 대한 충성과 충돌하거나 대립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민족의 호명은 기존의 정당성의 체계에 민족주의를 기계적으로 덧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상기한 ‘긴장’들을 폭발적 원심력을 자극하는 위기의 촉매가 아닌 단단한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기회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바로 이러한 ‘결합’의 성패에 달려있었던 것이다. 1986년 민족의 호명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와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조직과 이데올로기, 즉 당과 수령,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한 입론이었던 김정일의 두 개의 핵심적인 노작들인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고민과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⁷⁴⁾ 새로 호명된 민족은 조국, 혁명, 당, 그리고 수령과 철저히 결합된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먼저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는 총10권으로 구성된 <주체사상 총서>의 발간을 마무리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일단락 지은 바로 이듬해였던 1986년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행한 일종의 후계자 버전의 신년사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당’의 결속을 주제로 한 해당 논문에서 김정일은 상기한 결합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며 전형적인 민족주의 담론인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최초로 제시했다.⁷⁵⁾

74) 김정일. 1986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5) 일반적으로 ‘조선(우리)민족제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6년 7월 김정일의 담화인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고 알려져 왔다(이종석 1994: 71; 박승지 1997: 132; 김남식 2004: 55; 정영철 2001: 243; 2003: 1678). 그러나 이보다 반년 앞선 상기논문에서 이미 해당 내용이 거의 완결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 조국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 우리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창조적인 삶이 꽃피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어있는 참다운 조국입니다. [...]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자면 조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 조국에 대한 교양은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국에 대한 교양은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소개 선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은 공로자들은 직위와 명예를 바라지 않고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조국 땅위에 꽃피우기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입니다. [...] 작은 민족이 민족적자존심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다른 민족에게 예속될 수 있습니다. [...]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뿌리 뽑자면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⁷⁶⁾

상기한 담화가 있는 지 6개월 후인 1986년 7월 김정일은 앞서 언급한 <주체사상교양에 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문건을 통해 상기한 결함을 더욱 구체화했다.⁷⁷⁾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해당 담화를 통해 최초로 제시된 김정일 버전의 조직구성 원리인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해당논문에서 김정일은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가장 우선되는 임무는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이고 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내면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를 비가역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그것이었다.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개인의 육체적인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무한하다는 의미였다. 무엇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수령을 뇌수로, 당을 조직으로 하여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을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이자 운명 공동체로서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경계는 ‘혁명적 수령관’을 통해 계급노선과 그 속에서의 수령을 포

76) 김정일. 1986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7) 김정일.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팔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뇌수”로 규정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항일문장투쟁과 사회주의조국건설이라는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이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이라는 명제와 “정치적 생명의 아버지”으로부터의 “사랑과 신임”이라는 상징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성을 생명에 대한 집단주의적 헌신과 부모자식의 관계라는 만고의 도덕률과 결합시킨 후, 이를 다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에 대한 충성”과 일치시킴으로써 계급노선을 수령에 대한 인격적 충성으로 환원했다. 요컨대 해당 담화에서 김정일은 민족과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우리’라는 동일한 정체성의 양면으로 규정한 후 ‘혁명적’ 수령관을 통해 계급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우리’의 도덕률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민족, 계급, 수령을 하나로 포괄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이렇듯 나름의 방식으로 ‘계급 vs. 민족’과 ‘수령 vs. 민족’이 갖는 긴장들이 지닌 정치적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화학적’ 결합을 일단락 지은 1989년, 북한은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서의 기나긴 정당성의 정치의 귀결이자 민족주의에 대한 호명의 정점으로서 새로운 민족 건설을 선언했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금지와 자부심입니다.”⁷⁸⁾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위대한 주체사상,”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는 새로운 경계(boundary)로 구성된, 그리고 후에 “김일성 민족”으로 명명된 “우리민족”이 ‘건설’(building)되는 순간이자, 북한 정권이 수립 때부터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에 대한 고민이 마침내 ‘우리’, ‘민족’, ‘제일주의’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답으로 구체화된 순간이었다. 결국 ‘우리’의 불안한 외연의 상태가, 그것을 둘러싼 무수한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개념들의 긴장을 압도했던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생존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는 이데올로기적 모순들에 선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래 지속된 북한의 독자적 정당성의 추구가 ‘우리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의 구성, 즉 ‘민족 재건설’의 시도로 귀결된 것이다.

78) 김정일. 1989년 1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 선집』 제9권. 199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제4장 ‘민족’에서 ‘민족주의’로의 과도기: ‘김일성 민족’의 건설

제1절 탈냉전과 민족: 자주성의 진화

1991년 8월 1일 김일성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남북관계 및 민족의 개념과 관련하여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서슬 퍼런 현실에서 갑자기 공세적인 통일담론을 제기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먼저 기존의 북한 통일방안의 연장에서 민족이 계급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김일성 지도부가 민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¹⁾ 그러한 입장들이 공유하고 있는 ‘김일성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그의 ‘통일에 대한 숙명적 사명감의 발로’라는 측면은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은 물론, 그에 더해 당시 국제정치적 조건들이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종속변수라 할 수 있는 지도자 민족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화의 성격이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것인 만큼 그것을 추동한 독립변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해명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와 그에 대한 대응의 논리로서 민족주의의 부상을 이해하려는 다수의 시도들도 있다. 냉전 종식이라는 구조적 변수가 주는 압력에 대한 대응의 차원으로 북한 지도부가 민족주의를 호명했다는 논리이다.²⁾ 그러나 대외적 환경

1) 김일성의 1991년 저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참다운’이라는 수식을 걸기는 했지만 민족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를 통해 이전 시기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전향적 표현 즉, ‘참다운 민족주의’이라는 현상을 기존의 북한 민족, 민족주의 변화의 관성, 즉 김일성의 민족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정영철 2003, 1682-1683; 이종석 1994, 71-72; 전재호 2004, 73. 비슷한 맥락이지만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입장에 대해 공세적 통일론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로는 연구는 이하를 참고할 것. 김창근 2003, 44; 진덕규 2001, 106-111.

2)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갑식 2006, 155; 김창근 2003a, 63; 2003b, 44; 서동만 2000, 182-183; 서재진 1993, 87-89; 정영철 2010, 3-4; 전재호 2004, 71-73; 진덕규 2001, 105-106; 박영자 2005, 225.

이라는 단일변수가 북한의 민족주의 부상을 야기했다는 논리 역시 다소 불충분한 이해라 생각된다. 북한의 민족, 민족주의의 부상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 이전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문제의식에 따라 1990년을 기점으로 공세적인 민족론, 통일론, 대남관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상황을 보다 적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시기 북한입장의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냉전을 전후해서 북한이 그전과 같은 주제로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도, 냉전의 종식 이전과 이후에 미묘하게 달라진 개념과 내용상의 수정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북한이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 혹은 반응(response)의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연속된 의식의 흐름에서 국제정세인식과 현실주의적 입장에 기반한 판단의 결과이자 적응(adaptation)의 차원에서 독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북한의 오랜 화두 ‘자주성’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와 함께 새롭게 호명된 ‘민족’, 그것과 분리되기 어려운 ‘통일’ 문제는 자주성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들며, 냉전이 끝난 게임, 그 이후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 자주성의 재구성: 새로운 적, 경계 그리고 ‘우리’

1) 냉전과 자주성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 자주성 문제는 그 나름의 연원을 지닌 것이었다. 말하자면 대국주의 즉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형식주의부터의 홀로서기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단단한 테두리 안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이익의 반영이라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계산과 그 결과로서의 일련의 정책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연대나 혁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외침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냉전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진영의 경계로서 서방 자본주의와 미제국주의의 반동적 공세를 방어하는 역할을 자임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진영 내 국가들의 자율성에 일정정도 침식을 강요했다. 북한에서 주체담론이 최초로 제기된 것도 그와 같은 사회주의 대국들의 정치적 개입과 무관하지 않았다.

유일지배체제의 구축과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통성에 기반하면서도 독자적인 이론적 영역을 마련해나갔다. 그것은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문이었고 그에 대한 자답은 ‘주체사상’으로 일단락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분명한 ‘우리 식’의 천명이자 이데올로기적 모태로부터의 독자성을 의미했다.³⁾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북한의 논리는 분명한 적대적 대상을 상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철저한 반대개념을 상정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은 자신들의 주체사상의 독자적 노선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주체사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형식주의와 정반대되는 자주성의 표상을 자처한 터였다. 따라서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추구는 형제국들과의 차별화를 의미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되는 자주성, 창조성, 역사성의 궁극적 추구는 그러한 결별의 대상이 되는 이항대립의 사회주의 대국들로부터의 주체, 자주, 자립, 자위를 의미했다.⁴⁾

3) 김정일. 1979년 12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저작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 김정일. 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돏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냉전의 종식은 그러한 교조주의, 수정주의, 형식주의, 사대주의라는 배경의 근원이 되는 사회주의 대국의 침몰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모집단 자체, 즉 상위의 ‘우리’의 외연이 소멸되는 것이기도 했다. 거대한 ‘울타리’ 즉 ‘경제’가 사라졌다.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 붕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위기를 초래한 것은 분명했다.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이 급속도로 단절되거나 축소되었기 때문이었다.⁵⁾ 이러한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온전히 미국 일변도의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민족국가’의 단위로 참여해야한다는 사실과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해명과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즉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수는 엄청난 힘으로 구심력과 원심력의 동시 작동으로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그 양쪽 그 어디의 격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몸부림쳤지만, 현실은 그와 같은 모든 힘들에 대한 적응(adaptation)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진영 내의 형제국들의 비호 속에서 냉전의 이름으로 상당부분 상쇄되던 미국의 자본주의적 공세와 자유주의적 이념의 압력은 냉전의 우산이 사라지자 곧바로 거센 시련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형제국들과 함께 맞서던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화신을 오롯이 홀로 상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주체사상에서 근간이 되는 자주성의 성격과 내용은 이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즉 자주성은 이제 ‘무엇으로부터의’에서 ‘무엇에 대한’으로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대국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로 비유되던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자주성의 문제에서, 냉전 종식과 함께 본의 아니게 일원이 된 현실국제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로서의 권리인 자주성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북한이 직면하는 위협은 보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되었다. 예컨대 그동안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은 동유럽 국가들과 남한과의 수교,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의 민족주의 운동이 그 전운을 감지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 자신이 바로 사회주의 그 자체였던 소련의 붕괴와, 1990년 한소수교 및 1992년의 한중수교는 북한의 외교정책의 근본적 노선 수정을 강요했다(이종석 2004: 14). “세계 사회주의시장은 없어졌다”는 김일성의 시인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경제무역환경 역시 악조건이기는 마찬가지였다.⁶⁾ 북한이 팀 스프리트 한미 군사훈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 탈냉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원만하던 북·중관계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체결과 함께 냉각되었다(이종석 2001: 271-275).

6) “오늘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환경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쏘련과

련이나 미국주둔문제에 천착하는 한편 핵문제를 군사·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요컨대 자주성은 보다 절박한 환경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했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요지로서가 아니라, “민족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내용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매개가 되었던 것이 다름 아닌 “민족”이었다.

2) 민족국가와 자주성

사실 북한에서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언명을 내놓은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최고지도자에 의해 공유되고 있던 논리적 개념이었던 것이다.⁷⁾ 이것은 1955년 김일성의 교조주의 및 형식주의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글에서 마르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됨으로써 세계 사회주의 시장은 없어졌습니다. [...] 그들은 우리 나라와의 무역에서도 팔라에 의한 결제방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여야 하는 것만큼 우리도 무역 방법을 그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일성. 1991년 11월 23일, 26일. 당, 국가, 경제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3권. 199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7) 김일성의 언술에서 ‘민족국가’가 위와 같이 세계혁명이나 국제질서의 일원을 단위로서 상정되기 이전의 용례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레닌주의의 민족자결주의의 기본 원칙이었던 제민족적 특수성과 평등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바가 컸다.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맑스주의의 모든 정신과 그 모든체계는 매개 명제를 오직 역사적으로, 역사의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시켜 고찰할 것을 요구 [...] 《각국의 공산주의적로동운동의 국제적전술의 통일은 결코 다양성의 제거와 민족적 차이의 말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기본원칙들(쑬베트주권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을 적용하되 이 원칙들을 제 특수성에 맞추어 옹계 변형시키며 민족적 및 민족국가적 차이에 옹계 맞추어 옹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일성. 1957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김일성저작집』 제11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다음으로 신생 독립국가들에 대한 지칭으로서 민족국가를 등장시킨 것이다. “최근 최근년간에 새로 독립한 민족국가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파괴활동과 전복음모가 더욱 로골화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한편 반동들을 매수하고 끌어모아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반동적인 군사정변들을 더욱 빈번히 조작하고있습니다.” 김일성. 1968년 9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저작집』 제22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크스 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을 ‘민족적 특수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예를 들면 1967년 김일성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자립적경제노선을 주창할 할 당시에 도 그 단위가 민족국가임을 드러낸 바 있었다.⁹⁾ 또한 1969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 교양의 몇 가지 문제>를 통해 “세계혁명이 승리하려면 하직 멀었으며 민족국가를 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민족문화의 좋은 전통을 옹계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단위를 ‘민족국가’로 파악하기도 했다.¹⁰⁾ 이어 김일성이 1973년 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에서 한 결론에 따르면 “사료청조자들은 청소년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한편 그들에게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세계적범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민족들사이의 계급전선이 없어진다면 몰라도 아직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이 없으면 다른 민족한테 쉽게 동화되며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게 됩니다.”라며 혁명의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제약으로서도 ‘민족국가’를 언급한다.¹¹⁾ 또한 김일성은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고 진영들과의 선

8) 이러한 배경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 종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족국가를 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당시 북한의 대내적 정치권력 투쟁과 한국전쟁 책임론이 화두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전선이나 민족문제와 같은 내용 보다는 계급전선이 보다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맥이 의도하고 있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단위라는 측면에서 설정된 민족국가 개념과는 분명한 역사적 맥락에 따른 차이가 있다. 김일성.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김일성저작집』 제6권. 198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9) 김일성. 1967년 12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김일성저작집』 제21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0) 김일성. 1969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 교양의 몇가지 문제.”『김일성저작집』 제24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1) 김일성. 1973년 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 한 결론.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김일성저작집』 제28권. 198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을 그었으며, 1979년 6월 20일 <청신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이라는 연설에서는 “세계적범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기전까지는 국가가 존재하고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 [...] 그런것만큼 우리는 당에서 이미 내세운 구호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며 우리 식과도 연결 지었다.¹²⁾

요컨대 김일성은 1967년부터 혁명과 건설에 단위를 ‘민족국가’로 분명하게 한정짓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세계혁명 테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공산주의의 실현 전까지는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 ‘개별국가별로 상이한 혁명의 조건과 임무’를 근거로 민족국가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민족과 국가의 소멸을 예고하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부분적 부정이기도 한 ‘민족국가’에 대한 김일성의 언명들은 진영 내에서 극심한 양상으로 전개되던 중소분쟁의 여파와 무관하지 않다.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에 대한 강조를 통해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와 같은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상기한 자주성의 문제가 당시 북한의 대외정세 가운데서도 특히 공산주의 진영 내 강대국으로부터의 구조적 압력에 대한 반작용이었다는 근거는 해당시기 출판된 『조선중앙연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지침으로 자기의 대외정책을 세우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정치, 경제적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대외정책에서의 자주성을 견지하는것**, 이것은 **원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원칙에서 흘러나오는것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위치와 환경,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반제투쟁이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자기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였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적인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에 요구되는것이라면 언제나 주동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여왔다. [...]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관계가 진실로 공고한것으로 되며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려면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 이로부터

12) 김일성.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제32권. 198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년 7월 26일.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량강도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자.” 『김일성저작집』 제34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선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인정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여나아가는것, 이것은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¹³⁾

위의 글은 당시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에 대한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자주성의 문제는 그것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자신들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다하고 있음을 항변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복잡해진 자주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자체적 결론을 내렸음을 밝히고 있다. 연감은 특히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평등권과 자주성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이 형제국들에 대해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자주 및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에 대해서도 그런 대우가 대국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중소분쟁의 역학에 더해 소련으로부터의 코메콘(COMECON)가입에 대한 강요와 그에 대한 거절과 그 해명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보다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자주성의 문제를 ‘소련’ 으로부터의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부문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하고 정치부문에서는 자주성의 문제를 보다 강화하여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해나갔던 동학에 다름 아니었다.

한편 김정일도 민족국가와 자주성 문제에 있어 김일성과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역시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사상에 기반해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다른 한 쪽으로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관이 반영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옹계 할것을 요구 [...]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상의 영향이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¹⁴⁾

13) 조선중앙통신 편. 1970.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계급의 당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하여야만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 같이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¹⁴⁾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입니다. 세계혁명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입니다.”¹⁵⁾

김정일은 위의 제시문과 같이 김일성 탄생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전국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에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혁명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소련과 중국 간의 이념갈등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로 비판되면서 자구(自救)의 단위로서 ‘민족국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러면서도 개별 민족 국가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혁명’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적 임무 역시 민족적 임무와 양립가능하다는 점 역시 주지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민족국가’를 혁명과 건설의 단위로 상정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앞선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우리’에 대한 자문과 자답은 ‘우리민족제일주의’로 귀결되었다. 우리민족제일주의가 가지고 있는 수령중심의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수성은, ‘민족국가’의 외연을 통해 개별민족국가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일반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국가’를 혁명과 건설의 단위로 지칭한 것은, 실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내용적 측면에서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이라는 특수성을, 보편적 가치의 척도인 ‘국가의 주권’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정당하게 추구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받는 가치를 스스로 부여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 더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혁명과 건설이라는 사회주의의 과업은 냉전종식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항대립의 명제로서 사회주의 대국들의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로부터의 독자성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대신, 새로운 환경이자 적으로서 ‘미제국주의’로부터 ‘민족국가’를 수호해야한다는

14) 김정일. 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돏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5) 김정일. 1982년 11월 13일. 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0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6) 김정일.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의미로서 ‘자주’의 문제가 재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하의 글은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정식화되고 이것이 김정일에 의해 보다 강조된 사례이다. 이를 통해 당시 북한이 어떻게 국제정세를 인식했는가와 더불어 ‘자주’를 매개로 한 ‘민족’의 운명, 즉 국가 존망의 문제가 결부되어지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 부르조아인종론과 민족배타주의를 침략적인 세계주의와 결합시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리용하고있습니다. **민족국가와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부정하고《세계국가》와 《세계적인 경제》,《국적없는 문화》를 제창하는 세계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 다국적기업의 착취를 정당화하는데 복무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종주의와 민족배타주의, 세계주의를 고취하고 백인종의《우월성》과 세계에서의 미국의《지도적역할》을 날조하면서 세계를 제패하여 **세계 여러 민족을 노예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 **자주의 길로 나가는 민족의 운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됩니다.** [...]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인민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될 수 있습니다”¹⁷⁾

그동안 ‘민족국가’ 담론이 유통되던 공간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과정 혹은 사회주의 진영 내의 국가들 간의 힘겨루기로부터 파생된 틈새의 독자적 영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냉전의 붕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범주 자체가 없어진 국제정치적 환경은 말 그대로 ‘민족국가’ 그 자체로서의 생존을 강제하게 된 것이다. 곧바로 북한은 자신들의 논리적 디딤판을 ‘사회주의 대국주의’에서 ‘미제국주의의 세계주의’ 책동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진영의 외연이 사라진 세계를 바라보는 일종의 새로운 국제정치관이기도 했다. 그것은 위의 예와 같이 김정일의 언어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와 같은 직접적 압박만큼이나 당시 국제질서를 압도하던 국제화(globalization) 바람에 대한 반발로 표출되었다.

요컨대 소련의 해체, 동구의 몰락, 동서독 통일과 같은 일련의 사회주의 진영 내 사태들은 북한이 ‘민족국가’로서의 생존을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훼손된 사회주의 이념을 보완하면서도 ‘민족국가’의 구심력이 되어줄 ‘민족’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꿔 말하면, ‘자주성’ 개념의 방향과 목표는 ‘민족국가’로, 그 조건은 대국주의의 간섭이나 정치적 압박을 넘어 일극체제의 양육강식의 국제질서에서의 ‘생존’으로 보다 분명하면서도 사활적인 의미를 담지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17) 김정일. 1989년 1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강화

1) 사회주의 국가실패와 ‘계급 vs. 인민 vs. 민족’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연쇄적 붕괴의 현실 앞에서 김정일은 “동구라과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으며, 소련에서도 사회주의기발이 점차 내리워지고 있”음을 시인했다.¹⁸⁾ 2012년 증보판『김정일선집』 제13권에서 새롭게 추가된 담화인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자>에는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대한 김정일의 입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¹⁹⁾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두 달 후, 김정일은 특히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은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실패의 일반화를 전면부정 하는 내용이었다. 자신들의 사회주의가 동유럽 사회주의와 다른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임은 물론이었다.

18) 김정일. 1990년 1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 1990년을 전후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환경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주로 김정일의 말과 글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다. 『김일성저작집』이나 『조선중앙연감』에서도 특별히 김일성이 주목할 만한 담화, 연설, 논문 등을 내놓기 보다는 주로 김정일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기자가 내놓은 저서에서 김일성이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받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당시 국제상황에 대해 어두워 보인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 흥미롭다. 이에 반해 김정일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내놓으면서 사회주의 붕괴와 그 책임을 국가실패 혹은 특정 세력의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들과는 분명하게 분리시키는 한편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천명하는 등 사회주의 붕괴와 직면한 국제상황에 대한 공식적 대응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그와 같은 김정일의 대응이 증보판에는 1년4개월이나 빠른 시점에 보다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윤색 혹은 사후 첨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김정일의 국제정치적 대응의 연원을 앞당긴 증보판의 출판은 그의 업적정당성과 관련해 분명한 함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동구라파나라들은 자기 나라 인민의 의사에 맞게 자기식으로서가 아니라 **쏘련사람들의 도움에 의하여 쏘련식으로 건설** [...] 우리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의사에 따라 우리 식으로 건설 [...]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 군대, 국가건설도 우리 식으로** 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도 우리 식 [...] 우리 나라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 놓았기 때문에 오늘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고덕없이 사회주의 길 [...] 지난날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지 않고 **쏘련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쏘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쏘련이 수정주의를 하게 되자 그 나라들도 수정주의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혁명을 망쳐먹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²⁰⁾

위와 같이 김정일은 소련의 위성국가들이 소련의 지시와 정책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붕괴의 근본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자신들의 독자적 노선인 ‘우리 식’ 담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되는 포인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에서 소련이 미친 영향력은 물론 자신들이 소련의 형제국임을 자처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자신들의 ‘당, 군대, 국가건설’이라는 총체적인 혁명과 건설은 ‘우리 식’의 ‘주체사상’이라고 단언한 것은 몰락한 왕조와의 결별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도미노 붕괴 현상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조건에서, 이제 북한에게 보다 더 엄중한 현실은 “오늘 우리는 온 인류의 운명을 안고 있으며 단독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음을 강조한 김정일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즉 북한이 처한 현실은 자신들을 비호해줄 진영의 외투 없이 홀로 거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 즉 단극질서와 그에 유리한 국제질서, 그리고 그로부터 ‘강요된 세계화’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조건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김정일은 동일한 노작에서 상기와 같은 진단에 덧붙여, 김정일은 동유럽 국가들이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경시했기 때문에 “당이 녹아나고 사회주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절대적으로 관철할 것을 당에 주문했다.²¹⁾ ‘개량’이 아

20) 김정일. 1990년 1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1) “시대의 변천앞에서 혁명적 립장을 저버리고 사회주의원칙을 포기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주의원칙을 어기고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 개인주의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습니다. 사회주의는 개량이 아니라 혁명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자본주의화하려는 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다른 나라들에서 ‘개혁’, ‘개편’바람이 불면 볼수록 사회주의원칙을 더욱 견결히 지켜야 하며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일. 1990년 1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

닌 ‘혁명’으로 사회주의가 건설되어야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침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문제’에 있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관점은 김정일의 이후 저작에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소련에서는 1990년 4월 고르바초프에 의해 소비에트 최고회의에서 ‘소연방탈퇴법’이 제정되어 연방과 공화국 간의 권한 구분이 공식화 되었고(조정남 1996: 154) 5월에는 연쇄적으로 라트비아 및 발트 3국이 줄지어 독립을 선언하던 때였다(서규환, 이완중 2007: 21). 김정일은 그 모든 것을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탓으로 돌렸다.²²⁾ 상황이 격화될수록 정치사상의 단속 역시 더해졌다.²³⁾

이처럼 북한은 냉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의 합법칙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정권 나아가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의 정당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정일은 “일시적 우여곡절 일뿐 아니라 인류가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이라 역설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구체화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정권문제입니다. [...] 우리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비상히 넓은 사회정치적지반**을 가진 정권입니다.”²⁴⁾

“자주시대의 혁명사상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요구와 각 계각층 군중의 요구, 민족의 자주적 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다같이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되고 있습니다.”²⁵⁾

자.”『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2) 김정일. 1990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3)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파괴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소수 정치집단의 처지에 빠지게 된 주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당의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지 못하고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 박은 참다운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지 못한데 있다.” 김정일. 199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4) 김정일. 1990년 1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5) 김정일.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특히 북한은 기존의 ‘우리 식’의 구호가 나뉘는 주체로 한정되어, ‘우리 식 사회주의’로 귀결되는 과정을 통해, 분명한 시도로서 국가 내부의 ‘우리’의 외연을 확장해나갔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해야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급진적 성격의 일로에서도 내용적으로는 “통일전선”과 “모든 계급의 사회”임을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그 외연이 되어줄 그릇으로서 “민족”이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꿔 말하면 ‘우리’라는 집단주의의 강조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편향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의 계급성을 희석시키며 통일전선과 전(全)계급을 추구함으로써 국가내부의 ‘우리’에 대한 진입장벽은 훨씬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국가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계급성이 주는 균열 보다 통일전선이 주는 응집력으로 사회 제반의 이탈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상기한 흐름은 ‘계급’에서 ‘인민’으로의 변화로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당시 북한체제를 탈급진화, 탈계급노선으로의 단정도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와 같은 ‘계급’에서 ‘인민’은 다시 ‘인민’에서 ‘민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민’의 자리에 ‘민족’이 대체되는 것은 ‘탈계급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탈급진성’은 완화되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민족’의 강조는 동시에 ‘제국주의’와는 충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있어 미제국주의와 미국화에 다름 아닌 세계화가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부정’(negation)의 지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의 문제는 미제국주의와 세계화와 이항대립의 성격을 지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시 말해 냉전이 종식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오히려 반제국주의의 기치와 투쟁의 기치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황장엽 류의 주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계급’에서 ‘인민’으로의 탈급진화가 가진 위험성을 ‘계급’에서 ‘민족’으로의 전환으로 바꾸면서 완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계급성의 약화는 탈급진화의 필연적 귀결을 예정한 것과 같았지만, 북한의 경우 직면한 위기에서 이데올로기의 수정을 통해 ‘적응(adaptation)’의 과정을 거쳐 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민족과 인민은 동일한 실체로써, 민족적 일체성이 비교적 높은 북한에서 이 의미를 전화하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더욱이 ‘민족’ 담론은 ‘통일’의 당위론과 묘한 중첩을 이루면서 보다 자연스럽게 ‘인민’을 대체해 나갔다.

요컨대 계급노선에 머물 수도, 인민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전의 계급노선을 전면 부정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변화를 피하면서도 정권은 유지하는 해결책을 찾은 것이 바로 ‘민족’ 노선의 지속이라 할 수 있다.²⁶⁾ ‘계급’의 이완은 ‘민족’을 매듭으로 절충되었던 것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며 김일성의 언어를 소환했던 김정일의 언급에서 북한의 주체는 “인민”에서 “민족”이 되어있었다.²⁷⁾

2) 후계자의 정치비전과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북한에서 정식으로 호명되어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1986년에 즈음하여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후계자 김정일의 출생과 관련한 윤색작업이었다(안경모 2013: 74; 이찬행 2001: 526-527). 1987년 2월 17일 백두산 밀영을 김정일 혁명사적지로 지정하고 이듬해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상징하여 216m 거리에 정일봉(正日峰)을 새겨 넣은 다음 성대하게 기념식을 올렸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로동신문』에서는 ‘구호나무’라는 항일빨치산들의 각인 흔적들이 북한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발견된 구호나무에 대한 중앙 연구 토론회와 대중적인 교양사업이 자연히 이어졌다(이찬행 2001: 613-614).

‘구호나무’에 대한 언급은 『김정일선집』 2012년 증보판에 새롭게 추가된 1990년 1월 21일 담화에 역시나 잘 드러나고 있다.²⁸⁾ 김정일은 해당 논문에서 “백두산지구를 비롯

26)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계급’에서 ‘인민’으로와 ‘계급’에서 ‘민족’으로의 흐름이 공존했다가 이후에는 ‘계급’에서 ‘인민’으로가 약화되고 ‘후자’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군의 논리도 후자와 결합하게 면서 강성대국론 및 선군정치가 가지는 부국강병론과 민족주의의 강력한 결합현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27) 김정일.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8) 기존의 선집에서 추가된 담화문의 윤색과 수정 혹은 사후적 첨가라는 점에서 연구 및 사료적 가치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현재적 의미에서 북한이 강조하려한 내용들이 특정 시점에 김정일의 언어를 빌어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분석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 북부국경지대와 만경대, 룡악산, 대성산, 룡골산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발굴된 구호나무들에 썬여진 구호”를 예로 들며 “항일혁명투사”들이 “수령”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충성’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1940년대의 항일혁명투사는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북한의 인민 즉 ‘민족’과 대구를 이루고, 수령은 후계자 김정일을 염두에 두었음은 물론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구호나무’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며 당원 및 근로자 교양사업으로 투영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구호나무는 혁명전통과 사회주의 건설의 영광을 후계자의 계승과 매개하는 상징 그 자체였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옹호는 후계자에 대한 옹호와 동일시된다. 그 논리적 귀결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견결히 옹호”하는 것이 다시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금지와 자부심”으로 연결되었음은 물론이다.²⁹⁾ 그런데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대해 김정일이 자신의 독창성(originality)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의 주체사상과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금지와 자부심이며 당과 수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입니다.”³⁰⁾

위의 예는 1991년 김정일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내놓은 후계자의 신년사로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무원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의 일부이다. 그는 1989년 12월 자신이 공식적인 정의를 내렸던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소환 함에 있어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이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김정일이 중요한 명제로서 발언의 출처로 활용하던 ‘김일성의 교시’가 아닌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에서 정영룡은 그러한 김정일의 독창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9) 김정일. 1990년 1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과 기치 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0) 김정일. 1991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피로써 쟁취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우리 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세계혁명의 강유력한 성새로 더욱더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³¹⁾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 앞에서 북한 나름의 타개책으로 제시되었던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대한 고유성이 김정일 자신에게 있다는 언명은 분명히 후계자의 정치 비전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개념 규정이 김정일로부터 이루어진 점, 사용의 면에 있어서도 1986년 이후로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에 의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 점 등은 그러한 사실을 지탱하는 근거가 된다.

사실 김정일이 제기한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고유성은 우연히 혹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1967년을 시작으로 후계자과정에 임하면서부터 김정일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근원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앞선 2장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북한의 ‘우리 식’과 ‘우리민족제일주의’는 후계체제의 공고화 과정과 같은 맥락에 있다. 아래 <표 4-1>은 김정일의 담화에 등장한 ‘우리 식’ 표현을 기존의 선집과 북한당국이 새롭게 출판한 증보판을 결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같은 시기 김일성의 ‘우리 식’ 수사가 나타난 용례를 일대일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증보판으로 출간된 선집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자면 단순 양적비교에서도 김정일의 언급횟수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인다. 제시된 해당 문건들에서는 ‘우리 식’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하며, 그것은 ‘사대주의, 형식주의, 교조주의’를 지양하고, ‘민족의 특성’을 고루하지 않게 살리는 방식의 용례가 관찰된다. 그것은 특히 문학, 영화, 예술, 체육, 음악, 연극, 무용, 회화 등 북한의 문화체육예술의 전범위를 총망라하여 구체적으로 김정일의 말과 글로써 ‘우리 식’으로의 방법론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³²⁾

31) 정영룡. 1994. 정치사상론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3호.

32) ‘우리 식’의 표현은 김일성에 의해 김정일보다 앞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까지 김일성으로부터 언급된 ‘우리 식’은 광범한 분야에서 추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표현은 주체사상이라는 순수이데올로기의 실천이데올로기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례와 분야에서 말 그대로 ‘주체’적이라는 표현과 동의어에 가까운 ‘우리 식’을 고안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와 설득의 과정 그 자체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본격화 되는 1990년대를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정권으로 이해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는 특히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를 장악해나가는 1967년을 시작으로 1970년대 전반의 문학, 예술, 체육, 음악, 영화, 연극 등 선전, 문화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키워드로서의 ‘주체’에 더해 수사적 기능을 담당했던 ‘우리 식’의 김정일식 구현은 분명한 고유성의 연원을 지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가 북한에서 민족개념에 대해 언어와 혈통을 강조해 나가는 움직임과 같이 전개되었다는 점과 결부되어 후계자 김정일의 리더십과 관련한 사상적 모티브가 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4-1> 김정일 담화에 등장한 ‘우리 식’ 표현: 원본과 증보판 비교: 1961-1980

신 판	추가 여부	일시	출 처	제 목
1권	추가	1961.7.5	내각직속 체육지도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체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집단 체조창작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추가	1965.9.9.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일군과 한 담화	28 체육선수단의 체육기술을 국제적수준으로 끌어올릴 데 대하여
2권	원본	1967.6.7.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작곡가들앞에서 한 연설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추가	1967.7.17, 26	중앙속후속소년단양영소 일군들과 한 담화	소년단야영소를 잘 운영하여 학생교양에 적극 이바지 하자

내용과 방식은 후계 정권의 몫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식’ 표현은 『김일성저작집』 전반에 걸쳐 간헐적으로 관찰되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어떤 사람들은 쏘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표현을 통해 먼저 등장한 바 있다. 이어 1966년 5월 14일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에서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글자를 가지고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외에도 1970년 6월 1일 <함경북도농업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1일 상업류 통 및 경공업 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인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1년 11월 18일,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1월 31일 경공업공장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대학 교원, 학생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경공업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1979년 5월 4일 <폴름비아 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일행과 한 담화>, 1979년 7월 26일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량강도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자>, 1979년 9월 20일 <빠나마 인적자원육성 및 리용협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80년 3월 21일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1980년 4월 1일 방직공업부, 식료일용공업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방직공업과 식료일용품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1980년 8월 14일 조선통일지지 베네수엘라 위원장 일행과 한 담화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의 역할>, 1980년 9월 21일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올해농사경험과 다음해 영농사업방향에 대하여>,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이르기까지 총 14편 이상의 담화 혹은 연설에서 ‘우리 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원본	1967.7.30.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3권	추가	1968.12.16	영화예술부문 일군 창작가들과 한 담화	영화음악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추가	1970.1.2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일군들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원본	1970.2.14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추가	1970.10.2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당일군은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
4권	추가	1971.4.12	제11차 국가미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미술가들과 한 담화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미술을 더욱 발전 시키자
	원본	1971.4.28	우리 식의 혁명적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대하여	영화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추가	1971.7.8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 일군 조선인민군협주단 단장과 한 담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군사물가극을 창조할데 대하여
	추가	1971.9.24	문학예술부문 일군 창작가들과 한 담화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꽃파는 처녀>의 양상적 특성을 옳게 살릴데 대하여
	추가	1972.1.17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우리 식 무용표기법을 만들데 대하여
	추가	1972.7.8	주체적교예예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추가	1972.3.16	문화성 당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문화성에 정치국을 내올데 대하여
	추가	1972.4.22	종합축구선수단과 28축구선수단의 경기를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체육경기에서 사상전 속도전을 벌려야 한다
	추가	1972.7.8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적교예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5권	추가	1973.4.13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훌륭하게 완성할 데 대하여
	추가	1973.10.26	4.25축구선수단과 28축구선수단의 경기를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체육경기에서 기술전을 벌리며 체육과학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원본	1973.1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협의회에서 한 연설	당상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6권	원본	1974.9.4-6	문학예술부문 창작가들과 한 담화	가극예술에 대하여
7권	원본	1977.11.4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혁명연극 <성황당>을 재현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8권	추가	1978.6.5-10	만수대창작사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형상과 미술작품창작장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원본	1978.11.30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음악무용소품들을 특색있게 만들데 대하여
	원본	1978.12.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9권	원본	1979.12.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추가	1980.3.5	조선인민군협주단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군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를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원본	1981.3.31	전국문화예술인명상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사한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하여
	추가	1981.5.22	조선인민군 총참모장과 한 담화	남포갑문건설을 본따있게 내밀데 대하여

1967년 갑산과 숙청을 기점으로 북한의 문화예술 부문은 국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고 있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식’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으로 김정일의 정치비전이 구체화되기까지 그의 기본 생각들을 충실히 작품에 반영하는 실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이들에 의해 1970년대 전반의 예술문화영역 전반의 ‘우리식’과 ‘민족’ 개념이 무수한 작품을 통해 구현되는 동안 시나브로 인민대중에 각인되었던 것이다. 급격한 이념적 수정과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격렬한 변명을 내놓지 않아도, 이미 인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든지 수렴할 의사가 있도록 한 완충장치라 할 수 있다.

후계자의 정치비전의 원형(prototype)은 이처럼 ‘우리’에 대한 자문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중대한 역사적 전환을 기해 일종의 정치 비전으로서 전격적으로 정식화되었던 것이다. 계승의 정당성 즉 후계의 정당성(legitimacy)은 외부로부터의 위기에 대해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확보되었고,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론 하의 혁명적수령관과 혁명적동지애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불패성의 담보 [...]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 [...] 대를 이어 계승발전 되어야” 함을 역설한 후계자의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정치비전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검증과 더불어 국가의 존망을 가늠하는 거대한 정치 실험을 앞두게 된 것이다.³³⁾

3) 조직과 동원

주지하다시피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수령-당-인민’이 ‘삼위일체’로 귀결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전제로 한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혈연이라는 결정론적 관계로 규정되고 있으며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넘어 효성으로서 표현되었다.

33) 김정일.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그런가 하면 북한의 ‘우리민족제일주의’는 그 자체로서 ‘집단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³⁴⁾ 민족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집합으로서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앞서 언급한 ‘사회정치적생명체’라는 화학적인 성격이 부여됨으로써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지닌 개념의 완결성은 보다 강화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바로 “사회주의 로동”이 제시된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있었던 김중린의 발언과 같이 “민족이 계급에 우선”한다는 자극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의 근본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북한에서, 다시 한 번 계급적, 국제주의적, 보편적 힘에 대한 지향 역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즉 민족과 계급은 북한에서 반정향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절충적이고 변증법적 논리 구조에 따라 하나의 개념에 담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민족제일주의’였고, 이 개념에 따라 사회주의에서 ‘로동’은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실현하는 당원과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활동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활동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단순한 경제활동인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투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혁명실천 활동 [...] **사회주의에서 로동은 단순히 먹고 입고 쓰는데 필요한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활동으로** 된다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적로동활동의 본질적 특성과 의의가 있습니다.”³⁵⁾

“집단주의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됩니다. [...]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적집단의 의사를 대표하는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에 기초하여 발양됩니다.**”³⁶⁾

34)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지 못하면 민족적존엄과 자주성을 지킬수 없으며 남의 수모와 멸시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 사회의 집단도 모르고 자기자신만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로동은 개인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기자신만을 위한 로동이 개인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 있다면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은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1989년 11월 27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5) 김정일. 1989년 11월 27일. 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6) 김정일. 1990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은 위와 같이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 가는 활동으로서의 ‘사회주의 로동’을 실속있게 하려면 “집단주의 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해야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본성으로서의 ‘집단주의’를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공동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재부”는 사회와 나라의 재부에 비례하여 “모든 성원의 몫”도 커진다는 논리이다.

한편 북한은 ‘로동’의 ‘집단주의’와 ‘사회주의적생명체론’으로의 이해에서 보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적 국가 정책으로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는 사회주의사회에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집니다.”³⁷⁾

“당의 행정을 반대하고 국가정권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높인다는 구실 밑에 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단호히 배격해야.”³⁸⁾

이렇듯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는 사회정치적생명체라는 논리 하에 인민의 권리와 의무의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인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리의 문제는 희석되고, 역으로 수령, 집단, 국가의 이름으로 인민에게 베풀어지는 그야말로 시혜적인 것으로 관계가 전환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인텔리”에 대한 동원도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명분하에 사회주의 로동에 대한 동원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논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을 강조하면서 인텔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동유럽 국가들에서 전개된 아래로부터의 사회민족주의의 전개 양상이 다른 아닌 대학과 문학 및 예술분야 전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인텔리에 대한 북한의 단속 역시 이해가 가능하다.³⁹⁾

37) 김정일.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단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8) 김정일.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일성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9) 김정일. 1990년 9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텔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 민족과 통일: ‘우리’와 ‘민족’

북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를 종식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김일성 지도부의 열망은 한국전쟁의 실패로 한 차례 좌절되었으며, 바로 그 실패는 김일성 지도부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대해 천착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박헌영 등이 숙청됨으로써 형식적인 전후 책임 문제가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정작 전쟁 발발의 주동적 인물이었던 김일성은 권력의 암투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었다. 즉 태생적인 권위의 정당성(legitimacy) 문제가 배태된 셈이었다.

김일성이 민족주의자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그가 얼마나 통일문제를 중요시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생애를 관통해 남긴 통일 관련 담화 및 정책을 비롯해 사망 직전 남긴 통일 유훈이 잘 말해준다. 그것의 진정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북한의 공간 문헌에 나타난 통일에 관한 북한 정권의 공식적 입장은 사회주의 건설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목표였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통일의 주된 논리적 근거가 바로 ‘민족적 단일성을 회복하자’ 는데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담론과 민족담론은 서로 별개의 공간에서 다루어지고 유통되고 있지만, 사실상 매우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계급-민족-통일이라는 세 개의 개념적 긴장과 관계 속에서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즉 앞선 장과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계급과 민족’ 간의 모순된 결합과 그 점진적 전개 과정은 상대적으로 ‘민족과 통일’ 그리고 ‘통일과 계급’의 문제를 보다 긴장시키기 때문이다. 민족 개념의 수정이 ‘우리’의 범주와 정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 범주가 한반도를 포괄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는 곧 통일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6차 당대회에서 대남책임비서 김중런이 “민족이 계급에 우선” 한다는 말과 연이어 나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1980년대 들어 ‘계급-민족-통일’ 이 세 축의 긴장과 모순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공식적 노력이 가시화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하에서는 1980년을 전후한 북한의 통일방안을 역사적 맥락과 함께 검토하고, 그것이 북한의 ‘민족’ 개념 수정 즉 ‘우리’에 대한 정체성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1) 1980년 이전시기의 북한 통일방안

한국전쟁 이래 북한의 대남정책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남한에 대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발현되어 왔다. 1960년 ‘련방제’ 통일방안, 1960년대 중반의 ‘남조선혁명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73년 ‘련방제’ 통일방안 등은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북한의 대남 제체경쟁에의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했다.

먼저 북한이 최초로 제기한 ‘련방제’는 김일성이 1960년 8월 13일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등장한다.⁴⁰⁾ 김일성은 여기에서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비록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련합정부가 못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지도는 못하더라도 이 련방의 최고민족위원회에서 전민족에 리로운 경제문화적문제들을 협의하며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교류와 호상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북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자신감은 중공업우선 정책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두 축의 결과로 남한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당시의 국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까 두려워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 하자며 남한을 ‘배려하는’ 김일성의 말에서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은 해당 문건에서 남북문화교류, 상호 10만 이하의 군축, 남북 당국자 및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인사들 간의 남북 협상 개최를 제안하면서 “조선문제는 우리 조선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최초의 북한 통일방안이었던 ‘련방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련방제’ 보다는 ‘남조선혁명론’의 모토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1961년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진 남한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혁명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40)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1968년 출판된 『김일성저작선집』에는 해당 문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저작선집을 보완해서 출판되기 시작한 저작집에서는 해당문건이 등장한다. 즉 1981년 『김일성저작집』에서는 북한에서 제기된 최초의 통일방안이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1960년에 ‘련방제’의 형태로 등장했던 것이다. 물론 1960년 이후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 국호를 사용하여 유엔에 가입하자는 주장’(심지연 2001, 307)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통일방안이 제기된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담론에서 ‘련방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시원이 1960년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김일성저작선집』과 『김일성저작집』의 사료적 가치와 자료로서의 신뢰도와 관련 있는 문제이므로, 또 다른 입증의 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김일성. 1960년 8월 14일.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제14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혁명적당이 없었고 뚜렷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노동자, 농민이 항쟁에 널리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 인민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와 대가를 미제의 다른 앞잡이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남조선 인민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속에서 깊이 뿌리박은 노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과 북조선의 애국적사회주의력량과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합니다.”⁴¹⁾

김일성의 상기한 발언에는 1960년 4월 19일 남한에서 있었던 ‘4·19 혁명’에 대한 고무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남한의 혁명역량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1964년 ‘3대혁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등장한 ‘남조선혁명론’으로 실현되었고, 그것은 사실상 ‘북조선혁명기지론’의 연장이었다(백학순 2003: 160). 일종의 거점 혁명방식으로서 북한의 민주기지론 혹은 혁명기지론은 그 목표와 내용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즉 북한을 혁명의 기지로 삼고 남한의 혁명역량을 강화시켜 한반도 전체의 혁명, 통일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3대혁명 역량강화’라는 방침하에 ‘남조선혁명론’을 실제 통일방안으로 확정했다(신영석 2008: 121). 또한 ‘남조선혁명론’의 일환으로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이를 통해서 남한의 혁명역량을 극대화 시키고자 했다.⁴²⁾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은 1960년대 국제정세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⁴³⁾ 북한은 특히 남한에서의 혁명역량 고취와 관련해서 지하당 건설과 군사게릴라전도 불사했다. 1968년에 있었던 김신조 이하의 ‘청와대 기습사건’이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당시 군사모험주의 일변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북한 지도부가 남한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도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이종석 1998: 91). 그러나 북한의 그와 같은 시도들은 1968년 통혁당의 검거 및 해산

41) 김일성.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2) 편집부. 1989. 『통혁당: 역사, 성격, 투쟁, 문헌』 서울: 도서출판 대동. 71p.

43)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 남한에 대한 혁명역량과 정세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일성. 1965년 4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이 계기가 되어 급속히 탄력을 잃었다. 물론 실패의 근저에는 남한의 혁명적 상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오판이 깔려있기도 했다.

북한의 ‘남조선혁명론’과 군사모험주의적 도발은 1970년대를 즈음한 데탕트의 개막과 함께 서서히 완화되어갔다. 무엇보다 미·중 관계개선은 냉전 구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냉전의 일시적 해빙이라는 시대적 조류와 흐름을 같이 했던 것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그 정점이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해당 성명을 기점으로 북한에서 전개되어오던 모험주의적 대남정책을 수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⁴⁴⁾

그러나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는 채1년이 지나지 않아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통해 종신집권을 향한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감행하고 있었다면, 북한에서 역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을 공고화하려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짧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근본적 화해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973년 박정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즉 6.23선언의 발표 직후 ‘조국통일5대강령’을 내놓았다.⁴⁵⁾ 내용의 골자는 “첫째,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둘째,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셋째,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 각층의 인민을 거족적인 애족사업, 넷째, 남북 련방제 실시, 다섯째, 대외관계에 있어서 남북의 공동대응”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련방’의 정식 명칭을 “고려련방공화국”으로 제안하면서 “현존하는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현실적인 조건에 맞추어 실행하자고 설명했다. 유엔 가입도 마찬가지로 상기한 국호로 가입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조국통일5대강령’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1960년 ‘련방제’와 차별점을 가진다(이종석 1998, 98-99). 첫째, 1960년의 ‘련방제’가 총선거의 부담에 대한 차선책

44) 이종석(1998: 96-98)에 따르면 이 때부터 북한이 남한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남정책이 공식적인 당국자 간 채널을 통해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공동성명을 추진한 남측의 주체가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존의 북한 지하당 건설 및 지하공작 사업을 통한 대남정책이 부식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5) 김일성은 박정희의 6.23 특별성명발표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와 같은 ‘조국통일5대방침’을 내놓았음을 숨기지 않았다. “미제의 부추김 밑에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각방으로 추진시켜오던 남조선당국자들은 드디어 지난 6월 23일 오전에 <특별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조국의 분열을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오후에 새로운 구국대책으로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김일성. 1973년 6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97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으로서의 대안적 성격을 가진다면, 1973년의 ‘련방제’는 “현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는 주장한다. 이는 북한이 제기한 ‘조국통일5대방침’하의 ‘련방제’가 과도 기적이기는 하지만 임시적 단계보다는 보다 진척된 상태이면서도, 차선이 아닌 최선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의 선회를 의미했다. 둘째,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 대응하는 제안은 ‘민족문제’의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국제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 이슈를 ‘민족내부’의 문제로 한정하고, 미군철수를 비롯한 여타의 개입에 대해 거부해온 바 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유엔 가입문제는 국제사회의 이슈로 비화되면서 그러한 제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보다 국제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컨대 1974년 북한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었던 허담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전격적으로 제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시도들은 북한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당사자주의’를 고수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오히려 통일, 유엔가입, 대남정책, 핵문제 등 차후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민족 vs. 통일 vs. 계급’

북한의 ‘련방제’ 제안에 따른 통일방안의 전체적인 흐름은 1970년대까지 유지되었으나,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전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통일방안과 북한의 민족에 대한 입장에 일대 변화가 나타났다. 그 포문을 연 것은 이 대회에서 대남책임자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비서국 비서 김종린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면서 민족이 계급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부터였다. 먼저 김종린의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사상과 리념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

“주체사상은 사람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그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도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민족의 자주성을 쟁취하고 고수하는 문제가 매개 나라 혁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 있다”⁴⁶⁾

말 그대로 민족문제 해결이 계급투쟁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대남책임자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져왔다. 먼저 김남식(2004, 52-53)은 김중린의 발언에서 보다 나아가 “민족이 자본주의 시대의 역사적 범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사상과 이념의 상위 개념으로 민족문제를 설정”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종석(1994, 70-71)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김중린의 상기한 발언과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안이 “사회주의 민족의 민족주의적 담론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는 통일 민족을 담아낼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입장들은 당시 북한 지도부가 지니고 있었던 통일, 계급, 민족 간의 상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계급문제를 부차화 시키고, 통일문제를 가장 우위에 상정하고 있다는 논리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⁴⁷⁾ 실제로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의 결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한의 완결된 통일방안으로서 제기되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관련한 배경에 대한 김일성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⁴⁸⁾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량심도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앞에 다신 서약도 다 짊어 던지고 분열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섰습니다. [...] 민족분열의 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수단들을 동원하여 파쇼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 놓고 [...]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부르짖으면서 [...]”

김일성은 상기한 지적에 더해 박정희 정권의 군사 쿠데타, 유신헌법 등을 비판하고 남한의 민주화 및 통일운동가들을 ‘내란음모죄’ 및 ‘반공위반법’으로 처벌한 것을 지적하면서 남한 사회를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묘사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의 논리는 다음의 수순으로 연결되었다.

46)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4권.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11. 332p.

47) 이종석(1998, 103)은 이와 관련해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내놓은 뒤 이 방안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시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민족개념까지 변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48) 김일성.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8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아닌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열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입니다. 한민족의 피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⁴⁹⁾

이러한 인식에 바탕 하여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은 물론,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제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중립국가”로서의 정치적 노선도 분명히 하고 있다.⁵⁰⁾ “중립국가” 노선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필연적” 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만일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친다면 민족의 전반적이익을 해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련방국가의 형성원칙과 목적” 과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⁵¹⁾

김중린과 김일성이 위와 같이 제기한 민족, 통일, 계급의 긴장관계는 제6차 당대회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해 ‘가상의 제도적인 형태’ 로 수렴되었다.⁵²⁾ 북한

49) 김일성.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8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0) 김일성이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10대 시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합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의 군사적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옹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51) 김태영. 2001.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 평양출판사. 144-145p.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자체가 통일의 실현”이며 “하나의 통일국가”로 상정되면서 일종의 정치적 당위론에 입각한 통일방안의 이니셔티브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²⁾

이것이 지니는 효과는 첫째, 김중린의 토론과 마찬가지로 ‘계급 vs. 민족’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둘째, 김일성의 주장과 같이 ‘민족 vs. 통일’의 결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첫 번째 효과 즉 계급과 민족 간의 긴장 완화라는 측면은 예컨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제안 이전 시기에, 이미 1960년대 중소분쟁과 그에 대한 독자노선이라는 명분을 표방한 ‘주체사상’의 전개, 인민대중 중심의 철학에 바탕을 둔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보와 통일전선의 표방 등을 통해 상당부분 탈색 되어가고 있었다. 그에 반해 두 번째 효과인 민족과 통일 간 결합력의 강화라는 측면은, 제6차 당대회를 전후한 북한의 ‘민족’ 관련 입장의 큰 흐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북한 통일방안과 담론에서 ‘민족’은 통일의 당위론에 핵심적인 기제였다.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단일민족’의 조건이 되었으며,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을 정당화 시켜주었다. 그러한 당위론은 애초에 근본적인 정당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서 굳이 불편한 소재일 수 있는 ‘계급’의 긴장을 불러올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계급’의 긴장을 언급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1980년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에서 김중린의 발언을 통해 ‘통일’의 수면아래 있던 ‘민족’이 ‘계급’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통해, 민족개념이 보다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의 확장 효과를 가지게 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북한 당국 스스로 ‘민족’ 개념을 제한적 이념의 공간을 넘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 여유를 마련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계급 vs. 민족’ 간의 긴장관계는 통일이라는 도덕적·정치적 명분으로 수그러들었고, 민족은 이제 양지에서 보다 그 내용과 성격을 보다 심화 발전시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북한에서 최초로 제기되었고 최근까지도 북한의 공식적 통일방안의 모태가 되고 있는 통일방안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중린의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52) 여기서 ‘가상의 제도적인 형태’의 의미는 통일방안은 통일의 한 방식으로서의 아이디어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가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통일정책이라는 실질적인 제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53) 김태영. 2001.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 평양출판사. 127-128p.

에서 ‘민족’ 개념은 단순히 통일론에 간혀있는 상태, 다시 말해 남북관계에 국한된 개념 그 이상으로 이해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스탈린주의의 계승성 vs. 주체사상으로서의 독창성” 구도의 긴장관계와 일종의 생존전략으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지도사상으로 대체했던, 조선로동당 역사에서도 주목해야할 당시의 정황은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⁵⁴⁾ 바로 이 점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우리 식’과 ‘민족’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공존은 ‘계급 vs. 민족’이라는 근본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고민이 대외적 위기라는 환경변수로 인해 ‘국가’ 즉 ‘애국’의 공간 안에서 상호 결합됨과 동시에 ‘통일’이라는 또 다른 긴장의 가능성을 영리하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이 자신들의 근본적 고민이었던 ‘민족’과 관련한 문제를 ‘통일’의 영역으로 치환했던 작업은 자신들이 당시에 몰두하고 있었던 ‘자주성’의 주체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북한이 말하듯 “전체 조선민족”과 이제 “해외동포”까지를 포괄해야하는 입장은 ‘우리’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공간을 재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타공인 북한이 그동안 내놓은 그 어떤 통일방안에 비해 가장 정교하고 완성된 양식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제의 내용은 역대 통일방안에 비추어서도 수세적인 성격의 것이었다.⁵⁵⁾

그러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가져온 분명한 정치적 함의 가운데 하나는 ‘민족’과 ‘계급’ 문제를 일단락 지으면서, 그동안 ‘통일’의 근거로서만 기능했던 ‘민족’의 역할에 수정을 가해, ‘통일’이라는 제도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민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화시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후 김정일의 주도로 1985년 발간된 4권의『주체사상총서』와 『철학사전』에서는 ‘민족’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의 수정이 있었고, 그 정점에서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

54) 국토통일원. 1988.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4권.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33p.

55)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제안 와중에도 북미회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1974년 기왕에 선회한 ‘당사자주의’ 대신 3자회담을 제안하고 있었던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수세적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현(2013, 41-42)은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해 “4.19 뒤에 남북연방제 제안이 나오고 5.18뒤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나왔다”면서 남한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을 통해 북한의 남한 흡수 시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당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남한의 민주인사 집권’을 포함한 다섯가지 전제조건을 적시함으로써 남한의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의’가 등장하여 이후 북한의 정치담론에서 상당한 ‘민족’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⁵⁶⁾이처럼 1986년 김정일에 주도로 북한에서 호명된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비록 그 방식이 최고지도자에 의한 선언적 방식이기는 했으나, 1980년의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전개된 상기한 ‘민족-계급-통일’ 간의 논리적 긴장해소를 바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등장 과정에서 보다 수월하게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김정일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치아래 보다 다양한 정치적 영역에서 ‘민족’을 호명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의 민족에 대한 강조는 아래의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언제나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습니다 [...]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잇닿아 있습니다”⁵⁷⁾

김정일이 가장 포괄적인 집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적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것이 “자주성”의 주체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계급 혁명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그 의미를 점점 잃어가는 가운데, 계급을 대체하여 ‘우리’를 응집함으로써 ‘국가’의 ‘자주성’을 수호할 수 있는 것으로 ‘민족’만큼 적당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과 긴장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외연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에 제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아래와 같이 ‘자주시대’에 주체사상을 가진 ‘우리 민족’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선민사상에 가까운 위상을 확보해 나갔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행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세우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 [...] 우리 민족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 [...]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며,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는 슬기로운 민족.”⁵⁸⁾

56) 이와 관련해서는 본 논문의 3장을 참고할 것.

57) 김정일.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61p.

1980년 제6차당대회의 토론과 그 결과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제기로 북한에서 ‘통일’ 론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단힌’ 결과라는 선언을 내렸다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이전까지 ‘통일’ 의 당위적 논거로서 활용되던 ‘민족’ 론은, 북한에서 보다 확장된 정치적 담론의 공간으로, ‘국가’ 에 의해 호명되어 새롭게 ‘열린’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민족’ 은 여전히 통일로 향하는 구심력이기도 하지만, 확장된 공간에서 ‘통일’ 에 반하는 원심력으로 나아갈 가능성 역시 배태하도록 함은 물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민족주의는 무엇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힘의 장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위에 제시된 김정일의 발언은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도, ‘민족’ 이라하면 의례 그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 이라는 별도의 혹은 민족 내의 또 다른 민족의 범위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국가 민족주의의 전형으로 ‘민족’ 을 호명하는데에는 점증하는 대외적 정치 환경과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민족’ 개념의 탄력적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석된다.

58) 김정일. 1992년 1월 20일. “주체문학론.” 『김일성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제2절 민족 재건설의 실제

본 절에서는 1986년 북한지도부에 의해 ‘우리민족제일주의’로 호명된 ‘민족’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지를 이어가고자 한다. 하나는 김일성 사망 이전시기인 1992년에 기획된 북한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라는 사례를 통해 북한이 전형적 국가민족주의가 문화예술적 영역에서 발현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민족정책이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전자는 1960년대 선전선동부를 장악하면서 중앙권력에 접근해나갔던 김정일의 성취와 그 정치적 감각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는 특히 ‘민족’의 이름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사회민족주의(social nationalism)의 기반을 침식하여 국가로부터의 하향식(top down) 정당성만을 내재화(internalization)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후자는 북한이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단순한 레토릭과 수사에만 의존한 교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인민 대중의 삶과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로 구현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두 가지 흐름의 논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1.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 <민족과 운명>의 제작배경

1990년 1월 1일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 사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를 통해 후계자버전의 신년사를 발표했다.⁵⁹⁾ 제시된 <표 4-2>는 김정일이 생전에 내놓은 신년사 형식의 언술을 정리해놓은 것이다.⁶⁰⁾ 사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59) 안경모(2013, 96-97)는 1990년대 이후 김정일이 1990년 1월1일, 1991년 1월 5일, 1992년 1월 1일 1994년 1월 1일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전년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적 기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그것은 일종의 김정일 버전의 신년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의 해석은 연설의 형식, 내용, 시기 뿐 아니라 청중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라는 핵심적인 권력 중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는 보다 이전 시기인 1975년으로 소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75년을 시작으로 북한식의 신년사와 형식, 내용, 시기 면에서 유사한 형태의 김정일 연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60) 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당 정치위원으로 선출된 이듬해부터 1975년부터 김정일버전의 신년사가 매년 등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당중앙’을 자임하면서 대체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로 한정된 청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 자신만의 언어로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연설 및 담화를 내놓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인민무력부나 선전선동부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정일의 신년사는 일종의 후계자 권위 구축의 동학의 일환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 스스로가 주체사상 확립의 당사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혁명적수령관, 혁명적동지애 등을 고안하여 수령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당과 인민에 주문한 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구심력 속에서 후계자의 독자적 권위의 영역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주체사상이 일종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와의 독창성과 계승성의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면 김정일은 수령중심의 유일지배체제로부터의 독창성과 계승성의 딜레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김정일은 투트랙(two track)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신의 권위구축 동학을 실현하고자 했다. 첫째, 영화와 같은 문화 예술 영역의 레토릭(rhetoric)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동의’를 오랫동안 내재화 하는 방식을 취했다. 둘째, ‘당중앙’으로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자신의 직접적 언어를 통한 ‘신년사’의 레토릭을 통해 후계자의 권위를 만들어 나갔다. 전자와 관련해서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은 1967년 5월경부터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대중에게 문화예술부분의 코드를 사용하여 문화적 헤게모니를 점진적으로 장악해나갈 수 있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수령의 권위에 기대어있으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함으로써 양자를 일치시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신년사를 통해 수령 중심의 구심력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그 힘에 편승하여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김정일의 신년사는 항상 김일성의 신년사에 대한 동의와 충성맹세로 시작하는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김정일의 전략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라

당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당중앙’으로 불리며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보다 공고화해나갔는데(정창현 2011, 102), 1975년부터 자신의 언어로써 ‘신년사’ 형식의 연술을 꾸준히 내놓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 1월 1일 김정일의 담화문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⁶¹⁾ 특히 당면한 국제환경과 국내적 발전의 위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돌파의 시도로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고안하고 추진한 당사자가 바로 김정일이었다는 점에서, 진영의 위기에 대한 그의 입장은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표 4-2> 김정일 신년사 목록: 1975-2010

일 시	출 처	제 목
1975.1.1.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1976.1.1.	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올해에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
1976.1.1. (증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는 변수와 함께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수령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수령의 권좌에 오르지 않았으며, 3년간의 유훈통치를 단행했다. 김일성의 욕성으로 전해지던 신년사는 신년공동사설 하에 3개 단체(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의 “공동사설”(이하 ‘신년공동사설’)이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발표되고 있다.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바로 이러한 효과로 일부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가 와해되고 집단지도체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을 빚나갔다.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둔 북한의 집단지도체제로의 가능성은 오히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과 선군정치의 개막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김정일은 1975년부터 진행해오던 후계자의 신년사를 여전히 지속해왔을 뿐더러 그것은 오히려 형식적·공식적 권위의 공백과 국가발전의 위기에서 보다 더 강한 결속력과 응집을 주문했던 것이다. 1995년 부터의 신년사가 조선인민군, 조선로동당, 청년조직 세 개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은 수령의 이름이 아닌 국가의 이름으로 신년사가 발표되기 시작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상기한 3개의 조직은 북한 사회의 핵심 골간의 대부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달되었던 김정일의 생각과 입장은, 탈급진적 성격의 동학 역시 선군이라는 급진적 동학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김정일은 국가의 이름으로 전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술과 이전부터 지속해오던 당의 코어그룹에 대한 연술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마찬가지로 구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급진화와 탈급진화의 동시적, 절충적 추구의 예로서, 국가의 이름으로 이완된 위로부터의 압력이 사실은 내부 결집을 위한 당내 단속을 통해 병행 추진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1)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고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라면서 여전히 ‘민족주의’라는 용어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올해에 당조직이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8.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자력생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 계획을 앞당겨수행하자
1979.1.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1980.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
1982.1.2. (중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과 한 담화	당의 유일적 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1982.1.3. (중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선전부국장과 한 담화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1983.1.1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1984.1.14. (중보)	조선인민군 중대지도소초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중대지도소초활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의 중대를 더욱 강화하자
1985.1.2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1986.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1987.1.19. (중보)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의 군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
1988.1.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전당에 혁명적당품을 철저히 세우자
1989.1.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1990.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1991.1.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1992.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1993.1.5.	청년사업부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
1994.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1995.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1995.1.1. (증보)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1996.1.1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1997.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1998.1.1. (증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 나갈데 대하여
1999.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강성대국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0.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2000.1.2. (증보)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전군의 일심단결을 더욱강화하여야 한다
2000.1.4. (증보)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새해경축공연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노래의 형상수준을 계속높여야 한다
2001.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2002.1.1. (증보)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단장과 한 담화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천만군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2002.1.3. (증보)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음악예술부문에서 민족성을 고수해나갈데 대하여
2003.1.2. (증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선군정치를 튼튼히 틀어쥐고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2003.1.4. (증보)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들어야 한다
2007.1.19. (증보)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희천공작기계공장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이다
2008.1.30. (증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강계정신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창조된 사회의 수호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이다
2009.1.2. (증보)	당, 국가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하여
2010.1.1. (증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 CNC기술을 개척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자

김정일은 1990년 신년사에서 “우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혁명전통, 우리 당의 지도사상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자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이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실제적인 우월성에 기초하여 설득력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⁶²⁾

‘항일혁명투사의 회상기’ 출판 사업이 미진한 데 대한 김정일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었다. 『항일혁명투사의 회상기』에 공을 들였던 김정일의 기본 생각은 다음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려면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사상과 전통과 력사를 가지고 잘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로 “새 세대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고생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날의 항일혁명선렬들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 간고한 투쟁을 벌렸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그가 보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미래를 끝없이 사랑”하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기 때문에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⁶³⁾ 즉 당면한 고난을 청년세대들이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라는 의도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사상교양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인다고 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쓸데없이 만세”를 자주 부르면 “진실성이 없게 되고 대중이 당의 선전을 믿지 않게” 된다고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 있는 선전사업을 하도록 당부를 잊지 않았다.⁶⁴⁾

이듬해 김정일은 마찬가지로 1991년 1월 5일 후계자의 신년사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62) 김정일.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3) 김정일. 1990년 1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4) 김정일.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다그치자>를 통해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관한 자신의 독창성(originality)을 주장하고 나섰다.⁶⁵⁾ 그는 당조직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세도’와 ‘관료주의’를 배격대상으로 삼았다. 그에 더해 김정일은 소련의 해체와 동구의 몰락에 대한 인민대중 및 체제적 입장을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내놓고, 닷새 뒤인 5월 10일에는 <당세포를 강화하자>는 글을 통해 당조직의 결속을 도모했다.⁶⁶⁾

일련의 김정일의 연설은 ‘집단주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충성과 효성’, ‘혁명적동지애’, ‘우리 식 사회주의’, ‘사회정치적자주성’ 등 ‘우리민족제일주의’로 귀결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영화 <민족과 운명>이 제작되도록 김정일로부터 지시가 내려진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내가 보천보전자악단에 과업을 주어 지었는데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이 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조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출장가있는 사람들, 남조선에서 군장성으로 복무하였던 사람들이나 다른나라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늙은이,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조선사람들의 심리에 맞으며 어제도 맞고 오늘의 시대에도 맞는 참으로 훌륭한 노래 [...]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예술영화를 본때 있게 잘 만들어 수령님탄생 80돐에 내놓아야 하겠습니다.”⁶⁷⁾

영화의 제1, 2부는 1992년 2월 김정일의 50번째 생일을 기념해 제작 및 발표되었다. 이어 돌아오는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에는 3,4부까지 완성되었고, 2002년에는 100부작까지 제작될 것이 확정되었다(전영선 2004, 329-330). 영화 <민족과 운명>은 김정일이 행한 마지

65) 김정일. 1991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일성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6) 김정일.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91년 5월 10일.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당세포를 강화하자.” 『김일성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7) 이 논문은 2012년 출간된 『김정일선집』에서 새롭게 추가된 증보판이다. 김정일. 1991년 5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에게 준 지시. “노래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를 만들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막 현지지도로서의 작업이 되었는데, 명실상부한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구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영화는 ‘대작’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대작’의 원칙은 김정일이 영화예술사업에 열중하던 시기에 고안한 창작의 원칙이기도 했다.⁶⁸⁾

한편 <민족과 운명>은 북한 영화제작의 양대산맥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소장 백민과 2.8 예술영화촬영소(현 4.25예술영화촬영소) 소장 민일이 총제작을 맡고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사장 신상호가 시나리오를 담당했다.⁶⁹⁾ 또한 실존 인물을 형상화 하여 보다 ‘주체적 사실주의’를 추구한 본 영화는 북한 최고의 배우들이 참여하여 사실감을 높였다(장용훈 2004, 92-93).

북한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단지 김정일의 직접지시로 제작된 영화 혹은 100부작이라는 양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 무엇보다 오랜 세월 제작되어오는 과정에서 김정일이 인민대중으로부터 확보하고자 했던 정치적 ‘설득’과 ‘동의’, 그리고 ‘내재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많은 영화가 그러했듯이 김정일 스스로도 이 영화 제작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화에 대한 평론가이기를 자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후계자 시절부터 줄곧 고안해왔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영화화 했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8) “혁명적 대작은 한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혁명운동의 본질과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발전과정을 사상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낸 작품을 말합니다.” 김정일. 1964년 12월 10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9) 북한의 예술영화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인민군 4.25 예술영화촬영소 그리고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실에서 제작된다. [...] 북한의 모든 기록영화는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 과학영화는 조선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하는 형태이다(전영선 2006, 21-22).

2) 김정일의 ‘종자론’ 과 <민족과 운명>의 ‘종자’

김정일의 초기 당내 권위 구축 과정은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에서의 활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70일전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3대혁명 가운데 ‘소조혁명’ 등을 통해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다짐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당내외에 과시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구축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권력 최상부에서의 업적 정당성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대중매체와 선전 수단을 장악하여 ‘인민대중’을 직접 설득하고, 자신의 이념이나 아이디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일종의 미디어 헤게모니(Media Hegemony)를 점유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차기 정권의 유일한 지도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밟아 나갔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1960년대를 즈음해 김정일이 내놓은 ‘종자론’과도 무관하지 않았다.⁷⁰⁾ 196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김정일의 ‘종자론’은 1973년 그의 저작 『영화예술론』을 통해 공식화 되었다. 1974년 2월 당정치위원회 위원이자 후계자로 정식화되기에 앞서 등장한 해당 저서에서는 김정일의 정치구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단서들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식’, ‘종자론’이었다.⁷¹⁾ 그리고 그 이면에는 주체사상의 핵심적 이론가였던 황장엽의 영향력을 넘어 자신의 이론으로 전환시키는 후계자 김정일의 본능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의도가 전제되어 있었다. 실제로 황장엽의 회고록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김정일의 경쟁심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초반 후계자의 공학과, 문화선

70) 후루타 히토시(2004: 276-281)는 김정일의 ‘종자론’이 1987년부터 본격화된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 모태가 되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종자론’이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 모태가 되었다는 핵심적인 근거는 다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황장엽과 김정일의 사상적 교감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주체사상 관련한 황장엽의 주장은 상당부분 일방적인 편향이 있다는 점에서 후루타의 주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 한호석(1997, 4)은 1980년대부터 김정일의 대중, 대소 개혁, 개방의 비판적 입장과 배치되는 사상이론적 견해로 인해 황장엽의 지위가 상당히 격하되었으며, 당시 주체사상의 체계화에 기여한 최고의 이론가는 양형섭이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종자론’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가지는 이론적 연결성이 상당부분 논리적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접촉이 어떤 식으로 가능했었는지 보다 면밀하게 추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자론’은 1960년대의 간헐적 언급이 있던 후, 1972년 『문학예술사전』에서 정의되고, 1973년 김정일의 논문 “영화예술론”을 통해서 공식화되었다(장용철 2012: 92-93).

71)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등 이 글은 ‘종자론’에 대한 기본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편곡, 문학예술, 영화 연출, 촬영 기술, 안료 외 기자재, 노래, 작곡, 배우의 직접 노래, 선율, 피아노” 등 영화의 구체적인 작업에서 “우리 식”이라는 방식을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김정일. 1973년 4월 11일. “영화예술론.” 『김정일선집』 제5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전선동 부문 장악, 주체사상의 좌경적 정도 등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황장엽 1999; 2006). 김정일이 황장엽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주체사상의 골격과 기본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황장엽의 지적 소산은 김정일의 ‘종자론’ 이 ‘사회정치적생명체론’으로 이론적 지평을 확장해나가는데 있어 일종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정일의 ‘종자론’이 황장엽의 소련, 일본 유학시절 접했던 ‘헤겔식의 유기체적 국가론’의 논리적 이해로 확장될 수 있으며, 1980년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확대적용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한다(후루타 히로시 2004: 280-281).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쓰려면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아야 한다. **작품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본다면 거기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⁷²⁾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 ...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가 형성된 것은 생활과 문학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였다. 오늘에 와서 우리의 문학은 이때까지의 인류문학이 대상하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세계, 온 사회가 수령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위대한 형식을 형상원천으로 하게 되었다. [...]령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넣어서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흡,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진 혈연적 유대 [...] 수령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로 되고 있다.”⁷³⁾

요약하면 김정일의 ‘종자론’은 바로 북한의 ‘정치사상’을 ‘문화예술’의 언어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상적 알맹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주체사상, 혁명적수령관, 혁명적동지애. 우리민족제일주의, 사회주의대가정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 등을 인민대중에 ‘내재화’하는데 필요한 최고의 정수로서의 ‘핵’은 곧 작품의 ‘종자’로 작품에 깊이 내재된다. 따라서 영화의 “주제는 종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제약”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주제와 그 종자는 그 모태가 되는 가사 <내 나라 제일로 좋아>에 대한 김정일의 평가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조국을 노래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노래한 가사가 많이 창작되었지만 <내 나라 제일로 좋아>만큼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성이 깊은 가사는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⁷⁴⁾ 김정일은 ‘종자론’을 바탕으로 1992년 2월 3일 김정일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제1,2

72) 김정일. 1973년 4월 11일. “영화예술론.” 『김정일선집』 제5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3) 김정일. 1992년 1월 20일. “주체문학론.”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4) 김정일. 1992년 1월 20일. “주체문학론.”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부 작업필름을 관람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이 30년간 영화예술부분 사업 지도의 경력이 있지만 가장 만족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12년 판 『김정일선집』 제16권에 새롭게 추가된 담화문에서 잘 드러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1,2부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큰 **서사시적대작의 품격에 맞는 좋은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훌륭히 살려낸 것** [...] 영화가 잘되려면 영화문학이 좋아야 하며 영화문학이 잘되려면 종자가 좋아야 [...] 종자는 작품의 사실성과 예술성을 담보하는 근본핵”⁷⁵⁾

해당 작품의 성취의 핵심정 공로가 바로 ‘종자’에 있다는 의미였다. 김정일은 덧붙여 “작품이 1,000냥금이라면 종자는 800냥금”이라며 작품 전체에서 ‘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할이라는 비유도 아끼지 않았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민족의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 [...]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개별적사람들이 운명이 개척될 수 있 [...] 민족의 생명속에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생명이 있 [...] 민족과 운명에 관한 종자는 [...] 거대한 폭과 무게를 가진 종자”⁷⁶⁾

상기와 같이 김정일이 밝히고 있는 이 영화의 ‘종자’는 바로 민족과 개인의 운명이 일치한다는 명제이다.⁷⁷⁾ 이 영화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표 4-3>과 같이 각편에서 형상화하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실존했던 유명 인사였다는 사실과 그들이 북한 내부의 삶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북한에서의 삶으로 전향했다는 점에 있었다.

75) 김정일. 1992년 2월 3일. 영화예술부분 일군,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6) 김정일. 1992년 2월 3일. 영화예술부분 일군,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7) 해당 영화에 대한 『근로자』의 평론들 이 작품의 ‘종자’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영화의 기본종자는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사상적알맹이로서 민족의 생명속에 그 한성원인 개인의 생명도 있다는 주체의 철리를 담고 있다.” 리억일. 1995. “인류문예사에 특기할 대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영화의 예술적형상의 폭과 깊이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종자의 요구와 원형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에 맞는 새로운 구성형식을 발견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반적형상을 전형화한 데 있다.” 박덕남. 1995. “로동계급의 형상을 풍만한 예술적 화폭으로 구현한 세계적인 대결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표 4-3>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주요인물과 형상화: 1990-2003 조선중앙연감 정리

	배역	실존인물	특징 및 평가
1-4부	최현덕	최덕신	군직 10년, 관직 10년, 교직 10년의 인생 총화와 그 출로를 위한 '모대감'과정. 남조선에서 군직과 관직, 교직을 가지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섬겨오다가 당국자의 모략에 걸려 끝내 미국으로 망명하기까지의 생활과 망명한 주인공이 자기가 걸어진 길이 민족반역의 길이며 최악의 길이였음을 절감하고 드디어 남조선괴뢰도당의 위협공갈을 단호히 물리치고 평양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고있다
5, 14-16부	윤상민	윤이상	재독 음악가. 베를린에서 음악활동 중 방북의 이력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정치적 탄압, 1971년 서독 귀화. 1982년부터 북한에서는 매년 윤이상 음악회 개최. 영화는 민족재생의 낯을 음악속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치던 남반부출신의 한 해외동포음악가 윤상민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필생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위한 음악창작의 참다운 길을 찾을뿐아니라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모습
6-7부	차흥기	최흥희	국제 태권도 연맹이 주장하는 태권도 창시자.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 모의했으나 이후 소외, 캐나다 망명 후 유신체제 반대 및 수차례 방북. 영화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차흥기의 곡절많은 운명선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이야말로 일신의 명예나 출세, 호화로운 생활로서는 도저히 가설수 없다는 인생의 심각한 교훈을 주는 동시에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시대와 역사 앞에 고발함.
10부	홍영자	-	차흥기가 조직한 국제태권도련맹을 분열화해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카나다에 파견되었던 《한국태권도련맹》부총재 홍영자가 유신장당들의 꼭두각시로, 권력과 음모의 하수인으로서의 자기의 가려난 처지를 점차 의식하면서 번민에 휩싸이게 되는 과정과 그러한 홍영자를 포섭하여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려는 차흥기 부부의 생활을 그림.
11-13부	이정모	이인모	중군기자 출신. 1993년까지 40년 이상 비전향 장기수, 이후 월북을 희망, 최초로 복송된 인물.
17-18부	허정순	허정숙	일할일운동가, 여성운동가. 사회주의운동가. 광복후 서울에 귀국했다가 북한에 정착. 문화선전상, 보건성부장, 사법상, 최고재판소 판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등을 역임. 전남편 최창익.
19부, 20-24부	귀화한 일본인 여성 편		주인공 림은정의 이야기. 위안부 경험과 월북과정에서의 고초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귀화후 조선로동당원, 중앙병원 기술부장으로서의 새 삶을 사는 내용.
25-34부	로동계급편		특수강생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강서로동계급의 영웅적 투쟁모습과 그 과정에서 조선로동당원으로 성장하는 진용산의 생활을 기본으로 함. 천리마시대의 인간상을 구현.
34-37, 38-42부	카프 작가 편		민족의 운명이자 인테리, 문화인의 운명이라는 사회정치적 문제 제기. 최서해, 강경애 등 여러 작가의 형상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음.
45-47, 53-55부	최현		항일독립운동가, 북한의 정치인. 민족보위성 부상과 내각 체신상, 부총리 역임. 최룡해의 부친.
48-58, 62부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편		《고난의 행군》을 겪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한 영화는 김일성종합대학 동창생들이며 친구들인 차경심, 송숙, 분희와 그들부부의 인생행로를 통하여 혁명적신념문제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삶을 꽃피우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줌.
59-60부	농민 편		땅의 주인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태성할머니일가의 투쟁모습을 형상화.

3) <민족과 운명>의 정치적 함의

100부작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김정일의 권위 구축을 위한 아래로 부터의 ‘동의’를 강제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이다. 둘째, ‘민족’ 개념의 양가적 속성으로써, 원심력과 구심력의 동시적 구현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김정일의 권위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후계자의 정치비전을 인민대중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영화는 후계자 김정일의 마지막 문화예술부문의 현지도가 이루어진 작품으로 처음에 자신의 50주년 생일을 기념해 만들고자 했던 것이 10부, 20부, 50부 마지막에는 100부작으로 제작이 확정되어 유례가 없는 시리즈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전영선 2004, 329).⁷⁸⁾

김일성이 영화를 가장 중요한 선전수단으로 꼽은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사실 북한에서 영화는 선전매체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혁명적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이 매우 큼니다. 특히 혁명적 영화가 중요한 역할 [...] **영화는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선전수단입니다.** 연극같은 것을 공연하려면 큰 극장이 있어야 하므로 많은 제한성 [...] 그러나 영화는 큰 영화관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돌릴수 있습니다. **영화는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연극보다 낫고 소설보다도 나은 가장 힘있는 교양수단.**”⁷⁹⁾

78) 김정일은 『선집』 증보판을 통해, 1998년 시점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관련한 추가적 노작을 발표한다. 1998년이라는 시점의 의미는 김정일체제의 공식화라는 점에서 1차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1992년 처음 상영 발표된 작품이, 50부 제작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김정일의 노작은 그 중간 평가이자, 터닝포인트로서의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정일의 선택은 당시까지 7여년에 걸친 장기적 제작 기간에 대한 피로도에도 불구하고, 50부작 제작을 완성한 다음, 중간총화를 갖고 다시 제작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영화의 최초 상영 직후였던, 1992년 2월과 5월의 김정일의 비평에 비해, 1998년의 <로동계급>편은 다소의 수정보완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하는 김정일의 관련 언급이다. “내가 처음에 이 영화를 50부로 끝낼 데 대하여 말한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끌고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작가들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몇해동안 창작하다보니 좀 지친 것 같은데 50부까지 만든 다음 중간 총화를 하고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달라붙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1998년 2월 16-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영화예술부문 일군, 창작가, 예술인과 한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의 완성방향과 최근 영화 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9) 김일성. 1964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김일성저작집』 제18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영화 그 자체가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선전수단” 이므로 영화예술인들이 “철저히 혁명화”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정일 역시 혁명에서 교양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며 다음과 같이 교시했다.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영화만큼 영향력이 큰 예술은 없습니다. 영화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군중을 대상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돌릴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며 기동적인 예술입니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문학, 음악, 미술을 비롯하여 다른 예술의 특성을 자체내에 포함하고 있는 종합예술”⁸⁰⁾

김정일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과 기동력에 주목하면서 “문화예술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상기와 같은 영화의 힘에 대해 그가 인지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김정일은 1967년 실질적인 마지막 권력투쟁 이후, 문화예술부문에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압도적 국가 중심적 분위기 즉, 관제적 성격으로의 편향을 이어갔다.⁸¹⁾ 그가 자임하듯이 이후 30년간의 해당 분야의 깊은 조예와 경력은 1990년 초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인민대중에 자신의 비전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⁸²⁾ 인민대중의 가장 효과적인 선전 교양 수단인 북한의 영화는 혁명적수령관, 사회주의대가정론⁸³⁾,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라는 3가지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전영선 2006, 21-36).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작 1주년에 기념해 김정일이 문학예술부분 인사들과 나눈 담화문에서도 상기한 세 가지 요건이 잘 드러난다.

80) 김정일. 1966년 2월 26일.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혁명적영화제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81) 전영선(2014, 13-14)에 따르면 북한문학에서 문학은 온전한 작가의 정신적 산물이거나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물로서,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정치적 사안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문학은 기본적으로 관제문학이기 때문에 작가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작품은 철저한 검열을 통해서 발표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작가들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문학창작단이에 소속되거나 작가동맹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작가는 작가동맹이나 문학창작사와 같은 전문 창작기관 소속이다.

8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 실제 김정일의 저작 가운데 할애된 지면의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부분이다.

83) 1991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전영선 2006, 30).

“**혁명적수령관**은 우리의 모든 문학작품예술에서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구현되어야 [...] 주체의 문학예술은 수령과 인민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사이와 같은 혈연적 관계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한가정처럼 굳게 결합된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옹기 반영**하여야 [...]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통일체라는 입장에 서서 수령을 형상하고 당을 형상하며 인민대중을 형상하여야 [...] 한 마디로 말하여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 원칙**에서 인간과 생활을 보고 그려야 합니다.”⁸⁴⁾

이를 토대로 김정일은 유일지배체제의 입안자이자 수령에 대한 가장 충실한 심복으로서, 자신이 직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구상과 의도를 제작에 반영했고, 제작을 지시했다.⁸⁵⁾ 따라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상기한 세 요소를 충실히 담아내야 했고, 아래와 같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내가 근 **30년동안 영화예술부분사업을 지도**하면서 술한 영화를 보았지만 **이번처럼 만족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⁸⁶⁾

“이번에 영화 문학 <민족과 운명>에서는 지난날 문학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무게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간들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였습니다. [...]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사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를 훌륭히 구현한 작품이며 예술적으로 볼 때에는 형상을 완벽하게 창조한 작품입니다.**”⁸⁷⁾

84) 김정일. 1992년 5월 23일.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17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85)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대한 김정일의 직접적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의 언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내가 직접종자를 잡아주고 나의 구상과 의도 밑에 창자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체의 혁명결과 민족관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어야합니다.” 김정일. 1992년 5월 23일.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17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86) 특히 이 예시는 김정일선집 증보판에 새롭게 추가된 글이기도 하다. 때문에 북한이 2012년에 해당작품에 대한 김정일의 만족도를 보다 강조하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후 다부작으로 제작된 해당 영화가 선전선동 및 사상교양사업에 일정정도의 사업성과를 냈을 것이라는 논리적 유추가 가능하다. 김정일. 1992년 2월 3일. 영화예술부문 일군,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87) 김정일. 1992년 5월 23일.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

하지만 그러면서도 후계자의 정당성(legitimacy) 역시 혁명적수령관, 사회주의대가정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자연스럽게 융해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민족제일주의’ 그 자체의 실현인 <민족과 운명>은 마찬가지로 혁명의 계승성이라는 당위론에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녹여낸 것이다.

예컨대 국가의 외부에서 꺾박받은 민족들은 수령의 품으로 종국에는 돌아오는 결말로 작품이 종식되는데, 그것은 ‘광폭정치’의 메타포 그 자체이기도 했다. 인민대중은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서사를 가지고 영상으로 옮겨진 작품을 관람하면서 이미 모호해진 실존 인물들과 허구의 경계에서 정서적인 감화, 즉 김정일 정치비전에 대한 내재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주미(2008, 169)에 따르면 민족주의가 정치적 언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언술을 통해서 구사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집중적 내면화에 있다. 즉 인민대중은 상부의 명령을 시대적 사명으로, ‘동원’을 ‘참여’로 착각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민족문화이 민족적 특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별히 인도주의나 애국주의같은 심리적 차원의 미덕에 집착하는 이유도 상부의 명령을 자발적인 복종으로 바꾸는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요컨대 수령을 추월해 자신의 직접적 언어를 전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어떤 방식보다 김정일 자신다운 형식과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민족’ 개념의 양가적 속성과 관련한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양가적 속성은 ‘민족’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포괄성의 동시적 발현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족’으로의 호명은 이미 그 순간부터 경계의 내부에 대한 응집과 결속을 추구하는 구심력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외부에 대해서는 그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자타공인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종자를 고스란히 영화화 한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기존의 북한 내부의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의 인사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북한 태생이 아닌 사람들이다. 영화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들은 이 영화 안에서 모두 ‘우리 민족’으로 상정되어 있다. 다양한 소속, 계급, 신분을 망라한 개인의 삶에서 각각 부과되는 시련은 수령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조국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자각이 바로 ‘민족’과 관련한 것이다. 일련의 시도들은 ‘민족’의 외연 확장 그 자체였다(서성희 2006, 306). 개인의 운명이 곧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 영화의

일선집』 제17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제이자 종자인 셈이다. 계급성을 경계로 내부자(inner circle)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을 가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수령의 품에 들 수 있다는 논리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영화의 핵심적인 교리는 북한의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동시에 가장 배타적인 속성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김정일의 ‘민족’ 관련 언급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김일성의 교시를 환기시키며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라고 정의했다. 즉 피줄이나 언어와 같은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역사적 산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사실상 ‘우리민족제일주의’ 그 자체의 정의가 이미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데서 영화가 가지는 배타적 성격은 이미 예견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증보판 『김정일선집』 제16권 1992년 2월 3일의 담화문에 따르면 자신의 생일을 2주 남짓 앞두고 영화를 관람한 후 다음과 같이 언급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주인공의 주관적 의도와 엄청나게 상반되는 이러한 결과가 왜 빚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다름아닌 **미제와 그 앞잡이들때문**이며 주인공자신이 미제의 사환군노릇을 한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⁸⁸⁾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무리 치열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한 결과가 늘 나타날 수 있고, 그 책임이 바로 ‘미제와 앞잡이’에 있다는 것이다.⁸⁹⁾ 이러한 운명론적 논리는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되거나 대를 이어 반복될 것이라는 근본적 의식이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월북’을 감행할 만큼의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로, 바꿔 말하면 개인이 ‘월북’을 택하지 않는 한

88) 김정일. 1992년 2월 3일. 영화예술부문 일군,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89) 김정일이 말하는 주인공의 주관적 의도와 엄청나게 상반되는 결과란 다음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최현덕은 광복직후부터 민족을 위한 군대를 건설하는 일에 한몫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동족을 살해하는 결과만을 가져왔고 민족을 위한 대외활동을 해보려 하였으나 민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과만 가져왔으며 민족의 넋을 구원하는 성직자가 되려하였으나 성금형령의 오명을 쓰고 민족의 버림을 받는 고아신세가 되고 맙니다.” 김정일. 1992년 2월 3일. 영화예술부문 일군,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비극적 운명은 계속될 것이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김정일의 해설과 같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⁹⁰⁾ 문제는 그 자주성의 이항대립이 바로 “뿌리깊은 사대와 반공의식” 즉 미제국주의와 남한 정권에 있다는데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일종의 환유 기법을 통하여 끊임없는 정치적 메타포를 제공하고 있다. 반복적인 영화의 메시지는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물이 형상화 하는 영화적 장치를 통해 기왕에 호명된 ‘민족’을 스스로 내면화 했던 것이다.

이처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서로 다른 두 지향을 동시에 추구하며 북한의 ‘우리민족제일주의’ 구현을 보다 심화시켜나갔다. 김정일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부문의 현지도 생활을 마감했는데, 그의 저작 “영화예술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영화라는 장르가 주는 문화의 총제적, 종합적 효과는 주목할 만한 정치적 자원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문화예술부문 현지도의 마지막 대상으로 영화가 선정된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수령과 그 후계자가 인정한 선전교양에 있어 최고의 수단인 영화 작품을 통해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위로부터의 하향식 이데올로기를 넘어, 아래로부터 인민대중의 내면화된 동의라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덧붙여 이 영화가 후일 2002년에 가서 100부작으로 확대 제작된 것은 새로운 김정일 정권이 역사를 관통하는 통시성의 효과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90) 김정일. 1992년 5월 23일.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17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 민족재건설의 제도적 시도

1) 민족문화유산의 법제화

구소련 이래 사회주의 국가 일반에서 민족문화를 중시하는 현상은 공통된 것이었다(이우영 2012, 132). 북한에서도 정권수립 이전시기부터 민족문화에 관한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북한의 1960대 이전 시기까지는 주로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에 따른 민족문화유산의 복구 작업을 위주로 한 정책과 구호가 주를 이룬다. 김일성의 1949년 담화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복구하는 사업은 반드시 계급적립장과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1958년 담화에서는 여기에 “당성”을 추가했다.

아래 <표 4-4>는 북한의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주요 문건과 담화 및 표현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정일의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첫 담화가 1961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64년에 등장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슬러 올라가 북한의 『김정일선집』 2009년도 증보판에 추가된 논문은 1961년으로 그 시작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선집에 추가된 논문 다수가 ‘민족’ 관련 소재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이해의 시원을 보다 앞당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⁹¹⁾

91) 2009년 이후 『김정일선집』에 추가된 민족관련 논문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60년 10월 8일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1960년 10월 29일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 1961년 4월 5일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1961년 5월 24일 “력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발굴하고 잘 보존관리하자”, 1961년 5월 25일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1963년 5월 6일 “갑신정변을 옳게 평가할데 대하여” 등을 들 수 있다.

<표 4-4> 북한의 민족문화유산관련 주요 문건: ~1997년

일 시	제 목	출 처
1946년 4월 29일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1946년 4월 29일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시행규칙>	인민위원회 교육국 지령
1946년 4월 29일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수속>	-
1948년 11월 1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	내각결정 제58호 내각수상: 김일성, 문화선전상: 허정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1949년 10월 15일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1958년 4월 30일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김일성,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학생들과 한 담화
1961년 5월 24일 (증보판 추가)	<력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발굴하고 잘 보존관리하자>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6일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8월 22일 (증보판 추가)	<개성지구 력사문화유적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김정일, 개성지구 력사문화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2월 17일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과학교육 및 문화 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3월 4일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7월 11일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1987년 6월 7일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김일성, 정무원책임일군들, 력사학자들과 한 담화
1993년 12월 10일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1994년 4월 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최고인민회의 제9기 지7차회의 법령 제26호
2002년 6월 1일 (증보판 추가)	<력사문화유적이 많은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김정일, 고원군 량천사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3년 2월 10일 (증보판 추가)	<력사문화유적보존관리와 복구개건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김정일, 당, 군대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전영선(2002, 157-258)의 정리를 수정 보충

이러한 맥락에서 1961년 김정일의 추가된 담화문은 그 내용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009년에 추가된 이 담화문에서 김정일은 ‘구석기 시대’의 역사적 고증 및 발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

“나는 지난해에도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발굴사업을 다그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은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구성, 특히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와 직접 잇닿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국주의어용사자들이 떠든것처럼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없었다고 하면 조선사람은 신석기시대 이후에 이주하여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⁹²⁾

이 시점은 북한에서 아직까지 ‘민족’의 정의에서 ‘혈연’ 공통성이 추가되기 이전 시기라는 점에서 보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북한의 1973년 『정치사전』에 와서야 ‘민족’의 정의로서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는 명제가 부여됨으로써 ‘혈통’ 개념이 ‘민족’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의 ‘민족’ 개념수정을 위해서는 이전 시기 동안에 일정 수준이 이상의 공감대 형성은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북한에서 특히 김정일을 중심으로 ‘민족’ 개념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선집』의 증보판에 추가된 문건들의 진위 여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민족 개념의 이해를 위해 구석기 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장려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북한이 의도적으로 1960년대로 ‘민족’ 개념사를 역진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영철(2010, 11-12)에 따르면, 이미 김정일은 1960년에 김일성종합대학학생들과 나눈 담화에서 스탈린 민족론을 부정하고 ‘민족을 이루는 징표가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특히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을 가장 중시했다는 기록도 있다.⁹³⁾ 그런데 이 자료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담화문이 1990년대에 가서야 소책자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⁹⁴⁾ 하지만 2009년에 출판된 증보판 『김정일선집』에는 또 누락되

92) 김정일. 1961년 5월 2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력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발굴하고 잘 보존관리하자.”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93) 김정일. 1960년 10월 4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9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어있다. 일련의 정황들은 자료의 신빙성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저술 시점과 출판 연도가 30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가정과 그에 따른 세부적 질문들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실제로 1960년의 저술일 경우와 다른 하나는 사후에 추가되었을 경우이다. 1960년에 해당 자료가 실제 당시 김정일의 담화문을 기록한 것이라면 여기서 또 다시 발생하는 가정은 먼저, 왜 당시에는 공개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왜 굳이 사후에 추가적으로 공개했을까 하는 것이다. 전자는 반스탈린, 반소련적 입장을 전면화한 극단의 진보적 민족개념이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및 계급 노선과의 긴장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의 반영일 수 있다. 이어 후자는 사후의 시점에 ‘현재적’ 필요에 의해서, 역사 수정을 불사할 만큼의 필요가 제기된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김정일의 1960년 민족 정의와 관련한 담화가 사후적으로 추가되었을 경우라면, 이 역시 두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선, 사후적 출판시점이 왜 1990년이었을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무수한 시점 가운데서 인위적으로 선정된 해가 1960년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전자는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정식화 이후 지속 강화되었던 북한의 민족주의적 정책이자 1990년대 동구 및 소련의 붕괴로 인해 보다 강화된 민족적·자주적 정치노선을 견지할 필요성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후자는 기왕에 1990년에 덧씌울 역사라면 후계자를 위한 신화라는 기능적 측면도 고려될 수 있다. 민족에 대한 개념이 이미 부정하기 어려운 출판물 즉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정치사전』, 『철학사전』, 『조선말대사전』 등을 통해 확정된 ‘김일성의 언어’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보다는 ‘후계자의 언어’로 상정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부담을 줄이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던 주체사상 『총서』와의 연결성도 이러한 가설에 무게를 실어준다.

결과적으로 1960년 김정일의 스탈린 민족론의 부정과 민족개념의 새로운 규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아도 나름의 사료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구석기시대를 민족의 시원문제를 풀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는 김정일의 입장은 스탈린의 민족정의와 분명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귀납적 논리로 민족의 공통성을 추출했다면, 김정일은 연역적 논리로서 민족의 시원을 ‘선언’하려는 의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⁵⁾

94) 해당자료의 소개 및 지연된 출판 및 발표와 관련한 내용은 정영철(2010, 11)의 연구와 이계환(이계환 2010, 134-137)의 연구를 참고할 것.

95) 정영철(2010)의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민족개념과 혈연의 문제를 이론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

이러한 김정일의 견해가 가지는 논리적 함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스탈린적 민족개념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한 독자성의 확보이며, 다음으로 혈연의 공통성이 주는 정치적 응집력의 확보, 마지막으로 민족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단상황’의 압력에 대해, ‘통일’ 지향 목표는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재적 ‘분단’과 향후 어떠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탄력 있는 대응이 가능진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민족 역사문화에 대한 강조는 1964년 당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도 잘 나타난다.⁹⁶⁾ 그는 고구려시기의 문화 유적과 관계있는 대성산 주변의 유적 발굴을 독려하며,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여 온 역사를 밝히는데서 유적유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경북도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굴포리문화유적들이 잘” 보여준다고 설명함으로써 다시 한 번 민족의 시원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성산의 유적은 고구려의 역사적 가치를 보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 및 고려, 고구려 중심의 역사적 이해를 새롭게 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며, 그 역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다.⁹⁷⁾

동명왕릉, 왕건왕릉 뿐 아니라 단군릉의 개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1994년 김정일은 이미 김일성의 생전에 지시된 바 있었던 민족의 시조릉의 개건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⁹⁸⁾ 특히 단군릉의 묘실에 있는 설명문을 “우리 나라 글로만 쓰지 말고 중어, 일어,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글로도 써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단군릉을 중심으로 하여 이 지대에 있는 역사문화유적들을 잘 꾸리고 우리 나라에 오는 다른나라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한 2일 동안 역사문화유적을 돌아보도록” 할 것을 지시한 점, 천도교인들이 단군릉에서 제의식을 올리겠다고 하면 그것을 “텔레비존방송으로 방영”도 할 것을 권고하는 등 단군릉의 문화적 가치와 선전선동의 효과를 상당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

를 시도한다. 그는 스미스(Smith 2016)의 개념인 족류-상징주의(ethno-symbolism)에 북한의 민족 개념을 견주면서, 스미스가 ‘민족형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북한은 혈연적 ‘기원’에서 출발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96) 김정일. 1964년 9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97) 새롭게 추가된 김정일의 담화문 가운데 이와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은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정일. 1960년 10월 29일.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98) 김정일. 1994년 10월 29일. 단군릉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길이 전하는 귀중한 국보이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다. 이러한 일련의 방침들은 결국 “당의 방침대로 민족문화유산을 우리 인민의 감정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계승발전시키”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를 시작으로 북한에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1993년에 와서 법적 장치 마련된다. 199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과 199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문화유물보호법은 1993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회의의 의제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민족문화유산을 옹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였다. 『조선중앙연감』의 1994년 편에서는 해당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원인, 고인, 신인의 화석을 발견한데 이어 최근에는 단군릉이 발견되고 단군의 유골이 5011년전의것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동시에 고조선의 신지글자가 발견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명왕릉, 왕건왕릉, 개성 성균관을 비롯한 건축유산들, 강서 세무덤, 덕흥리 고분 등 고구려의 벽화무덤들, 대성산성, 정방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산성들도 원상대로 복구개건되었다. 그리고 《리조실록》과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민족고전유산의 번역복각분야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가져왔다.”⁹⁹⁾

민족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밝힌 성과에 대한 내용이 토론의 전반부에 진행되었고, 후반부에서는 민족문화건설의 방향과 정책적 후속조치들에 대해 논의되었다. 주목할 것은 최고인민회에서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즉 민족적 자주성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전체 인민이 **민족문화유산문제**가 자주시대의 기본요구와 민족자주로선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문제**이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관련된 민족사적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사회적관심과 근로자들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고 그것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¹⁰⁰⁾

99) 조선중앙통신 편. 1993.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00) 조선중앙통신 편. 1993.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해당 법은 제1조에 따라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 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7조는 국가가 “문화유물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한다”고 이 용원칙을 밝히고 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제3조에서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산다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더 잘 꾸리고, 빛내여 나가겠다는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주도록 한다”고 그 원칙을 밝히고 있다.

두 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바로 ‘애국’이라는 키워드이다. 국가민족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애국주의는 북한에서도 민족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연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다.¹⁰¹⁾

2) 민족과 일상생활: 가족법과 명절복원

북한의 민족문화에 대한 제도화는 일상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1991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승인함에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각각 채택 되었다.¹⁰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가족법)은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 법의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남한에서 주로 사법(私法)의 영역인 가족법이, 북한에서는 공법(公法)의

101) 북한 명승지 정책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우영(2012)의 연구를 참고할 것.

102) 조선중앙통신 편. 1991.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영역으로 치환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국가권력이 통치 관계 및 공생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가족관계가 수령론과 주체사상에 의해 초헌법적 원리로서 지배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조선로동당에 의해 불문법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가족법의 특성은 무엇보다 민사책임의 심리만으로 행정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데 있다(김영규 2009, 161,180; 문홍안 2015, 74).

상기한 ‘가족법’의 신설을 통해 북한 인민대중 생활전반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일상생활의 보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심화되었다. ‘가족법’ 제1조에서 명시된 것처럼 그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는 대전제를 통해 정당화 된다. 개별적 가정들의 총합이 바로 국가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유기적 총체이기도 하다. 국가와 가정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슬로건은 인민대중에 지도부의 정치적 의도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의 긴밀한 논리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¹⁰³⁾ 즉 북한 지도부는 가정의 이미지로 국가를 수립하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부모-자식 간의 가족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순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오병훈 2014, 35).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의 서거에 직면한 인민대중들에게도 ‘가정’의 논리를 통해 여전한 충성을 주문함으로써 국가전체의 단결을 도모했다. 이하는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마친 후 김정일이 전체 인민들에게 보낸 ‘감사문’의 일부이다.¹⁰⁴⁾

“수령님의 서거에 표시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애도의 정과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나가려는 충성의 결의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대가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힘있는 과시로 됩니다.”¹⁰⁵⁾

103)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에 관한 이해를 위한 사례로 이하 김일성의 강의를 들 수 있다. “우리 당은 적극적인 교양을 통하여 복잡한 군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하였으며 온 사회를 명랑하고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당의 경험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달라붙어 교양한다면 의식적인 반동분자들을 내놓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김일성. 198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04) 경향신문. 1994년 12월 26일자 보도. “김일성 애도 분위기 다시 고조.”

105) 김정일. 1994년 10월 28일. “감사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준 전체 인민들에게.”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한편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의 이러한 개입은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 하에서 수령에 대한 일방적 복종과 압도적 이데올로기 학습만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폐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에 대한 강조는 그 만큼의 혁명성과 계급문제에 대한 일정정도의 목인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이해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상기한 긴장을 상쇄시키고자 했다. 김정일의 다음 담화문은 그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총명하고 문명하며 우수한 민족 [...] 세계에서 **금속활자나 천문대를** 제일먼저 만들어 [...] **철갑선**을 먼저 만들어 [...] 된장과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었 [...] 우리 민족이 총명하고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 온돌방은 우리 조선사람들만이 쓰는 고유한 살림방 [...] 조선치마저고리는 세계에 둘도 없는 고상한 민족옷 [...] 우리는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적풍습을 살리는데 응당 관심을 돌려야 [...] 우리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쇠여오던 **민족명절도** 쇠고 민족음식도 자주 해먹으며 **민족음악과 민족옷도** 장려해야 합니다”¹⁰⁶⁾

김정일의 담화는 2011년 출판된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북한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가 김정일에 의해 처음 호명되었던 1986년 1월 이후 약 3개월 뒤에 발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김정일이 정치적 개념정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어떻게 구현되었으면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인민대중의 생활 속 소재로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활자, 천문대, 철갑선 등은 과거의 찬란한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도록 하면서도 된장, 김치와 같은 소재는 그 우수한 민족성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수령 김일성을 모시고 사는 것은 그 현재적 가치를 배가하는 동시에 미래적 낙관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자기 민족의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사랑할줄 알아야 합니다. 잘살아도 못살아도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정일의 언명은 가장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표현된 ‘우리민족제일주의’였다.

상기한 김정일의 추가 논문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민족명절에 관한 내용이다. 바로 1988년 추석과 1989년 음력설 및 단오를 민족명절에 각각 지정한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전까지 전통적인 민족명절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

106) 김정일. 1986년 4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아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해왔다(윤덕희 2013, 145). 1974년부터 김일성 생일과 1982년부터 김정일 생일이 ‘민족 최고의 명절’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기념과 우상화를 전개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그러던 것이 1986년 ‘민족’에 대한 호명은 민족명절의 국가적 휴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민족문화와 전통에 대한 강조와 장려에 따르는 일종의 ‘인센티브’였다.¹⁰⁷⁾

인민대중에 대한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일상생활 영역에의 관심은 1990년대 초 탈급진적 분위기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민의 변심을 막기 위한 일종의 ‘민심 달래기’와 같은 것이었다. 김정일이 인민들을 잘 교양하는 것과 함께 잘 먹이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는 2012년 증보판 『김정일선집』의 추가 문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은 해당 담화에서 “인민들을 잘 먹인다고 하여 미국의 코카콜라”를 먹이려 해서는 안되며, “미제는 코카콜라를 가지고 이전의 소련과 동구라파나라들을 녹여냈”고, “영국은 중국 침략”을 위해 “아편”을 이용했다며, ‘마약’과도 같은 외부의 문화 유입으로 인한 ‘멸망’에 대한 철저한 이항대립의 은유를 통해 인민대중을 이 해시켰던 것이다.¹⁰⁸⁾

국가를 주체로 하는 인민대중의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김일성의 인덕정치와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대중들이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다.¹⁰⁹⁾ 그리고 그것은 급진과 탈급진의 양자택일의 것이기 보다는 ‘민족’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통한 북한전체를 포괄하는 ‘큰 그림’을 위한 숨고르기였다.

107) 이하는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북한 명절과 관련한 2015년 기준의 정보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각각 1974년과 1982년에 민족 최대 명절로 지정하고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부른다. 선군절인 8월 25일은 김정일이 1960년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최초로 동행했던 날로 ‘선군영도 개시일’로 선전하고 있다. 민족명절과 관련해서는 설 명절, 청명절, 추석 등이 법정 공휴일이다. 과거에는 전통 민족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하였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추석 때 인근에 조상묘소가 있는 경우 성묘를 허용하고, 1988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정한데 이어 1989년에는 음력설을 민족명절로 지정하였다. 2003년부터는 음력설을 기본명절로 하고, 정월대보름까지 휴무일로 인정하였다.” 북한정보포털>사회>종교·풍속>명절. 검색일: 2017/5/10.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SO320>

108) 김정일. 1994년 12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09) 김일성의 인덕정치와 김정일의 광폭정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전개는 고유환(1994, 38-47)의 연구를 참고할 것.

제3절 수령의 사망과 정당성의 위기: 주체성과 민족성의 결합

앞선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시기 일련의 북한 민족재건설의 시도들은 수령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정당성의 구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로 호명된 북한의 ‘민족’ 개념은 사실상 ‘민족재건설’이라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계급혁명의 문제, 급진화와 탈급집화, 홍과 전의 딜레마, 발전전략의 문제, 계속혁명의 과제, 통일과 분단 등 무수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긴장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그들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임을 자처하고 국가정체성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 일반이 가지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역으로 북한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항대립의 강한 추구를 통해 정권의 정치적 권위구축을 이루어온 북한 지도부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과거에 ‘부정’ (negation)했던 것을 소환해 ‘인정’ (recognition)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딜레마는 보다 심화된다.

김정일의 언어로 호명된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레토릭을 넘어 이데올로기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권력의 중심에서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오는 한편, ‘대작’ 영화 <민족과운명>을 통해 인민대중으로부터의 동의와 설득도 내재화할 수 있었다. 요컨대 권력의 가장 중심과 가장 바깥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정당성 설득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각축은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왔는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 개념들과 그 실제적 적용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1. 수령의 사망: 포섭정책의 부상과 ‘김일성민족론’

1990년대 초반의 국제정치의 대변혁과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94년 7월 8일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수령은 국가의 뇌수이자 생명 그 자체였고, 유일지배체제하에서 김일성은 그 자신이 이미 신격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사망은 단순한 독재자의 사망을 넘어서 북한의 한 세기의 마감인 동시에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다.

김정일은 2012년 새롭게 출판된 선집의 증보판에서 김일성 사망이후 첫 공식입장으로 알려진 1994년 10월 16일의 담화문에 앞서 두 편의 새로운 논문을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1994년 7월 11과 19일 양일간에 걸친 담화를 정리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와 14일에 발표된 담화문인 <새로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는 대단한 걸작이다>이 그것이다.

특히 먼저 추가된 담화문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우리 국가의 걸출한 령도자”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사상가”, “혁명가”, “인간”이라 칭송했다. 국제무대에서 소외된 작은 나라의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 김일성의 공적이라는 것이다.¹¹⁰⁾ 김정일은 여기서 “주석은 곧 수령”이라며 주석의 존칭을 김일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헌법에 명시하여 제도화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자신은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따르는 수령님의 전사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직함을 가질 수 없고 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주석직을 승계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의 언급을 빌어 “국가행정경제사업실무” 보다는 “당과 인민군대”를 강화할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더했다. 이미 수령이 생존 당시에도 당사업과 군대사업을 자신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수령은 대외 및 경제 사업을 맡아왔었다는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후속 조치로서 1998년 수정헌법을 위한 준비와 절차가 진행되었고, 김정일은 그 결과 당과 군대에 집중된 정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김일성 사망 100일이 되는 날, 보다 정리된 형태의 김정일 담화문이 공개되었다.

110) 김정일. 1994년 7월 11,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은 여기에서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사용하면서 ‘우리민족제일주의’의 범주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합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 수령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더욱 잘하여야 [...]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해온 조선민족으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¹¹¹⁾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70년 『조선중앙연감』의 국제서술편에서는 『김일성전』이 일본에서 일본어와 영문으로 번역출판된 것을 기념하는 내용의 글을 실은 바 있다. 해당 글에서는 특히 ‘리츠메이칸 대학’의 ‘스에카와’ 명예총장의 추천문을 인용하여 “과거 몇세기동안 내우와 외환으로 신음해온 조선민족은 지금 김일성민족을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기본로선을 따라 곧바로 나가고 있으며 나라의 보다 공고한 터전을 닦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¹¹²⁾ 하지만 이때의 ‘김일성민족’은 해외인사의 추천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의도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반영된, 소위 유의미한 레토릭(rhetoric)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반면 김정일의 언어로 호명된 1994년 10월의 ‘김일성민족’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민족제일주의’의 명시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한정해서 표현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했던 북한이었기에 ‘김일성민족’의 선언은 보다 확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해외 동포들의 말을 빌려 전하기는 했지만, 김정일은 그 논리적 정당성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일성민족’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가 ‘사회주의조국’의 ‘시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의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력’의 시원으로 삼아 1997년부터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111) 김정일. 1994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12) 조선중앙통신 편. 1970.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또한 북한이 2012년을 기해 ‘김일성민족100년사’라는 표현으로서 자신들만의 ‘역사’를 별도로 호명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민족’으로 사는 인민대중의 자부심과 긍지는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담보하는 논리적 위상을 갖게 된다.

사실상 1991년 8월 1일 이미 김일성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임을 역설했다.¹¹³⁾ 여기서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은 자긍심과 자부심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독자성이자 방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것이 냉전 붕괴 이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로 규정된 바, ‘김일성민족’으로 사는 자부심, 즉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정신은 곧 ‘애국주의’로 치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령에 의해서 이미 ‘민족’은 ‘민족주의’로까지의 확장성을 담보하게 된다.

즉 김정일의 업적 정당성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민족주의에 있어서도 김일성의 후광 즉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결합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애국의 키워드를 호명하여 민족주의와 동일시했던 작업은 당시 권력의 최고 정수였던 수령의 권위를 통해 현실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그것이 바로 김정일에 의해 계승, 강화,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정일이 김일성을 민족주의의 화신으로 격상하려는 시도는 상기한 연결고리를 통해 가능했다.

이로써 민족주의 메타포는 김정일의 언술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정치적 힘을 얻게 되었고, 수령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김일성’ 자체가 화석화 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로서의 신화적 역할을 부여 받게 되었다. 물론 ‘김일성민족역사’는 김일성이 생전에 부여받기에는 한반도 문제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잖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망은 오히려 고인이 된 수령의 후광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탈바꿈되었다.

“우리 인민이 높은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부강번영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건설하여온 **참다운 민족사**는 20세기에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수령중의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비로소 시작되었다.**”¹¹⁴⁾

113) 김일성.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김일성저작선집』 제10권. 199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14) 편집국. 199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상징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사실상 ‘민족’이라는 정치공동체를 위해 가장 상위의 전통, 상징, 신화, 기억을 만들려는 시도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신생국가들에서 정치투쟁이나 대규모 주민 동원을 위한 필연적인 부수물이다(Chatterjee 1993; Brown 1994). 북한은 이제 김정일의 ‘김일성민족’에의 호명을 통해, 수령을 ‘화석화’ 시키고 영웅주의, 회상, 창조성, 재생, 신성함 숭배, 전통, 지도력과 같은 개념으로 묘사한다(Smith 2012, 176).

<표 4-5>는 김정일의 ‘김일성민족’ 호명 이후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를 통해 당내에서 담론으로 소비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김정일이 ‘민족’과 관련한 또 한 번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는 1997년 6월 이전까지 『근로자』에 나타난 ‘김일성민족’은 분명한 논리적 교집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령도자 김정일’ 동지제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광이라는 점이다.

수령의 이름으로 조선민족의 자존심, 영예, 긍지를 칭송하며 수령복을 누려온 데 대한 감사의 수사들로 채워진 문장들은 중국에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연결되지만, 그것은 자타공인 김정일의 환유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 강조는 이미 이완된 ‘계급’ 문제를 접어두고, 보다 분명해진 ‘우리’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김일성민족’으로 국가를 결집시키고 인민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었다.

<표 4-5> 『근로자』에 등장한 '김일성민족': 1995-1997

출 처	저 자	내 용
1995. 3호	편집국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지난해를 피눈물속에서 가장 비통하게 보냈으며 아버지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세세년년 살아가려는 끝없는 열망을 안고 우리 민족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민족>으로 소리 높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사상과 혈통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위상은 새로운 높이에서 만천하에 과시되어 있다.
1995. 7호	서윤석	지난 1년간은 우리 인민이 민족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최대의 불행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보낸 나날이었으며 아버지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나가는 김일성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나날이었다. [...]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우리 민족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셔온 민족으로서 지난 크나큰 영광과 민족적 행운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실 것을 한결같이 념원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 없이 모든 조선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만을 모실수 있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이다. 우리 인민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일대 경사 [...]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북중에서 가장 큰 복인 수령복을 누려온 우리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특전이고 크나큰 영광 [...]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1995. 8호	전문집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국과 민족의 최고령수로 모시여 온 세계에 빛나는 오늘의 조선이 있고 투철한 신념과 강毅한 의지를 지니고 과감히 전진하는 김일성민족 이 있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찬란한 미래가 확고히 약속되어 있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할 것.
1996. 1호	배경호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 [...]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따라 인류의 자주위업을 선두에서 개척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 으로서의 존엄과 영예 [...]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을 가지고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를 떨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민족의 자존심 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의 자랑과 긍지 이다.

2. 위기의 심화: 고난의 행군

1994년 지금의 북한을 수립한 수령 김일성의 사망은 일종의 국가 전체의 정신적 아노미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가 채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인정하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를 ‘완충기’로 설정함으로써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등을 우선하는 식의 탈급진적 이완 정책을 시도한 것도 그러한 북한의 위기의 일면을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1993년 냉해, 1994년 우박, 1995년과 1996년의 홍수, 1997년의 극심한 가뭄 등 전 국가적 범위에 가해진 자연재해는 그와 같은 위기를 보다 심화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후계자 김정일은 수령의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표방하며 대내적 위기 수습과 신정권의 개막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¹¹⁵⁾ 특히 ‘김일성민족’이라는 슬로건을 처음 제시한 1994년 10월 16일 이후 약 반년의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많은 논문과 담화를 내놓으면서, 갑작스러운 권위의 공백에 대한 철저한 사상적 단속을 이어갔다. 아래의 <표 4-6>은 해당 시기 김정일의 담화문과 저술을 정리한 것으로, 2012년에 새롭게 추가된 자료들을 포괄하고 있다. 총 18개의 저작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총 12개의 저작으로, 이를 통해 북한에서 수령이 사망한 해를 어떠한 정치적 노력을 통해 마무리하고자 했는가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 새롭게 추가된 저작 목록 가운데는 ‘군’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적·문화적 소재의 저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15) 북한이 김일성의 사망 직후, 김정일의 공식적인 승계를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 고유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김정일이 이 북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절차가 아니더라도 통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당시가 북한의 총체적 위기 국면이었다는 점, 공식승계에 필요한 새로운 이념과 정책의 제시 및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승계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고유환 1997, 9-11).

<표 4-6> 김정일 담화 및 저작 목록: 1994.10.16.~1995.1.15

제 목	신 구	일 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구	1994.10.16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20일)	구	1994.10.20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는 좋은 음악을 더 많이 창작보급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23일)	신	1994.10.23
감사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준 전체 인민들에게 (1994년 10월 28일)	구	1994.10.28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길이 전하는 귀중한 국보이다 (단군릉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29일)	신	1994.10.29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 11월 1일)	구	1994.11.1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1994년 11월 9일)	신	1994.11.9
당창건기념탑을 잘 건립할데 대하여 (당창건기념탑모형서판과 수도건설기념탑형성사인을 보면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 설계기들과 한 담화 1994년 11월 19일)	신	1994.11.19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여나가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1월 19일)	신	1994.11.19
4.25국방체육선수단사업을 추켜세울데 대하여 (4.25국방체육선수단을 돌아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1월 20일)	신	1994.11.20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3일)	신	1994.12.3
당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4일)	신	1994.12.4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실감있게 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25일)	신	1994.12.25
군인가족들은 항일유격대의 작식대원들처럼 살며 일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가족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27일)	신	1994.12.27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31일)	구	1994.12.31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구	1995.1.1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신	1995.1.1
인민군대는 자기 당,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게 충실하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5일)	신	1995.1.15

그러나 이미 『김정일선집』의 1998년도 버전에서 후계자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핵심문건은 대부분 출판되었다. 그것은 당과 군을 중심으로 한 체제수호와 김일성의 적자로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곧 국가에 대한 것과 동일시하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지기를 바라는 김정일의 요청을 담은 것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이례적으로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화’ 형식이 아닌,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직접 발표한 ‘론문’으로, 그 청자가 인민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⁶⁾ 앞서 소개한 대로 김정일은 100일의 애도기간을 마치고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문’을 보낸 바 있는데,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그로부터 나흘 쯤 되는 날에 다시 한 번 인민대중에 직접 전하는 새 지도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적도는 어떤 사회계급적토대를 가졌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기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와 인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민, 애족 사상을 가지면 누구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입장으로 부터 혁명의 매 단계에서 조국과 인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오시었다. [...]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자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간섭과 전횡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나갈 것이다.”

김정일은 이전의 입장의 연장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유물론적 사관에서 인간중심의 주체사관으로의 강조를 통해 주체사상에 대한 계승을 분명히 했다. 그러는 한편,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도 귀중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사회정치적생명”임을 명시하고 이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라고 단언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집단에 대한 헌신을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삶”으로 환원시키는 논리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논리적 순환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집단적 삶으로, 집단은 다시 국가로 치환되고, 개인의 생명과 자주성은 곧 국가의 생명과 자주성 문제로 규정되었다. 이 과정에

116) 김정일. 1994년 1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론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서 계급문제는 주체사상에서 이완된 논리적 공간을 통해서 비교적 그 긴장이 완화된 상태이며, 수령의 서거에 따른 국장(國葬)이라는 상황은 ‘자주권’에 대한 정당성은 무리 없이 확보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의 ‘애민, 애족, 애국’의 키워드는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포용적인 구성 요건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령의 시대를 보내고 새 세대를 대하는 후계자의 당부이기도 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 세대들이 모두가 교복으로 부터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국가로 부터 보장받으면서 가장 우월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도 밑에서 마음껏 배우고 있다. **당과 수령, 국가와 사회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우리의 새 세대들은 부러운 것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

한편 김정일의 ‘애국주의’ 강조는 자신이 1975년부터 이어오던 ‘신년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은 1995년부터 『신년공동사설』을 별도로 공개하면서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해오던 ‘신년사’는 그대로 유지해나갔다.

“사람은 자기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심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민족은 김일성조국, 김일성민족입니다.**”¹¹⁷⁾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라는 두 화두는 바로 수령 이후의 시대를 여는 기본 ‘종자’와도 같았다. 김정일은 ‘김일성조국’과 ‘김일성민족’을 다시 한 번 호명함으로써 국가와 인민대중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유훈통치와 관련해서 김정일의 탈상(脫喪)의 시점이 처음부터 예고되거나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우리 인민들에게 전통적인 풍속을 운운하며 수령님과 그의 그 무슨 영결의 계선”을 그으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부정하며 했수가 아닌 만으로

117) 김정일. 1995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따질 것을 주장했다.¹¹⁸⁾ 김정일의 유훈통치 종료시점이 불분명한데 따라 새로운 정권 출범 자체가 만4년 이후로 늦춰진 것은 현실적인 경제정책의 실패와 권위의 위기 속에 ‘단계적’으로 연장된 결과였던 것이다(안경모 2013, 116).

3. 김정일정권의 종자: 주체성과 민족성

지지부진한 유훈통치의 종식에 대한 안팎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공식적 출범을 앞둔 김정일은 자신의 새로운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담은 중요한 논문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라는 논문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시대에 관한 정치비전을 공개했다. 그 시점은 바로 수령의 서거가 했수로 3년째가 되던 1997년 7월이었으며, 논문의 형태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의 권두에 수록되었다. 해당 호는 당시 북한의 내로라하는 핵심 인사들이 수령에 대한 충성과 애도를 표하는 특집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논문에 선차하여 실린 김정일의 저작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었다.¹¹⁹⁾

118) 김정일. 1996년 2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19) 『근로자』 1997년 7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타이틀 하에 핵심인사들의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북한에서 인민군대장, 최고인민회의 8,9,10,11,12기 대의원을 지내고 당시 인민군 원수, 호위군 사령관을 역임한 리을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 제하의 논문을 개인 필명으로는 김정일 다음으로 수록했다. 다음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지내고,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보고를 전한바 있는 김기남이 리을설의 뒤를 이어 “탁월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한생”의 논문을 실었다. 또 당시 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량만길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자애로운 수령이다”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그리고 주 이집트 대사,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 국제부 부부장, 최고인민회의 7,8,9,10, 11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국제부 제1부부장, 당 중앙위 국제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비서관 비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당 비서관 대담담당 비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대표,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김용순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영생하신다” 제하의 논문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의 사촌 동생이자 허담의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통해 공식적인 자신의 사상과 입장을 전했다. 해당 논문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 김정일 시대에, 당면한 “혁명과 건설”의 노정과 이를 위한 요체로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내세웠다는데 있었다. ‘주체’ 혹은 ‘주체성’은 북한에서 최고의 이념이자 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과 ‘민족성’을 대등하게 제목에 배치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저술이 ‘민족’에 부여한 의미와 역할에 대해 짐작이 가능하다. 이하는 이 논문에 대한 정치, 사상적 이념에 대한 평가이자 동의를 표하는 당내 입장이다.

“로작은 현시대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행리론의 역사적 제한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사회주의가 좌절된 일부 나라들에서의 쓰라린 교훈과 우리 혁명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대한 전면적인 총화에 기초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완벽하게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다.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규정하시었다.**”¹²⁰⁾

“**주체성이 강한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주의를 말하며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 구현해나가는 사회주의를 말한다.”¹²¹⁾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논문의 개괄에 해당하는 머리말 부분, 둘째,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 대한 근본 원칙적 접근을 다루는 ‘1’ 부분, 셋째, 주체성과 민족성을 실제 현실에 반영하는 실천적 접근을 다루는 ‘2’ 부분이 그것이다.

김정일은 서론이자 논문 전체의 첫 문장에서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미국 일변의 세계질서에 대한 강한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달성하기

처, 최고인민회의의 7,8,9,10,11,12기 대의원을 지낸 김정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도덕의리심의 최고표현”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120) 편집국. 1997.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8호. 평양: 근로자사.

121) 정성철. 1997. 정치사상론설. “우리의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더 높이 발양되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위해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족성’은 이제 ‘주체성’과 같은 위상으로서 시대를 여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으며, 양자는 그 화학적 결합을 통해 국가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정신이자 사상적 기초로 호명되었다. ‘1’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괄식 명제를 바탕으로 상기한 호명의 근본적인 원리와 주창의 배경, 당위성 등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살리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을 그 자주적본성과 역사적,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¹²²⁾

김정일이 말하는 ‘자주적 본성’은 말 그대로 국가 일반이 가지는 고유하고 태생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의 자주성은 인간 개인에 주어진 자주와 마찬가지로 전시대를 초월하는 개념인 동시에 공시성과 보편성을 가진다. 한편 그와 함께 병렬적으로 제시된 ‘역사적, 현실적 조건’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조건을 지칭한다. 즉 국제정치의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약’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것은 통시적이면서 특수성을 수반한다. 요컨대 ‘주체성과 민족성’을 가지는 것은 개별국가의 ‘자주성’을 ‘역사적,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호해나가는 근본 원리라 할 수 있다.

“모든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라는 김정일의 전제는 “민족국가를 단위로”하는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 북한 내 주민 개인이 가지는 자주성과 평등성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사활적 조건에서, 국가에 자연히 위임되었다. 위임된 기본권은 다시 국가 간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원칙으로나마 국제질서에의 편입을 갈망하는 북한의 입장을 방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김정일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스탈린주의와의 분명한 거리두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지만 선행한 로동계급리론에서는 그것이 옳게 해명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체사상의 등장에서부터 ‘우리’에 대한 경계와 이항대립을 통한 독자성의 논리를 구축하던 관성에 비추어 볼 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122) 김정일. 1997.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민족’ 문제에 소홀했던 탓으로 돌림으로써 보다 단호한 어조로 ‘민족’을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제시했다는데서 기존에 취하던 자신의 주장을 보다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변화된 현실’에 주목해 ‘인민의 요구와 민족적특성’을 살리는 문제를 간과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실패의 사례들과 달리 자신들은 주체사상을 통해 그것을 극복했다고 주장한다. 즉 김정일은 주체성과 민족성의 결합의 시원을 ‘주체사상’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사회주의와 민족이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이 끝없이 융성번영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을 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위업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침을 마련하신 것은 인류 사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한편 김정일은 ‘민족성’에 관한 보다 진보적 입장을 전개해 나갔다. 그는 주체성과 대등하게 민족성을 전면부상 하도록 한 만큼 기존의 ‘민족’ 및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한 해명에서부터 논지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은 시대적, 계급적제한성을 가질수 있으나 민족성을 복고주의,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온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민족성에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 우리 당은 민족성을 민족적단결의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 [...]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민족성을 중시하고 민족성에 기초한 각계각층의 단결을 위해서 적극 투쟁하였으며 이 과정에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민족성은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상황논리로써 방어하는 내용이다. 그러한 시대적 제약에 따른 민족성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민족성’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자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밑천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김정일은 이러한 ‘민족성’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김일성의 유훈으로 남겨진 ‘통일’ 업적 달성에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 1986년 북한의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정의는 ‘위대한 수령, 당, 사상’을 핵심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치가 북한의 국가적 외연과 민족적 응집을 구현하는 동력으로써 기능하는 것과 ‘통일’에의 지향은 그만큼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¹²³⁾ 그런데도 김정일은 보다 전면적으로 ‘민족성’을 내세우면서도 그것이 역설적으로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한 김정일의 언술은 다음과 같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이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더욱이 외세와 반동들의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민족성이 짓밟히고 사멸되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민족성을 적극 내세우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전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게 되고 민족이 이질화되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수 있다.”

남한에서의 민족성이 ‘짓밟히고 사멸되어 가는 조건’에서 자신들이 ‘민족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는 그 자체로서 통일의 기초와 민족의 단결을 꾀하는 행위라는 논리이다.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바로 뒤이어 ‘조선민족제일주의’에의 거듭된 강조는 그러한 논지와 궤를 같이 한다.¹²⁴⁾

이 논문의 ‘1’ 파트의 마지막은 결국 ‘주체성과 민족성’에 관한 독창성과 정당성을

123) 이하의 예시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잘 드러난다. “온 나라 남녀로소가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즐겨부르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민족의 녀과 정기를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서만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서춘봉. 1998. “주체성과 민족성은 우리혁명의 생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제3호. 평양: 근로자사.

124)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의식의 한 축으로서 ‘민족 vs. 통일’의 문제는 바로 위의 지점에서 모순적이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탄력적 운영의 가능성으로 확장된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지면과 논리상의 이유로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뒷받침하는 강력한 반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한다. 여기서 이항대립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대국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은 다름 아닌 소련 및 동유럽 위성국가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계열들, 혹은 그에 추종하는 국내세력들 또는 황장엽과 같은 사회주의 이반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대국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것을 사회주의에 배치되는 것처럼 비방하였지만 결국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여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다. [...] 한때 <정통> 사회주의자, 국제주의자로 자처하던자들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국제주의를 배반하였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국제주의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의 보루를 철옹성같이 지키면서 [...]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즉 주체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 혹은 아류로 비판하던 자들의 최후에 비추어 보아도, 결국 ‘사회주의의 보루를 철옹성’ 같이 지키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라는 점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은 보다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2’ 파트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의 구체적인 구현과정과 실천적 요건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래 <표 4-7>는 김정일이 해당 저작에서 말하는 “주체성과 민족성”의 실천적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의 표와 같이 ‘주체성과 민족성’의 실천적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접근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원문 상의 표현대로하면 ‘선결조건, 기본요구, 실제적 담보, 중요한 것, 투쟁’의 분류하에서 각각의 내용이 상술되고 있다.

첫째,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선결조건 즉 논리적 대전제에 관한 내용이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수 없으며 따라서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당은 사회성원의 올바른 민족관 형성을 위한 교양을 담당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그 대표적 예로서, 이 영화는 계급의 성원으로서의 정체성만큼이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인민대중에 전하는 효과적 교양수단이 된다. 즉,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급과 계층을 불문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자주적 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해 전념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7> '주체성과 민족성'의 실천적 구성과 내용

구 성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애국애족 의 립장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선결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으며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 사회성원의 올바른 민족관 형성을 위한 교양 담당. -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 계급 성원만큼 중요한 민족으로서의 성원 - 조선민족의 피와 넋 - 혁명하는 당은 로동계급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조국의 부강발전',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것.
자기 식으로 하는 것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 기 위한 기본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주적 권리 - 당과 인민은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자기식을 구현 - 우리 식에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이 있고 애국애족의 넋이 깃들.
주체적 력량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경제적력량을 비롯한 모든 면의 자체력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력량,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하는 것 - 혁명주체의 위력은 단결에 있음. -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무엇보다 민족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기초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룩해야 자주적 통일. - 계급적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에서는 민족이자 인민이고 인민이자 민족이며 그 통일단결의 중심은 당과 수령 - 우리 당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전변시킴으로써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마련함. - 정치적 력량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 력량을 마련할 것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데서 중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민족에게는 다 자체의 우수성이 있으며 그것을 살리고 내세우려는 지향과 요구가 있음 -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 시키는 것 - 민족의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지며 높이 발양됨 - 오늘 세상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고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칭송하고 있음 -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 -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인민들이 높은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빛내여 나가도록 할 것
제국주의 지배주의 반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략탈과 예속의 올가미 -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은 오늘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강도적궤변 밑에 새로운 형태, 전 세계를 예속화시키려는 것 - (남조선의) 력대 반동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로 민족성이 심히 유린되어온 남조선에서는 당국자들의 반민족적인 <국제화>, <세계화> 소동으로 하여 민족의 넋과 미풍양속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다. 전대미문의 매국배족행위. - (남조선의) 모든 상황이 미국화, 일본화, 서양화.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성이 여지 없이 유린 말살되고 있음.

둘째,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기본요구 즉 구체적 실천에 관한 내용이다. 그 핵심은 자국 민족의 운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일종의 민족자결 원리와 국가생활 전반에서 자기 식, 즉 ‘우리 식’의 방식 고수에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우리 식에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이 있고 애국애족의 념이” 깃들어 있다는 명제는 ‘우리 식’의 당위를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담보 즉 실질적 역량에 관한 내용이다. 물론 물질적, 경제적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역량 즉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주체의 위력은 바로 ‘단결’에 있으며, “계급적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에서는 민족이자 인민이고 인민이자 민족”이라며 그것의 중심에 다시 “당과 수령”이 있음을 도식적 논리로서 설득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바로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다름 아니다. 한편 정치적 역량에 더해 경제적, 군사적 역량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즉 사상적 원천에 관한 내용이다. 이 역시 일반적 권리를 전제함으로써 시작하는데, “모든 민족에게는 다 자체의 우수성이 있으며 그것을 살리고 내세우려는 지향과 요구가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또한 이 같은 민족의 우수성은 다른 아닌 수령의 령도에 따라 장 훌륭하게 발양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우수성을 칭송받고 있는 현실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즉 이항대립을 통한 논리적 정당성에 관한 내용이다. 북한 뿐 아니라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 혹은 자유주의 이념을 따르는 국가의 정당, 정권 등 다양한 정치체들 마저도 사실상 상대 편 즉 ‘적’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그에 대항하는 논리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 시키는 논리에의 사용은 일반적이다. 1960년대 “대국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라는 수식어으로써 사회주의 맹주였던 소련과 그에 비등한 형제국 중국을 묘사하고, 그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자주성’ 논리와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탈냉전의 세계에서도 같은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략탈과 예속”이라 터부시하고 있는데서 시작한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일체화>에 대한 경계라는 점이

다. 경제적 원조가 결국 예측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지배전략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역대 정부도 ‘반동통치배’ 로써 ‘사대매국’ 행위로 말미암아 민족성을 심각한 수준으로 유린해온 당사자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항의 논리가 보다 분명해진다. 당시 김영삼정권의 국제화, 세계화 전략은 반민족적인 것으로, 민족의 뉘과 미풍양속을 소멸시키는 전대미문의 매국배족행위라는 것이다. 반민족적인 것인 대립각으로부터 얻어지는 북한정권의 민족적 정당성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주체성과 민족성’은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을 일 년 앞두고 공개된 정치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에 준비된 임시방편의 것이 아니었다. 1986년의 ‘우리민족제일주의’가 공식 호명된 이후, 1997년에 이르러 ‘민족성’이 ‘주체성’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데까지 ‘민족, 민족성, 민족주의’의 개념은 오랜 담금질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에 수반되는 과도적 시간들과 근로자라는 당내에서의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이론으로 격상되어지는 일련의 전개는 점진주의적(muddling through)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비로소 ‘주체성과 민족성’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주체성’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요체이고 ‘민족성’은 북한이 새롭게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민족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수령의 지도적 령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식 민족주의가 주체성과 화학적 결합을 이룸으로써, 그동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부정되어오던 민족주의가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부상하고, 그것이 김정일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당원들과 근로계급들을 넘어 인민대중에 철저하게 관철되도록 경주하는 과정은 그 북한에서 ‘민족주의 동력’에 기대하는 바와 그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제5장 민족주의의 호명과 애국주의: 선군, 강성대국, 김일성조선

1986년 김정일의 주도로 ‘우리민족제일주의’가 호명된 이래로 북한에서는 무수한 ‘민족’ 담론과 문화가 국가주도로 생산, 유통, 소비되기 시작했다. 명실상부한 국가민족주의의 북한식 구현이었다. 앞선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민족문화의 장려는 법령의 정비와 다양한 제도화의 측면 뿐 아니라 일상생활 깊숙이 일반주민에 내재화 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정일의 문화예술부문의 마지막 현지지도의 작품이자, 김정일 스스로 최고의 역작이라 평가하고 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민족’ 가치의 서사적 이해를 통한 정서적 동의를 북한 인민대중 전체로부터 확보하려는 국가와 지도자의 지속적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해당 작품은 김일성 수령의 사망 이전부터 기획 및 개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령의 의지도 다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령 사망 이후, 북한의 국가전변에 걸쳐 여전히 전임 정권의 경향이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후계자 김정일의 시대를 특징하는 분명한 징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시가 사실상 수령의 사망 이후 1990년대 말까지 기간은 북한 내부적인 권위의 위기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가 초래되었던 시기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¹⁾ 이미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심화, 그리고 제1차 북핵 위기로 말미암은 북한의 국가 상황은 수령의 서거로 인해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발전전략 및 국방, 외교,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총체적 난국을 일괄 타개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3년을 넘는 유혼통치의 이름 하에 김정일을 위시한 지도부는 분명한 선언을 통해 혁명의 주력군이 ‘로동계급’에서 ‘인민군대’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 ‘선군정치’의 시대를 열었다.

사실,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강성대국’과 ‘선군정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지배체제의 통치원리와는 엄밀히 말해 서로 다른 것이다. 양자의 단순비교로서의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김일성의 주체적 지배원리는 강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하다면

1) 해당 시기 북한의 국내정치적 권위의 동학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로는 안경모(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같은 시기 대외적 안보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시도는 장달중·임수호(2005)의 연구를 참고할 것.

선군정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그 운용의 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가 갖는 구조적 변수와 그 영향으로부터 결과 된 체제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먼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의 원리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적 기초위에 부분적 재해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사회주의 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힘겨루기와 그 사이에서의 독자적 ‘자주권’을 주창하던 북한의 외교 현실적 요구가 출현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본에 의한 식민지경험과 한국전쟁이라는 경험에 따라 일본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가 북한의 주적(主敵)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북한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자주성’의 문제는 진영 외부의 미제와 일제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형제국을 자처하던 진영 내 맹주들로부터 비롯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와 동시에 북한 내부에 외세와 결탁한 세력과 그들로 인한 사회주의 중앙집중적 권력체제의 위기, 김일성 지도부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대내적 요구가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사상유래 없는 유일지배체제로서의 ‘수령제’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수령은 말 그대로 지도자인 동시에 인민의 아버지면서, 최고의 뇌수이자 생명 그 자체를 자임했다. 수령은 체제의 핵심에 유일하게 존재하면서 당의 철저한 수호를 받는다. 그 외연에는 혁명의 주력군이 자리하고 있고, 체제의 가장 바깥에는 인민대중이 위치한다. 수령은 평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당이자 노동계급이자 인민이기도 했다. 요컨대 수령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제도에 가까운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²⁾

그러나 이처럼 생전에 ‘제도화’ 혹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추앙받았던 수령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수령의 사망으로 인한 부재 시, 상당한 권위의 공백과 위기를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즉 김정일이 처한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와 그 딜레마 자체였던 것이다. 이미

2) 북한작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문호’라는 칭호를 받은 백인준은 최초의 인민상, 김일성상, 문화계의 첫 노력영웅 칭호 등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백두산창작단 단장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사업을 주관했다. 그는 특히 1967년 북한의 유일사상체계와 5.25 교시 등장에 즈음하여 문학 활동을 본격화 했는데, 북한의 선전선동 사업을 위한 문화예술 전반의 부흥기와 그 시기가 일치한다. 그는 특히 유일사상체계사업이 시작되자 “수령은 너무 위대해서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수령형상을 위한 전문 창작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전영선 2014, 109-107). 이에 따라 집단적 창작체제를 갖추고 ‘백두산창작단’이 출범하면서 김일성 수령에 대한 형상화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백인준의 집단적 창작체제는 작가 개인이 수령 개인을 칭송하거나 묘사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부담에서부터 출발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미 수령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에 대한 형상화 작업 역시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후계자 과정에 입문하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명실상부 공식적인 후계자의 위치에 올라 김일성 다음으로 배타적 권위를 내외에 과시하던 김정일이었지만, 끊임 없이 계승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해야 했던 사실은, ‘수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에 따르는 당연한 논리적 수순이기도 했다. 수령 사망 직후 3년여의 기간 동안 북한 정치의 중심부에서 관찰되는 갖가지 이탈과 이상 징후들은 바로 그 반영이었다. 요컨대 수령의 사망은 곧 위대한 지도자의 사망인 동시에 제도적 근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후계자 김정일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변수는 김일성과 두 가지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주체사상 등장에 있어 강력한 정당성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주의 맹주의 부재 및 진영의 소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이자 상수로서 존재 하던 수령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시대적 혹은 구조적 변수는 후계체제 개막에 앞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난제를 안겨주었다.

먼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김정일 정권에게 또 다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제했다. 하나는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세계 속의 세계의 외연이 사라짐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주의적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압박했고, 다른 하나는, 앞선 내용의 인과적 결과로서 ‘사회주의 최후의 보루’의 자격으로 단극질서 하에서의 미제국주의 패권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한 김정일 정권의 대응은 ‘세계화, 국제화, 일체화’에 대한 극도의 민감한 반응과 경계태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 피포위 의식의 발현으로 나타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담보로 하는 ‘벼랑 끝 전술’과 같은 역설적 ‘편승’ 전략을 추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제도화 혹은 신격화 된 ‘수령’의 부재라는 위기에서 김정일은 ‘우리 식 사회주의’에의 계승성과 독창성 사이의 근본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적 붕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는 정권의 태생적 정당성을 포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가 전제하는 수령제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즉 정권과 체제의 외연과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신 정권과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을 찾는 것이 김정일 지도부에 주어진 과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김정일의 해법은 바로 ‘강성대국’ 즉 국가의 호명(interpellation)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군’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논리적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1998년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한 진군의 포문을 열고, 『근로자』를 통해 정치적 여론을 조성한 것은 ‘고난의 행군’을 종식하고 새 시대를 여는 국가 비전의 제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무렵 인민군대에 현지지도를 급격하게 확대 진행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주석이나 수령이 아닌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취임한 것은 강성대국의 기둥이 되는 선군정치 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 된 것도 그 일환이다(장명봉 1999, 85).

상기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김정일에 의해 새롭게 호명된 ‘사회주의강성대국론’ 및 ‘선군정치’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민족’ 개념과 결합되어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에 기여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를 시도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와 그 목표로서 강성대국론은 북한의 기존 이데올로기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사회주의 정권의 정당성에 주축인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수정은 어떻게 북한 정권의 지속을 담보하는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기존에 이미 김정일에 의해 호명된 ‘민족’은 ‘강성대국’ 및 ‘선군’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양자의 결합은 어떠한 구체적 실천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97년 ‘주체성과 민족성’의 공식화 이후에 ‘민족성’이나 ‘민족주의’가 폭발적 확장을 하지 못하고 경쟁적 정치구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김정일 시대의 국가비전의 요체인 ‘사회주의 강성대국론’과 ‘선군 정치’의 등장을 검토하고, 그것이 북한의 ‘민족주의’와 결부된 결과로서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민족 및 민족담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수렵과 호명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및 ‘선군정치’의 정당성에 바탕한 북한의 ‘민족·민족주의’가 ‘통일’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및 ‘민족공조론’이 가능했던 정치적·논리적 공간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것이 가지는 북한의 ‘민족주의’와의 필연적 딜레마와 긴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1절 수면아래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반제 선군’

1. ‘사회주의강성대국론’과 민족주의: 국가민족주의

1)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호명

1999년 1월 1일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통한 자신의 신년사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했다.³⁾ 김정일은 특히 자신이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 강성대국’임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정체성과 부국강병의 발전론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핵심 축으로 상정된 ‘선군’과 ‘부국강병’은 급진과 탈급진적 노선의 긴장된 동시추구였다.⁵⁾ 이는 다음과 같이 상술된다.

김정일은 ‘선군정치’에 대해 “나는 우리 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선군혁명령도원칙을 내놓고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으며, “전체 인민이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령도를 따라 주체혁명

3) 북한에서 강성대국론이 1999년 김정일의 신년사를 통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97년부터 1998년 기간 동안 『근로자』의 논문 3편과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당내에서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각각의 논문의 요지와 함의는 다음의 목에서 후술하겠다.

4) 김정일. 1999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 이처럼 북한의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이후 2000년대 후반에 들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보다 심화된다.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군사주의 및 공세적 모험주의라는 역설적 조합의 이해는 이정철(2016)의 연구를 참고할 것.

위업의 완성”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⁶⁾ 다시 말해 국가적 위기에 따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군정치’로서 국가를 수호했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도 사회주의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김재호 2000, 4).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에 대해 김정일은 “우리가 몇해동안 간고한 투쟁을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조건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가까운 앞날에 실현할 수 있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체 인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나의 구상”이라며 인민생활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통한 부국강병론으로서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 실천은 현재의 공장, 기업소의 생산활동의 정상화, 전기문제와 식량문제 해소, 토지정리사업, 경공업부분 투자를 통한 필수소비품 생산 증대, 상비약 생산 확대를 통한 보건 부문의 강화로 구체화 되었다.⁷⁾

즉 ‘당’의 령도에 따른 주체혁명위업 완성에 국방력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선군’의 령도 원칙이 더해짐으로써 반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급진적 요소가 부각되었다. 그런가 하면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7.1 경제개선관리조치’와 같은 제반 정책에서 나타나는 탈급진적 요소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함으로써, 양자는 ‘특수한 환경’의 조건을 통해 절충적인 성격으로 동시 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⁸⁾

1990년대 후반 북한이 당면한 총체적인 위기를 지칭하는 ‘특수한 환경’은 소위 ‘고난의 행군’에 다름 아니었다. 김정일 역시 “<고난의 행군>때와 같은 엄혹한 시련은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고 자임했을 만큼 당시 북한이 처한 위기의 수위와 범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고난의 행군’의 원인에 대해 한호석(2000, 1)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로 인한 정치외교적 불안과 경제적 난관, 둘째, 연속된

6) 김정일. 1999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 김정일. 1999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8) 급진주의(Radicalization)와 탈급진주의(Deradicalization)의 개념은 로버트 터커(Tucker 1967, 346-348)개념이 유용하다. 먼저 급진주의는 현존 질서에 대한 부정(neg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반역이 아닌 대안으로서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 반면 탈급진화는 혁명, 반역의 대상인 현존질서를 수렴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변화는 체제의 전복이기 보다 개혁적인 성격을 지닌다. 북한 체제의 급진주의 및 탈급진주의적 성격을 자세하게 분석한 연구로는 안경모(2013)를 참고 할 것.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의 악화, 셋째, 수령의 사망과 그로 인한 상실감, 넷째, 미국의 5년 총공세가 그것이다. 그는 특히 마지막 ‘미국의 5년 총공세’를 주목하고 있는데 ‘작전계획 5027’로 알려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요체로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4년 제네바 이후 미국이 북미공동선언의 이행이 미국에 의해 지연되었던 사실에 더해 1998년의 ‘작전계획 5027-98’은 북한의 도발 징후 포착시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방어에서 공격계획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5년 총공세’의 수사는 실제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군사작전 변경과 그로인한 군사적 압력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5-1> ‘미국 5년 총공세’에 대한 김정일의 언술: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한호석 2000)

로동신문 보도 일자	내 용
1998.12.4	• “미제에 대한 양보는 곧 굴종이며 투항”
1998.12.7.	•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하고 빌붙어서는 평화도 유지할 수 없고 민족의 존엄도 지킬 수 없다”
1998.12.9.	•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적들이 덤벼들 때에는 맞받아나아가 적들을 단태에 때려부셔야 합니다.”
1998.12.13.	•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어느 때이든지 적들이 달려들면 싸울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1999.9.5	• “유고슬라비아 정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은 약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적들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는 유고슬라비아나 이라크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오만해질수록 더 강경고압자세로 맞받아나아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1999.6.7	•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혁명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1999.7.22	• “제국주의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반제투쟁을 포기하면 언제 가도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00.1.7	•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현 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인민들이 다시금 식민지 노예의 운명에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00.5.12.	• “적들과 맞서 싸우면 살고 굴복하면 죽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각오를 가지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표 5-1〉에서 드러나듯이 1990년대 말 북한이 처한 ‘고난의 행군’은 그 종합적, 총체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 의해 위기의 성격은 ‘반미제국주의’로 단순화 되어 자신들이 처한 상황 역시 일종의 전시(戰時)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

1998년 5월 25일 김정일이 직접 인민군에 신천박물관의 개축 지시를 내린 것은 그러한 반미 계급교양 강화의 일레이다(안경모 2013, 145). 김정일은 동해 11월 22일 신천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천박물관의 전시품들과 직관물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썹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력사의 증거물”이며 “신천박물관은 미제와 계급적 원썹들의 귀족같은 만행을 보여주는 축도”이자 “력사의 고발장”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신천박물관 개축 자체가 지니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⁹⁾

한편으로 김정일의 1998년 신천박물관 개축은 그로부터 40년 전 1958년 김일성에 의한 신천박물관 건축 지시와 평행하며 역사의 반복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일성 역시 종파사건 후 인민의 결속과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해 ‘반미 애국주의’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한성훈 2011, 158-161)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대결하고 있을뿐 아니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반동들과 싸우고 있으며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계급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천박물관이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 청산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비롯한 반동들과 치열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반미교양, 계급교양의 중요한 장소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¹⁰⁾

“최근 년간 우리 인민은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린 반사회주의광풍과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핵위협, 흑심한 경제난관과 자연재해 속에서 력사상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간고한 투쟁을 벌려왔다.”¹¹⁾

“최근년간 <핵사찰>을 구실로 감행되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하고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영웅적으로 고수”¹²⁾

9) 평양출판사 편. 2006.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제3부. 평양: 평양출판사. 201-202p.

10) 김정일. 1998년 11월 22일. 신천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1) 고난의 행군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경제적 난관이나 자연재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적 수사에는 그러한 언급에 선차하여 일관되게 정치외교적 위기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철. 1999.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탁월한 령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12) 미국에 대한 반제국주의적 입장이 일관되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에 대한 수령의 령도 즉 정치적 리더십은 그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된다. 백남순. 1999. “경애하는 김일성

요컨대 신천학살은 미국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수사이자 체제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의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수령의 서거, 자연재해, 경제정책의 실패, 진영의 붕괴, 식량난 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대외적 변수인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소위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정책실패의 측면과 천재지변에 가까운 변수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국가 위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 등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는 당시 북한이 처한 위기의 근본적인 책임을 미국 일변으로 전가하며,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의 온상에 대해 무력을 불사하는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의 경제적 난관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봉쇄와 고립압살책동에 의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사회주의의 시장이 붕괴되어 이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가 끊어지고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까지 겹치다보니 우리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이 어렵게 된 것”¹³⁾

1998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공동사설의 서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북한의 위기에의 인식과 그 추상적 표현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자연재해와 경제적 난관에 앞서, 제국주의의 포위가 바로 ‘겹쌓인 난관’ 제1순위였던 것이다.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자주적인민의 삶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결사전이였다. 여러 해 째 계속된 <고난의 행군>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련이였다. 우리 인민은 겹쌓인 난관을 대단한 공격으로 뚫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총진군을 힘있게 벌려왔다.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혹심한 자연재해와 경제적난관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지난해 제국주의침략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고 엄중한 전쟁위험이 제거되게 되었다. [...]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백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무섭지 않고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더한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¹⁴⁾

동지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13) 김정일. 1998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방> 책동은 용납될 수 없는 침략와해 책동이다.”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4) 『로동신문』. 1998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상기의 예와 같이 『로동신문』을 통해 공동사설의 형태로 일반 인민대중에 전해진 내용은 ‘고난의 행군’ 대한 극복의지와 그 해소를 위한 동원의 메시지를 축약하고 있었다. 혁명적 군인정신과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통해 ‘우리 식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자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구체적 정책은 주로 정치사상교양, 당의 강화, 군의 강화 및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사설과 1998년 증보판 『김정일선집』에 추가된 김정일의 신년사와 동년에 추가된 9월의 담화는 그 논지의 전개와 흐름에서 상기한 ‘반미계급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문건들과 어조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김정일의 신년사에서는 ‘반제’의 메시지 자체보다는 생산과 경제회복과 사상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 한정한 상기한 김정일의 연설의 연설은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체제 이반에 대한 국가의 물리적 사용까지 가용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금 정세가 준엄할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생활을 쪼먹는 위법행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기관들이 법적통제의 날을 세우지 않으면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없앨 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 우리 나라는 마땅히 법을 중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법을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벌하여야 합니다. 지금 법기관일군들은 범죄현상이 나타나면 범죄자가 기본군중인가 복잡한 군중인가 하는데만 신경쓰면서 원칙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있는데 [...] 위법행위는 어느것이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건전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 만큼 범죄자가 누구이건 가라지 말고 쳐야합니다.”¹⁵⁾

“지금 우리 사람들속에서 비사회주의적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태를 벌여낼 수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사법검찰기관들에서 브루조아자유화바람의 침습을 막고 불순이색분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일대 꺾빠니야를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¹⁶⁾

요컨대 ‘고난의 행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2천리마진군’, ‘강계정신’ 등의 구호를 내세우는 한편, 위의 예와 같이 국내적 사상단속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북한 지도부 역시 위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15) 김정일. 1998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나갈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6) 김정일. 1998년 9월 27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승리의 신심드높이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정일선집』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기의 직접적 원인과 해결책에 있어 ‘반제국주의투쟁’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실천’ 과제이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상정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선군’ 담론과 ‘인민군대’의 강화 현상은 단순한 ‘당군’ 관계의 힘겨루기(power game)나 북한의 군사국가화로의 전환을 넘어 보다 총체적인 국가 비전과 이데올로기적 흐름의 일환이자 그 부분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⁷⁾

2) ‘사회주의강성대국’과 ‘민족’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1990년대 말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국가비전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강성대국론’은 특정한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사이에 있는 일종의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의 표현대로 그것은 요원한 공산사회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맞이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근접’한 미래의 것으로 그려졌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핵심이 무엇보다 ‘국가’와 ‘국력’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구체적인 본질은 이하와 같이 정리된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본질적특징은 무엇보다도 국력이 강한 나라라는데 있다. 국력이란 나라의 존재와 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즉 국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힘의 총체이다. 강한 국력은 나라와 민족,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고 실현하며 사람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이며 결정적인 조건이다.”¹⁸⁾

강성대국이라는 화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의 총체로서의 국력이 강한 나라의 지향은 ‘민족국가’ 일반이 추구하는 국가이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7) 선군정치, 선군담론, 선군민족 등과 강성대국, 애국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본 논문의 핵심 주제어들과의 상관관계는 이후의 장과 절에서 보다 상술하도록 한다.

18) 김재호. 2000.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6p.

그러나 ‘국가’가 추구하는 각각의 가치들은 국가전체의 잉여가 고갈된 상태에서 ‘전시’에 준하는 위기로 묘사되면서 ‘선군정치’와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이 표방하는 세 가지 지향, 즉 ‘사회주의사상강국, 사회주의군사강국, 사회주의경제강국’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다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어조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하는 앞선 세 가지 지향의 상술한 내용이다.

먼저 ‘사회주의사상강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정체성을 견결히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 김정일은 『김정일선집』 증보판에 추가된 담화문을 통해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과 고립압살책동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밖에 가져다 줄 것이 없다”며 “누가 무어라고 하든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 당과 인민은 결코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¹⁹⁾ 즉 ‘주체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단호한 지속이었다. 따라서 김정일 지도부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모기장을 든든히” 하는 한편,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을 견결한 계급의 전위투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은 ‘붉은’ 국가로의 당위적 지향을 의미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지향이다. 1999년의 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제일기둥이며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로 묘사되고, 인민군대의 호전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예컨대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계급적원수들과 끝까지 싸우는 사나운 맹호”로 육성하자거나 혹은 “우리 인민군대는 덤벼드는 침략자들을 무쇠주먹으로 단호히 짓부실 것이며 그 어떤 적의 아성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표현에서 군사국가가 주는 공세적 이미지를 마다않는 지도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²⁰⁾

마지막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에의 지향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정상화 및 나라 경제의 전반적 향상을 통해 인민생활을 안정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업, 기간공업, 전력과 석탄생산, 평양-남포고속도로 등의 기간시설 확충, 경공업에서의 인민소비품 생산보장 등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²¹⁾

19) 김정일. 1998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방> 책동은 용납될 수 없는 침략와해 책동이다.”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 이자.”

그렇다면 일련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기치 하에서 ‘민족’ 담론의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실제 1998년 ‘고난의 행군’ 종식에 연이어 출범한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제국주의 계급교양 강화 및 당내 결속을 위한 사상단속, 계급투쟁의 강화 등 급진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인민생활의 전반적인 향상과 경제적 성장을 강조하는 탈급진적 요소가 함께 추구되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1997년 김정일에 의해 호명된 ‘주체성과 민족성’이 계급과 인민, 즉 계급과 민족 양자를 모두 포괄하겠다는 의지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1998년의 ‘강성대국론’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절충적이고 양립되는 두 가지 노선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달중 & 이즈미 하지메 2004, 25-26).

주목할 만한 대목은 1997년 ‘주체성과 민족성’의 등장 이후 ‘민족’ 관련 담론이 강력한 ‘민족주의’적 동력을 발휘하거나 직접적인 정치구호로 전면에 등장하는 대신 ‘강성대국’과 뒤이은 ‘선군’의 호명이 이 시기를 압도했다는 점이다. 물론 1997년 6월 ‘주체성과 민족성’의 등장 이후에도 꾸준히 그것을 제목으로 하는 『근로자』에는 연간 2편 가량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데올로기의 주요 담론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²²⁾ 그러나 1998년을 기점으로 2000년 초반까지 북한 정치의 핵심적 키워드는 단연 ‘강성대국’과 ‘선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민족’ 담론이 이 시기에 단절되고, ‘사회주의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가 ‘민족’ 담론을 대체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체성과 민족성”은 후술될 2002년의 김정일의 ‘민족주의’에의 공식적 호명과 연관되어 여전히 이데올로기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족’ 담론은 ‘사회주의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의 구호와 병렬적으로 존재하며, 이전의 관성을 유지하며 수면아래에서 숨고르기를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결국 분명한 ‘민족’의 지향을 선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체성’과 결합되는 순간 ‘붉은 민족’으로의 자기규정이 분명해지는 성격 역시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주체사상으로 구현되는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완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민족’을 구심력으로 삼고 ‘민족국가’의 외연으로서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볼 수 있다.

21)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2) 흥미로운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던 2000년과 그 이후 2001, 2002년 시기에 오히려 ‘주체성과 민족성’ 제하의 논문이 『근로자』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03년부터는 다시 2편을 전후한 논문이 수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김정일 시대의 ‘정치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세 가지 본질 역시 정치사상, 군사, 경제라는 계급과 인민(민족)의 힘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강성대국’에 나타나는 정치사상, 군사, 경제라는 다층적 정치적 지향들은 이미 1999년 김정일에 의해 정식으로 강성대국이 호명되기 이전부터 당내의 엘리트 사이에 공유된 논의를 통해 발견된다.

예컨대 1997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에서 편집국론설로서 서운석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생명선”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수록한 바 있다. 여기서 강성대국은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간접 서술되고 있다.²³⁾ 이어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의 정론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도모하는 것으로 강성대국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1998년 『근로자』 제9호는 정치사상론설 리근모의 글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불패의 군력으로 사회주의 조선을 지켜나가는 위대한 수호자”로서 강성대국을 규정하고 있다.²⁴⁾ 마지막으로 1998년 『근로자』 제12호는 정치사상론설의 제1 수록 논문으로 홍성룡의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를 실어 강성대국건설 위업이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나라의 국력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최강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거창하고 성스러운 위업”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⁵⁾

정리해보면, 서운석이 강성대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적 역량”을 꼽고, 리근모가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경제회복”으로, 홍성룡이 “김정일의 사상령도”에 강성대국의 결정적 담보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통해 김정일에 의해 1999년 강성대국이 결정적으로 호명되기 전에 이 세 가지 노선 간에 긴장과 서로 다른 방향의 지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강성대국’론은 그 세 가지의 힘의 작용을 그대로 수렴하면서 3자의 절충된 힘을 반영하는 변증법적 국가비전으로 정식화 되었다. 그것이 세 가지

23) 서운석. 1997.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생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24) 리근모. 1998.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25) 홍성룡. 1998.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2호.

지향에 대한 국가의 사전 조율과 그것의 담론화 과정인지, 아니면 세 가지 서로 다른 북한 엘리트 간 노선 경쟁인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세 가지 힘이 모두 ‘사회주의강성대국’론에 수용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이 담지하고 있는 ‘민족’의 이데올로기적 힘이 관철된다.²⁶⁾ 바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핵심이 ‘내 나라, 내 조국’과 ‘김일성조선’에 대한 ‘애국’에 있었기 때문이다.『근로자』의 세 논문의 입장은 각각 사상, 군사, 경제라는 서로 다른 정책선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공히 상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수면아래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인민대중에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국가’라는 외연으로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었고, 다만 ‘민족주의’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분명한 국가민족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민족제일주의와 강성대국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다음의 예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주체사상이 밝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나가는데서
튼튼히 쥐고 나가야할 필승의 보검이며 위력한 사상정신적 원천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
신**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추켜들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이다.”²⁷⁾

26) 김일성민족-김정일의 령도-강성대국건설의 논리적 연동은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결국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대한 충실성은 곧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리영복. 2000.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 제2호. 평양: 근로자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이 사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어버이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으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 계신다.” 편집국론설. 2001. “우리 당의 위대한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자존심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기어이 제힘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이다.” 리봉낙. 2001.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 조서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27) 로배권. 2002. “주체사상이 밝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강성대국건설의 사상정신적원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 제6호. 평양: 근로자사.

그렇다면 당시에 ‘민족’과 ‘민족주의’가 ‘강성대국론’이나 ‘선군’과 같이 적어도 구호의 측면에서라도 선봉에 위치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자주성과 ‘우리’에 대한 근원적 자문에서 시작하여, ‘우리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 ‘주체성과 민족성’으로의 비교적 꾸준한 진화를 거듭한 ‘민족’ 담론이 정작 1998년의 김정일 정권의 신호탄으로서 전면에 등장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상기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그동안 피치를 올리던 ‘민족’ 담론이 이 시기에 그 힘을 유지하면서도 수면아래 놓여 있었던 까닭은 당시 북한과 김정일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권위의 위기에 대한 새 지도자로서의 응답은 단결과 충성이라는 복종의 강요만으로 불충분했으며, 그것은 정권의 위기 이상의 것, 즉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비전으로서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치비전은 민족과 결합된 주체사상만으로는 사회주의의 지속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주체성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사회주의 정권의 현재와 미래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은 주체비전 그 이상의 것이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1997년의 주체성과 민족성은 일종의 김정일의 민족주의 지속에 대한 관철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주체사상의 기반 위에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민족 혹은 민족주의 그 자체는 내용이 없다. 단순한 ‘우리’라는 정체성의 인식 그 이상의 정치적 지향을 갖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열망과 위로부터의 권력에 대항하는 힘이 클 때는 사회 민족주의의 반향으로, 그것이 위로부터의 아래에 대한 열망을 조장하고 국가의 입장을 관철시켜나갈 때는 국가민족주의로의 정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997년 주체성과 함께 결합한 민족성이 북한에서 수렴되어지듯, 김정일 시대의 포문을 여는 정치비전이 분명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을 때 민족주의와의 강력한 결합과 그로 인한 드라이브가 형성되는 조건이 된다는 의미이다.

3) ‘국가’의 부상과 ‘민족주의’: ‘광명성 1호’와 ‘김일성조선’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등장과 함께 급부상한 ‘국가’에 대한 강조가 북한 사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자연히 ‘애국’의 가치를 고취시키고 그것은 다시 수면아래 잠복해 있는 ‘민족주의’로 연결되는 논리적 흐름을 추적하고자 한다. 즉 ‘민족주의’의 등장 이전 시기 동안 ‘민족’ 담론은 강성대국이나 선군정치에 가려진 채, 진공상태 혹은 무력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일종의 담금질의 과정이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1998년 8월 31일 강성대국의 첫 포성을 여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발사되었다.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에 관한 청사진이 그려진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광명성1호’의 발사성공에 대해 평가했다.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것은 **주체조선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일대 사변으로 됩니다. [...] 과학기술발전에서도 오늘과 같은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세계선진국가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 [...]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구위성을 단 한번의 발사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이 놀라운 성과는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국력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²⁸⁾

증보판에 추가된 상기의 김정일 담화문은 인공위성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성1호’의 발사의 성공을 단언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국가’로서의 ‘힘’을 강조했다. 즉 ‘강성대국 건설의 첫 포성’임을 천명한 것이었다(김재호 2000, 158). 이로써 1998년 하반기는 ‘충포성 없는 전쟁’과 같은 고난의 행군을 ‘단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를 ‘여는’, 새 시대로의 도약이 예고되었다.

<광명성1호>는 그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넘어 ‘국력’을 과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²⁹⁾ <광명성1호>에 대한 김정일의 평가는 북한에서 ‘광명성1호’이 부여하는 정치적 상

28) 김정일. 1998년 9월 8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9) “이북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98년 8월 31일 첫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

정을 대변하고 있다. 아래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에서 <광명성1호>의 개발 비용을 둘러싼 김정일의 정치적, 경제적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일은 밀려드는 개혁·개방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며 “총대”를 틀어쥐고 “붉은기” 고수를 통해 “사회주의 조국, 부강조국”을 재건하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정치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의 동원 문제에서 불가피하게 인민대중의 희생을 담보하여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을 추동하겠다는 입장은 첫 인공위성 <광명성1호>의 지원을 위한 “통장훈” 서명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것이 “민족적 대경사”로서 <광명성1호>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의였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당시 김정일의 딜레마를 짐작할 수 있다.

“피눈물의 해 1994년 12월 31일 평양교외의 사격장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신념과 의지를 세상에 뚜렷이 선언하는 회성같은 총성이 울렸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나는 당과 함께 총대를 틀어쥐고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는 주체의 붉은기를 영원히 지켜나갈것이다! 내가 이 총대를 틀어쥐고있는 한 우리는 기어이 사회주의조국을 지킬것이며 부강조국을 일떠세울것이다! [...]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 써야 할 거액의 자금문제를 제기한 문건에 수표하시던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하여 다 리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통장훈의 하나가 바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쏘아올린 민족사적인 대경사였다”³⁰⁾

한편 ‘사회주의조국’, ‘주체조선’의 국력이 만천하에 과시된 지 8일째 되던 날,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의 국방위원장에 재취임 했으며, 이튿날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의 재취임과 공화국 창건 50주년에 맞추어 만천하에 쏘아올린 축포와 같았던 <광명성1호>가 ‘사회주의 국가’로서 여전히 건재함을 상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불어 <광명성1호>의 성공적 발사가 ‘국력’의 과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를 이은 새 후계자 김정일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일성은 1992년 생전에 김정일의 50세 생일을 맞아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 돌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 다 우러르네”라는 축시를 통해 광명성에 김정일을 비유하고 있다(이찬행 2001, 650-661).

여 궤도에 진입시켰다. [...] 그것은 막강한 군력에 기초한 이복의 국력을 과시한 일대 사변이 아닐 수 없었다.” 2003. 『민족과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86p.

30) 2012년 12월 21일. “전설적인위인 김정일동지: 불굴의 신념과 의지.”

이처럼 북한 최초의 인공위성 <광명성1호>의 이름은 1987년 2월 17일 김정일 혁명사적으로 지정된 ‘백두산밀영’과 무관하지 않다. 1988년 8월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을 상징하는 숫자인 216m 거리의 장수봉에 정일봉(正日峰)이라 각인하고, 이를 위한 기념식도 열었다(안경모 2013, 74). 또한 이 시기를 즈음해 『로동신문』에서는 북한 전역에서 항일 빨치산들이 새겨놓았다는 ‘구호나무’ 발견을 보도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난세를 올바르게 비추어 태양이 되라는 뜻”이라는 정일(正日)의 이름을 지닌 미래의 지도자 ‘백두광명’의 탄생을 알리고,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에 충효를 다할 것을 맹세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발굴된 전국의 ‘구호나무’는 화보집으로 발간되어 사상교양학습에 활용되었다(이찬행 2011, 527).³¹⁾ 김정일은 증보판 『김정일선집』에 새롭게 추가된 노작을 통해 ‘구호나무’ 발견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과 혁명사적 의의를 보다 강조했다.

“우리가 한 20년전에만 구호나무들을 찾아냈어도 지금처럼 지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백두산지구에서 새로 발굴한 수많은 구호나무와 사령부귀틀집자리 같은 것들은 매우 **귀중한 혁명사적**들입니다. [...] 이번에 혁명유적, 유물이 모두 **한 70종에 240여점** 발굴되었으면 대단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정일봉이 멋있습니다.**”³²⁾

요컨대 “광명성”은 김정일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광명성1호>의 성공은 “지난날 락후와 빈궁의 대명사로만 불리우던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위성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명시적으로 ‘국가’의 강조로 이어졌고, 마침내 ‘김일성민족’에서 ‘김일성조선’으로의 수사적 변화와 더불어 보다 고유한 명사로서 북한 로동당 내 엘리트 그룹에서 보다 확산되기 시작한다.

“주체조선, **김일성조선의 국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위상**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웠다.”³³⁾

31) ‘구호나무’의 화보집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김주복 외. 1991.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2) 김정일. 1988년 8월 18일. “백두산밀영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제12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3) 황해수. 1998.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는 주체조선, 김일성조선의 국력을 과시한 역사적 사변.”

한편, ‘김일성조선’은 이미 이전 시기에도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강성대국론’의 등장과 함께 강력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다 그 의미와 내용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나가는 역사적전환의 시대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튼튼한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 토대에 기초하여 김일성조선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빛내여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 주체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며 우주에 싸울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부강조국건설의 한길을 걸어온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며 주체의 강성대국의 출범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³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은 김일성조선이다. 오늘 세계의 수억만 인민대중은 주체의 조선을 김일성 조선이라고 격조높이 부르고 있으며 높이 칭송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크고작은 200여개의 나라들이 있어도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위대한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³⁵⁾

또한 ‘김일성민족’에서 ‘김일성조선’으로의 변화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타이틀로서 민족국가 일반의 자격으로 국제질서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수령의 사망과 잇단 자연재해 및 경제상황의 악화 일로에 직면한 북한 체제에 대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붕괴론’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말 그대로 북한식의 역전극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한 것이었다.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당당한 위성보유국이 된 것은 력사의 기적”이라는 신년공동사설의 언급은 인민대중에 알리는 반전의 ‘민족’ 주의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으며 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김일성조선에서 살며 투쟁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수령님이시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건국시조이며 민족적 룡성과 번영의 영원한 태양이다.”³⁶⁾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34) 홍성룡. 1998.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2호.

35) 박성철. 19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36) 리근모. 1998.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입니다.”³⁷⁾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건국시조는 20세기를 빛내이신 인류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입니다. [...]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태양의 나라,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사회주의 나라, 민족성이 꽃 피나는 민족의 성지인 것으로 하여 해외동포들의 높은 민족적 긍지와 영예의 상징으로 된다.”³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³⁹⁾

북한에서 ‘국가’가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의 애국주의적 발흥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특히 그러한 애국심의 대상이 ‘사회주의조선’ 즉 ‘김일성조선’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위대한 수령, 당, 사상, 제도’로 ‘민족’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즉 ‘국가’의 범위 역시 한반도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주의조선의 건국시조’라는 표현은 1997년 김일성 사망 이후 만 3년째 되는 날 공포된 ‘주체연호’의 제정과 무관하지 않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의 태양,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은 우리 나라 력사와 세계혁명운동력사에서 새시대의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된 주체시대의 출발점, 기점으로 되는 력사적인 해 [...] 주체연호의 제정시행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새로운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의 원년으로, 새로운 사회주의조국의 원년으로 함으로써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완전히 일치시킨 력사적 사변이다.”⁴⁰⁾

사회주의조선의 건국 시조는 바로 김일성이며 그것은 수령 김일성의 역사가 곧 김일성 민족의 역사이자 태양민족의 역사와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 ‘김일성조선’의 역사는 김일

37) 백남순. 1999.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38) 김유호. 2003. “사회주의조국은 해외동포들의 높은 민족적존엄과 영예의 상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39) 전경남. 2004.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40) 김태호. 1997. “주체연호의 제정시행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로 빛날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0호.

성의 생으로부터 출발하고, 북한의 건국역사로부터 정당성이 재부여 되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라는 표현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차원의 ‘국가’ 정체성 추구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한편 상기한 북한의 ‘국가’에 대한 강조는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변화와 결부된다. 이는 1998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의 수정에서 조선로동당의 권한이 다소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군과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 후술할 ‘선군정치’의 강세와 함께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에서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인민군대 역시 체제보위와 경제발전의 주력군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특히 헌법 개정으로 ‘내각 책임제, 내각중심제’로 정무원책임제가 개편되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내각의 자율성은 상당히 신장되었다(김갑식 2007, 9-13).⁴¹⁾ 요컨대 ‘선군’과 강한 연동을 가지면서도 ‘당’의 상대적 약화로 귀결되는 ‘내각’ 즉 ‘국가’의 강화는 상기한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 북한의 ‘국가’에 대한 강조는 ‘평양’의 정치적 상징을 부각시키는 작업으로도 이어졌다. 평양이 “우리 나라 원시 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라고 파악하는 입장은 1990년대 후반의 강한 ‘국가’의 부상과 연결된다.⁴²⁾ 평양의 도시 현대화 개발사업을 곧 북한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직결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결과로 보여 진다. 물론 평양 중심 역사관의 지나친 편향은 평양이 세계 5대문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게 되는 비약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역사학, 고고학이라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객관화 하려는 시도 역시 당시의 분명한 흐름이기도 하다.

41) 김갑식(2007, 13-14)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정무원책임제, 내각책임제의 도입에 즈음하여 내각의 역할이 강화되는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전문가인 기사장이나 지배인의 영향력 확대함으로써 당에 대한 경제실패의 원성을 피하고 당 간부의 부패기회를 축소시키기 위해 협동농장이나 기업소의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둘째,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관련 당 전문부서의 숫자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내각의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가 약화되었다. 셋째,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부터 ‘내각의 사업정형과 과업’이 의제로 상정되었고, 최근 중앙 및 지방기관, 중요 공장, 기업소의 간부들이 참석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여 신년공동사설,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제시한 경제과업 수행을 위한 대책을 토의한다. 넷째, 2006년 1월부터 김정일은 중국방문에 경제계 실세들을 대거 대동하고 있다. 요컨대 김정일 시대에 들어 경제정책에 있어 내각의 역할과 책임이 제고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42) 평양이 5대 문명 발상지라고 한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할 것. 장우진. 2002. 『조선민족의 역사적뿌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56-159p.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조선의 심장이며 나라의 얼굴입니다. 평양시건설은 새 거리를 형성하고 건축물이나 일떠세우는 단순한 경제실무사업이 아니라 주체조국의 수도를 빛내이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와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입니다 [...]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 웅장화려하게 건설하고 수도의 모든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⁴³⁾

상기한 예시와 같이 증보판『김정일선집』제19권에 새롭게 추가된 노작인 “강행군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에서는 평양개발사업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전형적인 하향식 거점개발방식의 경제적 효율성에 더해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족’ 주의의 고취 효과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43) 김정일. 1998년 2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강행군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 ‘선군’의 기원과 논리: 혁명의 새로운 주력군

1) 1995년 1월 김정일의 노작 3편과 ‘선군시대’의 배경

김정일 시대를 이르는 다른 이름인 ‘선군정치’의 시원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즈음한 때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는 2005년 권두 논문, 통권753권에서 선군정치 10년 역사를 기념하는 편집국논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는 간고하고 시련에 참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이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 [...]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사생결단의 신념과 의지의 집대성**이다. [...]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혁명의 만년재부로 간직하고 길이 빛내여 나가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⁴⁴⁾

즉 북한에서 선군정치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상이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북한 내부의 공식자료와 같이 1995년 김정일의 다박솔초소의 현지도도를 그 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⁵⁾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의 신년사를 편집국론설에 우선하여 권두논문으로

44) 편집국론설. 2005.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45) 북한에서는 이후 1961년의 류경수탱크부대의 방문, 1920년대의 카륜회의로 각각 두 번의 선군정치의 시원을 소급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이래 선군정치가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과 그에 따라 생산 및 소비가 되는 선군담론의 양태는 1995년 시원설에 보다 무게를 실어준다. 한편 북한 학자인 김철우는 2000년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김정일장군께서는 1994년 10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정치철학을 천명하시고 이를 구현한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할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나갔다”고 서술함으로써 선군정치의 시원을 두 달 남짓 앞당겨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0월에 저술된 김정일노작은 총 5개로, 그 가운데 선군 혹은 인민군대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글은 모두 두 개이다. 먼저 1994년 10월 16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에서는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대”이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며려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될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당, 전민,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再)수록하여 그 의미를 환기한 것도 그 기원에 관한 역사적 확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이 매년 정초에 육성을 통해 전달하던 북한의 기존 <신년사>는 김정일시대에 와서 <공동사설>의 형태로 바뀌는 데, 앞선 장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김정일은 이미 1975년부터 대부분 매년 자신만의 신년사를 발표했고, 그것은 김일성 시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는 별도로 김정일은 자신이 해오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를 대상으로 한 신년 연설 및 담화를 수령의 서거 이후 첫해인 1995년에도 지속했던 것이다.⁴⁶⁾

특히 김정일은 이 신년사에서 자신이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야하십시다>는 친필 서한을 내린 사실을 들며 새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2005년 근로자의 권두논문에 다시 소환된 1995년의 김정일 신년사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강화할 것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은 김일성조국, 김일성민족”의 명시적 언급을 통해 ‘민족’과 ‘국가’를 호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2009년 3월부터 『김정일선집』의 증보판이 출판되었는데, 이전시기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민군대 및 선군과 관련한 김정일의 노작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1992년부터 2005년시기까지 출판되었던 기존의 『김정일선집』에 수록된 노작이 총 376개인데 반해, 2009년부터 출판된 증보판에 실린 노작의 총 개수가 869개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⁴⁷⁾ 특히 그 가운데서도 기존의 선집에서 ‘군’ 관련 논문이 22여 개에서 4배 이상 증가한 114개나 된 것은 사후적으로 북한 당국이 ‘군’ 관련 논리적 보

다음 그로부터 나흘 후인 10월 20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제하의 논문이다. 특히 군의 경제활동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군이 인민생활 향상에 주역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 당과 군의 결합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 하자는 메시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군에 대한 배타적 강조나 ‘선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은 선군정치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6) 이러한 사실에 따라 본 연구는 김일성의 ‘신년사’, 김정일 ‘신년사’,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의 세 가지로 신년 연례 연설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47) 이러한 양적 증가는 『선집』과 그 증보판 『선집』 간의 기간이 차이난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의 『선집』이 2005년까지의 김정일 연술을 담은 것이라면 증보판은 2011년까지의 기록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보판에서의 양적 증가에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김정일의 담화가 눈에 띄는 정도의 비대칭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숙지하면서도 2006년의 시점에 북한에서 과거의 시점을 소급해 보다 강조하고자 하려는 역사와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역으로 추적하는 작업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충 및 보완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첫 등장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가던 ‘선군정치’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역사적 윤색과 마찬가지로 사후적 논리의 ‘덧댐’ 과정이 이루어졌다. 증보판에 등장한 첫 추가 노작이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인민군대는 이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한 담화였다는 사실은 그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⁴⁸⁾

같은 맥락에서 1995년 새롭게 추가된 김정일의 <신년사>는 보다 주목할 만하다. 증보판은 수령 서거 이후 첫 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상기의 연설 뿐 아니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담화문을 내용으로 하는 노작을 추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내가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 나라, 내 조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 나라는 김일성민족이 사는 주체조선을 의미하며 내 조국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들자면 **인민군대가 강해야 합니다.** [...] **나는 지금에 와서 수령님께서 생전에 왜 나에게 군권부터 넘겨주시었는가 하는 숭고한 의도를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⁵⁰⁾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군정치의 시작은 2001년 12월 15일의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구체화 되었다.⁵¹⁾ 이 정론은 <트,ㄷ>가 주체사상의

48) 김정일.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제105기계화사단 군인들과 한 담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인민군대는 이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9) 매년 새해 첫날에 대부분 1회의 연설이나 담화문으로 구성된 ‘신년사’가 증보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록됨으로써 ‘두 개 이상’의 노작이 되는 경우는 총 6회로 나타났다. 1976, 1982, 1995, 2000, 2002, 2003년이 그에 해당한다. 한편 구판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김정일 신년사가 증보판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사례로는 1984, 1987, 1998, 2002, 2003, 2007, 2009, 2010년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증보판 추가 김정일신년사들은 모두 군과 관련되거나 선군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는데 특징을 공유한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선군혁명명도와 관련한 로작들을 비롯하여 선집에 수록되지 못한 ‘중요로작’들을 새로 많이 수록”했다고 밝히면서 “이미 공개된 로작들” 중에서도 “일부 표현들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50) 김정일. 199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1) 『로동신문』. 2001년 12월 15일. <정론> “선군혁명 천만리-제1편 다박솔 언덕에서.”

한편 ‘선군’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1997년 12월 12일자 『로동신문』임을 밝힌 정성장(2003)의 연구나 1998년 4월과 5월의 ‘선군’ 용어가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원이라면, 다박술 현지도가 선군혁명의 시대를 개막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박술 시찰이 선군의 시원으로 보는 북한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저작들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다음의 사례들이 바로 그것이다.

“대국상 이후 첫 현지시찰로 1995년 설날 아침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군부대를 찾으신 **김정일 장군**”이 해당 현지도를 통해서 “군대를 믿고 군대에 의거하여 함로역경을 헤치며 미래를 열어 나가시려는 김정일 장군의 정치적결심과 의도가 비쳐진 **역사적 행보**”⁵²⁾

“1994년이 다 지나가고 바야흐로 새해 1995년이 밝아 오던 그 시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께 경모의 인사를 삼가 올리시었다.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의 층계를 걸음으로 **일명 <다박술초소>로 불리우는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군부대**를 찾으시었다. 주석님의 서거후 맞는 첫해의 첫 혁명활동의 시작이었던 이 초소 길에서 바로 사회주의 수호의 **위대한 선군정치의 전면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⁵³⁾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러한 신념과의지로 주체 1995년 1월 1일 아침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시는 것으로 역사에 류례없는 선군장정의 첫 자욱을 때 시었고 이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결심과 의도를 세계앞에 뚜렷이 보여주시었다.”⁵⁴⁾

2001년의 정론은 한결음 더 ‘선군정치’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오늘 아침에 다박술중대를 현지시찰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증보판 『김정일선집』의 1995년 추가<김정일 신년사>는 그간 ‘주장’ 되기만 했지, ‘사료’로써 인정받지 못했던 ‘선군정치’의 시원으로서의, ‘다박술 현지도’에 관한 김정일 자신의 언술이자 실증적 자료로써, 북한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⁵⁵⁾ 이 노작이 2012년 출판된 이전 시기까지 사실상 1995년 1월 1일의 선군정치 시작이라는 기준점도 당시에 대중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7년이 지난 시점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알려졌기 때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후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사용의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말의 ‘선군’의 공식화는 아직 이른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선군’의 구체적인 기원과 내용을 정리한 2001년의 정론이 선군정치의 시작에 관한 첫 번째 자료라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52)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5p.

53) 조성철. 2001. 『김정일장군의 사회주의재생재건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136p.

54)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평양출판사. 16p.

55) 이 노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1)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화 2) 인민군대에서 혁명적인 노래를 통한 사상교양사업 강화 3) 관병일치의 전통 강화 4) 인민군대의 군사력 강화 5) 인민군대에서 군인들에 대한 후방사업 강화 6) 인민군대의 군인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김정일에게) 보고할 것.

문이었다. 2001년의 정론에서 구체화된 ‘선군정치’의 내용은 또한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추대 10주년이 되는 2001년이라는 시점 무관하지 않았다(진희관 2008, 379).

선군정치의 시작으로 간주되고 있는 1995년 1월에는, 위의 추가적 김정일 신년사 외에도 또 하나의 노작이 증보판에 추가적으로 수록되었다. 신년사 이후 2주가 지난 1월 15일 발표된 노작의 주제는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인민군대와 관련한 것이었다.

“당의 군대를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은 나의 불변의 신조입니다. [...]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 [...] 언제나 당과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여왔습니다. [...]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 총대만 흔들리지 않으면 천만대적이 덤벼들고 세상이 열백번 변하여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⁵⁶⁾

수령을 중심으로 한 결사옹위의 정신은 ‘붉은기’, ‘총대’와 함께 결합되어 보다 강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부여 받았다. 특히 군 간부들에 대한 김정일의 사상단속이 두드러졌다.⁵⁷⁾ 김정일이 인민무력부장에 대해 “그는 내가 하라는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민무력부장을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평서문의 어조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인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뒤이은 논리에서는 대내적 사상단속에 이어, ‘철천지 원쑤’인 미제를 상기시키며, 북미 간 접촉과 협상과 무관하게 역사적 사실과 그로인한 현재적 분단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각을 세웠다.

56) 김정일. 1995년 1월 15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는 자기 당,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게 충실하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7)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드러난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투철한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제일선에서 당을 결사옹위하며 최고사령관을 받으면서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2) ‘선군’의 등장과 논리적 구성

북한에서 1995년 1월 세 차례의 김정일의 연설을 통해 호명된 것으로 규정된 ‘선군’ 개념은 ‘인민군대’의 강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축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첫째, 당면한 국가적 위기에서 인민군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적, 물질적 보상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셋째, 군의 사상교양강화를 통한 당의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조이다.

먼저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인민군대의 강화 입장이다. 먼저 1995년 김정일의 첫 신년 사이자 『김정일선집』의 구판에도 실린 노작인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채택이나 북한 영공에 “불법침입한 미군직승기” 격추를 들며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음을 자축하면서도, 그것이 미국의 침략적 본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인민군대의 강화를 역설했다. 아래는 반제국주의의 명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제국주의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 있고 아직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조건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잠시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 없는 것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습니다.”⁵⁸⁾

“일부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붕괴와 랭전의 종식으로 세계정지구도는 쏘미대결구도로부터 조미대결구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력학관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 진보와 반동, 자주와 지배, 정의와 불의, 평화와 전쟁사이의 첨예한 대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⁵⁹⁾

사회주의 진영의 소멸로 미제국주의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과 미완의 통일이라는 조건은 북한의 무장력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정당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미 계급

58) 김정일. 1995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9)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15p.

문제는 민족의 문제와 주체사상과 우리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 등의 개념을 통해 상당부분 탈급진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반제국주의라는 명분은 여전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수호하도록 하는 정치적 근거로써 기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어느때든지 한번은 미제침략자들과 판가리전을 벌려야 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자면 총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이 있으며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습니다.”⁶⁰⁾

증보판에 추가된 신년사는 상기와 같이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의 전면전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외부의 분명한 적으로 규정된 미제국주의로부터 국가의 평화, 자주, 행복이라는 권리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수호하려면 ‘총대’ 즉 군사력의 강화는 필연적 논리가 된다. 이러한 논리는 『근로자』에서도 이어진다.

“지금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접촉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치 우리 나라에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반제반미투쟁의 도수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⁶¹⁾

“군력의 담보가 없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는 것은 하나의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⁶²⁾

“주체적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힘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존망은 그 나라와 민족의 군력에 달려있다. [...] 총대우에 정의와 평화, 번영이 있다. 군사적힘을 키워야 한다.”⁶³⁾

60) 김정일. 199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1) 김정일. 1995. 1월 15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는 자기 당,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게 충실하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2) 전용석. 2003.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6호. 평양: 근로자사.

63) 방정국. 2004.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6호. 평양: 근로자사.

앞선 두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반제국주의의 투쟁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⁶⁴⁾ 당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미국을 미제국주의가 아닌 ‘미국’ 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기 시작했던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해당 김정일의 노작이 2009년부터 사후적으로 수정, 추가, 편집된 작업이라는 점과 1994년의 북미 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역사적 추이를 감안해볼 때, 북한의 그와 같은 대미 인식과 그에 따른 선군논리의 형성은 2000년대 후반의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⁵⁾

다음으로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적, 물질적 처우의 개선과 관련한 것이다. 말 그대로 군을 선차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군정치는 인민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물질적, 정치적 처우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아래 정리된 <표 5-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1995년 첫 신년사의 김정일의 연술이 이후 두 차례 추가된 증보판의 노작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인민군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는 정치적 연술들은 바로 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다. 실제로 군과 관련한 대부분의 『김정일선집』의 증보판에 공통적으로 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있다. 특히 수령, 당, 민족, 조국을 결사옹위하는 호위대이자 수비군으로서의 역할이 196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 92개의 추가 노작을 통해 논리적으로 강조되었다. 1995년 1월 하반기에 예정된 조선인민군 제9차 선동원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김정일은 군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인센티브 효과를 더했다. 실제 김정일이 군 현지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군을 위한 선동대를 직접 조직하여 사상교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예술적 수단까지 동원하였던 것은 군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예컨대 김

64) 이처럼 선군의 핵심 가정이 ‘반미(反美)’에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에 실린 강석주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와해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강성변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유일한 출로가 견결한 반미자주정신을 지니고 자기의 힘을 키우며 자주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현실로 중시해준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강석주. 2005. “선군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온 불멸의 년대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65) “주권국가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해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이 극도에 이르고 힘이 약한 나라는 대국의 폭탄세례를 받아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도 그 어디에 하소할 곳이 없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군력이 곧 나라의 존엄으로 되고 자주권으로 된다.” 차경일. 2003. “불패의 군력과 일심단결을 마련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시는 전설적령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정일은 1995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독자적 예술형식을 취하도록 조치한 다음, 1997년 가을에는 이들을 인민군협주단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현지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에 대동하여 “선군의 나팔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⁶⁶⁾

<표 5-2> 1995년 1월 김정일 노작에 나타난 군 관련 표현

구분	물질적 처우	정치적 처우
1995년 1월 1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군대에 대한 보장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 인민군인들이 생활과 훈련 근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군대에 대한 보장사업을 잘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제국주의자들과 당당히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나고 있음.
1995년 1월 1일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군대에서 군인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나는 인민군대의 후방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군인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후방사업에서 기본은 군인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군인들에 대한 후방물자공급규정량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군인들이 수행하는 임무에 맞게 정하여야 합니다. 비누, 모포 공급의 량과 질을 늘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당과 함께 인민군대를 매우 중시합니다. 인민군대의 위력은 본질에 있어 정치사상적 위력이며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여기에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전투대로 만들기 위한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총대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적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이 있으며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음. 조선인민군 제9차 선동원대회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1995년 1월 15일 “인민군대는 자기 당,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게 충실하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 인민군대에서 제일 걸린 문제의 하나는 군인들의 물질생활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군인생활문제를 풀어야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고 군사규율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더둘 수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에서는 내가 최고사령관이 된 다음 나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인민군대에 필요한 비누와 치약, 치솔을 전량 다 생산보장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경도를 충실하게 받들고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는데서 언제나 핵심적이고 주동적인 역할 세상에 우리 인민군대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은 없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군사지휘관들을 내세워주고 군사지휘권을 확고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든든한 배심과 배짱을 가지고 부대를 드세게 장악지휘하며 모든 군인들을 쇠소리 나는 일당백의 싸움꾼, 통일대전의 맹수들로 역세게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66) 평양출판사 편. 2006.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제3부. 평양: 평양출판사. 268, 274p.

그에 못지않게 후방사업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정치적 보상만큼 실질적인 인민군대의 복리향상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후방사업의 강조를 통해서 군인들의 복지증진이 신경을 쓰면서, 물자의 군 배분문제에 있어서 일부 부대의 부정을 지적했다. 당시 전반적으로 낙후되었던 인민경제생활 수준과 잇단 자연재해가 겹침으로써 국가전반의 경제적 위기가 악화 일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군의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일종의 달래기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군에 대한 사상교양의 강조와 통제의 강화이다. 김정일은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적, 물질적 차원의 격상을 주도하면서도 철저하게 당과 수령의 위계적 관계는 분명히 함으로써 군의 이반을 방지하고자 했다. “인민군대에서 당풍에 기초한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표현은 당과 군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인민군대의 사상교양에 관한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보다 뚜렷하다.

“나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전 소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 군대들의 비참한 운명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혁명군대안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실시하면 군대가 비정치화, 비사상화되어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통략물로 굴어떨어질수 있습니다.**”⁶⁷⁾

군대의 사상교양문제는 곧 체제의 단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지도부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투철한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제일선에서 당을 결사옹위하며 최고사령관을 받드는데서 손발이” 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김일성 회고록학습, 혁명적인 노래를 통한 사상교양사업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상적 단속은 수령의 사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한 체제의 위기에서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에 대한 김정일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의 대화를 빌려 종파문제를 상기시켰다. 즉 “오래동안 일하던 사람들 속에서도 종파가 나왔” 다며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 을 가지고 당 문제에 임할 것을 언명했던 것이다.

67) 김정일. 199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상기한 세 가지 지점들은 선군의 기원과 관련한 마지막 특징인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조로 귀결된다. “내 나라는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주체조선이며 내 조국은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김정일의 언술은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해방에 결정적 기여를 한 역사로서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국가’를 호명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⁶⁸⁾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어느 쪽이든 ‘반제국주의 투쟁’은 양자 모두에 적용되는 논리이며, 따라서 당의 군대이자 수령의 군대가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민족은 김일성조국,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에서 재확인된다. 즉 민족과 국가를 동시에 호명함으로써 ‘우리’만의 ‘영역’을 ‘방어’한다는 논리는 국가일반이 가지는 기본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우리=김일성민족’, ‘영역=사회주의 조국’, ‘방어=선군정치’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내 나라는 김일성민족이 사는 주체조선을 의미하며 내 조국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⁷⁰⁾

김일성의 유산으로 지칭된 ‘내 나라, 내 조국’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북한에서의 역사로서 정당화 되었다. 따라서 ‘선군’의 호명은 ‘민족’이 ‘민족국가’ 즉 ‘김일성조선’의 수호를 위한 물리적 방어기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존재했던 북한 인민군이 이 시기에 와서 새롭게 강조된 것은 단지 국가의 총체적 위기에 따른 비상체제나 군사국가로서의 임시적 성격으로 국한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민족국가’라는 외연을 통해 외부의 적인 미국을,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한 ‘당’의 령도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도 분명하게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8) 김정일. 1995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9) 이처럼 북한은 민족의 기본권이 인간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존엄에 대한 수호는 배타적 권리로 파악한다. “지금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다. 민족마다 역사와 문화, 생활풍습과 특성은 각이하지만 자기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는 것은 모든 민족의 공통된 념원으로, 지향으로 되고 있다.” 편집국. 2001.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은 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70) 김정일. 199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제2절 새로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호명

1. 민족 담론 생산 · 유통의 다양화

“주체성과 민족성”이 1997년 김정일의 확언을 통해 북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핵심 구호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제 ‘민족’ 개념은 보다 확장된 담론의 공간을 범주화 하게 되었다. 통일론의 영역에서 단일민족의 한정된 논리적 공간에서 “주체사상 - 우리민족제일주의 - 김일성민족 - 주체성과 민족성”으로 이어지는 ‘민족’ 개념의 변화과정을 통해 그 내용과 형식은 보다 구체화 되고 짜임새를 갖추어가면서도, 기존의 북한 이데올로기들과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맺어가며 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8년에 즈음해서는 ‘선군’이라는 화두와의 화학적인 결합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북한에서 민족개념의 이론적 발전 과정은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내외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며 상당한 탄력성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후술하게 될 ‘선군’과 ‘국가’를 매개로 한 논리적 접점은 ‘민족’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힘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서의 동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서 ‘민족’ 담론은 조선로동당을 넘어 신문과 방송을 통한 매체의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및 생산되었고, ‘민족’ 담론을 향유하는 대상 역시 코어의 권력 핵심그룹에서 인민대중 일반으로 보다 확산 유통되게 된다. 1967년 북한판 문화혁명을 통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는 언어의 독점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전미영 2006, 7).

아래 <표 5-3>과 같이 지도자에 의해 생산된 최초의 정치담론은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권력의 핵심부 및 당내 엘리트 등을 대상으로 확산된다. 이들 사이에서 김정일의 연설이나 담화라는 직접적 전달이나 당 기관지 『근로자』 등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새로운 정치담론은 일정기간 동안 논리적 검증과 보완의 기간을 거친다.

<표 5-3> 북한의 정치담론 생산 경로(전미영 2006, 8)

대 상	역 할	역 할 근 거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정치담론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령은 모든 사상 이론 정책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가”
지식인	정치담론의 해석 및 담론의 권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7년 5.25교시를 계기로 지식인의 자율성은 원칙적으로 소멸 지식인은 당국가의 공식담론의 방조자, 해석자의 역할
대중매체 (신문, 방송)	정치담론의 확대·재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은 당 정책의 선전자 역할을 하며, 당국가사회비판의 영역이 전무 신문의 목적: “당의 방침과 정책, 당원들의 투쟁임무를 일상적으로 해설함으로써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지도자의 명제는 지식인이 해석을 통해 보다 견고해지는 한편 내용적으로는 보다 풍부한 확장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결된 새로운 정치담론은 특정한 북한 사회의 변화나 정치적 변수들과 조율을 통해 일반대중에 ‘의미 있게’ 유통되기 시작한다. 이는 물론 1967년 갑산과 숙청 이래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독점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인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 각 소조와 직업군 별로 발행되는 북한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다.

실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민족, 애족, 애국’을 제목으로 하는 『근로자』의 논문은 일 년 평균 10개가량이 수록되었다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17.1개로 양적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김정일의 민족관련 주요노작과 민족주의와 관련한 박사논문이 발표된 시점인 2002년 이후부터는 20개를 상회하는 『근로자』의 ‘민족’ 관련 논문들이 수록되었다.⁷¹⁾ 뿐만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연구』, 『천리마』 등의 조선로동당 기관지 및 북한의 핵심적 사상 저널에서 ‘민족’ 혹은 ‘민족주의’와 관련한 논문들의 증

71) 2000년대 들어 민족 및 민족주의와 관련한 연구들은 저널뿐만 아니라 단행본으로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연구의 수준이 심화되었다. 그 분기점이 된 것이 바로 김정일의 민족주의에 대한 전격적 입장 전환이 반영된 논문의 발표였다. 민족 및 민족주의와 관련한 김정일 및 기타 연구자들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 2002년 2월 26일,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강민화. 2002. 『민족문제에 관한 주체적연구』; 강충희. 2006. 『민족주의의 구현과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김현환. 2003. 『김정일장군 조선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김혜연. 2002.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전개』. 평양: 평양출판사; 조성박. 1999. 『김정일민족관』. 평양: 평양출판사; 최기환. 2003. 『민족과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가가 두드러졌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의 기존 사상관련 이론 서적과 잡지 내에서 민족 및 민족주의 담론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의 급격한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조선로동당의 대중교양잡지 『민족문화유산』의 창간이다. 2001년부터 연간 4회로써 계간지의 형태로 발행되는 『민족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이 편집부 발간사를 통해 잡지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시기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민족문화유산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여 새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부터 **대중교양잡지 <민족문화유산>**을 내오게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당의 문화보존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을 잡지의 사명으로 하여 주시었다.”⁷²⁾

즉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대상을 일반인민대중의 차원으로 확장하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상교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근로자』를 비롯하여 『력사과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연구』, 『천리마』 등 다양한 사상 잡지를 통해 민족 및 민족주의 담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담금질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 열거된 잡지들은 접근에 제한이 있거나 내용이 난해하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선로동당 차원의 의도는 또 다른 매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족문화를 일반대중에까지 널리 수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필진은 일반 학사, 박사, 교수, 부교수, 본사기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 우리 당의 문화보존정책에 대한 해설선전자료,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해설선전자료,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학술자료와 보존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적문제, 력사유적유물들과 명승지들, 우리 나라의 민속, 력사이야기와 전설, 상식,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와 그를 통한 선전교양사업을 잘하고 있는 단위를 소개하는 글과 사진 및 삽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력 독자층이 일반대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채로운 소재와 이미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김정일의 <명언해설>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시를 학습시킴으로써 활

72) 편집부. 2001. “잡지를 내면서.” 『민족문화유산』 제1호.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자를 통한 수령과 인민의 직접적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련의 민족 및 민족주의 담론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민족 개념의 구축의 관성에 따른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지도자의 사상과 이념에서 엘리트들의 제한적 소비와 재생산을 통해 마침내 인민대중에 확대 유통된 것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이 ‘주체성과 민족성’, ‘우리민족제일주의’ 발현이라는 결과로 수렴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김정일 정권의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이론적 변화와 논리적 전개과정은 다음 지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민족주의’ 호명의 배경

김정일은 2002년 2월 26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통해 ‘민족주의’에 대한 현저한 입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미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김일성민족’, 그리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민족’의 개념에 투영시켜온 김정일이 마침내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인정과 적극적 이해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김정일의 ‘민족주의’의 공식적 인정은 ‘민족’ 담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그 관성에 비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민족’의 개념이 상당부분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8월 1일 김일성의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등장한 “진정한 민족주의” 이후에도 ‘민족주의’ 자체를 온전하게 공식적인 담론의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용례는 찾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⁷³⁾

73) 흔히 많은 예로 최정현(1991)은 민족주의를 애국애족의 관점에서 애국주의와 동일시하는 논지의 논문을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에 실기도 했다. 최정현. 1991.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의 발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당시 김일성의 언급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장에서 ‘계급’ 문제와 ‘민족주의’와의 긴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것은 특히 당시 김일성의 담화를 발표한 『로동신문』과 1994년 출판된 『김일성저작집』에 나타난 노작이 서로 불일치 하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즉 1991년 8월 1일의 김일성의 담화는 나흘 뒤인 1991년 8월 5일 『로동신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라 언급한데 반해, 1994년의 저작집에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애국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수정되어 수록되었던 것이다.⁷⁴⁾ 이는 수령 김일성조차도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적 패러다임의 구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웠던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전미영 2003, 194).

이러한 북한 내부의 이데올로기 간 긴장 즉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상충은 유일지배체제하의 북한에서 조차 만만치 않은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 시대에서도 김일성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력해지는데 따르는 긴장이 대구를 이루며 반복되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김정일의 ‘민족주의’에 대한 공식화는 해당 노작의 발표 시점에서도 그 주저함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사실에서 재확인 된다.

예컨대 2005년 출판된 『김정일저작집』 제15권과, 2013년에 출판된 증보판 『김정일저작집』 제14권에 공히 수록된 노작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는 2002년 2월 25일과 28일에 나눈 담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당내에 문건의 형태로 공개된 것은 2005년 『근로자』의 마지막 호에 이르러서였다.

무엇보다 김정일의 해당논문 발표에 앞서, 9·13 인민문화궁전에서 당 중앙위원회 선전담당비서 겸 선전담당부장 정하철과 교육상 김용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 노작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열었던 사실은 ‘민족주의’ 개념을 전면화 하기 전 여론의 완충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⁷⁵⁾ 그에 더해 김정일의 노작 발표 바로 이전 호인 『근로자』의 2005년 제11호에서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라는 전성국의 글을 통해

74) 김일성.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김일성저작집』 제10권. 199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91년 8월 1일.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하신 담화.”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기사.

7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일일·주간 북한통향. 2005년 9월 14일자 조선중앙방송 원문재인용. http://nkinfo.unikorea.go.kr/nkp/argument/viewArgument.do?pageIndex=2&argumentBbsId=3199&tabType=ARGUMENT_DAIL

사전에 ‘민족주의’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먼저 개시한 점 역시 흥미로운 지점이다.⁷⁶⁾ ‘민족주의’가 『근로자』의 제목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91년 이후로 처음이었을 뿐더러, 바로 그 직후에 그것도 3년이나 묵은 김정일의 노작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신중한 북한의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⁷⁷⁾ 이는 최고지도자의 ‘민족주의’ 호명에 앞서, 사전에 ‘민족주의’에 대한 여론과 반응을 감지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는 1997년 김정일에 의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의 노작발표와 비교된다. 김정일의 해당 노작은 1997년 6월 17일의 날짜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2013년 출판된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과 2000년 출판된 『김정일선집』 제14권에서 공히 명시되어 있고, 실제 1997년 6월 21일자 『로동신문』의 3면이 할애되어 전문이 수록되었으며, 그것이 실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된 것도 1997년 7호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거의 해당노작의 완성과 동시에 당내 지도부에 공유되었던 1997년의 김정일 노작 발표와 2002년의 발표 사이에는 다소 간의 온도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유는 1997년의 ‘민족성’의 경우, 그 고유성과 특수성에 입각하여 ‘주체성’과 큰 저항 없이 논리적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데 반해, 그동안 ‘민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르쉴레 민족주의’로서, 제국주의의 반동분자들의 소산이라고 치부했던 자신들의 ‘부정’(negation)의 역사를 ‘재(再)부정’해야 하는 부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시기까지 북한 사회 전반에서 ‘민족 및 민족성’에 대한 강조가 국가의 주도로 활발하게 전개된 결과 ‘민족성’ 자체는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주체성’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민족’의 호명은 국내적으로 강한 이데올로기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1997년의 김정일 노작 발표이후 최근까지도 『로동신문』의 주요사설과 『근로자』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이 새 시대의 구호로써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한다.

이에 반해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추동력이 그 어느 사회보다 강하게 국정을 지배하고,

76) 전성국. 2005.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의 사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77) 『근로자』에서 “민족주의(자)”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김정일의 2002년 노작 발표 이후인 6월호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족주의가 전면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김정일,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여 민족주의의 긍정에 대한 당내 반발을 피하려한 인상을 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도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고 하시였다.” 리정순. 2002.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옹계 살려 나가는 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6호. 평양: 근로자사.

정권 스스로 이데올로기에서 그 정당성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북한이 ‘민족주의’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은 그만큼의 자신들의 부정에 대한 부정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민족주의’에 대한 호명은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의 약화를 감수할 만큼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담지한 결과였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당과 인민대중 일반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의미의 ‘민족주의’의 호명이었고, 일단 호명된 이상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후 북한은 ‘민족’과 ‘민족성’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민족주의자’라는 사실은 부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제약과 모순을 넘어, 보다 완결된 형태로서 자신들만의 ‘민족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시공간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김정일의 ‘민족주의’의 논리를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민족주의’가 아닌 ‘애국, 애족’ 등의 언어로 대체하거나 간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면 응수를 택한 이데올로기적 맥락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3. 김정일(2002),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의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의 등장 이후 『근로자』 등을 비롯한 당 기관지 뿐만 아니라 『로동신문』 사설, 『철학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연구』, 『천리마』 등을 통해 ‘민족주의’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해명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대거 출판되었다. 최고지도자의 언어를 통해 정식화된 북한의 ‘민족주의’는 해당 노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민족 및 민족주의의 개념 정의이다. 둘째, 부르조아민족주의와의 차별성이다. 셋째, 공산주의 및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논리적 양립가능성이다. 넷째, 김일성의 업적과 그것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의 업적이다. 다섯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족주의의 관계이다.

먼저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정의이다. 이미 김일성 시대에 ‘민족’의 개념은 일정한 변천의 과정을 겪은 결과로써 재확인되었다. 즉 “매개민족은 피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사회적집단이며, 여러 계급,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명시되었다. 이것은 김정일의 주도로 1985년에 출판된 『주체사상총서』의 ‘민족’에 관한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⁷⁸⁾ 하지만 마지막에 언급된 계급, 계층 문제를 초월하여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성”을 옹호고수 해야 하며, 그것은 민족성원의 공통된 이해관계임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민족주의’를 정의한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특성과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통성변명을 지향하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심리입니다. 민족성원들의 이러한 사상감정과 심리를 반영한 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다시 말하여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⁷⁹⁾

78) 박일범. 1985. 『주체사상총서: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원리』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79) 김정일. 2002년 2월 26일,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원론적인 주장에 가까워 보이지만 상기한 설명은 김정일의 분명한 ‘민족주의’의 호명이었으며, 또한 ‘애국주의’의 소환이었다. 바꿔 말하면 ‘민족’과 ‘국가’가 동일시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정의와 같이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인데 그것이 곧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이 민족 국가를 단위로 진행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는 명제는 그러한 북한의 입장의 재확인에 다름 아니었다.⁸⁰⁾

둘째, 부르조아민족주의와의 차별성이다. 민족주의의 발생 자체는 진보적인 것이지만,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근대화시기, 예외적으로 ‘인민대중’의 이익이 ‘신흥부르조아지’의 민족주의적 기치가 민족공동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일치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혁명의 승리 후, 그들이 스스로 ‘반동적지배계급’이 됨으로써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으로 위장하게 되면서 ‘민족주의’ 자체가 ‘민족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르조아사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진정한 민족주의’와 ‘부르조아민족주의’를 구별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민족주의’의 대척점으로 ‘민족리기주의, 민족배타주의’ 그리고 ‘대국주의’를 명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김정일의 이러한 설명이 ‘민족주의’에 대한 구별로서 ‘진정한 민족주의’와 ‘부르조아민족주의’를 상정했다는 사실이다.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정의 자체는 1985년 『철학사전』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1985년 당시의 ‘진정한 민족주의’의 자리는 ‘피압박민족부르조아지의 민족주의’가 차지하고 있었다.

“민족주의는 민족배타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제국주의국가의 부르조아민족주의와 피압박민족부르조아지 민족주의로 갈라진다. 제국주의국가의 부르조아민족주의가 다른 민족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기의 계급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피압박민족부르조아지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계급적 이익과 지배를 실현하려고 한다. 식민지예속국가 민족부르조아지의 반제적 측면이 인민대중의 반제민족 해방투쟁과 결합될 때 그것은 일정하게 진보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부터 노동계급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민족부르조아지와 동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과 동요성을 고려하여 노동계급의 당은 그들의 부정적 측면과는 투쟁하는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80) 리금옥. 2006. “민족주의본질에 대한 과학적해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3호; 정 심. 2007. “민족주의에 대한 주체적리해의 독창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호.

즉 ‘민족주의’ 자체의 부정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정한 조건 즉 ‘식민지애속국가 민족부르조아지의 반제적 측면이 인민대중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결합’ 될 때 ‘진보적 역할’ 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계속해서 견제해야 한다는 전제는 따르지만, 2002년 김정일의 ‘민족주의’ 에 대한 호명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반제국주의’ 의 명분하에서의 ‘진보적 역할’ 을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기서의 진보성은 바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상” 그 자체이다(표광근 2006, 19).

셋째, 공산주의 및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논리적 양립가능성이다. 김정일은 “공산주의는 노동계급의 이익과 함께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이며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 임을 명시했다. 민족주의 자체도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애국애족의 사상” 이며 “애국애족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에 공통적인 사상감정” 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애초에 공산주의가 근로인민 즉 노동자 계급의 구현이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와 민족의 소멸 가능성까지 예견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전통에 비추어볼 때, ‘노동계급의 이익’ 에 ‘민족의 이익’ 이 ‘추가된’ 것이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가정에서부터 양자가 결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김정일의 ‘민족주의’ 에 대한 전면적 호명에 앞서 ‘선행리론의 제한성’ 등을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제기되었음은 물론이다.⁸¹⁾

따라서 위와 같은 김정일의 설명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과 ‘민족주의적’ 인 개인적 성향, 그리고 정권 수립초기 조선로동당 규약의 최고 강령 설정 문제 등의 반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공통분모를 의식적으로 명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넷째, 김일성 업적과 그것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의 업적이다. 김정일은 ‘민족주의’ 에 관한 해명의 시원을 김일성에서 찾고 있다. 그 근거로서 먼저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해명” 을 했으며, ‘주체의 민족관’ 을 정립했다는 것을 들었고, 다음으로 민족주의자들을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의 위업에 협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예

81) 2005년 김정일의 민족주의 노작이 공식발표 되기 전, 북한의 매체에서 민족 관련 선행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기되었다. “민족성고수문제를 선행한 리론에선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고 국제적연대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민족성은 세계혁명의 과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나아가 인과관계로까지 주장되고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민족성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사회주의혁명도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김옥녀. 2004. “민족성고수에 대한 선행리론의 제한성.” 『정치법률연구』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로 김구와 최덕신을 꼽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독립’과 ‘번영’을 위한 업적을 근거로 수령이 “가장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시면서 절세의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였다는 설명이다. 김정일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도 역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가 되자면 열렬한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는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인민,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이며 진정한 민족주의자, 열렬한 애국자**입니다.”

김정일은 ‘공산주의자=민족주의자=애국자’의 등식을 완성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와도 일치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혁명적수령관, 혁명적동지에 등 기존의 북한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도덕적 정당성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의 부모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수령의 “애국, 애족, 애민”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은 “광폭정치”를 통해 “애국”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섯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이다. 북한의 전통적 논지전개의 방식인 이항대립의 설정이 김정일의 ‘민족주의’ 호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다만 이전 시기에 사회주의가 혁명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반제국의 기치는 사라지고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주된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반제국주의 노선은 북한이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주의의 정권의 정체성으로서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반제국주의는 ‘선군’이라는 물리적 담보로써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민족-애국-선군’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외부의 적대적 환경으로서의 기능이 부여되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제국주의는 ‘지배주의적 야망’ 실현을 목적으로 ‘세계화’와 ‘일체화’의 책동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제국주의자들이 “자주적인 민족 독립국가건설리념이나 조국애, 민족애 같은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적편견>이며 <세계화>, <일체화>가 시대의 흐름”이라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미국식 <자유세계>, <민주주의세계>”와 동치 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살리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한 투쟁”을 해야 하며 그러한 맥락에

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하여 자주 강조하는 것도 민족성을 살리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⁸²⁾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족주의의 관계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지면이 할애된 ‘통일’ 관련 부분은 2000년에 진행된 6.15 남북공동성언에 기초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조국의 통일이 ‘우리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고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지향’이라는 설명과 함께, “북남공동성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는 언명을 담고 있다.⁸³⁾

요컨대 총 6개의 ‘민족주의’의 주요 설명은 북한에서 ‘민족·민족주의’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해명이기도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호명은 김정일 스스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민족’과 ‘민족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 ‘주체성과 민족성’에 이르는 개념사의 축적을 토대로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담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호명되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이다.

‘민족주의’의 호명은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장 이후인 1990년에 가서도 여전히 부정되었다. 1990년 1월 1일 김정일의 신년사인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에서 “우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고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민족주의’를 부정한 데 비추어 볼 때, 1986년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장 이후 3년이 넘는 1990년 초반까지도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체에 대한 내부적 동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고심은 중국의 경우와 대비할 때 보다 뚜렷해진다. 중국의 1990년대

82) 북한이 말하는 ‘세계화’에 대한 강한 반발은 다음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국주의자들이 <국경 없는 세계>, <세계문화>이니 하면서 <일체화>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것은 결국 저들의 반동적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썩어빠진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이다. 방대한 정보통신수단들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총 동원하여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은 전 세계를 서방화하여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말살하려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이다.” 편집국. 2003.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8호. 평양: 근로자사; “오늘 미래는 <세계화>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더욱더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 악랄성과 교활성은 특히 정보제공전달시간이 매우 빠른 인터넷망을 통해 썩어빠진 양키식문화와 생활양식, 가치관을 전파하여 사상문화침략의 도수를 날로 높이고 있는데서 표현되고 있다.” 주진구, 2004.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중요한 요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83) 이 시기의 ‘민족’ 및 ‘민족주의’와 ‘통일’, ‘애국주의’, ‘애국애족’과의 관계, 그리고 ‘민족’ 및 ‘민족주의’와 ‘선군’과의 관계는 이하의 지면에서 보다 상술하겠다.

‘애국주의’ 고양은 중화민족의 영광을 소환하여 현재적 중국 인민의 동원과 결집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애국주의’의 영광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중국 정권은 ‘민족주의’라는 직접적 용어를 사용할 필요로 부터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북한의 경우 식민지의 지배 경험과 한국전쟁 등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에 버금가는 역사적 상처의 조건이 분명한 상황에서 소환할 수 있는 ‘과거의 영광’은 너무 먼 것이거나 또는 너무 취약한 것이었다. 북한이 국호로서 조선을 사용하면서도 조선왕조의 역사 보다는 고려의 역사에 보다 천착하고, 통일의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신라보다는 고구려의 역사를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북한의 고민을 짐작케 한다.⁸⁴⁾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국가의 주도로 ‘민족주의’를 정치적 동원의 기제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과는 달리 단순한 ‘애국주의’의 강조가 아닌 ‘민족주의’ 자체로서 ‘민족’을 재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민족주의’ 호명은 ‘민족국가’로서의 ‘민족재건설’ 과정에서 필연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에로의 분명한 인정과 호명을 통해, 명실 공히 북한의 ‘국가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충실한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도구이자 국가권위의 그 자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방위 및 수호’의 논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논리적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84) 삼국통일의 주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신라가 아닌 고려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1990년 『조선중앙연감』의 국내편 역사 부분에서는 신라가 “외세를 끌여들여 동족을 멸망시킨” 장본인이라 지적한 다음, 남한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로 구분하는 것과 배치되는 방식, 즉 발해 및 후기신라시대라고 지칭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자료는 김정일의 연술을 빌려와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지향은 10세기 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편집부, 『조선중앙연감』 국내편 역사.

4. ‘민족’의 대서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1)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작배경

김정일은 1960년대 선전선동 및 조직지도부에서의 경험을 시작으로 북한의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주체사상 및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에 있어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의 활약상은 그의 정치적 권력 부상과 궤를 같이 했다. 1980년 제6차 조선로동당대회 이후 대내외에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보다 공고화 했던 김정일은 유일지배체제에 더해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혁명적수령관’ 등을 심화시켜나가는 한편, 이를 자신의 전문 분야인 문화예술 전반에 순차적으로 적용해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논리적 정교함을 갖추어 나갔다. 그 결과는 ‘주체문학론’, ‘주체무용론’, ‘주체미술론’, ‘주체영화론’, ‘주체음악론’ 등으로 집대성되었다. 특히 그와 같은 김정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는 철저한 국가 중심의 ‘언어독점’에 바탕하고 있었다. 1967년 갑산과 숙청과 함께 이른바 북한식 문화혁명에는 특히 김정일에게 문화예술부문의 배타적 권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거세된 북한의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의 전 영역에서 오직 ‘국가의 언어’만이 허락된 조건은, 당연히 국가의 정치적 동원과 설득의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되어 훌륭한 문화예술 작품은 곧 정치적 의도의 반영에 다를 아닌 것이 되도록 했다. 김정일은 그와 같은 문화예술 작품의 ‘주제’와 ‘상징’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인민대중에의 ‘국가’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수단으로서의 ‘종자론’이 지닌 효과이기도 했다. ‘국가’와 ‘당’이 사상계 급교양의 직접적 전수나 설득 이외에 특정한 정책이나 혹은 새롭게 던져지는 시대적 화두는 인민대중 전체에 ‘문화적 코드’를 통해 보다 쉽게 감성적으로 수렴 및 내재화된다. 복잡한 이데올로기의 변증법적 논리 구조의 설명이나 자기모순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부담을 피해 말과 글이 아닌 서사와 음악, 미술, 공연 등의 메타포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함축하여 인민대중에 전해지는 것이다. 결국 결정적인 작품에 심어진 종자를 통해 정권과 지

도자는 대중에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고, 그것은 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로 이어져 권위의 정당성 구축에 기여한다.

정치와 문화예술 영역의 유기적 메커니즘에 대해 정통했던 김정일은 자신의 경험과 조직력을 토대로 탈냉전기 두 차례 북한 문화예술부분에 큰 족적을 남긴다. 그 하나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이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 ‘종자’가 바로 ‘민족’에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김정일의 ‘민족’ 중심의 인민대중 사상교양을 위한 선전선동의 대표적 예술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꼽을 수 있다. 앞선 장에서 상세히 다룬 바와 같이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완전한 구현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100여 편에 달하는 시리즈와 제작 규모를 자랑하는 자타공인 ‘대작’이었다.

한편 1990년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북한의 종합문화예술 장르인 영화를 통해 ‘민족’ 문화의 대세를 리드했다면, 2000년대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결합을 통해 ‘강성대국’과 ‘민족’적 서사를 구현했다.⁸⁵⁾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2001년에 기획되어 약 1년 만인 2002년에 초연에 성공하는데, 바로 그 2002년은 북한에 여러 의미로 중요한 해였다.⁸⁶⁾ 김일성 탄생 90주년, 김정일의 60회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기 때문이다.⁸⁷⁾ 뿐만 아

85) 북한의 집단체조에서 ‘아리랑’과 같이 민족적 색채가 짙은 제목으로 공연된 예는 없었으며 ‘아리랑’은 정치사회적으로 민족적 문제를 통해 반회세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체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작품이다(황경수 2008, 224). 한편 재일 북한 무용가 리미남(2002)은 4월 18일자 로동신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아리랑’ 축전을 상술하고 있다.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 제1차부터 20차까지 세계 5대륙 8백여나라, 1만 2천여명의 외국 예술인들과 해외 동포 예술인들이 참가하였고, 세계적인 명배우들만 하어도 1,500명이나 참여하였으며 관람자수는 180여만 명에 달한다.”

86) 김정일은 2002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앞두고 1월 1일과 3일에 각각 조선인민군 지휘성원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단장과의 담화를 나누었다. 2002년 1월 3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음악예술부문에서 민족성을 고수해나갈데 대하여”와 2002년 1월 1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단장과 한 담화.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천만군민을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로의 노작으로 기록된 두 건의 노작은 ‘김일성 수령 탄생 90주년’과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배경으로 예술공연에 대한 군 부문의 김정일의 교시가 내려져 있다. 두 개의 노작 모두 2013년 증보판 『김정일선집』 제21권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먼저 1월 1일 신년사는 “민족음악과 민속무용을 장려하는 것은 앞으로 북남간에 대화와 접촉을 많이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 나는 올해에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만나는 기회에 민족음악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하려고 합니다”는 언급을 통해 개선된 남북관계를 의식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1월 3일 담화문에서는 반제국주의의 교양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자는 모두 음악과 예술부문에서 ‘민족성을 고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

나라 김정일의 <민족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할데 대하여>라는 핵심노작이 집필된 해이기도 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민족주의가 전면화 되던 해였기 때문이다. 공연의 제목인 <아리랑>은 이전까지 북한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들이 ‘로동당’, ‘수령’, ‘혁명’ 등의 상징을 작품화 한 것이었음에 비해 ‘민족’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전영선 2002b, 133). 애초에 이 해당작품의 제목이 <첫 태양의 노래>였던 것이 <아리랑>으로 변경된 것은 바로 김정일의 직접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⁸⁸⁾ 김정일은 김일성 수령의 생일인 4월 15일의 초연을 시작으로 3회에 걸친 ‘아리랑’ 공연의 관람 후, 아래와 관련한 노작을 내놓았다.

“나는 창작가, 출연자들이 세운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줍니다. [...] 나는 이번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요 <아리랑>을 **종자로 하여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문제를 우리 혁명의 역사와 결부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가 비껴있는 비애와 눈물의 <아리랑>이 우리 시대에 와서 **민족적금지**와 **랑만, 혁명적기상이 넘치는 선군<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⁸⁹⁾

위와 같이 김정일은 ‘아리랑’에 대한 성과와 업적을 치하함에 있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정부’의 권위를 소환했던 것이다. 이름 그대로 ‘당-정-군’ 즉 ‘국가’ 전체의 이름으로 ‘아리랑’에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하명한 공연제목은 실제 오랜 역사를 가진 대

87)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이하여 창조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같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훌륭한 문화예술 작품이 나온 것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일”로 평가했다. 김정일. 2002년 8월 15일. 김일성상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결작이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88) 작품 제목 변경과 관련해서 전영선(2002, 133)은 리철우의 증언을 보도한 연합뉴스의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고 있다. 리철우는 공훈예술가이자 윤이상음악연구소 부소장,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의 공연기획자이기도 하다.

“집단체조 ‘아리랑’원제는 ‘첫 태양의 노래.’” 『연합뉴스』 2006년 7월 29일자 보도. 검색일. 2017년 3월 3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370766>

89) 김정일. 2002년 8월 15일. 김일성상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결작이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표적 전통 민요 아리랑의 ‘민족’적 요소를 ‘종자’로 하되, “민족의 운명문제”를 “우리의 력사”와 결부 지을 것을 명시했다.⁹⁰⁾

2002년, 2005년, 2007~2013년까지 총 9년에 걸쳐 공연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10만 여명의 인원이 대규모로 작품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규모를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전영선 2011, 41).⁹¹⁾ 또한 2014년에는 2012년 남한에 이어 세계유네스코에 ‘아리랑’이 지정되면서 그 예술성과 의의를 인정받았다.⁹²⁾

기존의 집단체조는 북한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산하 ‘집단체조창작단’에서 지도해왔으나 ‘아리랑’ 공연의 경우 총괄부서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아닌 내각 산하 문화성이었다(박영정 2007, 49; 김양희 2014, 131).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산주의계급교양을 주목적으로 하던 기존의 ‘집단체조’ 이상의 목표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⁹³⁾ 다시 말해 고정된 내용과 구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체조를 청소년들에게 단순하게 반복, 훈련시키는 역할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달리, ‘집단체조창작단’의 역할은, 북한뿐 아니라 사회주의 일반에서 체제 정당화의 중요한 선전도구로서, 창조적·예술적·집단적 기능을 담보하여 보다 높아진 위상을 잘 보여준다. 아래와 같이 김정일은 집단체조형식

90) 2000년 초반 시기에 김정일의 ‘종자론’의 강조와 그 반영에 대해서는 전영선(2002, 142-143)의 연구를 참고할 것.

91) ‘아리랑’공연은 대체로 평양시에 위치한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이루어졌으며 티켓의 가격은 일반석 50유로에서贵宾석 300유로선으로 책정되었다. ‘아리랑’공연의 총괄 책임자 송석환 문화성 부상은 2007년 시점에 “향후 아리랑 공연을 연례화 할 계획”임을 밝혔고 실제 이후 6년간 연례적으로 공연되어 왔으나(평화문제연구소 2007, 45), 2014년과 2015년의 공연은 취소되었다.

92) 유네스코는 ‘아리랑’의 역사적 의의와 상징성에 주목하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켰다. 물론 유네스코가 ‘아리랑’공연 전체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채로운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www.unesco.org/culture/ich/en/RL/arirang-folk-song-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00914>

93) 김정일은 1987년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급부상하던 시기에 즈음하여 ‘집단체조’와 관련한 노작을 내놓은 바 있다. 김정일은 노작을 통해 ‘집단체조’의 기본 목적과 정치사상적 의의, 계급적 효과 등을 개괄하고, 체조대, 배경대, 음악 등 집단체조의 3대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시를 포괄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집단체조는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 체육적기교가 잘 배합된 종합적이며 대중적인 체육형식입니다. 집단체조를 발전시키는 것은 청소년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 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특히 집단체조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력과 함께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줍니다. [...] 집단체조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시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김정일. 1987년 4월 11일. 집단체조창작가들과 한 담화.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제12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에 더해 예술공연형식이 결합된 형식으로서의 작품 형식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집단체조형식과 예술공연형식**을 다 잘살리면서 조화롭게 결합시켜 인류문화예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대성공작입니다. [...]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결합시키지 않고 순수 집단체조나 예술공연만으로는 오늘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우리의 창작가, 출연자들은 체육과 예술을 배합한 작품창작에서 **당의 요구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였습니다.”⁹⁴⁾

즉 <아리랑>은 상기와 같은 기조에 따라 집단체조가 예술공연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라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특성이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원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장점을 각각 살려 종합적 공연예술의 형태로 재탄생했다(박영정 2007, 48-50). 이렇게 완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선전교양적 힘에 대해 김정일은 “그 어떤 형태의 문화예술작품이나 몇천몇만부의 강연제강”보다 위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래는 김정일의 견해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리는 <아리랑>공연을 평양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인민군대의 비행사들과 최전연초소군인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초소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탄광, 광산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광범히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아리랑>공연을 6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공연을 보겠다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공연기일을 연장하였으며 **<아리랑>열차를 편성하여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방의 관람자들이 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리랑>공연을 **400여만명**의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 해외동포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았는데 모든 관람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⁹⁵⁾

위와 같이 김정일이 직접 공연의 관람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아리랑 공연이 “커다란 감화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민족적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데

94) 김정일. 2002년 8월 15일. 김일성상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결작이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95) 김정일. 2002년 8월 15일. 김일성상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결작이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있었다. 공연을 직접 관람한 군인들과 인민들이 가질 정서적 감화와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은 김정일의 분명한 기획의도와 그 선전선동 효과의 인과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일부 핵심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방의 관람자들” 까지 관람하도록 하면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 직접 편성했다는 “〈아리랑〉 열차”는 김정일의 광폭정치의 실현이자 적극적인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사후적이거나, ‘고난의 행군 - 〈광명성1호〉 개발 - 통장훈 - 인민경제 약화’ 라는 일련의 위기극복 정책과 그 과정에서 강요된 인민 희생을 담보로 하는 동원정책 등의 정치적 딜레마를 공연의 형식을 통해 풀어냄으로써, 인민대중으로부터의 설득과 지지 확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리랑〉 공연은 그 자체의 수준은 물론 관람객의 수와 범위의 측면에서, 김정일의 언술과 같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북한에서 자체 평가되었음은 물론이다.

2)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구성과 정치적 함의

김정일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세 번 관람 후 ‘나무랄데 없이 성공한 작품이며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작품’이라고 극찬했다.⁹⁶⁾

2002년 초연된 〈아리랑〉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2002년 8월 15일 김정일은 자신의 노작을 통해 〈아리랑〉 관람 후기를 전하며, 각 장과 경, 그리고 해당 노래에 대해서도 세세한 평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의 2003년 『조선중앙년감』은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 〈아리랑〉’의 2002년 6월 ‘김일성상’ 수상사실을 기록하면서 공연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을 간략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각 장면에 전개되는 실제 공연과 그 것이 상징하는 메타포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함으로써 〈아리랑〉의 제작 의도와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96) 김정일. 2002년 8월 15일. 김일성상개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결작이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표 5-4> 2002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구성

구분	목차	노래
환영장	-	반갑습니다
서장	아리랑	아리랑
제1장 <아리랑민족>	1경 두만강 넘어	조선의 별
	2경 조선의 별	동지애의 노래
	3경 내 조국	사향가, 빛나는 조국
	4경 우리의 총대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제2장 <선군아리랑>	1경 내 조국의 밝은 달아	내 조국의 밝은 달아
	2경 활짝 웃어라	장군님과 아이들
	3경 내 나라의 북소리	이 강산 하도 좋아, 흥하는 내 나라, 더 좋은 내일로
	4경 인민의 군대	영원한 심장의 노래,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제3장 <아리랑무지개>	1경 인선남폭포	금수강산 내 나라, 그네 뛰는 처녀
	2경 행복의 락원	추억의 두만강
	3경 오직 한마음	오직 한마음
제4장 <통일아리랑>	-	아리랑, 우리는 하나
종장 <강성부흥 아리랑>	-	강성부흥아리랑, 김일성장군의 노래

출처: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조선중앙년감』 2003년; 전영선(2011).

2003년에 출판된 『조선중앙년감』의 <아리랑> 공연에 대한 소개를 이하와 같이 요약했다.

서장은 배경대에 붉은 태양이 솟아 오르고 <아리랑>이라는 공연의 제목이 새겨지는 것을 시작으로 공연의 출발을 알린다.

제1장 <아리랑민족>의 제1경 <두만강을 넘어>는 ‘눈물 젖은 두만강’의 선율을 따라 20세기 초 민족이 비극을 잘 묘사하고 있고, 제2경 <조선의 별>은 새별이 유난히 빛을 뿜 내며 세찬 불길로 봉화대에 솟아 오르는 모습을, 제3경 <내 조국>은 ‘사향가’와 ‘빛나는 조국’의 노래 가락에 따라 ‘조국광복과 공화국 창건의 역사’를 상징하였으며, 제4경 <우리의 총대>는 수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권총 두 자루로부터 오늘날 북한의 최강 무력을 고수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사수했다는 긍지를 상징한다.

제2장 <선군아리랑>의 제1경은 김정일의 현지시찰, 제2경 <활짝 웃어라>는 ‘장군님과 아이들’의 노래 가운데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제3경 <내 나라 북소리>는 배경대에 <천

지개벽>이 새겨지면서 ‘토지정리사업’을 형상화하고 <더 높이 더 빨리>에서는 교예 및 룬 예술 체조를 통해 정보사업시대와 과학기술발전상을 그렸으며, 제4경 <인민의 군대>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기상과 담력을 과시하는 장면으로 자위의 군대이자 인민의 군대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제3장 <아리랑 무지개>의 제1경 <이선남폭포>는 전설속 선남들이 아름다운 민속무용을 통해 삼천리강산의 조국의 대화폭을 담았고, 제2경 <행복의 락원>은 교예와 체조장면을 화려하게 삽입했다.

제4장 <통일아리랑>에서는 쓸쓸한 ‘아리랑’의 선율에 분단된 한반도와 콘크리트 장벽, 군사분계선이 배경대에 그려지고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강조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선율에 맞게 ‘우리 민족은 피줄도, 언어도 하나, 땅도 풍습도 하나’임을 강조하는 배경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종장 <강성부흥아리랑>에서는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속에 경축의 축포가 터지는 동시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면서 공연은 막을 내린다.

요컨대『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북한이 밝히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전체적인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 민족사에 극적사변들로 새겨진 조국광복과 《고난의 행군》의 승리를 두개의 큰 역사적봉우리로 설정하고 기본주제해명에 형상의 초점을 돌렸다. 후반부에서는 **선군정치아래 펼쳐 지는 전변의 현실**을 보여 주면서 **태양민족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 오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확증하는데 형상창조를 지향시켰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요구와 감정정서에 맞게 중심을 오늘의 시대, 선군시대로 정하여 사상주제적과제를 현실적의의가 있게 풀이하였다.” (조선중앙년감 2003).

전반부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규명으로서, 민족사에 있어 과거의 양대비극은 일제강점기와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의 극적인 사변과 역사의 반전은 조국광복과 고난의 행군의 종식으로 된다. 후반부는 현재 정책의 의의와 미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각각 선군정치와 태양민족으로서의 미래가 그것이다.

2002년의 초연에 2005년과 2007년 이후에 공연이 이어지면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해당 시기의 중요한 정치적 화두와 관련하여 수정 보완을 거친다.⁹⁷⁾ 이는 특

97) 김양희(2014, 139)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아리랑>은 다음과 같은 내용적 변화를

히 공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물질적 요건을 “국가적인 대책”을 통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김성모 외 2002, 40). 따라서 국가의 의도에 의해 ‘선군’과 ‘태양민족’이 그 ‘종자’로 상정되는 <아리랑>이 지닌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난의 행군’을 종식하고 ‘강성대국’, ‘선군정치’로 빛나는 부흥의 역사를 대내외에 알려 상처받은 국가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했다. 고난의 행군을 종식하고 강성대국이라는 정상국가이자 발전된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포기했지만, 자신들은 수령의 령도와 체제의 우월성을 무기로 엄중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분명한 의미의 사회주의 성공사례로서 자부심을 갖고자 했다. <아리랑> 공연의 전체적인 테마는 태양장군 김정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었고, 지도자 김정일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령도하는 수령이자 신화 그 자체로 그려졌다. 초연된 2002년 4월부터 8월의 시점까지 김정일의 주장대로 400여명이 관람하도록 한 것은 그 선전성을 잘 보여준다.⁹⁸⁾ 더욱이 당시 한일월드컵 경기와 맞물린 공연의 시점은 오히려 한반도의 체육문화의 상징성의 측면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며 긍정적인 이미지 재고에 기여했던 것이다.

거쳐 왔다. 먼저 2005년에는 제1장 4경의 인민군 위력 시위의 장면이 삭제되고, 중국의 호금도 주석이 김정일과 함께 <아리랑>을 관람하는 때에 맞추어 두 나라의 깃발과 ‘우의’, ‘축원하노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중국’, ‘추억 깊은 조종친선 영원하라’의 문구가 배경대에 새겨졌다. 두 번째로 2007년의 공연에서는 수정이 사례가 보다 다양해진다. 남북정상회담의 일환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아리랑>관람에 맞추어 ‘서장’을 삭제하는 대신 출연진들이 노대통령을 환영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종장’에서는 ‘영원히 번영하라 조선로동당’, ‘영광스런 조선로동당’,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을’ 등의 배경대 문구가 빠지고, 제2장 6경의 ‘인민의 군대’를 ‘아리랑 민족의 기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환영장의 시작을 ‘반갑습니다’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로 교체했으며, 제1장 2경에 가요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이 추가되었다. 제3장 1경에 민요 ‘양산박’이 추가되었고, 전설상의 금강산 8선녀가 북한의 ‘선국8경’에 강림하는 장면, 제2장 5경에 노래 ‘준마처녀’와 ‘녕변의 비단처녀’가 더해졌다. 제4장 ‘통일 아리랑’의 배경대 자막에 ‘조국통일’ 문구가 추가되었고 제1장 1경의 제목 ‘두만강 넘어’에서 ‘정든 고향 뒤에 남기고’로의 변경이 있었으며, ‘눈물젖은 두만강’ 노래는 ‘타향살이’로 바뀌었다. 세 번째로 2008년에는 영변처녀들의 비단짜는 모습이 독자적 장면으로 분리되었고, 제2장 5경에 ‘녕변의 비단처녀’라는 제목으로 삽입되었다. 네 번째로 2010년에는 제5장 ‘친선아리랑’이 추가되고, 판다와 중국의 민족의상을 입은 무희가 등장하였다. 또한 ‘CNC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2011년에는 제2장 4경의 과수업, 양어업의 성과가 강조되었고 중국어 대사와 카드 섹션까지 등장한다.

98) 김정일. 2002년 8월 15일. 김일성상개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결작이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둘째, 정치적 상징과 메타포를 활용한 외교적 메시지 구현과 그 활용이다. 대표적으로 남한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다. 먼저 남북관계의 사례인 2007년의 공연 재개와 내용의 수정을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관람 당시에 서장을 삭제하고, 대신 노 대통령을 북한인민이 환영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종장’에서는 ‘영원히 번영하라 조선로동당’, ‘영광스런 조선로동당’,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을’ 등의 배경대 문구가 빠지고, 제2장 6경의 ‘인민의 군대’를 ‘아리랑 민족의 기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제4장 ‘통일 아리랑’의 배경대 자막에 ‘조국통일’ 문구가 추가되었다. 북중관계에 있어서는 그 보다 민감하고 적극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먼저 2005년 제1장 4경의 인민군 위력 시위의 장면이 삭제되고, 중국의 호금도 주석이 김정일과 함께 <아리랑>을 관람하는 때에 맞추어 두 나라의 깃발과 ‘우의’, ‘축원하노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중국’, ‘추억 깊은 조종친선 영원하라’의 문구가 배경대에 새겨졌다. 2010년에는 제5장 ‘친선아리랑’이 추가되고, 판다와 중국의 민속의상을 입은 무희가 등장했으며 이듬해 2011년에는 중국어 대사와 카드 섹션까지 추가되었다. 후진타오의 2005년 방북 당시에 추가된 내용이 일시적이었다면, 2010년의 공연은 완전히 하나의 장이 추가된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민족’ 공연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외교적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집단체조의 참여와 예술공연 직관을 통한 새 시대의 인민대중의 정치참여와 권위의 정당성 확보이다. 1990년대 인민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 담론의 사상교양은 100편을 제작목표로 삼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담당했다면 2000년대는 바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⁹⁹⁾ 두 작품의 정치사상적 의의는 2016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제1비서가 발표한 사업총화 전문에서도 잘 드러난다.¹⁰⁰⁾

99) 냉전이 종식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효성과 타당성 자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설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인식에 바탕해 있다. 먼저 사상, 자주성 문제에 대해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근로자 리영선(2006년 5호), 근로자 서춘봉(1998년 3호)의 글이 근거가 된다. 둘째, 군대 문제를 틀어쥐지 못해서 국가와 연방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2003년 1월 29일의 김정일 노략과 김철우(2000, 53)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민족문제와 민족들의 제 요구를 수렴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5년 6월 19일, 1994년 10월 6일 노작, 근로자 편집부(1997년 8호), 근로자 박현규(1995년 11호)가 근거가 된다.

100) 36년 만에 부활한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김정일은 상당한 분량의 사업총화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두 작품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총결기간 인민군대에서 선군문화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 국가의 자랑인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혁명적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주체문학예술의 성공작으로,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작되고 군인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온 사회에 혁명적광만이 넘치게 되었습니다.”¹⁰¹⁾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민족’을 핵심적인 화두로 삼고 인민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양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령-당-인민-민족-국가’의 연결은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동일시하도록 했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될수록 ‘국가’ 외연의 정체성도 그에 비례하여 강화되었다. 그러나 100여 편에 달하는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되는 동안 소재의 고갈과 제작비용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고, 제작 및 상영의 초기 단계와 달리 선전선동의 효과는 후반으로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영화라는 매체는 김정일이 자신한 것처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관객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사상교양 수단이지만, 동시에 일방적인 영상이라는 단점은 ‘교감’을 통한 ‘소통’이나 ‘참여’에 따른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난의 행군’을 타계하고 ‘강성대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자 했던 김정일에게 인민대중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사상교양의 일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 바로 <아리랑>이었던 것이다. 즉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결합이라는 방식은 북한 특유의 절충적이고 종합적인 멘탈리티가 문화예술 및 체육부분에도 적용된 것이다. 집단체조의 ‘집단주의적 사상교양’의 효과는 ‘예술공연’이 지니는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과 결합하여 보다 심미적인 파급력을 담보할 수 있었다. 더욱이 10만 여명의 전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점은 그동안 항일무장투쟁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결여한 새 세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했다. 공연 참가자들은 직접적인 ‘정치’에의 참여를 통해 ‘높은 정치사상적 자부심’ 즉 정치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김정일은 특히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포상으로 컬러 TV를 제공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추구했다. 특히 포상으로 받은 TV는 단순한 ‘포상’ 이상의 정치적 효과까지 담보했다. 공연에 참가했던 개별 청소년들이 폐막 후 각 가정으로 돌아가 TV를 상영할 때, 총 천연의 세상을 관람하게 되는 시청자는 곧 김정일 정권의 광폭정치와 우월함에 대해 자연스러운 감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101) 김정은. 20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당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보도.

요컨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여는 강성대국 북한이 야심 차게 선보인 ‘민족적’ 사상교양 수단이자 외교적 기능을 담당한 복합적 작품이었다. 물론 그것이 김정일 사후 지속되지 못하고, 인권문제, 경제난, 공연 자체의 정치적 자극성의 약화 등을 이유로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10 여년의 기간 동안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했던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는 작품 전반의 메타포, 상징을 통해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통일과 민족재건설의 딜레마: ‘우리 민족끼리’의 양면성

김정일의 민족의 기본징표 즉 민족의 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볼 것이냐 충분조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남북한 통일관에 미치는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조건을 포괄적·통합적 관점에서 광범하게 적용할 경우,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 통일의 당위론과 부합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글이라는 동일한 말과 글을 사용하고, 한반도라는 공통된 영토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군을 시조로 하는 고조선의 이래의 공통된 역사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단일민족이라는 혈연의 공통성에 이르는 민족의 징표야말로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직접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제는 굳이 언급 않아도 되는 당위적 기정사실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일성의 민족의 징표를 민족에 대한 충분조건으로 볼 경우, 즉 배타적이고 엄밀하게 적용시킬 경우 상기한 논리적 귀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1985년에 『주체사상 총서』 제2권 사회역사적원리 편, 『정치사전』, 『철학사전』에서 일제히 정의되고, 2002년에 와서 김정일에 의해 재확인되었던 북한의 ‘민족’ 개념의 요건인, “피줄, 언어, 지역(영토), 문화생활”의 공통성이 모두 동시에 만족될 때만이 ‘민족’ 즉 ‘한민족’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면, 그 인과적 결과에 대해서 쉽게 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민족 개념의 규정과 그 적용의 결과가 불일치 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볼 때,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당위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적 단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통일의 당위론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

상기와 같은 논리는 다음과 같이 현실적 문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피줄’에 있어서,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지는 사회주의 백두혈통의 역사를 달리하는 있는 민족의 상황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점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사회를 장려하는 남한의 사회분위기를 지적하며, 혈연적 단일성을 해치는 남한에 대해 북한이 비난을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언어의 공통성 문제이다. 남한의 무분별한 외래어 및 한자의 유입과 무조건적인 영어의 사용과 친미 사대적 언어 왜곡으로 인해서 언어의 공통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 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셋째, 지역의 공통성 문제이다. 이는 분단의 고착화와 단절된 생활의 지속,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보다 심화되고 있다. 넷째, 문화생활과 관련해서는 경제생활의 공통성 문제가 민족의

요건에서 비록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토대로부터의 상부구조에 대한 영향력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현실의 반영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즉 상반된 정치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해온 남북한이 현실적 시점에서 ‘통일의 조건’으로서 문화생활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반통일적 입장의 다름 아닌 논리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의 민족 개념의 정의는 오랜 세월동안 다듬어지면서 1985년에 지금의 형태로서 완성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지니는 양면적 혹은 절충적 성격으로 인해 통일문제와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상당한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 역시 누적해 왔다. 이는 북한에서 ‘민족’이 ‘주체’와 정식으로 결합하게 되는 1997년과 ‘민족주의’ 그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2002년을 지나오면서 이완되기 보다는 긴장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현실에 적용되어온 것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공간자료와 문헌을 통해 관찰된다.

물론 상기한 민족과 통일의 긴장관계가 심화된다는 명제와 현실적 반영 그 자체가 남북한 분단의 고착화 즉 ‘투 코리아론’ (two korea)의 필연적 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역사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통일담론’은 핵심적인 정치적 정당성의 자원으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정치적 목소리도 그 반대의 입장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정은 정권의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그러한 통일과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제스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¹⁰²⁾

본 연구는 북한의 통일론에 대한 예단이나 확정적 평가를 지양한다. 논문 전반을 관통하는 북한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한 모멘텀은 단순히 고정불변의 확정적 성격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기에 적응해나가려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에 가깝다. 북한의 민족과 민족주의가

102) “민족적 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2012년 1월 1일.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자 기사;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제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김정은 2013년 1월 1일.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1월 1일자 보도;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은 2014년 1월 1일.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1월 1일자 보도;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은. 2015년 1월 1일.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1월 1일자 보도;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 것입니다.” 김정은. 2016년 1월 1일.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1월 1일자 보도;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합니다.” 김정은. 2017년 1월 1일.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1월 1일자 보도.

국가의 의도에 의해 사회주의와의 긴장을, 인정을 통한 점진적 결합의 방식으로 해소함으로써 오늘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사실은, 그에 비례하여 통일문제와의 긴장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체제 내적 정치적 정당성으로서의 민족주의의 동력은 적과 아의 구분을 보다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우리’에서 남한을 배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기한 문제의식 하에 이하에서는 민족과 통일이 가지는 긴장과 그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중전술(two track)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통일과 분단고착화라는 정반대의 힘이 어떻게 북한의 민족, 민족주의 개념과 정책에 융해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 분석하도록 한다.

1. 통합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구심력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우는 남북한 분단 이래로 가장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었고, 2008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역시 남북관계에 역사적인 업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각각 공동선언문을 통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실제 2000년에 즈음하여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및 노동신문 등의 다수 매체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 및 비난의 어조는 상당부분 완화되었고, 남북 간의 활발한 사회문화부분의 교류에 더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 분야로 확대되었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공단조성의 단초가 이루어졌고, 이후 북한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서 남북화해교류협력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자임했던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이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주역이 되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6.15 공동선언의 첫 조항은 경제부문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목표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는 남북한 협력 및 관계개선의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민족’과 ‘통일’이라는 개념적 구도 하에서 각각의 성격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양자의 긴장과 모순의 역학관계의 발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본고 전체를 관통하는 북한의 민족 및 민족주의의 개념 변화와 민족 재건설의 과정에 비추어 ‘김일성민족’으로의 편향, 더 나아가 ‘김일성조선’으로의 확장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과 그 만큼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기한 긴장에 북한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존의 남북한 관계의 고전적 통일론의 연장에서 ‘당위론’에 입각한 통일의 필요성의 역설이다. 둘째, 선군정치와 한반도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리적 해명을 시도한 것이다.

1) 당위론에 입각한 통일의 재강조

김정일의 노작 1997년 6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가 발표되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정일은 소위 ‘8.4노작’으로 불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했다. 김정일은 여기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 임무”임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김일성의 통일노선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주의의 로선**이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와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¹⁰³⁾

103) 김정일.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년에 완전히 정립되고 2002년에 김정일에 의해 다시 한 번 재확인 된 바 있는 ‘민족’에 대한 개념 규정이 그대로 반영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천년동안 한강 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조선민족”의 재결합이라는 역사, 지역(또는 영토) 그리고 피줄 즉 혈연적 공통성에 기초한 단일성 개념의 지속을 의미했다.¹⁰⁴⁾

이러한 민족 개념에 더해 김정일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세 가지가 “조국통일의 3대헌장”임을 전제했다. 3대 헌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둘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강령’이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 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요컨대 “조국통일 3대헌장”은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에의 구현이었다. 김정일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데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 것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보장하며 민족의 룡성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 요구”임을 정당화 했다. 즉 김정일은 자신이 두 달 전에 제기한 “주체성과 민족성” 문제와 그 고수가 기존의 북한 통일론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민족의 자주성 수호라는 측면에서 “조국통일3대헌장”과 “주체성과 민족성”의 개념은 분명하게 수렴된다는 논리적 귀결을 따른다.

이러한 입장은 1998년 4월 18일 통일관련 김정일의 새로운 노작<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자>을 통해 보다 정식화된다. 해당 노작은 김일성 사망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0월 당비서에 취임한 뒤 처음 내놓는 자신만의 ‘통일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김수민, 윤황 2005, 98). 김정일은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을 기념하는 중앙연구토론회에 서한으로 이루어진 노작을 통해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발표했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8·4노작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단일성’ 있었다. 아래는 그 상술이다.

104) 2000년대 초 남북관계의 화해 국면과 맞물려 북한의 『근로자』에서도 다양한 통일 관련 글이 소개 되었다. 그리고 그 핵심 고리는 ‘단일민족’에 있음은 물론이다. “오늘 우리 겨레가 어디에서 살건 서로 만나면 반가와 하고 따뜻한 혈육의 정을 느끼는 것은 유구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지니게 된 고유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국. 2002. 편집국. “민족자주정신은 조국통일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2호. 평양: 근로자사.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 반세기 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 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 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공통성이 훨씬 더 큼**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이해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 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합니다.”¹⁰⁵⁾

조국통일의 과업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김정일의 견해는 새 지도자로서의 통일관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김일성의 유훈으로서 통일과업을 계승하겠다는 후계자의 의지이기도 했다.¹⁰⁶⁾ 아래의 예는 대를 잇는 통일관 및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었으며 그것을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건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력사적로정에 훌륭히 구현**하시어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었습니다.”¹⁰⁷⁾

위에 따르면 이미 김일성이 주체사상에서 민족문제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민족대단결 사상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여 그것이 광복, 국가건설, 통일이라는 전 역사의 과정에 구현 되어왔다는 주장이었다. 김정일의 해당 주장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 당시 북한이 ‘민족’과 ‘통일’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민족을 중심으로 주체와 통일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자 한 의도는 비교적 분명하게 관찰된다. 즉 김일성의 독창적인 “민족대단결”론은 민족과 통일의 긴장을 연결하는

105) 김정일. 199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06)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김일성이 1993년 4월 7일 발표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김일성의 이론을 김정일이 재정리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란’” 1999년 4월 10일.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566501> 검색일: 2017년 5월 14일.

107) 김정일. 199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 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이라는 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해당 노작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발견된다.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기치로 ‘조국광복회’의 정치적 평가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량심적인 종교인과 자본가들까지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환하여 ‘통일전선’ 추구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북한이 의도적으로 통일과 관련한 민족 문제와 사회주의 계급노선과의 연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계급-민족-통일’이라는 세 가지 개념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모순들은 수령의 유훈으로 주어진 통일이라는 현안을 중심으로 하여 한 곳에 집중되었다.

요컨대 “주체성과 민족성”이 ‘계급-민족’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3대조국통일현장”과 “민족대단결” 등은 ‘민족-통일’의 이완을, 그리고 “조국광복회와 통일전선”은 ‘통일-계급’의 이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2) 선군과 통일의 논리적 결합 시도

다음은 통일의 원칙들과 선군정치의 논리적 충돌과 관련한 북한의 대응이다. 즉 ‘선군정치’와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논리적 근거 제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절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선군정치의 시원은 대체로 1995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군정치가 당시를 시작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체계와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북한의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2003년 출판한『선군정치논문10선』에 수록된 일련의 논문들의 저술 시점이 2000년 이후로 소개되고 있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서도 ‘선군’이 제목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의 1월부터이기 때문이다.¹⁰⁸⁾ 특히 『근로자』1999년 7월의 논문은 ‘선군정치’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 되기 시

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필자가 아니라 『로동신문』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낸 논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이라며 선군정치의 개념들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선군’은 ‘통일’ 문제를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단지 사회주의건설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이 부각될 뿐이다.

2000년대 들어 ‘선군’과 ‘통일’ 문제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다. 1990년대 말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한 ‘선군’ 정치는 ‘당의 군대이자 인민의 군대’라는 표제로서 ‘계급’ 문제와의 긴장을 일소했다. 그리고 연이어 계급과의 긴장보다 더 첨예한 논리적 충돌이 예고된 ‘통일’과의 관계문제가 해명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선군 즉 인민 군대가 방어해야 할 대상과 적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선군정치는 ‘김일성조선’을 수호하기 위한 보검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 때문에 ‘통일’과 ‘선군’의 긴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북한도 여기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관찰 할 수 있다.

“선군정치의 이러한 민족통일의 의지는 막강한 군력에 의거한 통일이라는 점에서 무력통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남에서는 군사문제와 결부시켜 통일을 론하면 의례히 북침무력통일을 뜻하는 것이지만 선군정치에서는 반대로 군사문제와 통일을 결부시킬 때 그러한 북침 무력통일기도를 저지시키고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을 념두에 둔다. [...] 결국 선군정치는 민족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그리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인 것이다.”¹⁰⁹⁾

108) 『선군정치 논문 10선』에 소개된 논문 10편은 다음과 같다. 구국의 소리방송. 2003.1.1.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에 관해 하신 말씀.”; 김일성방송대학특강. 2002.2.23.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사상을 명시.”; “김정일시대와 정치방식.”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2000. “총대중시와 선군정치의 위력.” 『강성대국건설전략』; 구국의 소리방송. 2003. 1.13-19. “선군정치에 대하여.”; 2001.12.8. “선군정치의 뿌리.” 『로동신문』; 2001.12.15. “선군혁명 천만리: 제1편 다박솔언덕에서.” 『로동신문』; 2001.4.1.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신문』; 2001.1.1.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공동사설. 『로동신문』; 강인규. 2003.1.14. 통일여명편집위원. “선군정치, 우리 당의 2003년 총노선.” 한편. 『근로자』에 ‘선군’이 처음 제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1월 차운복의 논문부터였다. 차운복. 1999. “선군혁명령도로 주체위업을 개척하고 빛내여온 위대한 력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제1호.

109)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28-130p.

“위대한 선군정치는 자주통일을 위한 최고의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 우리의 선군정치는 전 민족적범위에서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중시의 정치이며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는 정의의 보검이다. [...] 만약 우리가 외국의 침략과 간섭을 총대로 반대배격하는 선군정치를 펴지 않았더라면 자주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일백 번도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¹¹⁰⁾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안아 올 최고의 자주정치이며 사랑과 증오가 결합된 애국애족의 정치이다.”¹¹¹⁾

결과적으로 말해 통일은 주로 애국애족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선군’이 보장하는 한 자주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선군의 물리적 담보는 핵과 미사일인데, 그것이 바로 반제국주의의 논리에 따라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 등의 제국주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만능의 보검’이 된다는 논리였다.

“참으로 선군정치방식은 무적필승의 강군을 키우는 철의 보검, 사회주의를 지키는 필승의 보검, 강성대국건설을 떠미는 창조적 보검, 조국통일을 담보하는 애국의 보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해나가는 정의의 보검으로서의 만능의 보검이라 할 것이다.”¹¹²⁾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히 선군의 의미는 바로 ‘혁명의 주력군’을 ‘로동계급’에서 ‘인민군대’로 대체했다는 데 있었다. 1998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과 함께 보다 공식화된 북한의 ‘선군’ 정치는 사실상 달라진 혁명의 조건에 따른 결과로써의 성격이 강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요원한 유토피아 보다는 사회주의 진영의 소멸과 수령의 사망으로 인한 부재에서 오는 극심한 체제의 위기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수호할 현실에 적합한 주력군이 바로 ‘군’이었기 때문이었다.

110) 주진구. 2003. “우리 민족끼리 굳게 뭉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111) 림미화. 2002.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자주의 기치 밑에 전진해 온 성스러운 위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0호. 평양: 근로자사.

112) 김현환. 2002.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29p.

“지난 시기에는 로동계급을 내세우는 것이 사회주의정치의 어길수 없는 공식처럼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한세기반전에 나온 리론과 공식이 오늘의 현실에 맞을 수 없다. **혁명의 주력군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될 수 없으며**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사회의 어느 계급, 계층 또는 어느 사회적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국주의의 <힘의 론리>가 횡행하는 오늘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로동계급도, 다른 어느 사회적집단도 대신할 수 없다.**”¹¹³⁾

이미 주체사상과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통해 ‘계급-민족’의 결합이 보다 심화되는 관성에서 김정일의 ‘주체성과 민족성’ 개념의 제시는 그것을 불가역적인 이데올로기로 확증하도록 했다. 그 바탕 위에 등장한 ‘선군’은 이데올로기와 조직만을 무기로 삼던 ‘계급’에서, ‘물리력’까지 담보하는 ‘군’대로의 변화를 통해 여전히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고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기능적인 차원의 보강으로써, ‘선군-민족’은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담보하는 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군’이 맡게 되면서 보다 강한 결합력을 생성했다.

한편, 상기한 논리에 더해 무엇보다 미국의 핵과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체감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을 가속화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선군-통일’의 관계를 이어주는 논리로 정당화 되었다. 즉 군사적 물리력을 확장시켜나가는 논리는 통일의 외적인 요소로서, 미국으로부터의 방어적 기제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아래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 한다.

“조국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은 이남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민족분열의 화근, 조국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인 이남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에 대처하는 군중시의 정치, 선군정치로 되어야 한다. 미국의 21세기 조선반도 지배전략을 파탄시키고 전화위복하여 **민족의 운명에 통일이라는 광명을 안아 올 정치는 오직 선군정치일뿐**이라 하겠다.”¹¹⁴⁾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의 원칙,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선군정치와 그에 기초한 우리의 통일정책과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북과 남 사상의 화해와 협력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심화발전.”¹¹⁵⁾

113) 편집국. 2003.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필승의 보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114) 김현환. 2002.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35p.

115)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영: 평양출판사. 175p.

“미제가 저들의 침략적리해관계를 중시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의사를 무시한채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정책과 대조선압살공세의 도수를 날로 높이고 있어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자주권의 불모지로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 당하고 있고 공화국복반부를 포함한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 당하고 있다. [...] 선군자주만이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할수 있게 하는 최고의 민족자주로 된다.”¹¹⁶⁾

다시 말해, 미국의 침략에 대비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민족의 자주성을 드높이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었다. 사회주의 건설과 계급혁명이라는 계급노선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선군을 내세움으로써 반제국주의라는 새로운 기치를 강조하는 북한의 논리는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민족주의가 내용적으로 추구하고 있던 반제국주의라는 부정적인 수사와 핵·인공위성과 같은 긍정적인 상징들이 ‘선군’을 매개로 수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래는 그에 대한 정당화의 예이다.

“선군정치는 우리만을 위한것이 결코 아니다. 총대중시,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미제국주의호전세력에 의해 수시로 조성되었던 전쟁발발위험이 제거되고 우리 민족은 핵전쟁재난을 면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북과 남, 해외에 있는 7천만 온 겨레의 삶과 미래가 지켜 지고 있는것이다.”¹¹⁷⁾

“우리 민족이 미국의 핵전쟁도발위험에 직면한 오늘 전쟁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면 전민족적성격의 막강한 전쟁억제력, 군사적 타격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선군정치, 그에 의한 장성강화된 군사적억제력이 바로 그러한 위상에 놓여지는 민족의 수호신 북과 남의 인민들의 공유물인 것이다.”¹¹⁸⁾

이로써 ‘선군-통일’의 관계는 개념상의 모순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계급-민족-통일’의 삼각구도에서 계급문제가 일시적, 예외적으로 선군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통일과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억제력이자 안보 환경을 제공한다는 논리였다.

116) 김혜영. 2003.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핵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 1호. 평양: 근로자사.

117) 편집부. 2003.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생명선』. 평양: 평양출판사. 39p.

118) 김인옥. 2003.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65p.

2. 분리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원심력

2000년대 들어 “우리 민족끼리” 혹은 “민족공조”라는 구호가 남북관계에 부상했다.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화된 이러한 흐름은 남한과 북한의 당사자주의 및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보다 전면화 되었다. 북한에서 이 개념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통일도상에서 제기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며 민족전체의 힘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¹¹⁹⁾

그러나 북한의 통일 지향적 메시지와 ‘우리 민족’이 구호로서 정치 담론에 전면적으로 활용되었던 사실은 2000년대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북한의 진의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본 논문 전체의 문제의식인 북한의 민족재건설의 과정과 통일의 근거로서 활용되는 단일민족성의 문제가 분명한 개념적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 & 김일성민족 vs. 우리 민족끼리 & 민족공조”의 단순한 구도는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와 1994년 ‘김일성민족’의 등장은 2000년 ‘우리 민족끼리’와 2002년 ‘민족공조’의 등장과는 서로 상이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자가 사회주의의 이념적, 경제적 실패와 진영의 붕괴, 수령의 사망 등 국가의 총체적이 위기에 대응한 동원전략에 가깝다면, 후자는 새로운 정권의 안정화와 경제적, 군사적 자신감의 회복 그리고 남북관계의 해빙에 따른 실용적 선택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및 ‘민족공조’의 논리는 이전의 북한 민족·민족주의 정책을 기각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의 민족주의적 정향은 강화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론’의 함의와 민족재건설과 관련한 개념적 위치를 밝히는 일은 통일을 비롯한 현실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론’을 북한의 민족재건설 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들의 남북관계개선과 통일 지향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 역의 근거들이 여전히 유효한 점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이다.

119) 김인옥. 2003.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79p.

1) <우리 민족끼리>의 명과 암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해나가자”고 명시하고 있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북한에서는 2000년 말까지 총화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와 통일문제의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전개했다고 전해진다.¹²⁰⁾ 이후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론’은 2001년부터 꾸준히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남북관계 및 통일 부문에 주요한 구호로 활용되었다. 이후 『근로자』 및 『로동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 자료에서 해당 개념이 널리 확대 사용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론’은 유사한 의미와 용례로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김수민 2005,301). 이하는 ‘민족공조론’의 정의와 내용이다.

“민족공조란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며 그것을 방해하는 외세에 대항하여 공동행동을 적극 벌려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미제를 위시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단결하고 **공동보조를 취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한다는 것이다.”¹²¹⁾

‘민족공조’란 말 그대로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끼리’의 공동보조이자 협력이요, 그것은 미제를 위시한 외세에 대한 단결을 상징한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민족공조론’과 ‘우리 민족끼리’가 지닌 태생적 모순이 발생한다.¹²²⁾ 그 목표로서 상정된 ‘조

120) 『로동신문』, 2000년 12월 15일 기사.

121) 최기환. 2004.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41p.

122) 상기와 같은 모순은 2002년 『근로자』의 한 논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온 세상에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있는것처럼 조국통일도 철저히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 해야 한다 [...] 오직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푸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 때에만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도로 찾고 [...]” 즉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라는 북한만의 민족범주와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의 통일담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민족의 범주의 전제가 서로 근본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김혜영. 2002.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국통일의 위업' 이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책동과 고립 압살 정책을 저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는 명제는 남한과 미국 간의 한미동맹에 대한 의도적 무시와 따른 귀결이기 때문이다. 다
음의 예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이다. 바로 '선군' 과의 연계가 그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
한 **온 민족이 공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리는 것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공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리는 것은 반제자주정치인 선군정치를 옹
호하고 받드는 최선의 방책이다.**”¹²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군' 정치와 '통일' 의 연계가 논리적으로 가능했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민족공조론' 역시 상기한 논리로 정당화 된다. “어떤 민족이든지 온 민
족의 단합으로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 때만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 기 때문이다.¹²⁴⁾ 따라서 “반미는 곧 자주통일이고 평화”
라는 명제는 그들에게 당연한 논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이 관례적으로 민족적 통합을
논할 때 주로 쓰는 ‘혈연적 공통성’ 즉 ‘민족적 단일성’ 을 통해 보다 강화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이렇듯 누가 누구를 부정하거나 누구에게 부정하는것도 없다. 오직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피줄을 나눈 같은 혈육, 같은 형제, 같은 민족**으로서 서
로 힘을 합쳐 7천만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나가자는 숭
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뜨겁게 굽이칠 뿐이다.”¹²⁵⁾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우리’ 라는 개념은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묶는 것
이기도 하지만, 타자와 자아를 구별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 민
족끼리’ 는 그 자체로서 양가적 속성을 배태하고 이다. ‘민족끼리’ 는 ‘우리’ 에 의해
수식되는 구조로 서로 다른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개념으로 탄생했다. 이는 ‘우리민족제
일주의’ 나 ‘사회정치적생명체’ 등과는 상이한 단어의 조합방식이다. ‘우리민족제일주

123) 최기환. 2003. 『민족과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87-188p.

124) 주진구. 2003. “우리 민족끼리 굳게 뭉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지 『근로자』 제3호.

125) 주진구. 2005.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대단결의 새시대를 펼친 애국애족의 기치.”
조선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의’는 합성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불완전명사의 자격으로 각각의 단어의 띄어쓰기는 상기한 바와 같다(구갑우 2016). 그렇다면 ‘우리 민족끼리’는 왜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있는가? 북한식 설명에 의하면 그 근거는 “앞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다.¹²⁶⁾

그렇다면 ‘우리’와 ‘민족끼리’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민족재건설의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민족’에 대한 북한의 개념규정과 무관하지 않다. 즉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골간인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 위대한 주체사상,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라는 요건은 남한을 포괄하지 못한다. 아래의 예는 이를 보다 확증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선군정치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조국**과 더불어, 대를 이어 끊임없이 흐르는 **김일성민족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더불어 영생하고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펴시여 이룩하신 업적에서 중요한 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발악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것이다.”¹²⁷⁾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오늘 우리당이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똑똑히 알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김일성민족제일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 높이 떨치고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¹²⁸⁾

즉 ‘선군’ 정치와 ‘통일’과의 논리적 연계를 시도하고 나름의 완결적 구조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군’ 정치의 본래적 속성 즉 ‘우리 식 사회주의’, ‘김일성민족’, ‘선군조선’을 지키는 만능의 보검으로써의 역할이 가장 주된 것임을 상기해볼 때 ‘민족공조론’ 역시 근본적 전제조건부터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2004년에 즈음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수정된 모습을 보

126) 2005년 출판된 『조선문화어건설리론』에 따르면 합성어는 하나의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는 토가 끼였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 쓴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그 예이다. 한편 불완전명사는 앞 단어에 붙여 쓰고 ‘적, 식, 형, 성, 용, 급’과 같은 한자말이나 접미사가 붙은 단어는 그 뒤에 오는 명사와 붙여 쓴다. 예컨대 사회정치적생명체가 그것이다. 그에 반해 앞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띄어 쓰도록 한다. 본문의 ‘우리 민족끼리’가 그 예가 된다(구갑우 2016, 원문재인용)

127)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2006. 『우리 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74p.

128) 김상목. 2002.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도록 하는 데 집중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여준다. 즉 ‘당의 령도’를 대신해 ‘우리 군대’가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핵심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이 흔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당군 관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군인’이나,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한 구성으로서 ‘군대’나 마찬가지로 둘 다 “조국보위의 제일선에서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위훈”이라는 사실이다.¹²⁹⁾ 따라서 “군력으로 담보되는 <우리 민족끼리>”의 명제는 그 진정성에 있어 근본적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³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서 기본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이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자존심과 자부심이 바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다. [...]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영원히 높이 떨치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4대 제일주의를 틀어쥐고 나가면 강한 국력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흥하게 되며 인민생활도 꽃피나게 된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4대제일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21세기 주체의 강국이다.”¹³¹⁾

따라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협력과 그에 따른 이익 확보를 위해 북한이 ‘우리 민족’에 대한 범위를 남한으로 확대했다는 주장은 절반의 유효성을 지닌다.¹³²⁾ 김갑식(2006, 169)의 주장처럼 북한의 ‘민족공조론’은 애국심을 고취시켜 남한정부를 견인하는 한편 남한 내 ‘민족주의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측면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04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해외를 포괄하는 각계 통일운동단체 및 동포들과 강력한 연대연합을 통해 민족공조를 반대하는 세력을 철저히 고립, 분쇄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도 그러한 측면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러

129) 편집국. 2004.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130) “불패의 군력으로 담보되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남조선에서 그 누가 집권하든 민족자주통일이라는 대세를 함부로 거역할 수 없게 하는 선군시대 조국통일의 기치로 되고 있다.” 권호웅. 2005. “선군정치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애국애족의 정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131) 편집국. 2004.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132) 최진욱(2004)는 2004년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2004.1.19.)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고취, 미국의 민족 이간 책동에 맞서 민족공조의 실현,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미성전, 6·15공동선언의 철저히 구현, 선군정치지지 등5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했고, 남한 당국과 정치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과거 통일전선전술과 차별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북한의 그러한 주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주장에 가까웠다.

한편 ‘우리 민족끼리’ 및 ‘민족공조론’이 통일정책으로서 가지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특정한 통일 방안 즉 통일의 구체적 방식을 제안한 것이었다. 이후 김일성의 1993년 전민족대단결 10대 원칙과 1998년 김정일의 민족대단결론은 그 실천적 조항이자 규정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는 설사 그것이 레토릭에 불과하더라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보다 구체적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 민족끼리’의 강조는 바로 ‘누가 참여할 것인가?’라는 행위자의 문제로 퇴보시켰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논리는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공동의 적을 ‘미국’으로 상정하여, 적에 대한 최선의 방어 전략으로 ‘선군정치’를 내세운다. 남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제는 선군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는 달리 보면, 우리 민족끼리가 가지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이미지에 대한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민족끼리’가 가지는 횡적인 특성 즉 남북한 간의 민족공조라는 협력적 당사자주의의 성격보다는, 종적인 측면 즉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근본 원리와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차원에서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담론은 남북한 관계차원과 북한 민족 자체에 대한 규정으로 양분되었다. 민족이 계급과의 결합을 통해 통일을 끌어안음과 동시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관계의 문제로 치환하여 오히려 관계를 역전시켰고, 그것이 계급과 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 차원의 민족은 혈연에 기반한 종족 민족주의적(ethnic nationalism) 시각에서 나아가 ‘김일성민족’을 보다 일반화시킴으로써 민족주의의 포괄적 성격과 배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는 이 같은 북한의 의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끼리가 가지는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속성 때문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여전히 남북관계의 중요한 민족공조의 구호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횡적인 관계의 확장성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종적인 의미의 ‘우리’ 담론은 이제 사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넘어 선군이라는 구체적인 군사 안보 외교의 구체적 정책으로까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¹³³⁾

2) 민족 개념의 지속 vs. 민족 요건의 불충족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민족·민족개념은 1985년 『주체사상총서』, 『철학사전』, 『정치사전』을 통해 확정되었고, 2002년 김정일의 <민족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할데 대하여>를 통해 재확인 되었다. 그것은 바로 “령토, 언어, 피줄,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력사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남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분단된 민족의 통합은 말 그대로 통일이라는 최대의 과업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상기한 민족 정의가 불변하는 한 북한의 통일에 대한 지향과 민족주의적 정향 역시 그에 귀속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민족제일주의’(1986)와 ‘김일성민족’(1994)을 통한 민족재건설의 시작, ‘주체성과 민족성’(1997)의 동시 호명을 통한 내용적 민족주의의 인정, 마지막으로 ‘민족주의’(2002)에 대한 공식적 호명을 통한 민족재건설의 내용적 완결을 통해, 사회주의 진영의 쇠락과 총체적 국가위기에 대한 일련의 적응의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에도 북한의 민족 개념 그 자체는 수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1998년과 2002년에 각각 재확인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민족재건설의 과정의 역동적 전개 과정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정의가 불변했다는 사실은 실천적·정책적 견지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여전히 북한의 민족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의 구심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개념의 지속을 전제할 때, 통일의 구심력에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그 조건들에 대한 부합정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구성하는 요소들에 비추어 남한의 민족 동향은 여전히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북한이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는 통일의 가능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상기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하에서는 북한이 평가하는 남한의 민족성에 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¹³⁴⁾ 이를 위해 첫째, 민족 혈통의 공통성, 둘째, 민족 언어의 공통성,

133) 민족 분화의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사례들은 다음을 참고할 것. 1997년 신년사: 1997년 2호 근로자 김용순; 1997년 6월 19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1997.8.4.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 1998.4.18.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구); 1999.1.1.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0.1.1.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2000.6.30.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2002. 2.26.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피줄이 다르면 하나의 민족으로 되지 못한다. 민족의 넋, 민족이 제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 (강민화 2000, 20, 85-86, 99, 120)

마지막으로 민족의 뉘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첫째, 민족 혈통의 공통성이다. 북한에서 통일은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일 인 것인 만큼 북한의 민족 정의에서 혈통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단군은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설사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피줄이 다르면 하나의 민족으로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혈통의 공통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¹³⁵⁾ 아래의 예시 역시 마찬가지로 혈통을 중심으로한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잘 보여준다.

“우리 민족은 미국과 같이 조상도 유구한 역사도 고유한 민족문화도 없는 **혼혈집단이 아니다**. 우리에게 **한피줄**을 이어오며 5천년의 유구한 세월 **단일민족의 혈통**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으며 우리 민족고유의 생활전통과 아름다움 미풍양속이 있다”¹³⁶⁾

그런데 이러한 혈통에 대한 순수성의 고집은 북한 내에서도 보수적으로 발현된다. 예컨대 남한의 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순수한 단일민족의 혈통에 집착한 나머지 혼혈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¹³⁷⁾ 실제 북한에서 혼혈인은 공민권의 박탈과 동시에 후대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외국인과의 결혼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북한의 혈통 순수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 때문이었다.¹³⁸⁾

위와 같이 북한이 혈통의 순수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남한사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134) 북한의 민족 정의에서 ‘영토’와 관련한 문제는 위의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분단 상태의 고착화라는 현실 자체만으로도 영토의 공통성은 부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족정의의 영토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시각에 따라서 충족여부가 결정되는 요소라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영토와 관련한 민족 이슈는 현재 국제질서에서 어느 국가든 수정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도 그 한 근거가 된다. 더불어 민족성과 관련한 문화생활의 문제도 본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문화생활 자체가 경제체제의 차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35) 강민화. 2002. 『민족문제에 관한 주체적연구』. 발행자 불명.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특수자료. 20p.

136) 안경호. 2004.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데 자주통일의 활로가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137) “북한은 순수한 한국 민족이라는 개념에 집착해 혼혈아의 존재를 부정한다. 특히 북한 여성이 이웃한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임신 후에 북한으로 강제 소환될 경우에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한 탈북자는 북한 관리가 ‘불순하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며 신생아를 양동이에 넣어 처리한 일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아시안투데이』. 2014.11.19.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9010011801>. 영국일간 텔레그래프 인용. 11월18일 보도.

138) 데일리NK 2006.4.28.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21618&catald=nk00700>

지향과 배치된다. 북한은 남한의 “다민족, 다인종 사회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이 중국에는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운운하는 ‘다민족, 다인종 사회론’은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이민족화, 잡탕화, 미국화하려는 용납 못할 ‘민족말살론’이다. [...] ‘다민족, 다인종 사회론’을 제창해나서는 남조선의 친미매국세력은 민족관과 사회역사발전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은 물론 한 조각의 민족의 뉘도 없는 열간 망둥이들이다. [...] 남조선에서 거래의 지향에 배치되는 반(反)민족론이 제창되는 것은 명백히 북과 남을 혈통이 서로 다른 지대로 만들고 6.15통일시대를 가로막으며 민족을 영구 분열시키려는 ‘한 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족속들의 범죄적인 기도와 미국의 배후조종의 결과이다.”¹³⁹⁾

“남조선의 곳곳마다에는 민족도 국적도 밝히기 어려운 혼혈아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현실은 남조선사회의 이질화, 잡탕화, 미국화의 뚜렷한 증거물로 되고 있다. [...] 특히 지금까지 <단군의 후손>, <한피줄>, <한겨레> 등을 강조하여온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해부터 <다인종, 다민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려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등의 용어도 <다문화 가정>으로 바꾸려고 책동하고 있다.”¹⁴⁰⁾

단일민족의 순수성을 통일의 오랜 당위로 전제한 북한입장에서 남한의 이주노동자와 그로 인한 혼혈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민족성의 물리적 와해 위험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러한 혼혈인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은 다음의 예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코시아, 코유안, 코미안 ... 이 단어들은 남조선사람들과 외국인들사이에서 태어난 혼혈2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빠른 속도로 국제인종화되어가는 남조선에서는 이런 혼혈아들이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 민족의 순수한 혈통이 심히 모독당하고 있다. [...] 민족성을 말살하는 <혈통의 국제화>에는 괴뢰지배층과 특권족속들이 앞장서고 있다.”¹⁴¹⁾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존중, 인권 등과 같은 이슈들은 북한에서 ‘민족적 단일성’ 즉 ‘혈통의 순수성’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왜냐하면 혈통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순간, 통일의 당위론의 근간 역시 흔들리기 때문이다.¹⁴²⁾

139) 『로동신문』. 2006년 4월 27일.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은 민족말살론.”

140) 강명옥. 2009.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적극 살려나가자> 조선민족의 피줄의 공통성을 부인하는 사대매국행위.” 『민족문화유산』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41) 편집부. 2005. “국제인종화되어가는 남조선.” 평양: 천리마사.

둘째, 민족 언어의 공통성이다. 김정일은 2009년 출판된 증보판 『김정일선집』의 추가 노작을 통해 언어생활의 주체적 사용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¹⁴³⁾ 그는 해당 글에서 “민족은 민족어와 뗄수 없이 련결” 되어 있으며 “민족성을 살리고 그것을 고수하자면 언어생활에서도 주체를 세우고 민족어를 발전” 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즉 언어가 민족의 핵심요건인 만큼, 사용에 있어서의 주체성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따라서 언어생활에 있어서 한자말과 외래어는 그 사용이 지양되었다. 이하의 사례들은 북한에서 언어가 민족성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언어생활에서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 고유한 우리 말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민족적자부심이 높고 단결력이 강하다.”¹⁴⁴⁾

즉, 북한에서 고유한 우리말의 고수는 귀중한 민족적 재부로 되는 동시에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바뀌 말하면 아래와 같이 언어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민족성에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따른다는 논리이다.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이다. [...] 때문에 언어문제는 언제나 민족문제, 국가적문제와 관련되고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심중한 정치적문제로 제기된다. [...] 언어는 민족어 또는 종족어로만 존재한다. [...] 언어의 민족적특성이 동화되거나 상실되면 그 민족어의 존재도 기능도 사멸되며 자기의 발전방향을 잃게 된다. 특히 언어가 민족의 존엄과 단일성을 지켜나가는 주요한 수단이고 문화의 기본형식인 것으로 하여 민족어가 사멸되면 민족이 없어지고 민족문화가 점차 역사에서 사라지는 참혹한 후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¹⁴⁵⁾

142) 이러한 북한의 인식이 반영된 경우는 다음의 사례도 참고 할 수 있다. “한중의 흠을 큰산이라고 과장하면서까지 자기를 혼혈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그리도 자랑스러운 일인지. [...] 우리는 조선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데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조선의 사회과학자라면 마땅히 민족의 혼혈성을 헛되이 <증명>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안고 단혈성의 근거를 풍부히 하며 우수한 민족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데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바쳐야 할 것이다.” 허종호. 2005. “조선민족과 민족성의 형성,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2.” 『력사과학』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43) 김정일. 1961년 5월 25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44) 문영호. 2000. “언어생활에서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상기와 같이 『근로자』에 수록된 논문은 언어생활과 민족성의 상관관계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즉 언어문제는 “심중한 정치적 문제”이며, “언어의 민족적 특성이 동화되거나 상실되면 그 민족어의 존재도 기능도 사멸”될 뿐 아니라, “언어가 민족의 존엄과 단일성”을 지켜나가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민족어가 사멸되면 민족이 없어”지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남한의 언어생활을 민족성 훼손의 차원에서 비판하는 문제는 통일의 원심력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래는 그 사례이다.

“민족적 랑심과 자존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남조선 괴뢰들이 영어를 마구 끌어들이으로써 민족의 자랑이며 금지인 조선말은 짓밟히고 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언어는 민족과 함께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언어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민족의 동질성에 금이 가게 된다. [...] 미제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은 [...]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고 있다.”¹⁴⁶⁾

“남조선 괴뢰통치배들은 우리 말을 잡탕말, 범벅말로 망쳐놓고도 성차지 않아 이제는 <한자병용, 외국말병용>을 <정 책>으로까지 고착시켜놓아 남조선에서 조선말은 완전히 없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놈들의 이러한 반동적인 민족어말살책동의 진의도는 북과 남의 언어를 완전히 이질화하여 민족분열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동적이며 반민족적인 북남언어이질화책동과 민족어말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으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이 둘로 갈라질 수 있으며 남조선에서 우리 말을 되살려낼 수 없게 된다.”¹⁴⁷⁾

즉 남한의 외래어 사용, 한자병용 등과 관련한 정책들이 민족말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언어의 순수성 보장에 실패는 민족의 동질성 실패로 이어진다는 논리와 같다. 북한이 판단하기에 남한의 ‘북남언어이질화책동’과 ‘민족어말살책동’은 한반도의 영구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념과 관련한 내용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게 부상하는 가운데, 민족개념에서 ‘민족의 념’이 추가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5) 문영호. 2006. “현시대 민족어발전의 기본방향을 밝힌 강령적지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발표 4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146) 서치열. 1987.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미국식 생활양식의 해독적 후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2호. 평양: 근로자사.

147) 문영호. 2000. “언어생활에서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앞선 민족성의 공통요건인 혈통과 언어가 ‘우리 민족’의 단일성에 오히려 위배 될 수도 있듯이, 민족의 넓이 달라지면 단일 민족이었어도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의 넓이에 대한 김정일의 견해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 개 민족이 대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조국강토 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 심리와 감정**으로 뿔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¹⁴⁸⁾

그런데 위에서 제시된 “조선민족의 넓이”가 통일을 위한 통합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정반대의 용례로 사용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민족으로 태여 난 사람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 곧 조선의 넓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의 넓이란 우리 민족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인민이 제일이라는 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¹⁴⁹⁾

위에서 말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민족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애국애족의 정신은 북과 남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최대 공양수이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대대손손 살아온 세계에 없는 **단일민족**이며 어디에서 살건 **자기민족의 넓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남달리 강한 민족**이다. 외세에 의해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치로 될 수 있는 것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단일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애국애족의 정신**이다.”¹⁵⁰⁾

148) 김정일. 199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49) 강민화. 2002. 『민족문제에 관한 주체적연구』. 발행자 불명.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특수자료. 121-122p.

상기한 예시와 같이 ‘민족의 녀’은 혈통, 언어, 영토 등과 함께 민족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녀’은 이미 1998년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도 등장한 바 있다.¹⁵¹⁾ 당 기관지 『근로자』의 2006년 제5호에 소개된 논문을 통해 이러한 민족의 녀와 민족성의 직접적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인종적특성은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민족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특성 [...]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민족의 녀이다. 한 민족성원이 되자면 피줄이 같아야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민족의 녀를 지녀야 한다. 아무리 피줄이 같아도 민족의 녀를 지니지 못하면 참된 민족의 성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족의 녀를 잃으면 피줄의 공통성을 점차 잃게 되고 민족의 모든 정신 문화를 잃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의 녀는 민족의 공통성을 유지하고 민족의 존립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²⁾

요컨대 북한의 민족정의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혈통과 언어는 통일을 위한 상수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 실제에서는 오히려 민족 분열 즉 반통일적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었다.¹⁵³⁾ 그것이 통일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책임은 남한에 전가하는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민족의 문화생활 공통성 대신 내용적으로 ‘민족의 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남북한 이질화 현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물론 상기한 일련의 통일의 원심력과 관련한 근거들이 북한의 분단고착화, 영구분단론에 대한 지향이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의 원심력과 마찬가지로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북한의 시도들과 그 근거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북한의 민족주의적 정향과 민족재건설의 과

150) 주진구. 2005.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대단결의 새시대를 펼친 애국애족의 기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제11호. 평양: 근로자사.

151) “조선민족의 피와 녀를 지닌 사람이라면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

152) 리영선. 2006. “민족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의 귀중한 밑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제5호. 평양: 근로자사.

153)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은 남한의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민족적 존엄에 위해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남조선사회에서와 같이 민족의 존엄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미풍양속이 천시되고 사라져간다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민족의 대를 옹계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박승길. 2004.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문화와 풍습을 전면적으로 살려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정이 하나의 한국(One Korea)이나 두 개의 한국(Two Korea)이나 하는 이분법적 논리구조를 넘어 말 그대로 열려있는 북한과 남한의 선택지들이자 기회의 창이라는 점이다. 민족주의 그 자체가 가지는 운동성은 가변적이라는 성격에 다름 아니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민족담론은 끊임없이 통일과의 긴장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예측과 전망의 어려움은 북한의 선택 자체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비(非)민주국가에 대한 비교정치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북한 민족주의의 정치적 동학과 함의, 그리고 내용과 성격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개념들은 국가민족주의, 적응, 회복탄력성, 정당성의 정치 등이다. 해당 개념들은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과 관련하여 각각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질문들과 연동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민족주의의 주체에 주목했다. 민족주의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나 주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구분은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느냐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담론 혹은 운동으로서 국가에 대응한 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물론 일국적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전자를 대변하는 국가민족주의나 후자를 대변하는 사회민족주의 중 어느 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의 상대적 강도에 따라 특정 국가의 민족주의의 성격을 국가민족주의나 사회민족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해당 국가의 민족주의가 국가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혹은 사회민족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번째 개념은 적응이다. 이는 본 연구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민족주의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북한, 더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지속과 쇠퇴에 대한 설명과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된다. 주지하듯 탈냉전 이후 사회과학을 지배해온 관점은 진화론에 기반한 민주화론이었다. 체제론에 있어 역사의 답은 정해진 것으로 모든 정치 체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로 수렴될 것이며 수렴되고 있다는 ‘역사의 종언’ 류의 관점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 자체가 가진 규범적 함의에는 일정부분 동의하나 그러한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비민주국가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저발전 상태에 머물게 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가 기존의 결정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정치발전론의 시각에서 최근 비교사회주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자 본 연구에서 ‘인정과 점진주의를 통한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방식’으로 규정한 적응이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이라는 생존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포착하고자한 이유이다.

세 번째로 적용을 시도한 개념은 마찬가지로 최근의 비교사회주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인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부각된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탈냉전 이후의 지배적인 예언들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더 나아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속에 대한 의문이었다. 즉 ‘진영’ 전체의 필연적인 붕괴를 초래했다고 간주되어온 다양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들이 생존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변화를 흡수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밝혀보고자 했다. 요컨대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은 ‘국가라는 주체에 의해,’ ‘적응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적응적 국가민족주의’가 적어도 현재까지는 북한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개념은 정당성의 정치이다. 해당 개념은 상기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즉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회복탄력성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설명’의 핵심이다. 요컨대 민족주의는 모든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변수인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내려는 국가의 의도적인 노력의 과정, 즉 ‘정당성의 정치’의 핵심자원으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보완 혹은 대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정치적 정당화 메커니즘이 결코 단선적이거나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점에 동시에 주목한다. 그것은 민족주의가 기존의 정당성의 자원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계급노선, 수령제, 통일전략과 갖는 긴장이 그것이다. 먼저 민족 대 계급의 긴장이다. 이는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마르크스의 언명이 상징하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본질적 긴장에서 비롯된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한 ‘계급’에서 ‘민족’으로 방점 이동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의 근본 기둥인 계급노선의 약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긴장은 수령제와의 긴장이다.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호명은 ‘사회주의 조국’을 강조함으로써 민족과 계급의 본질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역으로 북한에서는 철저히 인격화되어있는 충성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수령’ 그 너머에 비인격적인 충성의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충성의 대상을 교체하려는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부상할 여지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전략과의 긴장이다. 주지하듯 통일은 북한 국가 목표에 있어

말 그대로 지상과제의 위상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의 민족주의 부상의 토대가 되고 있는 ‘민족재건설’의 내용이 이러한 통일론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핏줄, 언어, 문화, 영토”를 기준으로 규정되던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의 민족 개념을 대체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위대한 주체사상”,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는 새로운 경계가 이전의 그것과 달리 남한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이 지금까지와 같이 성공적인 방식으로 체제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 북한이 앞으로도 이데올로기적 적응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열려있는 가능성의 향배와 관련한 핵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민족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정은 정권의 출범은 2011년 12월 2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실질적인 후계체제는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김정일의 사망 이후 정권의 공식적인 출범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20여년간의 후계체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유혼통치 기간을 설정해야했던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으로의 계승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갑식 2014, 29-31, 정영철 2012, 2; 김근식 2013, 104; 정성장 2012; , 조한범 2016, 24-25; 전미영 2013, 2).

주지하듯 2012년의 김정은에게 주어진 과제는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진 한 시대를 마감하는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영원한 수령”의 사망에서 비롯된 김정일 시대의 관성을 뒤로하고 다시 육성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신년사가 등장하기 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2012년 신년공동사설이었다. 김정일에 대한 애도와 존경으로 가득 채워진 해당 사설에서 지나간 시대는 “반만년력사에 일찍이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로 새로운 시대는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 규정되었다.¹⁾ 이는 김정일에 의해 공식화된 체제 정당화의 핵심 기둥으로서의 민족주의의 메타포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탄과 같았다.

김정일 사망 후 100일이 지난 직후이자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함으로써 공식적인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는 무대였던 제4차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

1)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게 행해진 2012년 4월 6일의 담화, 그리고 말 그대로 “주체조선 100년사”의 기점으로 규정된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행해진 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이와 같은 비전과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²⁾ 그는 김정일의 핵심적인 업적을 “김일성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것으로 평가하고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급의 “민족의 아버지”로 규정했으며 지난 100년을 김일성에 의해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이 김정일에 의해 계승완성된 기간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천만년사”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중반부터 전면화되기 시작한 “김정일애국주의”는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가까웠다. 김정은은 자신의 노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의 기본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첫째,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최고 정화이다. 둘째,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넷째,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이 지닌 숭고한 후대관이다.³⁾ 선대 정권의 연속선상에서 애국의 키워드를 통해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동원과 훈육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김정은 본인은 이와 같은 김정일 애국주의의 화신으로 규정되었다.⁴⁾ 애국을 매개로 전대수령에 대한 충성과 자신에 대한 충성을 동질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애국주의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후대관’이었다. 조국관과 인민관은 조국애, 향토애 그리고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요소들을 통해 기존의 사회주의애국주의에도 포괄되어 있었던데 반해 후대관은 새로이 등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애국주의가 ‘현재’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시공간적 한정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후대관’은 세대의 연속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성격을 담지하고 있었다.⁵⁾ ‘김정

2) 김정은.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김정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주석 탄생 100돏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 평양: 조선중앙통신.

3) 김정은. 2012년 7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평양: 조선중앙통신.

4)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열렬한 애국자로 성장하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 후대들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조국은 곧 수령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관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은 동지 [...] 애국으로 사색하시고 애국으로 실천하시며 애국으로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가 있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강성국가로 일떠설 것이다.” 리룡하. 20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김정일 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5)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인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결정된

일’이라는 애국의 화신은 과거의 영광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애국 전통을 계승한 ‘김정은’ 자신은 현재와 동시에 미래의 가치를 동시에 점유하는 새로운 애국의 화신으로 규정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김정은 담화는 바로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현재와 미래, 인민과 수령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통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자 했던 김정일의 구호는 김정은에 의해 후대관이라는 애국주의의 미래적 가치로 승화되고 있었던 것이다.⁶⁾

“혁명의 피줄을 이어받았다고 하여 자식들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의 피는 유전될수 있어도 사상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혁명사상은 오직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실천 투쟁속에서만 신념화 되고 투쟁의 지침으로 될 수 있습니다. [...]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당과 인민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간직 하여야 할 소중한 사상정신적 양식**이며 주체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가장 위력한 추동력입니다.”⁷⁾

이처럼 김정일애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김정은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치는 3대세습의 불명예와 이미 화석화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정면 돌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정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한 사상 정비 과정을 거친 후 김정은은 본격적인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회주의 문명국,”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 등의 슬로건에서 보듯 그것은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부국강병론이었다.

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금철, 최금룡. 2013.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이야기』. 평양: 평양출판사. pp108-109; “김정일애국주의가 우리 인민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것은 [...] 그것이 우리 인민들에게 애국의 한길로 변함없이 곧바로 나아가도록 하는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으로 되기 때문이다.” 김양민. 2013. “김정일애국주의는 모든사람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사상정신적양식.” 『김일성종합대학보』 제3호.

- 6) “김정일애국주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으로 하여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안겨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는 구호에 우리 장군님의 후대관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김정은. 2012년 7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평양: 조선중앙통신.
- 7) 김정은. 2012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5돐에 즈음하여 학교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혁명가유자녀들은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어야 한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제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상황, 그리고 6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2017년 현재까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민족주의적 비전은 정당성의 정치의 핵심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를 핵심적인 매개로 하여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온 북한의 민족주의 드라이브의 성패는 결국 그들 스스로 비전으로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의 건설 여부, 즉 안보를 넘어선 번영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릴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영 문

- Alvin Y. So. 1990. "The Modernization Perspective."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Althusser, Louis. 2006.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towards an investigation). *The anthropology of the state: A reader*, 9(1), pp.86–98.
- Anderson, Benedict.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London&New York: Verso).
- Armstrong, John A. 1965. "Sources of Administrative Behavior: Some Soviet and Western European Comparis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9(3): 643–655.
- Armstrong, Charles K. "Ideological Introversion and Regime Survival: North Korea's "Our-Style Socialism." In Dimitrov, Martin K. ed. 2013.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hro, Rudolf. 1977.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London&New York: Verso).
- Beissinger, Mark R. 2004. *The Collapse of the Soviet State*(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_____. 2002. *Nationalist Mobilizat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Stat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ner, Erica. 1996. *Really Existing Nationalisms: A Post-Communist View from Marx and Engels* (Oxford: Clarendon Press).
- Bollerup, S. and C. Christensen. 1997. *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National Revivals and Conflicts in Late-20th-Century Eastern Europe*(London: Palgrave Macmillan).
- Breslauer, George W. 1982. *Brezhev as leaders: Building Authority in Soviet*

- Politics*(London: George Allen & Unwin).
- Breuilly, John. 1994. *Nationalism and the Stat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udny, Yitzhak M. 2000. *Reinventing Russia: Russian Nationalism and the Soviet State, 1953–1991*(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oker, Paul. 2000. *Non–Democratic Regimes: Theory, Government and Politics*(London: Macmillan Press Ltd).
- Brown, Archie. 2009.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London: Bodley Head).
- Brownlee, Jason. 2007.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eno de Mesquita, Bruce et al. 2005.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Cambridge).
- Bush, George H. 1992.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January 28)."<http://www.presidency.ucsb.edu/ws/?pid=20544> (2017/4/5)
- Carr, Edward Hallett. 1945. *Nationalism and After*(Macmillan and Co).
- Calhoun, Craig. 1998. *Nation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hang, Maria H. and Amy Joseph. 2001. *Return Of The Dragon: China's Wounded Nationalism*(Colorado: Westview Press).
- Chen, Cheng. 2012. *The Prospects for Liberal Nationalism in Post–Leninist States*(Pennsylvani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Cheng, Li. 2012. "The End of CCP's Resilient Authoritarianism?: A Tripartite Assessment of Shifting Power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211: 595–623.
- Chu, Patricia E. 2010. *Race, Nationalism and the State in British and American Modernism*(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versi, Daniele. 1995. "Reassessing Current Theories of nationalism: Nationalism as boundary maintenance and creation".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Vol. 1, No. 1(Spring), 73-85.
- Cordesman, Anthony H. & Ashely Hess. 2013. *The Evolving Military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Lanham, Boulder, Newyork, Toronto and Plymouth: CSIS.
- Davis, Horace Bancroft. 1978.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Monthly Review Press).

- De Sauvigny, G. de Bertier. 1970. "Liberalism, Nationalism and Socialism: The Birth of Three Words." *The Review of Politics* 32(02) : 147–166.
- Deutch, Karl W. 2010. *Nation Building in Comparative Contexts*. Aldine Transaction.
- _____. and Timothy C. Weiskel. 1961.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New Haven: Yal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Research Library).
- D'Encausse. H.K. 1993. *The End of the Soviet Empire: The Triumph of the Nations*. trans. by Franklin Philip(NY: BasicBooks).
- Dickson, Bruce J. 2000. "Cooptation and Corporatism in China: The Logic of Party Adapt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5(4): 517–540.
- _____.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The Party, Private Entrepreneurs, And Prospects for Political Change* (Cambridge, New York, Melbourne, Madrid, Cape Town, Singapore, São Paulo: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Wealth into Power: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China's Private Sector* (Cambridge, New York, Melbourne, Madrid, Cape Town, Singapore, São Paulo: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6. "Class in Contemporary China, by David S. G. Goodman." *The China Journal* 75: 172–174.
- Dimitrov, Martin K. ed. 2013.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bbins, James., Seth G. Jones, Keith Crane and Beth Cole DeGrasse. 2007. *The Beginner's Guide to Nation-Building*. CA: LAND.
- Duara, Prasenjit. 1997.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ckstein, Susan. 1970.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22(4): 475–495.
- Fowkes, Ben. 1996.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A Study in the Rise and Triumph of Nationalism*(London: Palgrave Macmillan).

- Fukuyama, Francis.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No.16.
- Gans, Chaim. 2003. *The Limits of Nationalism*(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t, Azar with Alexander Yakobson. 2012. *Nations: The Long History and Deep Roots of Political Ethnicity and Nationalism*(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ddes, Barbara. 1999. "Authoritarian Breakdown: Empirical Test of a Game Theoretic Argument."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tlanta, September 1999.
- Gellner, Ernest. 1983.1993.2008, *Nations and Nationalism*(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iddens, Anthony. 1987.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Volume 2 of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eenfeld, Liah. 1993.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es, Peter Hays. 2004.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 John A. and Siniša Malešević. 2013. *Nationalism and Wa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John A. 1998. *The State of the Nation: Ernest Gellner and the Theory of Nationalism*(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ilton, Malcolm B. 1987. "The Elements of the Concept of Ideology." *Political Studies*. XXXV.18–38.
- Hayes, Carlton J. H. 2016. *Nationalism: A Religion*(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Hechter, Michael. 2004. *Containing Nationali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rz, John H. 1978. "Can We Retrieve It?". *Comparative Politics*. Vol. 10, No. 3(April), 317–343.
- Hobsbawm, E. J. 2nd ed.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ess).
- Holbraad, Carsten. 2003. *Internationalism and Nationalism in European Political Thought*(London: Palgrave Macmillan).
- Holling, C.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 Hough, Jerry F. 1977. *The Soviet Union and Social Science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Hughes. Christopher R. 2006. *Chinese Nationalism in the Global Era*(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ungtington, Samuel P. 1991. "Democracy's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2(2):12–34.
- James, Jason. 2012. *Preservation and National Belonging in Eastern Germany: Heritage Fetishism and Redeeming Germanness* (Palgrave Macmillan Memory Studies).
- Johnson, Chalmers. 1962.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37–1945*(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0. "Comparing Communist Nations."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nathan Unger ed., 1996. *Chinese Nationalism*, NY, M. E. Sharpe.
- Jowitt, Ken. 1971.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omania, 1944–196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75. "Inclusion and Mobilization in European Leninist Regimes." *World Politics* 28(1).
- _____. 1992. *New World Disorde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utsky, J. H. 1962.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and Communism*(Colorado: Wiley).
- Kerkvliet, Benedict J. 2005. *The Power of Everyday Politics: How Vietnamese Peasants Transformed National Policy*(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ing, Charles. 2010. *Extreme Politics: Nationalism, Violence, and the End of*

- Eastern Europ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ohn, Hans. 1944.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s and background*. New York: Macmillan.
-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isteva, Julia and Leon S. Roudiez. 1993. *Nations Without Nationalis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ne, David. 1968. "Social Pluralism." *Political Studies* 16(1): 102–105.
- Leifer, Michael. ed. 2000. *Asian Nationalism*(London: Routledge).
- Liew, Leong H. and Shaoguang Wang. ed. 2004. *Nationalism, Democracy and National Integration in China*(London: Routledge).
- Linz, Juan J. 1993. *State Building and Nation Building*(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75.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London: Lynne Rienner).
- _____. 1964. "An Authoritarian Regime: Spain." *Erik Allardt and Stein Rokkan ed. Mass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 Alfred Stepan. 1996. *Problems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 Lowenthal, Richard . 1970.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Ma, Rong. 2007. "A new perspective in guiding ethnic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politicization' of ethnicity in China" *Asian Ethnicity* 8(3): 199–217.
- Manela, Erez. 2009.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Oxford: Oxford Studies in International History).
- Mazz, Hans-Joachim. 1995. *Behind the Wall: The Inner Life of Communist*

- Germany*. (New York: WW Norton).
- McKay, David. 1999. "The Political Sustainability of European Monetary Un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3).
- Meyer, Alfred. 1967. "Authority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In Lewis Edinger ed., *Political Leadership in Industrial Societies* (New York: Wiley).
- Morgenthau, Hans J. 1957. "The paradoxes of nationalism." *Yale Review*. 46(4).
- Mullins, Willard A. 1972. "On the Concept of Ideology in Political Scien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498–510.
- Nathan, Andrew J. 2003.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14(1).
- Nathans, Eli. 2004.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n Germany: Ethnicity, Utility and Nationalism* (London: Bloomsbury Academic).
- Nyiri, Pal and Joana Breidenbach. 2005. *China Inside Out: Contemporary Chinese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ism*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 Ogden, Suzanne. 2001. "Chinese Nationalism: The Precedence of Community and Identity Over Individual Right." *Asian Perspective*. 25(4)
- Palmowski, Jan. 2013. *Inventing a Socialist Nation: Heimat and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n the GDR, 1945–90: New Studies in Europe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ti, Elias Jose. 2001. "The Nation as a problem: Historians and the 'National Question'." *History and Theory* (October), 324–346.
- Reid, Anthony. 2009. *Imperial Alchemy: Nationalism and Political Identity in Sou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mmer, Karen L. 1996. "The Sustainability of Political Democracy Lessons From South Ame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9(6).
- Rigby, T. H. 1980. "Conceptual Approach to Authority, Power, and Policy in the Soviet Union." T.H. Rigby, Archie Brown, Peter Reddaway ed. *Authority, Power and Policy in the USSR* (London: The Mcmillan Press LTD).
- _____. 1982. *Political Legitimation In Communist States* (London: The Mcmillan Press LTD).
- Saxonberg, Steven. 2013.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 Regime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Carl. 2007.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rmann, Franz. 1968.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2n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ull, Joseph. 1992. "What is Ideology? Theoretical Problems and Lessons from Soviet-Type Societies." *Political Studies*. XL. 728–741.
- Schwartz, Benjamin I. 1993. "Culture, modernity, and nationalism: Further reflections." *Daedalus* : 207–226.
- Seton-Watson, Hugh. 1977. *Nations and States: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Nations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Colorado: Westview Press).
- Shambaugh. 2008.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en. Simon. 2007. *Redefining Nationalism in Modern China*(London: Macmillan).
- Skilling, H. Gordon. 1966.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18(3): 435–451.
- Skocpol, Theda. 1985. "Br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 Theda Skocpol ed. *Bring the State Back In*. Committee on State and Social Structures.
- Smith, Anthony D. 2010. *Nation: Theory, Ideology, History*.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09. *Ethno-Symbolism and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8. *Nationalism and Moder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88. "Nationalism and modernity." *Race and Ethnicity: Comparative and Theoretical Approaches*: 153–70.
- _____. 1986.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John A. Hall eds. *State in History*. Oxford: Basil Blackwell.
- Strauss, Leo. 2007. "Notes on Carl Schmitt,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 Carl Schmitt.

-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gar, Peter F. 1995. *Eastern European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Univ Publ Assn).
- Sun, Yan. 1995. "Ideology and the Demise or Maintenance of Soviet-type Regimes: Perspectives on the Chinese Cas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8(3): 319–338.
- _____. 1994. "The Chinese and Soviet Reassessment of Socialism: The Theoretical Bases of Reform and Revolution in Communist Regim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7(1): 39–58.
- Suny, Ronald. 1993. *The Revenge of the Past: Nationalism, Revolut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zporluk, Roman. 1991. *Communism and Nationalism: Karl Marx versus Friedrich Lis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 1998. "The State of Nationalism." *Critical Review* 10(2): 299–306.
- _____. 1994. "States and nationalism, and Democratizatio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Baltimore : John Hoplins Univ).
- _____. 1975.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and Lond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ucker, Robert C. 1967. "The Deradicalization of Marxist Movement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 343–358.
- Trencsenyi, Balazs. Eds. 2001. *Nation-Building and Contested Identities: Romanian and Hungarian Case Studies*(Regio Books).
- Tsou, Tang. 1984. "The Historic Change in Direction and Continuity with the Past." *The China Quarterly* 98: 320–347.
- _____. 1986. *The Cultural Revolution and Post-Mao Reforms: A Historical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smaneunu, Vladimir. 2013. "Ideological Erosion and the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s." In Martin K. Dimitrov,ed. 2013.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New York: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Van Ree, Erik. 1988. Socialism in One Country: A Reassessment. *Studies in East European Thought*. 50(2).
- Verdery, Katherine. 1995. *National Ideology Under Socialism: Identity and Cultural Politics in Ceausescu's Romani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1. "Theorizing Socialism: A Prologue to the Transition." *American Ethnologist*. 18(3)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Wang, Zheng. 2012. *Never Forget National Humiliation: Historical Memory in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lker, Brian, C. S. Holling, Stephen R. Carpenter, Ann Kinzig. 2004. "Resilience , Adaptability and Transformability in Social–ecological System." *Ecology and Society*. 9(2).
- Walker, Brian, John M. Aderies, Ann P. Kinzig, Paul Ryan. 2006a. "Exploring Resilience in Social-Ecological System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Ecology and Society*. 11(1).
- Walker, Brian, Lance Gunderson, Ann Kunzig, Carl Folke, Stece Carpenter, Lisen Schultz. 2006b. "A Handful of Heuristics and Some Propositions for Understanding Resilience in Social–Ecological Systems." *Ecology and Society*. 11(1).
- Watson, Hugh Seton. 1977. *Nations and States: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Nations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 (London: Methuen & Co. Ltd).
- Weiss, Jessica Chen. 2014. *Powerful Patriots: Nationalist Protest in China's Foreign Relation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Stephen. 1986. "Economic Performance and Communist Legitimacy." *World Politics* 38(3): 462–482.
- _____. 1983. "What is a Communist System?" *Studies on Comparative Communism*. Vol. XVI, No.4.
- Wintrobe, Ronald.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 Jackman, Robert. 1993. *Power without Force: The Political Capacity of Nation-States* (Analytical Perspectives on Politics)(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Verdery, Katherine. 1991. "Theorizing socialism : a prologue to the 'transition'." *American Ethnologist* 18(3): 419-439.
- Xie, Lizhong. 2014. *De-Politicization of Ethnic Questions in China*(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Yack, Bernard. 2012. *Nationalism and the Moral Psychology of Communit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uval- Davis, Nira. 2003. "Belongings: in between the Indigene and the Diasporic" . Umut Özkırımlı eds. *Nationalism and its Futures*. NY: PALGRAVE MACMILLAN.
- Zhao, Suisheng. 2013. "Foreign policy implications of Chinese nationalism revisited: The strident tur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82): 535-553.
- _____. 2006. *Debating Political Reform in China: Rule of Law vs. Democratiz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5. "Nationalism's Double Edge." *Wilson Quarterly*. Vol.29 Issue 4.
- _____. 2004.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Dynamics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A State-Led Nationalism: The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in Post-Tiananmen Chin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3): 287-302.
- Zizek, Slavoj. 1994. *Mapping Ideology* (London, New-York: VERSO).
- "Contents of the May 18th North Korean Party Central Standing Committee Meeting". May 21, 1961,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RC FMA 106-00581-02. Translated by Anna Beth Keim.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055> (검색일: 2016.12.12.).

2. 국문 단행본

- 고유환. 1994. 『북한의 사상과 정치』.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곽준혁·조홍식. 2012.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우리시대 애국심의 지성사』. 파주: 한길사.
- 김남식. 2004. 『21세기 우리민족 이야기』. 서울: 통일뉴스.
- 김성보·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I』.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 김형아. 2005.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서울: 일조각.
- 박명림. 2003.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서울: 나남.
- 박상섭. 2008. 『국가·주권』. 서울: 도서출판 소화.
- 박영정. 2007.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서울: 월인.
-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서울: 소화.
- 박호성. 1997. 『남북한 민족주의연구』. 서울: 당대.
- _____. 1989.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까치.
- 백낙청. 1981.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서동만. 2000.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서진영·김인성 편. 2006. 『세계화시대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오름.
- _____. 2008. 『21세기 중국 정치: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서울: 폴리테이아.
- _____. 2006.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서울: 폴리테이아.
- _____. 1992.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성혜량. 2000. 『등나무집』. 서울: 세계를 간다.
- 송두율. 1990.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농민·지식인』. 서울: 한길사.
- 신영석. 2008. 『한반도 통일논의 60년: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 신일철. 2004.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서울: 생각의 나무.
- 심지연. 200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 안치영. 2013.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파주: 창비.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찬행. 2001.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 이희옥. 2014.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4.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파주: 창비.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 장달중·이즈미 하지메. 2004. 『김정일 체제의 북한: 정치·외교·경제·사상』. 서울: 아연출판부.
- 장문석. 2011. 『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 _____. 2007. 『민족주의 길들이기: 로마 몰락에서 유럽 통합까지 다시 쓰는 민족주의의 역사』. 서울: 지식의 풍경.
- 전미영. 2006.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담론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전영선. 2014. 『북한의 정치와 문학: 통제와 자율 사이의 줄타기』. 서울: 도서출판 경진.
- _____. 2006. 『북한 영화 속의 삶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글누림.
- _____. 2004. 『북한의 문학과 예술』.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정성장. 2011.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권력체계』.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정세현. 2013. 『정세현의 통일토크』. 파주: 서해문집.
- 정창현. 2011.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김일서에서 김정일까지』.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조영남. 2013.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 _____.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
- 조정남. 1996. 『러시아 민족주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진덕규. 2001.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서울: 통일원.
- 차기벽. 2005. 『민족주의 원론』. 서울: 한길사.
- 편집부. 1989. 『통혁당: 역사, 성격, 투쟁, 문헌』. 서울: 도서출판 대동. 71p.
- 한국서양사학회편. 1999. 『서양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까치.
- 한성훈. 2012. 『전쟁과 인민: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 한형식. 2010. 『맑스주의 역사강의』. 서울: 그린비출판사.
- 함택영. 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 홍태영.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 황장엽. 2006. 『북한의 진실과 허위』. 시대정신.
- _____. 1999.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국가안전기획부 편. 1995.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 자료집』.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국토통일원. 1988.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4권.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외교부 편. 2010. 『러시아연방 개황』. 서울: 외교부.

3. 국문 논문

- 강경덕. 2016. “알튀세르와 버틀러, 발리바르: 주체화 양식의 논점과 일반화.” 『철학연구』. 제53집.
- 강성윤. 1981. “민족주의 연구: 북한에 있어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북한학연구』. 제11권.
- 강정인·정승현. 2013. “한국 현대정치 of 이념적 지형: 민족주의의 신성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4호.
- 강주원. 2013. “한국어를 공유하는 네 집단의 국민·민족 정체성의 지형: 중·조 국경 도시 단동의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통일문제연구』. 제25권 1호.
- 강진웅. 2010. “북한의 국가권력에 대한 미시적 접근: 호전적 민족주의와 주민들의 삶.” 『한국사회학』. 제44집 2호.
- 강철구. 2001. “독일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전망.” 『이화사학연구』 제28집.
- 고유환. 1997.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지속과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8호.
- 공봉진. 2015. “시진핑 시대의 중국민족정체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43집.
- 곽승지. 2000.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9권2호.
- _____. 1997.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성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구갑우. 2016. “‘띄어쓰기’와 ‘띄여쓰기’.” 미발표 원고.
- _____. 2014.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2002년10월3일 ~ 11월 26일, 말의 공방과 담론의 생태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4호.
- 구자정. 2013. “‘맑스(Marx)’에서 ‘스탈린(Stalin)’으로: 맑시즘 민족론을 통해 본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역사적 계보.” 『사총』. 제80호.
- _____. 2012. “이식된 근대, 만들어진 민족, 강제된 독립: 소비에트식 ‘민족창조’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근대성의 착종.” 『역사문화연구』 제44집.

- 권형진. 2014. “분단과 독일인의 국민자격 변화의 역사적 고찰: 전후 재통일까지의 동·서독 국적법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제27권.
-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
- _____. 2007.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전망.” 『현대북한연구』. 제10권 3호.
- _____. 2006.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8권 1호.
- _____. 이무철. 2006.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2호.
- _____. 2005.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 김근식. 2014.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 _____. 2013.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치: 지속과 변화.” 『평화학 연구』. 제14권 3호.
- 김남섭. 2008. “스탈린 시대 소련의 ‘민족 불세비즘’적 역사교육과 소수민족의 통합.” 류한수, 김남섭, 박상철, 황동하.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서울: 동아역사재단.
- 김남식. 2001. “북한의 민족론: 그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4권.
- 김병웅. 1983. “독일민주공화국의 민족개념 변모.” 『평화연구』. 제8권.
- 김소중. 2006. “중국민족주의 역사와 전망.”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
- 김수민. 2005. “김정일의 민족공조론 함의와 평가.” 『통일전략』. 제5권 2호.
- 김수민·윤황. 2005. “김정일의 민족대단결론과 민족공조론에 대한 평가.” 『고려대학교 평화연구논집』. 제13권 2호.
- 김양희. 2012.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나타난 정책적 함의.” 『한국예술연구』. 제5호.
- 김영규. 2009. “북한 가족법의 공법적 특성: 수용한계의 측면에서.” 『국방연구』. 제52권 제2호.
- 김연각. 1996. “북한정권과 민족주의.” 『근대사강좌』. 제8권.
- 김인성. 2012. “러시아에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제50권.

- 김정훈. 2000. “분단 체제와 민족주의: 남북한 지배 담론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동향과 전망』. 제44권.
- 김정환. 2004. “루마니아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양상.” 『동유럽발칸연구』. 제13권 1호.
- 김창근. 2006. “북한의 민족 개념과 시민윤리적 과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9집 2호.
- _____. 2003a. “북한 지도부의 민족·민족주의 담론: 특징과 의미.”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2호.
- _____. 2003b. “김정일 민족 인식과 정치적 활용.” 『국민윤리』. 제54호.
- 김희교. 2006.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통권 75호.
- 김태우. 2002.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과정.” 『역사와 현실』. 제44호.
- 권희영. 1994. “러시아 민족주의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제17권 2호.
- 남궁영. 200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계.” 『국제지역연구』. 제5권 1호.
- 남기호. 2014. “정치적인 것의 비개념: 슈미트의 독재국가와 헤겔의 인류국가.” 『가톨릭철학』. 제23권.
- 노재봉. 1984. “민족주의 연구: Populism(민중주의) 논고.” 『세계정치』. 제8권 1호.
- 도홍렬. 2003. “북한 ‘민족주의’의 사회학적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0권 2호.
- 리미남. 2002. “북한의 ‘아리랑 축전’과 무용.” 『민족무용』. 제1호.
- 민정현. 2001.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10월 혁명 이전시기를 중심으로.” 『사총』. 제54권.
- 박수현. 1997. “공산당 개혁의 도전과 좌절: 흐루시초프와 고르바초프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제36집 3호.
- 박영자. 2016. “김정은의 장기집권 기반 구축.” 『북한』. 제540호.
- _____. 2005. “북한의 민족주의와 여성.”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 _____. 2005. “분단 60년, 북한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48권.
- 박용수. 2007. “1990년대 이후 남·북한 민족주의의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1호.
- 박주식. 2001.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발칸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사상연구』. 제9권.
- _____. 2002. “발칸 지역의 민족공산주의: 유고와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학』. 제4권 2호.

- 박찬부. 2001. “상징질서,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체의 문제: 라캉과 알튀세르.” 『영어영문학』. 제47권 1호.
- 박형중. 20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통일연구원.
- 배성인. 2001. “김정일체제의 지배담론: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
- 배성인. 2002.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세계화와 주체화의 변증법.” 『통일문제연구』. 제14권 1호.
- 배성인. 2003. “김정일 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담론과 담론의 정치.”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 백학순. 2003. “대남전략.” 세종연구소편. 『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울 아카데미.
- _____. 1995.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김일성의 자율성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28권 2호.
- 서규환·이완중. 2007. “사회주의와 민족문제: 소련의 민족정책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3권 1호.
- 서동만. 2000. “북한체제와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제4호.
- 서성희. 2006. “〈민족과 운명〉의 민족주의담론 연구: 연속편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28권.
- 서정경. 2013. “미·중 민족주의의 특성과 양국관계: 메시아니즘과 천자관의 조우.” 『국가전략』. 제19권 3호.
- 서재진. 2002. “김정일시대의 통치이념의 변화.” 서재진 외. 『북한체제의 현주소』. 통일연구원.
- _____. 1993. “북한의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 신범식. 2006. “민주화, 민족주의 그리고 대외정책: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1권 4호.
- 신봉수. 2009. “계급과 민족의 변증법: 마오쩌둥의 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1호.
- _____. 2008.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용과 변화: 1921-1945.: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행위논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1호.
- 신승권. 1988. “고르바초프비 재편·공개·민주화 정책.” 『광장』. 2월호.

- 신은희. 2006. “민족주의에 나타난 북한 언어문화의 특징.”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 1호.
- 신종대. 2010.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남한의 정치변동과 북한의 국내정치.” 『정신문화연구』. 제33권 1호.
- 신주식·최용호. 2003. “중국경제성장이 중국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 『경상논집』. 제31권 1호.
- 안경모. 2015.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그 정치적 함의(1966-2012).”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4호.
- _____. 2013. “북한의 선국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오성호. 2014. “현대문학: 북한문학의 민족주의적 성격 연구: 민족해방서사의 주인공과 그 변모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55권.
- 우평균. 2014. “러시아민족주의 성격과 푸틴주의의 민족주의적 지향.” 『슬라브학보』. 제29권 3호.
- _____. 2004.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러시아인 다이나스포라: 러시아의 인식, 정책과 이론적 측면.”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3호.
- 유광진. 1991. “북한의 사상체계; 주체사상과 북한의 민족관: 공산주의 민족이론과 관련하여.” 『북한학연구』. 제20권.
- 유지훈. 2008. “분단시대 동독의 통일정책.” 『사회과학연구』. 제24권 1호.
- 윤경우. 2012.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민족주의.”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4집.
- 윤덕희. 1992. “공산체제에서의 민족주의와 개인숭배; 루마니아와 북한 비교.” 『동아연구』. 제25권.
- _____. 1988a. “제1부 동구 민족주의: 제1장 동구 공산주의국가들의 민족주의”
- _____. 1988b. “동구의 민족주의: 루마니아의 권력형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권.
- _____. 2000. “구유고지역의 민족문제와 민족갈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0권 2호.
- _____. 2003. “북한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제20호.
- 윤희탁. 2013. “‘북한민족국가의 파탄’: 만주국의 붕괴와 ‘만주국인’의 충돌·수난.” 『중국사학회』. 제78권.

- _____. 2010. “중국의 애국주의 고취와 ‘열사포양’ 공작.” 『중국사학회』. 제68권.
- 이계환. 2010. “북한의 민족론과 민족주의.” 정수일 외. 『재생의 담론: 21세기 민족주의』. 서울: 통일뉴스.
- 이기동. 2005.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 성격에 관한 연구.” 이우영 외. 『화해·협력과 평화변영, 통일』. 서울: 한울.
- 이동률. 2012. “중국 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 『중소연구』. 제35권 4호.
- _____. 2001. “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제21권.
- 이동훈. 2008. “탈북인사대담 130: 북한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실태.” 『통일한국』. 제297호.
- 이명자. 2002.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 플래시백과 역사재현.” 『통일논총』. 제20호.
- 이문기. 2014. “중국 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과 국가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 이미경. 2003.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자주노선 정립.”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 이완중. 2008. “스탈린의 언어와 정치: 일국사회주의의 이론과 전술.”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호.
- 이우영. 2012. “북한의 명승지 정책의 성격.”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 이정남. 2006. “천하에서 민족국가로, 중국의 근대민족주의의 형성 및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109호.
- 이정철. 2016.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 노선의 역조합.” 『사회과학논총』. 제18집.
- 이종광. 1993.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6권 2호.
- 이종석. 1994a.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
- _____. 1994b. “집중분석 I: 단군왕릉 발굴과 북한의 민족주의.” 『통일한국』. 제124권.
- 이주미. 2008. “북한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 『한민족문화연구』. 제21권.
- 이천석. 2010. “중화민족론의 성격과 전개과정.” 『아태연구』. 제17권3호.
- 이희옥. 2014.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협상민주주의 도입의 의미화 한계.” 『국제정치

- 논총』. 제54권 2호.
- _____. 2009. “중국 민족주의발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7권.
- _____. 2005. “체제전환과 중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 임수호. 2011.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치와 외교.” 『수은북한경제』. 2011년 겨울호.
- 임지현. 1991. “사회주의민족이론과 소련의 민족문화정책: 민족어정책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15권 1호.
- 장달중·임수호. 2005. “김정일체제와 강성대국론.” 백영철 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장명봉. 1999. “북한의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배경, 내용, 평가.” 『공법연구』. 제27집 제2호.
- 장용철. 2012. “북한 ‘종자론’의 문예론적 특성과 통치담론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
- 장용훈. 1999. “북한영화이야기: <민족과 운명>-90년대 북한 최고의 다부작 극영화.” 『통일한국』. 제191권.
- 전미영. 2013. “김정은 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 _____. 2003.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통일이념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 _____. 2001. “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1호.
- 전상봉. 2007.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남과 북 그만남의 역사 희망을 위한 발걸음』. 서울: 시대의 창.
- 전영선. 2011. “북한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4권2호.
- _____. 2010. “북한의 아리랑 축제와 민족예술의 가능성 모색.” 『한국문화와 예술』. 제6집.
- _____. 2002a.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기본과 사적 흐름.” 『한국문화연구』. 제6집.
- _____. 2002b. “북한의 대집단체조예술공연 ‘아리랑’의 정치사회적·문화예술적 의

- 미.” 『중소연구』. 제25권2호.
- 전재호. 2004. “세계화 시대 북한과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3호.
- 정성장. 2012.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 정책, 실천』
- _____. 1999.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2호.
- 정영철. 2012.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 _____. 2010.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3호.
- _____. 2007. “남북한 대립 상징의 구조와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1호.
- _____. 2003.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민족 개념의 정립과 민족주의의 재평가.” 『문화와 사회』. 제16권 4호.
- _____. 2001.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 정일영. 2013. “북한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과 전개: ‘민족공조’와 ‘김일성민족’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56권.
- 조경란. 2010. “현대 중국민족주의 비판: 동아시아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010년 2호.
- 조영남. 2002. “개혁기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과학』. 제24권 제1호.
- _____. 2009.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지속.” 『EAI 국가안보패널(NSP)보고서』. 제32호.
- 조한범. 2016. “집권 5년, 김정은의 핵개발 집착.” 『북한』. 제538권.
- 조호연. 1999. “20세기 러시아사에서의 국민통합과 민족주의.” 『서양사학』. 제62권.
- 진희관. 2008.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 찰스 암스트롱. 1999.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 최경석. 2006. “김정일시대의 신년사와 통치강령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대회. 2003. “소비에트 민족정책과 스탈리의 민족문제 ‘해법’.” 『인문과학』 제16집.
- 최은숙. 2014. “일제강점기 ‘아리랑’ 관련 민족담론의 구성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

- 학』. 제40권.
- 최진욱. 2004.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 평화문제연구소. 2007. “북한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재개.” 『통일한국』. 제279호.
- 한경자. 2014. “북한식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전개.” 『무용역사기록학』. 제33호.
- 한석희. 2010. “21세기 중국 민족주의의 딜레마: 세계화와 실용주의적 민족주의의 상호관계.” 『신아세아』. 제17권 1호.
- 한성훈. 2011. “북한 민족주의 형성과 반미 애국주의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국가적 위기’의 결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6집.
- 한승호·이수원. 2013.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애국주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국방정책연구』. 제29권 2호.
- 한운석. 2008. “1970년대와 1980년대 구동독 역사교육에서의 민족문제와 민족사.” 『역사교육』. 제106집.
- _____. 2006. “북한과 동독 역사학의 민족사 인식의 변화 비교.” 『독일 연구: 역사·사회·문화』. 제12호.
- _____. 2005. “동독과 북한 당 지도부의 민족정책 비교.” 『역사학연구』. 제24집.
- 한주희. 2012. “제5장 중국 민족주의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한국 민족주의의 방향성 모색.” 『민족사상』. 제6권 3호.
- _____. 2007. “중국의 부흥과 대외정책의 변화- 중국 민족주의와의 상관관계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호석. 2000.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이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일학연구소. <http://www.onekorea.org/research/000916.html> (검색일 2010.7.22.)
- 홍웅호. 2013. “레닌과 스탈린시기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 변화.” 『사림』. 제46호.
- 홍태영. 2012. “프랑스혁명 이후, 애국주의에서 민족주의로.” 박준혁, 조홍식 엮음.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파주: 한길사.
- 황경숙. 2008. “북한무용의 현황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6권1호.
- Armstrong, Charles K.. 1999. “북한 문화의 형성, 1945- 1950” . 『현대북한연구』. 제2권 제1호, 123- 154.

4. 번 역 서

- 덩샤오핑. 1983년 1월 12일. “제반 사업은 모두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김승일 역. 1994. 『등소평 문선(상)』 서울: 범우사.
- _____. 1984년 2월 24일. “경제특구를 잘 건설하고 대외 개방도시를 늘리자.” 김승일 역. 1994. 『등소평 문선(상)』 서울: 범우사.
- Abel, Elie. 1991. 이근달 역. 『동구의 붕괴』. 서울: 국제언론문화사.
- Altrichter, Helmut. 1997. 최대회 역. 『소련소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Anderson, Benedict R. O’G · 최석영 역. 1991. 『민족주의의 역사인류학』. 서울: 서경문화사.
- _____. ·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 Bauer, Otto. 1924. 김정로 역. 2006. 『민족문제와 사회민주주의』. 서울: 백산서당.
- Baum, Richard. 2012. “텐안먼으로 가는길: 1980년대의 중국정치.” Roderick MacFarquhar ed. 김재관 · 정해용 역. 『중국현대정치사: 건국에서 세계화의 수용까지』. 서울: 푸른길.
- Brezewski, Zbigniew. 명순희 역. 1989. 『대실패: 20세기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말』. 서울: 을유문화사.
- Bueno de Mesquita, Bruce & Alastair Smith. 이미숙 역. 2012. 『독재자의 핸드북』. 도서출판 웅진.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2011.
- Carr, Edward Hallett · 김태현 역. 2000. 『20년의 위기』. 서울: 녹문당.
- Cumings, Bruce. 김자동 역.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서울: 일월서각.
- Giddens, Anthony. 진덕규 역. 1991.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 Goncharov, Sergei Nikolaevich., Lewis W, John and Xue Litai 저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반 역. 2011. 『흔들리는 동맹』. 서울: 일조각.
- _____. 1987.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시사영어사.
- _____. 1989.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Pravda』 1989.11.26. 김정래 역. 1989. 『중소연구』 제13권 4호.
- _____. 1989. “신뢰의 힘이 증대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영국방문 연설.” 『Pravda』 1989.4.8. 김정래 역. 1989. 『중소연구』 제13권 2

호.

- _____. 1990.7.3. “페레스트로이카의 길로 계속 나아가자: 소련공산당 제28차 대회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정치보고.” 『Pravda』 1989.4.8. 김정래 역. 1989. 『중소연구』 제14권 3호.
- Hobsbawm, E. J. 강명세 역. 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 Jenkins. Brian. 김인중, 마은지 역. 2011. 『프랑스 민족주의: 1789년 이후의 계급과 민족』. 서울: 나남.
- Johnson, Chalmers A. 서관모 역. 1985. 『중국혁명과 농민 민족주의』. 서울: 한겨레.
- Kolakowski. 임지현 역. 1986.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 Khrushchev. Nikita Sergeyevich. 1956. 박상철 역.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 서울: 책세상.
- Leonhard, Wolfgang. 유창선 · 박정주 역. 1987.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 서울: 청아출판사.
- Marx, Karl & Friedrich Engels. 1872. “공산당 선언,” 1991. 김재기 편역.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서울: 거름.
- _____. 나라사랑 편집부 역. 1989. 『마르크스 레닌주의 민족이론』. 서울: 나라사랑.
- Mcdermot, Kevin & Jeremy Agnew. 황동하 역. 2009. 『코민테른: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파주: 서해문집.
- MacFarquhar, Roderick. 김재관 & 정해용 역. 2012. 『중국현대정치사: 건국에서 세계화의 수용까지』. 서울: 푸른길.
- Nahaylo, Bohdan & Victor Swoboda. 정옥경 역. 2002. 『러시아 민족문제의 역사』. 서울: 신아사.
- Overy, Richard. 조행복 역. 2008. 『히틀러 대 스탈린, 권력 작동의 비밀: 독재자들』. 서울: 교양인.
- Pipes, Richard. 이종인 역. 2001, 2006. 『공산주의』. 서울: 을유문화사.
- Scalapino, Robert & Lee Chong-sik · 한홍구 역. 1987.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3권. 서울: 돌베개. *Communist in Korea: Part 1: The Movemen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chram, Stuart. 김동식 역. 1977. 『모택동』. 서울: 박영사.

- Service, Robert. 김남섭 역. 2012. 『코뮤니스트』. 서울: 교양인.
- Stalin, Joseph. 1989.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Karl Marx 외 저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서울: 인간사랑.
- Thompson, John M. 1996. 김남섭 역. 2004.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서울: 사회평론.
- Wehler, Hans-ulrich. 이용일 역. 2007. 『허구의 민족주의』. 서울: 푸른역사.
- Vogel, Ezra F. 2014. 심규호, 유소영. 『덩 샤오핑 평전』. 서울: 민음사.
- 古田元夫, 박홍영 역, 2008, 『베트남의 세계사: 중화세계에서 동남아시아 세계로』. 충청북도: 도서출판 개신.
- 마오쩌둥. “항일시기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임무.” 김승일 역. 『모택동선집』 제1권 (범우사).
- 유효중, 이와마 아키코 엮음. 박은미 역. 2012.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 개념과 정책의 비교사회학』. 파주: 한울.
- 후루타 히로시. 2004. “김정일의 ‘종자론’에 대하여: 유기체적 생명관으로부터 ‘군민일치’ 원군미풍교화까지.” 『한일공동연구총서』 2004년 7호.

5. 북한 단행본

- 강민화. 2002. 『민족문제에 관한 주체적연구』. 발행자 불명.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특수자료.
- 강충희. 2006. 『민족주의의 구현과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 김민 외. 1985.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령도 체계』 제9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성모, 탁성일, 김철만. 2001. 『조선의 집단체조』. 평양: 외국문출판사.
- 김이환. 201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민족주의에 관한 주체의 이론』. 조선사회과학학술집 46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인옥. 2003.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 김주복 외. 1991.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재호. 2000.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 김태영. 2001.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 평양출판사.
- 김현환. 2003. 『김정일장군 조선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 _____. 2002.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 김혜연. 2002.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 평양: 평양출판사.
- 리성철·리만렬·강설경. 2012.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한 사회주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리수덕·김재창. 198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의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박일범. 1985. 『주체사상총서: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원리』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1948. 『민족과 민족문제』. 평양: 로동당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85. 『철학사전』.
- _____. 1973.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연구를 위한 전국 사회과학토론회 논문집』.
- 오성길. 2003.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생명선』. 평양: 평양출판사.
- 오현철, 최금룡. 2013.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이야기』. 평양: 평양출판사.
- 장우진. 2002. 『조선민족의 역사적뿌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평양: 평양출판사.
- 정성철. 2010.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혁명리론』. 조선사회과학학술집 78.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2006. 『우리 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8.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중앙통신 편. 2003.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_____. 1993.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_____. 1991.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_____. 1970.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조성박. 1999. 『김정일민족관』. 평양: 평양출판사.
- 조성철. 2001. 『김정일장군의 사회주의재생재건전략』.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최기환. 2004.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 _____. 2003. 『민족과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 최성욱. 1966.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최희열. 2014. 『주체의 민족리론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500.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평양출판사 편. 2006.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제3부. 평양: 평양출판사.
- 한동성. 2010.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 조선사회과학학술집 57.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6.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노작

- 김일성. 1991년 11월 23일, 26일. 당, 국가, 경제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3권. 199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년 8월 5일.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 _____.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김일성저작집』 제10권. 199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년 6월 7일. 정무원책임일군들, 력사학자들과 한 담화.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0권. 199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35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일성저작집』 제35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년 9월 21일. 농천경리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올해 농사경험과 다음해 영농사업방향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35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년 8월 14일. 조선통일지지 베네수엘라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한 담화.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의 역할.” 『김일성저작집』 제35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년 4월 1일. 방직공업부, 식료일용공업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방직업과 식료일용품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김일성저작집』 제35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년 3월 21일. 전국수산물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김일성저작집』 제35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9년 9월 20일. “빠나마 인적자원육성 및 리용협회 위원장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34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9년 7월 26일.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량강도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리자.” 『김일성저작집』 제34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9년 5월 4일. “폴롬비아 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일행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34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돛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제32권. 198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3년 6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97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3년 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 한 결론.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김일성저작집』 제28권. 198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3년 1월 31일. <경공업월간>에 경공업공장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대학 교원, 학생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경공업부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8권. 1984.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 _____. 1971년 11월 18일,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제26권. 198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1년 10월 1일. 상업류통 및 경공업 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6권. 198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0년 6월 1일. “함경북도농업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제25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0년 2월 17일. 과학교육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제25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9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 교양의 몇가지 문제.” 『김일성저작집』 제24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9년 7월 1일. “아련 《다르 알 타호리르》출판사총국장 아브델 하미드 아흐메드하르루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제2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1968년 9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저작집』 제22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8년 6월 14일. 함경북도 인테리들앞에서 한 연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1967년 12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김일성저작집』 제21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7년 6월 20일. 함경남도당 및 함흥시당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

- 출판사. 1983.
- _____. 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7년 3월 17~24일. 도, 시, 군및공장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19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6년 5월 14일.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0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5년 2월 23일. 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1964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김일성저작집』 제18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3년 5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강화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7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3년 4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회의에서 한 결론.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7권. 198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3년 2월 8일.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3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2년 3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 결론.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1년 4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에서 한 결론.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1960년 8월 14일.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제14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9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9년 2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8년 10월 30일.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군인들 속에서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8년 4월 30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학생들과 한 담화.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8년 3월 19일. 전국청년사회주의건설자대회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8년 3월 8일.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8년 3월 7일도. 시, 군 당위원장들과 인민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8년 1월 17일. 영화예술인들앞에서 한 연설.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판사.

- _____. 1957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김일성저작집』 제11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7년 11월 27일. 조선인민군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조국통일문제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 『김일성저작집』 제11권. 198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4년 5월 11일. 교통운수부문모범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2년 4월 25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김일성저작집』 제7권. 198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6권. 198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8년 10월 21일. 경비대문화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부대의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8년 8월 7일. 내무국 경비처 제3경비려당잔을 임명하면서 준 지시. “38선경비대의 임무.” 『김일성저작집』 제4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8년 3월 29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결론.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7년 7월 21일. 평양시 각급 학교 졸업생환영대회에서 한 연설.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일터는 민주학원졸업생들을 기다린다.” 『김일성저작집』 제3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7년 2월 7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연설. “평안북도 당단체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우리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 『김일성저작

- 집』 제3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7년 1월 15일.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업.” 『김일성저작집』 제3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6년 8월 10일. 산업국유화법령지지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기초.”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6년 2월 23일. 평양학원개원식에서 한 연설. “평양학원개원식을 축하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5년 11월 17일. 평양학원 터전을 정하면서 학원 및 지방당 일군들과 한 담화. “평양학원을 창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5년 11월 5일. “민족운동자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1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50년 10월 21일. 조선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의 결론. “인민군대 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6권. 198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 전선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46년 8월 10일.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 『김일성저작집』 제2권. 197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은. 2017년 1월 1일. “신년사.”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2016년 5월 8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당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기사.
- _____. 2016년 1월 1일. “신년사.”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2015년 1월 1일. “신년사.”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2014년 1월 1일. “신년사.”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2013년 6월 5일. 조선의 전체군대와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호소문 <마식령속 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2013년 4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평양: 조

선중앙통신.

_____. 2013년 1월 29일.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평양: 조선중앙통신.

_____. 2013년 1월 1일. “신년사.” 평양: 조선중앙통신.

_____. 2012년 11월 26일. 전국섬검찰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혼을 일으킬데 대하여.” 평양: 조선중앙통신.

_____. 2012년 8월 25일. “8.25 경축연회 연설.” 평양: 조선중앙통신.

_____. 2012년 7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평양: 조선중앙통신.

_____. 2012년 4월 15일. “김일성주석 탄생 100돏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 평양: 조선중앙통신.

_____.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평양: 조선중앙통신.

_____. 2010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5돏에 즈음하여 학교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혁명가유자녀들은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어야 한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201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 CNC기술을 개척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자.” 『김정일선집』 제24권. 20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2009년 1월 2일. 당, 국가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4권. 20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2008년 1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강계정신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창조된 사회주의수호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이다.” 『김정일선집』 제23권. 20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2007년 1월 19일.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희천공작기계공장은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이다.” 『김정일선집』 제23권.

20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3년 2월 10일. 당, 군대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력사문화유적보존관리와 복구 개건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3년 1월 4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 체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3년 1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선군정치를 튼튼히 틀어쥐고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2년 9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2년 8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예술인후비양성 사업에서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예술인후비양성사업에서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2년 8월 15일. 김일성상개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결작이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2년 6월 1일. 고원군 량천사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력사문화유적이 많은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2년 2월 27-28일. 재일본조선인민축하단, 총련현본부위원장대표단, 재일조선인 예술단 성원들과 한 담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련애국사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자.”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2년 2월 26일,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2년 1월 3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음악예술부문에서 민족성을 고수해나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2년 1월 1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단장과 한 담화.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천만군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21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1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김정일선집』 제20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0년 6월 30일. 재미녀류기자 문명자와 한 담화.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20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0년 1월 4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새해경축공연을 보고. “노래의 형상수준을 계속 높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20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0년 1월 2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전군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20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0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9년 1월 1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년 11월 22일. 신천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년 9월 27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승리의 신심드높이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년 9월 8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년 2월 16-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영화예술부문 일군, 창작가, 예술인과 한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의 완성방향과 최근 영화 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년 2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강행군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나갈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7.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7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9권. 20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 _____. 1996년 2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하신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6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5년 1월 15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는 자기 당,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게 충실하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5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중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2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2월 27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가족들과 한 담화. “군인가족들은 항일유격대의 작식대원들처럼 살며 일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2월 25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실감있게 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2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2월 3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1월 20일. 4.25 국방체육선수단을 돌아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4.25 국방체육선수단사업을 추켜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1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1월 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과 명령. 제0051호.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0월 29일. 단군릉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단군릉은 우리 민족

- 의 유구한 역사를 길이 전하는 귀중한 국보이다.”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0월 28일. “감사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준 전체 인민들에게.”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0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는 좋은 음악을 더 많이 창작보급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0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7월 11,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 『김정일선집』 제18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김정일선집』 제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3년 1월 5일. 청년사업부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 『김정일선집』 제17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년 5월 23일.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17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년 2월 3일. 영화예술부문 일군,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년 1월 20일. “주체문학론.” 『김일성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출판사.

- _____.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년 5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에게 준 지시. “노래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를 만들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년 5월 10일.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당세포를 강화하자.” 『김일성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년 1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김정일선집』 제14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년 9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년 1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의 기
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
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년 1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당사상교양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
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9년 1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 선집』. 제9권. 1997.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 _____. 1989년 11월 27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3권. 2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9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온 사회에 문화
정서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2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_____. 1988년 8월 18일. 백두산밀영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백두산밀영지구를
잘 꾸릴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2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8년 1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전당에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김정일선집』 제12권. 2011.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의 혁명관
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2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 _____. 1987년 4월 11일. 집단체조창작가들과 한 담화.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
하여.” 『김정일선집』 제12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년 1월 19일.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의 군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년 5월 17일. 문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8권. 199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년 4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아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5년 8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5년 1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김정일선집』 제11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4년 1월 14일. 조선인민군 중대지도소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중대지도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의 증대를 더욱 강화하자.” 『김정일선집』 제10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10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년 11월 13일. 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0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돏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년 1월 3일.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로혁

- 명가들을 존경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년 1월 2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과 한 담화.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 『김정일선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9년 12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집』 제9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9년 1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8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8년 1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협의회에서 한 연설.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8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8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 『김정일선집』 제8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7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올해에 당조직들이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8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6년 1월 1일. 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6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김정일선집』 제7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전군을 김일성주의 화하자.” 『김정일선집』 제7권. 20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4권. 199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3년 4월 11일. “영화예술론.” 『김정일선집』 제5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2년 3월 16일. 문화성 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문화성에 정치국을 내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4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0년 3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3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9년 7월 1일.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에 대한 분석총화사업을 결속하면서 사회과학자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제3권. 20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8년 8월 22일. 개성지구 력사문화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개성지구 력사문화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 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7년 7월 30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7년 6월 7일. 문화예술부문 일군 및 작곡가들앞에서 한 연설. “당의 유일사상 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6년 2월 26일.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혁명적영화제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4년 12월 10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김정일선집』 제2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4년 9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력사유

- 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3년 5월 6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갑신정변을 옳게 평가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1년 5월 25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1년 5월 2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력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발굴하고 잘 보존관리하자.”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1년 4월 5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0년 10월 29일.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0년 10월 8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20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0년 10월 4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제1권. 199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 북한 논문

- 강명옥. 2009.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적극 살려나가자〉 조선민족의 피줄의 공통성을 부인하는 사대매국행위.” 『민족문화유산』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강석주. 2005. “선군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온 불멸의 년대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 권호용. 2005. “선군정치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애국애족의 정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 김강민. 2013. “김정일애국주의는 모든사람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사상정신적량식.”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3호.

- 김기남. 1997. “탁월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한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 김려현. 1989.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교양사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5호. 평양: 근로자사.
- 김상복. 2002.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도록 하는데 집중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김옥녀. 2004. “민족성고수에 대한 선행리론의 제한성.” 『정치법률연구』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용순. 199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영생하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 김유호. 2003. “사회주의조국은 해외동포들의 높은 민족적존엄과 영예의 상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 김정숙. 1997.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도덕의 리심의 최고표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 김춘근. 2013.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 김태호. 1997. “주체년호의 제정시행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로 빛날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0호. 평양: 근로자사.
- 김혜영. 2003.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핵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2.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 량만길. 1997.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자애로운 수령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 로배권. 2002. “주체사상이 밝힌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강성대국건설의 사상정신적원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6호. 평양: 근로자사.
- 리규린. 1986년 2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

- 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
- 리근모. 1998.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제9호. 평양: 근로자사.
- 리금옥. 2006. “민족주의본질에 대한 과학적해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3호.
- 리룡하. 20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제1호. 평양: 근로자사.
- 리봉낙. 2001.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 리억일. 1995. “인류문예사에 특기할 대걸작: 다부작예술영와 <민족과 운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리영복. 2000.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2호. 평양: 근로자사.
- 리영선. 2006. “민족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의 귀중한 밑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 리을설. 199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제7호. 평양: 근로자사.
- 리정순. 2002.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옹계 살려 나가는 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림미화. 2002.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자주의 기치 밑에 전진해 온 성스러운 위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0호. 평양: 근로자사.
- 문재철. 1999.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탁월한 령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 문영호. 2006. “현시대 민족어발전의 기본방향을 밝힌 강령적지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발표 4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0. “언어생활에서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제3호. 평양: 근로자사.
- 박덕남. 1995. “로동계급의 형상을 품만한 예술적 화폭으로 구현한 세계적인 대걸작: 다부작

-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 박성철. 19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 박승길. 2004.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문화와 풍습을 전면적으로 살려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박창수. 2000. “사회주의애국주의화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근본 요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 배경호. 1996. “수령의 위대성은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의 확고한 담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 백남순. 1999.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1946년 8월 28일. “쓰팔린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 『조선로동당 대회자료집』 제1집. 1988. 국토통일원.
- 서윤석. 1997.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생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1995. “경애하는 수령님은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김일성민족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어버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 서춘봉. 1998. “주체성과 민족성은 우리혁명의 생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서치렬. 1987.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미국식 생활양식의 해독적 후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2호. 평양: 근로자사.
- 안경호. 2004.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데 자주통일의 활로가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안대식. 1988.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향토애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 장춘일. 2013.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체육인들의 확고한 의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9호. 평양: 근로자사.

- 전경남. 2004.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 전문섭. 1995. “조국해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재생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8호. 평양: 근로자사.
- 전성국. 2005.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의 사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전용석. 2003.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6호. 평양: 근로자사.
- 전택실. 2002. “항일의 애국주의는 참다운 애국주의의 시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2호. 평양: 근로자사.
- 정성철. 1997. 정치사상론설. “우리의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더 높이 발양되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정 심. 2007. “민족주의에 대한 주체적리해의 독창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호.
- 정연학. 2005.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조국을 해치려는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 정영룡. 1994.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조철. 2005.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인륜도덕교양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 주진구. 2005.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대단결의 새시대를 펼친 애국애족의 기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1.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중요한 요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3. “우리 민족끼리 굳게 뭉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차윤복. 1999. “선군혁명령도로 주체위업을 개척하고 빛내여온 위대한 력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 최정현. 1991.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의 발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최춘식. 2013. “국방공업의 위력으로 김일성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신 절세의 애국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2호. 평양: 근로자사.
- 홍성룡. 1998.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2호. 평양: 근로자사.
- 황해수. 1998.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는 주체조선, 김일성조선의 국력을 과시한 역사적 사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편집국. 2013.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넋이며 숨결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9호. 평양: 근로자사.
- 편집국. 2004.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3.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8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3.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필승의 보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3. “항일선렬들의 애국정신을 본 받아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2. “민족자주정신은 조국통일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12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1.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은 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2001. “우리 당의 위대한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1997.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8호. 평양: 근로자사.
- _____. 199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상징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제3호. 평양: 근로자사.
- 편집부. 2005. “국제인종화되어가는 남조선.” 평양: 천리마사.
- 표광근. 2005. “민족주의의 진보성.” 『정치법률연구』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허중호. 2005. “조선민족과 민족성의 형성,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2.” 『역사과학』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 기타 언론 및 기사

『경향신문』. 1994년 12월 26일. “김일성 애도 분위기 다시 고조.”

『조선중앙연감』. 1975. “〈주체사상과학토론회전국집회〉 일본 도쿄에서 성대히 진행.” 평양: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06년 4월 27일.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은 민족말살론.”

_____. 2012년 12월 21일. “전설적인위인 김정일동지: 불굴의 신념과 의지.”

_____. 2012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_____. 2001년 12월 15일. <정론> “선군혁명 천만리-제1편 다박솔 언덕에서.”

_____. 1964년 7월 7일. 평론원 사설. “왜 평양경제토론회의 성과를 중상하러드는가.”

『아시안투데이』. 2014년 11월 19일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9010011801>.

『연합뉴스』. 2006년 7월 29일 “집단체조 ‘아리랑’ 완제는 ‘첫 태양의 노래’.” 검색일 2017년 3월 3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370766>

『데일리NK』. 2006년 4월 28일 보도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21618&catald=nk00700>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일일·주간 북한통향 2005년 9월 14일자 조선중앙방송 원문재인용.

http://nkinfo.unikorea.go.kr/nkp/argument/viewArgument.do?pageIndex=2&argumentBbsId=3199&tabType=ARGUMENT_DAI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nationalism's rise in the socialist state and to explain the nationalism's impact on the state's resilience to overcome the crisis through the North Korean case. It argues that nationalism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for the weakening of political legitimacy when the rosy promises of a utopia based on class line has faded in the socialist state and North Korea is one of the typical case. Under these concerns, the study aims to differentiate against the existing studies of North Korean nationalism at several points of view below.

Firs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North Korean nationalism in a broader spectrum of national strategies rather than the framework of inter-Korean relations. Many North Korean strategies and policies have been considered in the framework of the unification strategies wi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n nationalism has also been evaluated in that context. However, the study argues that it needs to go beyond the perspective in order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about the North Korean nationalism. In other words, the reinforcement of the North Korean nationalism, named as 'politics of legitimacy', has been sought as a response to the internal and fundamental crises that was caused from the conflicts between other socialist state, the continued failure of the regime, and the political succession rather than the reactive and passive response to balance against South Korea.

Second, I would like to focus on not only the consequences of North Korean nationalism but also the unique methods they used. Since the 1980s, the nationalism has not been built as a whole Korean nation of the past, but restructured as a new nation that excludes South Korea. That is the concept of *Kim Il Sung Minjok*. The research contends that the analysis on this approach to North Korean nationalism can be a key to enhance the existing understanding about the North Korean nationalism.

Third, this study aims to combine the analysis of North Korea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ist states. In many other studies, the nationalistic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described as a result of the historical distinctiveness of North Korea but the combination of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North Korea can never be an exceptional phenomenon. Ever since Lenin's imperialism and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ppeared, socialism and nationalism have repeated constant tensions and reconciliation. In sum, the combination of socialism and nationalism itself is explained in general dimensions and the method differed by country.

Fourthly, I will analyze the rise of North Korean nationalism in terms of political development staying away from the deterministic view of the transitology.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s to apply the latest research of comparative politics on the surviving non-democratic states. The concept that these researches generally pay attention to is 'adaptation'. In other words, through the adaptations to modify the existing political design, the surviving socialist states look like standing on the road to the development without democratization, not the road to the democratization through development. This is why this study applies the concept of adaptation to the analysis on North Korean nationalism and defines that as an 'adaptive state nationalism.'

Finally, while focusing on the fundamental structural pressure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state's ultimate interest is to survive,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ways to respond to the pressure can be varied by each states.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tensions in the regime of North Korea that uses nationalism as the ruling ideology. The first tension is between nation and class. The second is between nation and *Suryong* system, and the final is between nation and unification. I believe that the analysis on these tension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specific dynamics of North Korean nationalism and to prospect the future of North Korean nationalism.

Keywords: North Korea, state nationalism, adaptation, politics of legitimacy, resilience

Student Number: 2011-30889